



Prof. Dr. Alexander Thumfart

번역: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 동·서독의 정치통합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 동·서독의 정치통합

---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 동·서독의 정치통합

인 쇄 2007년 8월

발 행 2007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봄 (2275-5326)

인 쇄 처 도서출판 늘봄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7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동·서독의 정치통합/ Alexander Thumfart 지;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역.-- 서울 : 통일연구원, 2007  
p. ; cm. --

원서명: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07-8 93340 : 비매품

340.925-KDC4

320.943-DDC21

CIP2007002749

# 목 차

〈발간사〉

## 제 1 부 통합이론

I. 규범적 통합과 체제전환 .....	3
1. 체제전환 연구의 범위 .....	8
2. 학제 간 연구, 해석학적 문제와 해석상의 패러다임: 방법론적, 내용적 그리고 규범적 요소로서의 통합 .....	33
II. 규범적 통합의 기본요소 .....	72
III. 자료검색체계 .....	77
1. 멤버십 .....	82
2. 갈등조절 .....	88
3. 여론 .....	94
4. 연대감 .....	98
5. 가치연계 .....	104

## 제2부 정치통합현실

I. 연구의 구성: 정치 제도의 제반 분야 .....	115
II.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의회주의와 주의회 .....	122
1. 이론적 접근 .....	126
2. 주의회의 제도화 .....	149
가. 엘리트 순환의 세 단계와 동독 최후의 인민의회 .....	152
나. 첫 번째 입법기 1990~1994년의 주의회의 구성 .....	161
다. 두 번째 입법기 1994~1998/99년의 주의회 .....	179
라. 요약: 통합과 이면세계 .....	198
3. 정치이론적 전망: 연구 방향과 요망사항 .....	202
III. 정당과 정당체제 .....	212
1. 이론적 접근 .....	216

2. 새로운 독일의 통합된 정치체제 .....	225
가. 동독의 정당 .....	225
나. 정당의 지위와 신연방주의 시민운동 .....	231
다. 1989년 ‘평화적 혁명’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정당들 .....	236
라. 동독과 서독의 유권자 .....	305
마. 요약: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지향 .....	314
3. 정당이론적 차원의 전망 .....	322
참고문헌 .....	33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77

## 발간사

이 책은 독일 에어푸르트(Erfurt) 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알렉산더 톰파르트(Alexander Thumfart) 교수의 『동·서독의 정치통합』(*Die politische Intergration Ostdeutschlands*)을 번역한 것이다.

본 번역서는 1989년 대전환 이후 구 동독지역의 정치지형의 파노라마를 알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책으로 독일통일에 따라 이루어진 동독의 정치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원문은 모두 3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부는 정치통합 이론, 제2부는 사례, 제3부는 결론과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만 하더라도 1,0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 중 제1부 이론적인 부분과 제2부의 정치체제 중 대전환기 의회주의와 주의회정치 및 정당과 정치체제 부분을 번역했다.

본 번역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먼저 통일부 독일주재관이 본 책의 번역을 추천해 주었다.

톰파르트 교수께서는 친히 한국에서 번역서로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본 책자를 발간한 독일 edition suhrkamp 사에서도 한국의 독자를 위해 번역·발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번역을 위해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안미현 교수님을 비롯, 최경인, 안미라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 번역해 주신 세 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통일연구원 김영운 박사와 정재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번역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감수와 교정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밖에 본 번역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번역서가 통일문제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07년 8월

통일연구원 원장 이 봉 조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 일러두기

- 본문 중의 굵게 강조한 부분, 괄호로 번역된 부분과 같은 편집은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임.
- 참고문헌은 번역한 부분의 참고문헌만을 게재함.

# 통합이론 제1부





## I

## 구범적 통합과 체제전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표현했듯이 짧고 극단적인 20세기의 종식을 알렸다(Hobsbawm 1995, 15~33쪽).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약화되었던 두 세력권의 대립관계는 브란덴부르크 성문 앞의 ‘철갑 장벽’ 위에서 열정적인 춤과 함께 사라졌으며,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동참하지도 않았던 동독 국가기관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장벽은 붕괴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지금 이 시각부터 당장’ 서쪽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허가서가 필요 없다는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의 성명이

---

1\_ 샤보브스키(Schabowski)의 성명은 Gransow/Jarausch 1991, 93~94쪽에 인쇄되었다. 슈타리츠(Staritz)는 이 성명의 탄생에 관한 진기한 상황을 재구성했다. 그에 따르면 통일사회당(SED)의 중앙위원회(ZK)는 1989년 11월 9일 당시 상황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킬 새로운 여행규정 초안을 인가했다. 필요 이상으로 공공연한 추가적인 압력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호프만(Hoffmann) 문화부장관과 중앙위원회에 새로 선출된 사무총장 및 (당연히) 정치국(Politbüro)의 에곤 크렌츠(Egon Krenz)는 기한을 나타내고자 사용했던 ‘일시적인’ 그리고 ‘과도기규정’이란 용어들을 지웠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전략적인 배경을 잘 몰랐던 샤보브스키는 발표할 성명을 시간적으로

발표되자,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의아함과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어처구니없다는 듯한 미적지근한 태도는 어쩌면 그때까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관과 양측의 표면적인 기대감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발표문이 있는 후 (의도된 바와는 전혀 달리) 여러 단계, 불안한 상황, 대안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들이 실행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sup>2</sup> 독일통일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약간의 예외사항과 특별규정을 제외하고서는 동독의 모든 법적인 틀은 대의민주주의, 복지국가 조직을 갖춘 사회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sup>3</sup>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구동독의 최고권력기관) 최

---

또는 사실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19시 경에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Staritz 1996, 380~383쪽 참조. 이 성명의 유포와 특히 이 소식을 동독-고위층으로부터 '장벽이 붕괴'되었다는 해석은 미디어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써 1989년 11월 9일 한스 요아힘 프리드리히스(Hanns Joachim Friedrichs)는 ARD 독일 TV에서 22시 45분 경에 베를린 장벽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도했다. 그 후 수 천 명의 동독 시민들 (그리고 서베를린 시민들)은 다양한 통과지점(보른홀머 거리, 존넨알레, 체크포인트 찰리)과 브란덴부르크 성문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서 결국 차단기를 진짜 열게 되었다. Hertle 1999 참조.

2\_ 동독의 주요 책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독일을 통일시키자는 취지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로타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총리 정권하에서 1990년 4월 12일 발효된 연정합의안에서 볼 수 있다. 연정들은(CDU/DSU/DA/DFP/BFD/FDP/SPD) '과도기규정을 위한 [1974년 개정안의 동독]헌법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 국가가 서로 접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동독 집권당의 연정합의안 1990, 6쪽. 이것은 원탁회의(Runder Tisch)에서 (적절하게 이름 붙인) '동독의 새로운 헌법'이란 작업팀의 헌법초안(1990년 4월 4일)의 내용과도 일맥 상통한다. Preuss 1990(헌법초안이 나와 있다).

초의 자유선거와 1990년 5월 7일 자치단체선거(Kommunalwahl)로 이미 의도했던 것들은 양측이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동의 법적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소련 형태의 국가가 서방국가 성격의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 연방주의 복잡하고, 세분된, 일관적이지 않은, 다층적인 그리고 특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체제전환이란 과정에 대해 이 책은 서술한다.<sup>4</sup>

이 책에서는 체제전환의 과정을 우선 정치적인, 즉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새 연방주에 관해서만도 현재 너무 많아 파악하기조차 힘들어진, 사회적인 변혁과정이 시작된 이후의 실질적인 사회발전과정을 묘사하고 (후에) 분석한 정치적-사회학적 문헌과 연구의<sup>5</sup> 대열에 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자체적인 관점에 따라 이론적이고

3\_ 통일계약서에 따른 특별규정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6월 17일 법으로 결정하여 7월 1일 설치한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이 있고, 그 밖에도 예를 들어 노동권에 관한 특별규정과 낙태관련법이 있다. THA Seibel 1997a, 172~178쪽 참조, 마지막 규정에 대해서는 Peter 1990 참조.

4\_ 헤리베르트 프란틀(Heribert Prantl, 1999)은 장벽붕괴 10주년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토 실리 장관은 새 연방주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 독일 통일은 10주년이 지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및 화폐통합이 잘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동독 지역에서 정치적 장소로서의 독일을 찾는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우선 조사해봐야 한다. 아직 통합과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한 말이다. 다음은 글래스너(Glaßner, 1999, 599쪽)가 프로젝트로서의 독일 통일을 표현했다. “독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동과 서의 정치적,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한 근접하게 할 수 있는가와 그 방법은 무엇인가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Reich(2000, 32쪽)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5\_ 하우저(Hauser)등은 1990에서 1995년 말 발간된 체제전환 관련 출판물을 약 3,000개 정도로 추정한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501쪽.

실험적인 체제전환연구 내의 다양한 (최근의) 발전사항을 설명한다.

이 책의 색다른 관점의 접근방식과 전제 그리고 (대략적인) 방법론적 및 내용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특징짓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1990년 봄부터 진행된 체제전환연구의 발전과정을 짧게 요약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경제적, 행정적-법적 체제전환과정 그리고 사회학적인 체제전환연구에서 보다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아직 거의 발전되지 않았지만, 점점 분명하게 완성된 초기의 이론적 배경, 개념적인 방향, 그리고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실험적인 연구도구들에서는 너무 단순화되어 있었고 추상적이었으며, 복합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빠진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다.<sup>6</sup> 그래서 다층적인 단계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충분히 적절하게 구성하거나 개념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작업들을 거치면 다양한 단계들이나 사회학적인 연구의 차원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인 연구디자인과 연구 패러다임의 지속적인 방향전환과 수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분명한 폐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적어도 다섯 가지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상적인 변화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론형성의 발전과정과 실험적인 연구에 관한 비판적인 개관은 **첫째로** 역사를 (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현재의 위치까지 나타내주면서

---

6\_ 폰 베이메(von Beyme)는 “단축된 독일 체제전환연구의 관점”이라고 말했다(von Beyme 1996, 315쪽), 라이씨히(Reißig)은 심지어 체제전환연구의 “진지한 장애물로 되어버린 전략적인 ‘문제의 단순화’”라고까지 표현했다; Reißig 1996, 247쪽(원본에는 이탤릭체로 쓰여져 있다).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의 성찰적인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로는 이론에 따른 실험적인 연구에서 나타난 그리고 장차 피해야 할 부족한 부분들과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조명한다. **세 번째**로는 연구사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표면적이고 깊이가 없는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또는 할 수 있는 개정작업, (현재의) 수정작업 그리고 특히 이론적인 확대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이와 같은 성찰에 의해 보다 개선된 추구 모델, 이상, 의문사항, 기준의 틀 그리고 특히 이미 존재하는 방법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해나갈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안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은 방법론에 치우친 관점 외에도 적어도 대략적으로 정치학적인 체제전환연구가 다루는, 즉 점점 더 많이 반영하게 된 (시간이 흐르면서 수적으로 많아진) 주제들과 분야들을 내용적으로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드러나듯이 앞서 언급한 방법론적 순서는 내용에 관한 의문사항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론적인 사상을 변화시키면 내용도 변하고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자연스럽게 이론적인 반응들에 대해서도 내용상으로 새롭게 강조할 것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유형화된 재구성은 이 책의 취지이기도 한 배경과 맥락의 소개뿐만 아니라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내고 제시하며, 거기서 나타나는 의문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를 통해 체제전환연구가 (보편적인) 설명에 입각한 이론적 명제에서 벗어나 (해석학적) 이해에 입각한 이론 모델로 옮겨가게 된 명제를 제시하고 대변하고 논증할 것이다.<sup>7</sup>

## 1. 체제전환 연구의 범위

사회과학적인 체제전환연구는 시기별로 분류한 기존의 타임테이블과<sup>8</sup> 연계하여 크게 3~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개별 단계들이 항상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단계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집중도와 다른 분포와 의미를 지녔으며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층(Schicht)을 지니는 모델(분명 이 개념에도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다)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다.<sup>9</sup> 각각의 층들은 지배적인, 그리고 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시되었던 연구프로그램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다른 층들과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변화된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이 가지는 상대적인 동시성, 그리고 그것들의 표현이나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층 개념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법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최상의 위치에 근접해 간다는 (또는 그 최상의 위치에 도달한다는) 뜻에서 층들이 단계별로 올라가거나 발전해나간다고

---

7\_ 이와 같은 차별화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사회학적 허리케인의 중심에 속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셔(Esser)는 막스 베버의 이론을 빌어 '설명'이란 해석학적 의미의 '이해'라고 주장하는 반면(Esser 1993, 595~597쪽), 홀리스(Hollis) 역시 막스 베버의 이론을 빌어 이 이론은 분명하지 않으며, 특별한 맥락에서는 인과율적 '설명'을 '이해'와 당연히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ollis 1994, 195~201쪽.

8\_ 예를 들어 콜모르겐(Kollmorgen)이 1996년 작성한 시대구분의 표현과 내용적인 면에서는 체제전환연구의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참조.

9\_ 라이쾨(Reißig 1998, 304쪽)은 체제전환연구 진행계획표에서 단계(Phase)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라이쾨는 너무 엄격하게 제한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누적되고 발전해온 인식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패러다임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다. 이보다는 오히려 본보기와 모델의 차별화, 다양화 그리고 심지어 다원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사고의 틀이 바뀔 때는 비록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이전의 사고의 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의 발달과정은 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의 복잡성과 이질성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이때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경직된 모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sup>10</sup> 이와 같이 개념을 제한한다면, 필자의 관점에서 층이라고 말할 때 층 고유의 다양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새로운 노선과 발전사항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제전환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1990년 봄에서 1993~94년 정도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는 전적으로 실험적인 것에 방향을 둔 임시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접근방법을 택하게 된 이유는 서독에서의 사회과학 전반과 사회학적 관점에 따른 동독(DDR) 연구가 동독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극단적인 변혁과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결국 예측해주는 도구인 사전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10\_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만 인식의 발전이란 개념은 토마스 S. 쿤(Thomas S. Kuhn)과 리하르트 로티(Richard Rorty)가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과정을 표현할 때 사용한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론적 세계관의 발전을 누적적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물에 관한 새로운 관점은 지금까지 유효했던 개념의 연장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물'에 관한 개념자체도 바뀌게 되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에 따라 복합적 관점에서 표현된다. Kuhn 1976, Rorty 1989, 30~45쪽 참조.

못했다는, 변혁과정 중 제기된 비난 때문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이 일반화한 비난은 당연히 옳지 않지만,<sup>12</sup> 그래도 사회과학계가 가능한 한 빨리 실험적인 데이터와 정보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적어도 지금 당장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표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Reißig 1998, 303쪽; Giesen/Legewie 1991, 8~9쪽 참조). 이 개별 연구들은 곧 체제전환에서 세 가지 중심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사회구조적 변화, 즉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사회안전망 그리고 생활수준의 불균형이고, 둘째는 제도적 변화과정, 즉 정치행정적 분야 또는

11\_ 이 비난은 언론과 학계, 양쪽에서 제기되었다. 그래서 C. 베커(C. Beck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불만족과 불안에 대한 징후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변화의 작은 징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Becker 1991. 그리고 바이메(Beyme)는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주장을 피력했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방법적으로 사회과학계의 검은 금요일이라 표현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의 방법적인 권리인 ‘예측’을 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일어난 후에야 예측’했다.” Beyme 1994, 15쪽. 일반적인 관점에서 다른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울리히 벡(Ulrich Beck 1991)이었다. Glaeßner 1990, Fenner 1991, Bredow 1991, Jesse 1995b, 316~318쪽 참조. 사회학과 사회과학의 예측성에 관한 사항은 Friedrichs/Lepsius/Mayer 1998 참조.

12\_ 동독의 건국 40주년 직전까지 동독의 안정과 지속성을 말해주는 평가들도 당연히 있었다(Wolle, 1992, 73쪽~74쪽; 슈뢰더(Schroeder)는 심지어 철저할 정도로 이 평가들의 목록을 작성했다. Schroeder 1993, 621~628쪽 참조). 그러나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된 후에도 동독에 관한 연구는 전체주의이론에서 체제고유 모델로 바뀌지 못했다. 후자는 부동산을 안정으로 여겼을 것이고 비통합화경향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Thomas 1995, 307~311쪽, von Beyme 1994, 26~29쪽, Kuppe 1995 참조. 다렌도르프(Dahrendorf)의 앞을 내다보는 인상 깊은 예측도 당시 동독과 소련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해 상이한 관점을 보여준다. “오웰(Orwell)의 소설 1984년에 근접해 있는 것 같다. 나는 항상 1984년이 지속할 수 없으며, 모든 권위주의는 자유를 향한 폭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1989년에 새로운 프랑스 대혁명(1789년)이 일어나는 것이다.” Dahrendorf 1975, 60쪽.

중간조직 부분들(협회, 정당, 미디어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식과 정신적-관습적 부분, 즉 사상과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이 첫 단계에서의 세분화와 개념의 제한은 후에 모든 차원에서 실시된 체제전환연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전통적인 틀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다(Pollack 1996, 3쪽 참조). 그러나 이것은 각 내용들을 변화한 관점에서 다루었을 뿐 아니라, 사례별로 다른 요소들과 범위들이 추가되는 것을 배제하지 못했다.

이처럼 클러스트 모양으로 보이는 체제전환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차원의 연구는 (붕괴를) 전혀 예기치 못했다는 사실과 엄청난 시간적 압박과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사건들의 속도 때문에<sup>13</sup> 다음 세 가지의 피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선 조사와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었던 연구기술의 결과들은 순전히 현재와 관련된 것이었고,<sup>14</sup> 모든 역사적인 깊이와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로 실험적인 조사의 방향은 이론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검색과 문제제기를 충분히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나 그것을 간과했다. 불확실한 틀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관리하고 결과의 평가를 도와주는 틀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거시차원에서의 사회과학적 이론규정, 즉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모델(체제이론, 행동이론, 가담자이론)은 실험적인 전략과 연계되지 않았던 것이다.<sup>15</sup> 셋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적인

13\_ 많은 학자들은 발생한 사건의 엄청난 속도를 항상 언급했다. 종종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역사라고 표현했다. Offe 1991, 79쪽, Korte 1994, 9쪽 참조.

14\_ Geißler 1993, 7~11쪽 참조. 가이슬러(Geißler)의 저서인 『변혁으로의 사회구조질서: 잘못된 방향』에서는 실험적인 패널조사를 의식적으로 집중적으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을 잘 볼 수 있다.

성격을 지녀서 특정 지역에만 초점을 두었다. 개별 사례연구는 서로 분리되었고 큰 그림으로 엮여지지 않았다. 라이쾅(Reißig)은 “(우선) 임시-연구로서 [...] 체제전환연구는 분석적이었지만, 체계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Reißig 1998, 319쪽)”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 다음 1992년 중반 혹은 말부터 체제전환연구의 두 번째 국면이 시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찰 단계와 개념화 방식이 중첩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임시연구와 구분되고,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최초의 단계들이 착수되었다.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서독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사회연구에 잘 알려진 연구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체제전환의 특수 분야를 특별히 다루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얻어진 데이터들과 진행 경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목록을 마련해 주었다. 만약 사람들이 이 경우에 집합단수를 사용하려 한다면,<sup>16</sup>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전 전제와 규범화하는 주도양상을 설정하는 현대화이론이 그 척

---

15\_ 랑에/쉬뢰버(Lange/Schröber)는 비텐베르그에서 했던 그들의 조사에서 “이상적으로는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 단위들이 있었어야 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방법론적, 실제 방법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부분프로젝트를 [...]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개별결과들을 연결시키기로 했다. 이때 별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Lange/Schröber 1993, 25쪽.

16\_ “사회적 변화의 방법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 척도들은 사회과학적인 변화이론들과 그 속에 포함된 사회개념을 제공한다. [...]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 항상 현대화 이론이 사용되었다.” Hradil 1992, 3쪽.

도로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현대화이론은 처음에는 주로 자유시장이란 경제구조의 이식이란 영역에서 사용되었지만, 곧 사회전반의 구조변화와 민주적 자기규정 형태의 제도화 영역으로 넘어갔다. “새로 편입된 주들의 경제구조를 파악하는 포괄적인 체제전환과정은 사회전반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것을 기술하고 밝히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현대화 모델이 우세하게 적용되고 있다.”<sup>17</sup>

현대화이론은 탈식민화라는 맥락에서 생겨난 이후로 지극히 다양한 변화와 보완을 거쳤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sup>18</sup> 이론적 전제조건들의 핵심 사안을 미리 준비하는데, 그것은 특히 볼프강 차프(Wolfgang Zapf)의 논문들을 통해 체제전환연구에서 다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와 연계해서 네 가지 ‘발전적 보편개념’이 주효하게 적용되는데, 그것은 18세기의 거대한 두 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역사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형성되고 실행되었던 관료주의, 자본과 시장체계,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에 기초해 초안된 법체계 (Parsons 1969b, 72쪽)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서열에 따라 조직된 관료주의, 사회국가적으로 완화된 시장경제의 경쟁체계, 제한된 임기를 가진 정부의 공공연한 경쟁민주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적 사법권의 검열 체계 속에서 이 보편개념들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현대사회의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의미를 얻게 되

17\_ Fürstenberg 1995, 116쪽. 같은 뜻으로 Reißig 1996, 245쪽; Zapf 1991; Mouzelis 1993; Geißler 1993, 63~67쪽; Geißler 1995, 120쪽; Müller 1995, 9~24쪽. 과거 동구권 나라들에서의 경제담론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Stojanow 1992 참조.

18\_ 이 같은 수정 현상에 대해 방향을 조망해주는 논문으로 Evans/Stephans 1988, 741~746쪽, van der Loo/van Reijen 1997, 30~52쪽 참조.

고, 현대사회의 통합 업적으로 간주된다(Zapf 1994, 136~143쪽 참조). 동시에 이 네 가지 제도적 복합요소는 현대사회가 불가피하게 나아가는, 이른바 ‘현대화의 브레이크다운’이 포함된 원칙적인 목표를 보여준다.<sup>19</sup>

이 같은 관점에서 현대화이론은 적어도 파슨스의 방향에서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진행되고 관철되는 사회법칙과 구조기능적인 법칙성을 규명하는 독보적인 학문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대단히 유사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론적 지위를 차지한다.<sup>20</sup>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법칙들이 혼합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해진 출발조건을 사용할 때 현대화의 특징을 이루는 차이들과 통합의 초개인적인 구조적 메커니즘이 의심할 바 없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준다(Alexander 1987, 73~88쪽). 이 같은 배경에서 차프는 체제전환연구의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본보기적으로 규정한다. “현대화과정은 변형과 전이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목표가 잘 알려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 진보적 혁신이란 공개적인 현대화과정과 차이가 난다. 이때의 목표란 현대적 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와 법치국가제도의 도입과 실시, 구현을 말한다”(Zapf 1992, Müller 1995, 14쪽에서 재인용). 역으로 말하면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상호적인 안정화의 **완결된(geschlossene)**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사회의 이 네 가지

19\_ 브레이크 다운을 장기적인 발전으로 견딜 수 있도록 결합시키기 위해 차프(Zapf) 스스로 현대화이론 속에 병합시킨 보완들에 대해서는 Zapf 1996a, 172~174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과정에서 ‘목표는 원칙적으로 알려져 있고 핵심요인들에 의해 의식적으로 추구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동일 참조문헌, 168쪽.

20\_ 부동(Boudon)은 사회적 변화의 현대화이론을 필연적인 사회적 발전의 ‘법칙들’을 전제하는 이론이라고 특징지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과학과 유사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Boudon 1994, 67~70쪽, 77~80쪽 참조.

부분요소들의 설정이 적어도 믿을만한 정도로 **사회통합(Integration der Gesellschaft)**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이 같은 사전이해 하에서 동독에서의 사회변화는 ‘뒤늦은 현대화(Zapf)’과정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40년 이상 서독 지역에서 형성되었고,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유지되던 경제적, 정치적-행정적, 상호매체적인 시스템의 제도화형태를 새 연방주로 적용하는 것을 내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1990년 5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이미 시작되고, 그 다음 이른바 경제 및 화폐통합조약에 따라 동독재건을 보조하기 위해 (비록 기간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이고 정치적 과제로 규정된 실질적인 제도와 재정, 인적 교류는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함축한다. 이 같은 교류는 서독 지역의 제도적 틀에 역방향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 없이, 가능하면 빨리 동독에서 기능할 틀을 규정하고 구축하려는 계획과 의도를 따르게 된다.<sup>22</sup> 요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에 따르면 이것은 ‘창조적 파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것으로 통일사회당(SED)에 의해 지배되던 중앙 집권적인 동독 기관들을 철폐하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서독의 표본에 따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목표사회의 규범적 형태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과정에 적용되는 이 같은

21\_ Lepsius 1990b, 216~222쪽, Münch 1984, 617~629쪽 참조. 뮌히(Münch)는 이 같은 요소들의 병합이 가져올 수 있는 경직화의 위험을 특히 강조했다.

22\_ “동독의 기관들이 [...] 조직적 구조나 인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면, 서독 측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 측의 통일과정은 의도나 결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어쨌거나 구서독의 정치적 권력관계나 기본구조를 다양하게 건드릴 수 없었고, 이렇다 할 만한 변화 없이 -통일조약의 특징적인 용어에 따르면- 편입지역으로 대되었다.” Wollmann/Derlien/König/Renzsch/Seibel 1997, 80쪽.

현대화이론 프로그램 속에는 최소한 네 가지 근본전제들이 들어 있다. 첫째는 서독의 정치적-사회적 체계가 하나의 **청사진**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그것에 따르면 **사회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 양식에서도 동독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모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Waschkuhn 1996 참조). 둘째로 이것은 체제전환상황에 대한 **외부적인(exogen)** 조종을 내포한다. 셋째로 여기에서부터 특수한 잠재적 적응력 혹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 서독의 정상성을 채택하게 된다. 동독은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더 이상 여기서 뒤흔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sup>23</sup> 네 번째로 이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혹은 거의 전적으로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구성에만 치중하고 있다. 반면 그 내부에 활동하는 주체 및 단체들의 특성과 규약은 무시할 뿐 아니라<sup>24</sup>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여건**’에 대해서도 역시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다.<sup>25</sup>

23\_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균등화에 관해서는 동독에서의 대부분의 발전들은 서독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Zapf 1991, 44쪽. 프리체(Fritzsche)도 통일독일을 바라보며 “정치문화의 변화는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적응문제로 초안되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전수되어온 정치문화를 변화된 민주적 제도에 맞추는 것은 교육과 재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24\_ 때문에 대표적으로 빈커(Bönker)와 같은 사람들은 체제전환(연구)에서 ‘우선 간과되어버린 <행위자 부족현상>’에 대해 타당성을 갖고 이야기한다. Bönker/Wiesenthal/Wollmann 1996, 16쪽. 구동독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교육을 담당하고 일을 한 몇몇 사회학자들이 반드시 현대화이론의 개념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동독과 체제전환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실존했던 사회주의의 붕괴와 그 이후에 이뤄진 사후(ex post)의 일들은 필연적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도 경직되고 고정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는데, 그 속에서 행위의 주체들은 (미심쩍은) 과도기적 의지(Prozesswille)만을 관찰시킨다. Schmidt 1992; Adler 1992 참조.

25\_ Merkel 1999, 89쪽. 메르켈(Merkel)은 이에 덧붙여 ‘고전적 현대화이론에서 간과할

적어도 1995년 초부터 고전적 혹은 신고전적 현대화이론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의 세 번째 단계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체제전환연구가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복잡한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분야와의 제휴를 가능케 할 만한 혼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단계를 앞으로 펼쳐질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한 제3단계의 특성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관찰과 숙고가 필요하다. 현대화이론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지적은 현대화이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서구의 모델을 동독 사회의 어떤 영역이든 그대로 옮겨놓기만 하면 (몇몇 뚜렷한 예외상황을 제외한) 대다수가 지지하고 수용할 것이며, 동독의 변화가 거의 마찰 없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sup>26</sup> 이는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독의 대대적 지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결코 자립적이라 할 수 없는 경제 체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sup>27</sup> 정치, 행정과 중간 영역에

---

수 없는 결핍과 눈 가리기 식 행위'를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현대화이론이 “장기적이고 글로벌하게 나타는 보편적 경향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민주화의 출발 시점을 규정해 주지 못하며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민주화를 방해하는 문화적이고 종교적 맥락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 한다”는 것이다.

26\_ 짜다(Czada)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한다. “독일 통일 과정은 아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처럼 전개되지 않았다.” Czada 1998, 24쪽. 뮐러(Müller)는 ‘늦은 현대화 정책’을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상당히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 Müller 1996, 459쪽.

27\_ 경제 발전과 서독의 재정지원(이전비용: Transferkosten)은 집중 연구의 대상이다. 1997년 슈윈(Schwinn)은 통일 이후 지원금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개별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펜랜더(Oppenländer) 1997년 자료집을 참조할 것. 또한 Pohl/Ragnitz 1999도 참조할 것.

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이 펼쳐진다. 정치에 대한 개별 연구결과들은 모두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이런 모순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당, 연맹, 법에 대한 동독 시민들의 어느 정도 뚜렷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 거리감이나 냉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그 증거로 대개 외국인 혐오주의와 반다원주의 및 반민주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극우적 폭력성이 급격히 확대되어가는 것들을 수 있다.<sup>29</sup> 현대화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까지 동독 통합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 분야에서 거부감과 거절과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해 **비통합적 경향**들이 발생하고 부각되면서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독일이 ‘분리된(이원적) 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Cavalli 1996, 554쪽. Gabriel 1997a, 17~21쪽 참조).

28\_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독지역에 만연한 불만은 1993년 시행된 KSPW-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참가자 중 1/4 미만의 사람들만이 독일연방 공화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1995년과 1996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이전에 비해 약간 증가하기는 했으나 구동독지역에서의 결과는 구서독지역에서의 설문 결과보다 현저히 낮았다.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 번의 설문에서 모두 동일하게 평가했다.” Gabriel 1996, 256쪽. 이와 관련하여 Montada 1997, 251~264쪽도 참조할 것. Pollack/Pickel은 “서독과 동독 지역 간 상이한 가치평가는 통일 이후 경험한 각기 다른 경험과 상황 때문이지 절대 ‘동독지역만의 특별한 성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Pollack/Pickel 1998, 22쪽.

29\_ 그 결과 1998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보고서(Sozialreport)는 신 연방주에서는 “약 80%의 설문 응답자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 쾰른도이체 짜이퉁(Süddeutsche Zeitung) 지 1998년 9월 4일자, 5쪽. 그에 반해 1992년 말 동독 주민들 중 외국인과 망명자를 거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34.3% 뿐이었다. 1996 슈퇴스(Stöss)가 말한 자료 해석의 문제점도 살펴보라.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체제전환연구의 방법론적-경험론적 개념을 확대해야만 했고, 이는 연구 접근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첫) 시도는 제도적이고 행정적 구조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방식을 정치, 문화적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보완한 것이었다. 정치제도는 더 이상 사회를 지탱하는 구조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로) 문화적인 사회의 생산물로 간주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제도적 영역을 일컬어 정치제도의 ‘구조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이라 칭할 수 있다.”<sup>30</sup> 정치제도는 문화적 배경, 기대, 규칙, 가치, 상징에 녹아들어갈 뿐 아니라 최근의 (정치학적) 제도이론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복잡한 상호변화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sup>31</sup> 제도가 정치, 문화적 전형을 만들고, 특징짓고, 변화시키고, 관습화 과정을 통해 행위 주체들에게 심어지듯이 다양한 주체와 단체의 문화적 해석 방식은 제도적, 구조적 구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해석되며 변화된다(Searle 1997, 123~150쪽. Berger/Luckmann 1987 참조).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 연계된 이 두 요소와 변수에 대한 이해는 보다 세분화된 구분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우선 **역사적 차원**을 추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조와 문화의 접촉은 두 차원의 항구적 상호변형을 가져오는 특별한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sup>32</sup> 그러

30\_ Eisen 1996b, 35쪽. 램부르흐(Lehmbruch)는 정치적 구조와 문화의 긴밀한 결합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두 영역의 연구가 “행정을 포함한 중간단계의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무시했다”고 우려한다. Lehmbruch 1995, 354쪽.

31\_ “총체적인 정치 체제의 운명은 제도와 이 제도 안에 행위하고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사람과 단체, 즉 행위주체 및 역할담당자들을 비롯하여 상황에 따른 특별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Waschkuhn 1997a, p. 251; Göhler 1994; Rehberg 1994도 참조할 것.

나 이 상호의존적 과정은 (대부분) 특정한 사회 발전과정에서 구현되며, 그 자체로 사회발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는 구조적, 문화적 속성의 특정한 형상이자 결합체이다. 이는 사회적 동질성이나 구조와 문화의 마찰 없는 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의 내적 차이, 배척, 분리, 분야별 긴장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sup>33</sup>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서독과 동독의 사회와 정치체제를 수십 년간 독립적인, 다른 특성을 지닌 정치적 구조와 문화를 형성한 서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전제일 것이다. “양 독일국가들은 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자기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사회화시켜서, 시민들이 축적한 경험, 삶의 체험들과 전기(傳記)는 개개인의 정치에 관한 이해를 사전에 각인시키고 정리한다. 전후역

32\_ “Political socialization is [...] the way one generation passes on political standard and beliefs to succeeding generations, a process called *cultural transmission*. [...] Political socialization shapes and transmits a nation’s political culture on from old to young. It transforms the political culture insofar as it leads the population, or parts of it, to view and experience politics in a different way.” (정치사회화는 한 세대가 정치적 기준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문화적 전승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뜻한다. 정치사회화를 통해 한 국가의 정치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많은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전수된다. 정치사회화는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가 정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한 정치문화를 변형시킬 수 있다.) Almond/Powell 1988, 34~35쪽. 이는 니트함머(Niethammer)가 동독 지역에서 1987년 실시했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또래집단별 아비투스 부르디외(Bourdieu)가 말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내면화된 성향의 체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인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세대인지, 전후 세대인지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Niethammer, von Plato/Wierling 1991, 45~73쪽 참조.

33\_ 테르보른(Therborn)이 강조하듯이 “문화-구조적 매뉴얼은 사회 발전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개별 영역에서 ‘trajectory’(궤도)를 가시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Therborn 1995, 13쪽.

사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은 정신적으로도 흔적을 남겨서 통일된 독일 내에서도 두 개의 정치 문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Feist/Liepelt 1994, 582쪽; 이와 같은 내용은 Greiffenhagen/Greiffenhagen도 주장 1993; Greiffenhagen 1997). 체제전환 과정과 함께 시작한 새 연방주로의 제도이전은 특별한 구조적, 문화적 이전과 내적으로 차별화된 제도적인 관념의 복합체에서 (전반적으로) 다르게 형성된 구조적, 문화적 습관의 이전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전체적으로 서방의 민주주의 구조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진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문화적 프레임, 해석과 행동의 세계까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지속성이란 개념에 따르면 단순히 사회기술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현존하게 된다.<sup>34</sup> 따라서 체제전환연구의 3차원 단계에서는 한편으로는 “동독체제의 사회문화적 유산(Legacies)”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 엘리트 유치와 건국 지원자를 동반한 사회문화적 짐(Luggage)”을 구분한다(Eisen 1996b, 44쪽).

이와 같은 발견적 전제는 차별화한 영역모델 또는 차별화된 차원(Dimension) 모델에 내장되어 있다. 구조와 문화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전제에 따라 세 개의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의 차원 또는 영역을 구분한다. 첫째는 정치적 행정적 제도화의 차원(거시차원)이다. 이 차원은 의회, 헌법, 정부부처, 지방자치

34\_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행동양식보다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Agh 1994, 33쪽; Lepsius 1990a 참조.

행정부처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중간 기관 구축의 영역(중간차원)으로, 이에  
는 정당, 협회, 교회 그리고 미디어가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  
회일원들의 정치적 문화적 방향성, 인식 그리고 행동방식의 차원(미시차원)을  
말한다. 이 모든 세 가지 단계들은 계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  
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sup>35</sup> 이와 같은 분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동  
일하게 혼합하고 상호 간섭함으로써 영역 내 또는 영역 간의 거부, 저항, 마찰  
로 인한 손상과 기능 불능 현상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 전체적으로는 역사  
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조건을 문화적인 세계와 연결시켜주며, 동  
시에 서로 다른 관련자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이론적인 모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모델을 통해 정치학적인 체제전환연구의 틀 내에서 신고전적인 현대화  
이론과는 현저히 다른 복잡한 연구 프로그램(Forschungsprogramm)이 만  
들어진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서독뿐만 아니라 특히 구동독의 과제는 시간  
이 흐르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한 구조와 문화 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현재**의  
변화, 과정 그리고 방해요소들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세 단계에 개별  
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동독(DDR)의 사회학적인  
재구성, 구조적인 시스템, 기관들의 구조적인 권력 [...] 그리고 구동독의 실생  
활에 나타나는 행동들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동

---

35\_ Gabriel 1997a, 15~17쪽; Eisen/Kaase/Berg 1996, 23~27쪽 참조. 이런 내용은 이  
미 1992년 흐라딜(Hradil)이 언급한 바 있다. 이때 그는 (베버 이론에 따른) 삶의 영  
위에 관한 사상을 이용하여 “주관적인 요소”를 둘러싼 체제전환과정에 사회학을 확  
충하려 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는 행동의 목표와 행동의 전략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끝나고 현대화이론에 머물러 있었다. Hradil 1992 참조.

독일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Reißig 1996, 254쪽). 이와 같은 프로그램화된 발언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을 거쳐 거대한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헬무트 볼만(Hellmut Wollmann)은 동독 지역의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중간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제도화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문화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상호관계를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독일황제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국가사회주의, 독일연방공화국(BRD)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DDR)을 통틀어서 분석하며 세부적으로 개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방법으로만 현재의 통합 및 해체 움직임, 자체개발과정, 대안적인 방법과 모방에서 나타나는 연속성, 비연속성, 연관성, 재수용, 중단과 지속성이 분명해지고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Wollmann 1995, 556쪽).

이 접근법의 장점은 밝혀진 저항들인 ‘분열’(갈등유형과 갈등노선)와 해체 현상, 긍정적인 연결 메커니즘과 통합의 성과를 밝혀내고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특정 분야, 영역 그리고 주체그룹을 특징짓고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깊게 서술되는지 가늠하게 해준다(Waschkuhn/Thumfart 1999, 15~18쪽 참조).

앞의 내용에서 이 모델과 연구프로그램의 이론적인 결과 및 비판적인 논리적 관계가 대략적으로 나타난다. 첫째로 구동독뿐만 아니라 구서독의 구조와 문화들을 포함하며, 이로써 현대화이론의 하위적인 전제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 반대한다. 우선 서독일 사회가 변화와 혁신을 박탈당한 모든 (제도적인) 사물의 척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sup>36</sup> 이보다는 체제전환이란 제도적 문화적 요소들의 위치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sup>37</sup> 또한

구동독의 문화적인 유산은 이제 부수적인 것,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또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털어내야 하는 현대화의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독 문화와 연계되기에는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립적이고 긍정적인 자원으로 여겨진다.<sup>36</sup> 둘째로 체제전환이란 과정 전체가 다양한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 집중도와 범위가 달랐으며, 상황의 장기적인 정세를 보자면 **외부와 내부 사실들의 결합과 융합**을 나타낸다.<sup>37</sup> 셋째로 새로운 연방주의 자체적인 제도의 구성을 저항이나 불쾌한 이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자체적인 그리고 맥락에 맞는 **발달잠재력**이자 대안의 길을 향한 스위칭이라고 환영하는 시각이 나타난다.<sup>38</sup> 넷째로 이미 사전에 목표의 형태와 내용이 정해진 현대화이론가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목표와 결과가 열려있는, 다양한 고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자체발전(혁신)**에 맞춘다.<sup>39</sup> 다섯째로는 이론적 모

36\_ 슈타르크(Stark)는 다음의 발언으로 비판했다, “the economi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 cannot simply be chosen from among economist’s designs like selecting wares from the supermarket or choosing the winning blue-print in an architectural competition”, #Stark 1992, 1~2쪽; Ettrich 1999, 131~133쪽도 참조.

37\_ von Beyme 1996, 314~315쪽; Wollmann/Derlien/König/Rentzsch/Seibel 1997, 20~21쪽; Thumfart 1999c, 214~216쪽도 참조.

38\_ “동과 서의 서로 다른 생활세계의 차이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평균화되어야 하는, 문 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Woderich 1996, 95쪽; Segert/Zierke 1997도 참조.

39\_ 지방 부문에 관한 자세한 조사는 Wollmann 1995a, 135~153쪽 참조; Wollmann 1997a, 311~318쪽.

40\_ “사회적인 체제전환의 과정은 따라서 만회해야 하는 현대화가 아닌 현대화 내의 대안법으로 가는 과도기과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Eisen/Kaase/Berg 1996, 29쪽.

41\_ “체제전환은 개방적인 스스로 조직화하는 진화로 새로운 것과 자체적인 것을 결과로 낳는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475쪽. Waschkuhn

델과 수많은 실험적이고 이질적인 자료들의 촘촘한 맞물림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sup>42</sup> 특히 마지막 두 항목들은 광범위한(방법론적-이론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거기에서부터 현대화이론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사회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찾는 것을 그만두거나 또는 적어도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sup>43</sup> 정치적인 변화에 관한 거대 이론(grand theory)은 (적어도 현재에는) 추구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는 연구를 이끄는 추상적 수준과 내적인 경직성이 너무 높다. 그보다는 중간 범위 정도의 작은 그리고 실험으로 입증된 논리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44</sup>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론(catch-all-theory)과는 달리 체제전환과정 중 다양한 정치적 체제의 영역들의 서로 다른 형태와 발전사항들을 묘사해주는 케이스 스터디에 기반을 두고, 맥락을 따라가는 접근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sup>45</sup> 이런 개별적인 요소들에서는 (우선

1999b, 129~144쪽; Thumfart 1999c, 216~218쪽.

42\_ 동유럽 전환체제사회의 연맹들을 참조, Croissant/Merkel/Sandschneider 1999, 337~344쪽.

43\_ “[체제전환]이 발전에 개방적인 성격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면 “결과는 [...] 실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그래서 “일반적인 체제전환에 관한 이론의 추구는 [...]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Eisen/Kaase 1996, 32쪽. 앞의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저자들은 전에는 현대화이론을 다뤘고 Parsons와 Zapf가 설명했던 일반개념 4개를 결정론적으로 논박했다.

44\_ 메르켈(Merke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발견적 가치를 가진 그 같은 이론[즉 전체론적인 체제전환이론]이 경험적 연구를 위해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Merkel 1996, 32쪽.

45\_ “Modernization theory [...] abstains from specifying any variation to/through modernity, which appears as much too crude. [...] For my part, thinking back

은) 일반적인 이론을 유추해낼 수 없고, 그보다는 상대적이고, 이질적이며, 다원화된 현상을 얻을 수 있다.<sup>46</sup>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벡/기든스/래쉬(Beck/Giddens/Lash)의 연구에 기대어 이와 같은 제한과 수정(Revision)을 ‘성찰적 현대화’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sup>47</sup> 이와 더불어서 정의된 도착사회(Ankunftsgesellschaft) 프로젝트로부터도 당연히 멀어지게 된다.

볼만(Wollmann)의 예가 보여주듯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연구 내에서도 (규범적인) **사회통합**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현대화이론과는 달리 독일이 통일할 경우 양측이 제각기 변화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정치적-문화적 체제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다양한 **통합의 형태, 방법 그리고 미디어**가 다양한 범위, 연관성, 안정성과 침투력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혹평

---

and forth between the analytical scheme, on the one hand, and the empirical issues and materials, on the other, taught me [...] the limits of social theory.”  
Therborn 1995, 358쪽.

46\_ 메르켈/푸레(Merkel/Puhle 1999, 239쪽)는 “새로운 체제전환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규범이란 구조적으로 정해진 ‘행동의 틀’ [...] 안에서 민주주의의 정착화가 성공하는지 아닌지가 구체적인 정치학적인 결정과 선호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고 했다. 체제전환이 구조적인 질서 내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 여건, 정치가들의 결정력 [...]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인 결정의 적합성”의 영향을 받게 되면, 체제전환과정은 컨텍스트상으로,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의 이론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칩칙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47\_ 이와 관련하여 Müller 1995, 35쪽 참조. 뮌히(Münch)는 현재를 이미 제3의 현대라고 부른다, 즉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행동범위의 조율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이탈과 혁신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한 가지 현대화모델에 집중하고 혁신을 규정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혼합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Münch 1998, 27~67쪽, 364~414쪽 참조.

을 가하지 않으면서 각기 다른 **해체의 형태**와 혼란도 함께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사항을 바라보면 세 번째 차원에서의 체제전이론과 연구가 세분화되었고 동시에 광범위하게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연구프로그램도 잘 짜여있으며 다양한 시도들(구조이론에서부터 행위자이론까지)을 위한 자세가 다각화되었다.<sup>48</sup> 특히 사회학적인 연구는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철학과 역사에서 한때 표현되었던바와 같이 ‘큰 이야기들’을 멀리했다.<sup>49</sup>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겠다. 사회학적인 체제전이론연구는

- (추상적인) 주도적인 검색모델과 해석모델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 대부분의 경우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고정된 도착사회를 대신하여, 대안적으로 그리고 내부 생성적으로 관여하는 경로와 발전을 합성하였다.
- 보다 복잡한 구조와 문화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모델, 정치적인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관련자들을 위한 제도적-구조적 변혁 및 증축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 따라서 개별적으로 닦아가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밑에서 위로(bottom-up)와 위에서 밑으로(top-down) 시각을 혼합하면서 위에서

48\_ 메르켈/풀레(Merkel/Puhle, 1999, 62쪽)는 “단 하나의 이론에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얽매이는 것은 [...] 인식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며, 반대로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를 절대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분석적인 ‘부가가치’와 체제전환의 발전과정에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9\_ 광범위하게 논의된 동시에 모던에서 포스트모던과의 관계와 같은 몇 가지 원칙을 다루는 제유법에 대해서는, Welsch 1988 및 Kamper/van Reijen의 수집자료 1987 참조.

부터 밑으로(top-down) 내려다보는 시각에 집중하였다.

- 역사적인 시간을 하나의 요소로 조명했으며, 습관적이고 집단적이며, 단계마다 다르고 다양한 그리고 불안정한 해석세계의 심층차원(Tiefendimension)을 설정했는데, 그것의 지속성은 제도적인 외부사항으로까지 미친다.<sup>50</sup>
- 그것은 경험으로 채워지고, 이질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내적으로 차별화된 이론을 지지한다.
-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각기 다르게 얽여져 있는 통합과 해체에 관한 시각을 뚜렷하게 했다.

이 같은 과정과 병행해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발견적 체계를 가진 체제 전환연구가 취했던 대상 영역(차원)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이 영역들의 근본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는 첫 번째 단계 이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바뀐 것이란 각 영역들 간의 관계와 작업처리 방식, 그리고 관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제도의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도 이 차

---

50\_ 이에 대해 코카(Kocka)는 통일과정 중 학문을 조사하면서 일반적으로 다음을 강조했다. “동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것의 역사는 우리 현재의 일부분이다”, Kocka 1998, 8쪽. 이와 같은 정신적-문화적 요소들이 체제전환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엘스터/오페/프로이쎈(Elster/Offe/Preuß)의 네-국가-연구에서 잘 볼 수 있다. 저자들은 네 개의 포스트사회주의 국가들인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와 슬로베니아에서 서방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체적인 발전은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음도 강조했다,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success of the transformation is the degree of compatability of the inherited world views, patterns of behaviour and basic social and political concepts”; Elster/Offe/Preuss 1998, 307~308쪽.

원들 하나하나를 다루어야 하겠고, 그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거시차원(예를 들어 헌법, 의회, 정부부처)
- (2) 중간 조직들의 중간차원(정당, 협회, 미디어)
- (3)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성향과 행동양식이란 미시적 차원과 다른 한편으로  
는 정치적-행정적 영역의 지방자치라는 미시적 차원

현대화이론의 핵심적 전제들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은 용어상으로도 표현된다. 따라서 안드레아스 아이젠(Anreas Eisen), 막스 카제(Max Kaase), 프랑크 베르그(Frank Berg)는 소련형 국가의 전체적인 변형과정을 더 이상 체제변형(Transformation)이 아닌 체제전환(Transition)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제기했다(Eisen/Kaase/Berg 1996, 27~31쪽). 이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말놀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연구의 세 번째 차원 초반에 다다르게 되면서 체제전환을 세 개의 서로 분리된 단계로 분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혁명과 옛 체제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초기단계, 좁은 의미에서의 전환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구조화와 정착화단계(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3~5쪽; Merkel 1996, 33~36쪽)가 그것이다. 이때 전환단계는 서로 다른 관련자 그룹과 서로 다른 관심사를 추구하는 그룹들 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면서 중대한 정치, 경제 분야에서 법적으로 근거한 (민주적인) 제반조건이 형성되고 실행되는 과도기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헌법에 의한 비준과 정치적인 민주화 및 경제 질서의 변형을 위한 기본제도적인 정착화’를 ‘2단계

전환단계의 [...] **마지막 부분**으로 여겼으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3쪽). 그렇다면 제3단계에서만 (유일하게) 세분화와 새로운 질서의 정착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동독의 체제전환에 적용해본다면, 이것은 ‘**전환단계**는 [...] 1990년 1월/2월에서 1990년 10월 3일까지 [이어졌으며]’, 공식적인 독일 통일 이후에는 어떠한 혼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침체가 있었다(동일 참조문헌, 7쪽).

그에 반해 체제변형(Transformation)을 체제전환(Transition)으로 대체하면서 상황이 완전하지 않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목표지향적이란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변혁과정을 결과에 개방적인, 비교적 정해져 있지 않고 지속적인 현상들로 보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때 (우선은 동독 영역에서) 어떠한 정해진 그림을 따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자체적인 발전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적-문화적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용어상으로 체제변형(Transformation)보다는 **체제전환(Transition)**이라 말하도록 하겠다.<sup>51</sup>

학문이론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목표전환, 즉 세 개의 층들은 학문적인 방향의 문제, 즉 비호환성을 담아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손게이츠(Thorngates)가 개발한 모델과 매우 잘 맞는다. 손게이츠가 세 개의 서로 다른 연구 요구사항, 즉 이론적 요구사항의 **동시적인** 현실을 원칙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칭한 것은 체제변형연구에서 체제전환연구로의 발전 과정을 시간적으로 전개된, 즉 **직선적**으로 보여주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

51\_ 이것은 물론 인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손게이즈는 학문적인 이론을 세 개의 계명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은 (1) 일반적이고, (2) 정확하고 (3) 단순해야 한다(Thorngates 1976, 406쪽). 이 세 개의 계명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 이 중 두 개만 실현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이론이 일반적이고 간단하다면, 세부사항을 묘사하고 예측하기에는 매우 부정확할 것이다. 이 세 개의 계명을 또한 보다 시각적으로 시계에 빗대어 말할 수도 있다. 12시에는 ‘일반적’, 4시에는 ‘정확히’ 그리고 8시에는 ‘간단히’가 쓰여 있다고 하자.<sup>52</sup> 일반적이고 쉽지만 부정확한 이론은 ‘10시-연구’가 되겠고, 8시(정확한) 그리고 12시(일반적인)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그러면 이것을 층모델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겠다. 첫 번째 단계(실험적인 케이스 스터디와 임시-연구)는 대략 5시와 6시 사이에 있게 된다. 이것은 개별 케이스에 정확히 적용되겠고, 이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분명히 일반화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단계(현대 화이론)는 시계바늘을 10시와 11시 사이에서 움직인다. 이 단계는 비교적 적은 전제들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매우 일반적인 차원의 결과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부정확해서 개별 케이스의 다양성이나 다차원성을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단계 또는 층(수정)에서는 시계바늘이 3시에 치우친 2시로 움직인다. 구조와 문화의 특정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럼으로 적용범위(일반성)를 중간 정도로 줄여준다. 아쉽게도 이 단계는 간단하지가 않고, 훨씬 더 복잡한 모델로 구조와 문화의 서로 다양한

52\_ 바이크(Weick)는 손게이즈 모델의 이와 같은 표현을 추천한다. Weick 1985, 55쪽 참조. ‘간단히’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컴(Ockham)의 면도날 이후로 아주 작은 전제에 관한 세분화된 요구를 이해하게 된다(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ate).

그리고 분야에 잘 맞춰진 연계 또는 해체를 만들어낸다(적용사항이 유효하다면).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내의** 체제전환연구의 (거의) 모든 가능한 이론시각들이 다뤄지고 이론적 시각의 변화들이 실제로 설명요구사항의 방향전환을 납득시킬 뿐만 아니라 왜 세 단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며 복잡해야 하는지 설명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단계를 시계비늘 모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시계는 결국 나선형이 된다. 나선형이 된다는 것은 미래가 널리 열려있다는 함축된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론적-방법론적 방향전환으로부터 여러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결과가 나온다. 이론적인 지속성과 합리성 및 신빙성에 관한 중심적인 문제 그리고 연구 자료의 질서에 관한 설득력과 같은 방법론적으로 이끄는 선택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결과들은 지금까지 적어도 정치학적인 맥락에서는 -사회학 분야와는 달리- 자체적이고 분명하게 성찰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학제간 연계를 중심으로 그 윤곽을 그리는데 치중했다. 이어서는 이미 앞서 짧게 언급한 사회학적인 이해모델로의 이동을 다루도록 하겠다.

## 2. 학제 간 연구, 해석학적 문제와 해석상의 패러다임: 방법론적, 내용적 그리고 규범적 요소로서의 통합

“해석학적 이성, 해석 그리고 역사적 이성, 이야기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엮어 놓은 유희 방식이다.”<sup>53</sup>

역사문화적 정세와 구조적 분석의 전개 및 내용 면에서 정해진 (현대화 이론의) 틀을 포기하게 되면서 정치학적인 연구는 다원주의적 방법론으로 (Mohr 1995, 156쪽 참조) 학제간 연구를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즉, 정치학적인 연구는 그것 자체로부터 이런 흐름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금 앞서 언급한 복잡하고도 새로운 발견적 이론모델과 역사문화적 및 역사구조적인 방향성을 지닌 연구프로그램을 바라보면, 이미 계획적으로 결정된 체제전환연구는 (최근에 들어) ‘제도발생적으로 고취시키고’, 게다가 ‘과정지향적’이며, 특히 ‘케이스 스터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재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Wollmann 1996a, 50쪽). 이때 ‘일반적으로 [...]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한다(Eisen 1996b, 34쪽). 다른 말로 하자면, 예를 들어 볼만(Wollmann)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해석

53\_ Marquard 1995, 59쪽.

하기 위해 그리고 예측을 내놓기 위해 추천한 토포스 리스트(Topoiliste)를 따른 역사문화적 재구성은 해석적 과정과 해석학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학적인 체제전환연구는 이어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해석적 접근방법으로 적어도 세 개의 학과들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학과들은 대부분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란 특징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적 전환 후 특정 문제와 철학자들 -해석학 혹은 ‘해석화를 위한 과정(Hermeneutisierungsschub)’ (Vielmetter 1999, 56쪽)-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찰구조를 이미 학제간 연계했고 전반적으로 통합화를 실현했다. 이 세 학문분야는 (사회와 일상생활의) 역사, (철학적인) 문학 그리고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을 다룬다. 이 세 학문분야는 모두 (해체적 문학을 포함하면서) 전문적으로 심화되고 여기서 본보기적으로 제시된 ‘버전’으로, 혹은 20년 쯤 ‘사회학 [...]이 문화학과 문화이론에 비중을 두는’ 이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체 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해석적 (그리고 구성적) 패러다임은 어쩌면 결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요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sup>54</sup> 바로 이 학문들이 최근 들어 체제전환이란 연구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래서 서로 간 관찰시키고자 하는 과정 또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 나타난다.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는 해석적 패러다임에 포함되어 있는 체제전환연구의 규칙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

54\_ Reckwitz 1999, 19쪽. 그리고 라비노브/솔리반(Rabinow/Sullivan 1987, 1쪽)은 흘러들 수 없는 말을 조심스럽게 표현했다. “Over the past decade interpretation has gained a certain currency, even prestige, in philosophical circles and in social sciences.”

서 해석학적 과정을 따른다. 정치학적 체제전환 연구는 세 학문분과에서 생겨나고 발달된 이론적인 함축, 방법론적 문제와 리스크 및 해결전략도 따라야 한다. 언급했듯이 정치학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주제 자체에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보다는 지금까지 프랑크 놀마이어(Frank Nullmeier)가 밝혀낸 바와 같이 대체로 이해되지 않았던 정보를 주는, 성찰적인 자기인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sup>55</sup> 자유롭게 표현하자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해석학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체제전환 그리고 체제전환연구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석학적 전환이 정치학에 미치는 결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이를 만족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이때 우선 모든 세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의) 핵심사항을 밝히기 위해 해석학적 행동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다.<sup>56</sup> 또한 자료조사의 중점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형성된 해석학적 접근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현대화에 관한 회의적인 자세 또는 현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을 밝혀낼 것이다.<sup>57</sup> 이와 동시에

55\_ 이렇듯 놀마이어(Nullmeier 1997, 109쪽)는 일반적으로 ‘해석적 패러다임’에 대한 의미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서독일) 정치학에서의 큰 공감이 결여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또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제기했다. “정치학은 문화적인 변혁, 해석적 패러다임을 변하면서 [...]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은 정신학, 문화학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규칙들에 속할 것이다.” Nullmeier 1999, 219쪽.

56\_ 라비노브/술리만(Rabinow/Sullivan 1987, 2쪽)은 바로 패러다임의 성공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성공은 “displace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pretative turn and ultimately empties it of its capacity to challenge the practices of knowing in our culture”. 이런 의미에서 사전준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57\_ 레크비츠(Reckwitz 1999, 24쪽)는 사회학에서의 해석학적 변화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에서 예를 들어 문화와 일상생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기억, 기억의 형성 그리고 역

모든 학과들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와 적용할 사례를 밝혀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해석적, 지식사회학적 패러다임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발상은 정치학이 재구성작업을 실시하면서 형성하게 된 학제간으로 해석한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이것에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범적 방향을 규명하는데 이를 적용해 본다. 서로 다른 세 분야의 학문들이 교차하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굳이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특히 각각의 학문들이 다루고 있는 서로 다른 대상의 수준 또는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학적 체제전환 연구와 새로운 **일상사(日常史)**와 **사회사(社會史)** 간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일상생활사는 (정치학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다른 생활의 행동범위, 의사소통 양식 그리고 구조적인 조건들을, 예를 들어 구동독-역사에서 재구성하려 한다. 이렇듯 **하나의** 판단 과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즉 참여자 각각의 행동, 의도, 배경지식, 제도화된 네트워크 내 위계질서, 능력 그리고 특별한 기대 등을 밝혀낸다.<sup>58</sup> 이와 같은 미시사(微示史)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분석에서는 엘리트 시민들이 아닌 일종의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더 큰 사회적 구조, 지배관계 그리고

---

사적인 **이야기**를 [...]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역사 편찬의 지금까지의 다양한 모델과는 거리를 둔다고 했다. 그러나 이때 현대화 이론의 중심 사상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58\_ Markovits 1997 참조. 일상생활의 역사에 관한 고전적인 책 중 하나는 긴츠부르크(Ginzburg)의 생활에 관한 보고서, 그리고 16세기 말 뮐러(Müller)의 성경해석본인 Menocchio im Friaul이다. Ginzburg 1983 참조.

문화적인 자기이해 등 주관적인 행동양식과 경험의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게 된다.<sup>59</sup> 이렇게 사회의 제도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구조 외에도 다양한 상징적 질서, 집단적 재현, 문화적 논증과 이해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Raphael 1996 참조). 따라서 일상생활의 역사는 재구성시 거시차원과 미시차원 사이에 나타나는, 주로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영화, 보고서, 판결문, 조각, 교회의 그림, 소설, 일기, 전시, 인터뷰 그리고 자료와 같은 이질적인 미디어를 사용한다.<sup>60</sup> 왜냐하면 이런 (반은 사적이고 반은 공적인) 자료에는 사회의 조직적이고 거시적인 틀을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적, 집단적 그리고 그룹을 특징짓는 ‘상상력’에 관한 다양한 형태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Patlagean 1994).

‘심성’이란 카테고리를 통해 전달되는<sup>61</sup> 상징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대립하거나 합리화하면서 결국 ‘사회적 논리의 다원성’을 밝히고 ‘낮선 것, 또는 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59\_ 이와 관련하여 Lüdtke 1989, 26~28쪽; Dehne 1989, 141~149쪽 참조. 에드워드 P. 톰슨(Edward P. Thompson)은 “후세의 엄청난 오만으로부터 가난한 양말직조공과 ‘노후한’ 수공업자를 [...] 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Thompson 1987, 11쪽. 또 고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긴즈부르크의 ‘베난단티(Benandanti)’의 토속적인 생식 제의에 대한 연구와 이들이 서서히 종교재판과 제도적인 문화로 인해 마녀로 바뀌게 된 것에 관한 연구다. Ginzburg 1993 참조.

60\_ Lüdtke/Becker의 모음집 참조 1997. 판결문, 독자편지, 영화, 기술에 관한 잡지와 만화, 음악, 광고 그리고 소설을 이용하여 동독-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모자이크를 맞추듯이 만들어낸다.

61\_ 심성(Mentalität)이란 용어는 프랑스의 아날(Annales)학파에 의해 도입된 이후 유명해졌으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Burke 1987 참조. 이 용어는 사회사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적들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계획과 내용적인 방향으로 이해되는 심성을 ‘사회적인 것을 연결해주는 세상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할 수 있다. Kuhlemann 1996, 207쪽.

열어준다(Lüdtke 1997a, 12쪽). 첫 번째 관점(다원성)을 우선 언급하자면 일상생활의 역사는 다양한 영역과의 차이와 특정 그리고 비연속적 갈등이 존재하는 합리화구조의 단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일상생활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실시하게 된 의도는 ‘이제는 하나의 역사 [...]가 아닌 많은 역사들을’ 연구하는 역사학 내에서도 중대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움직임의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sup>62</sup> 그러나 이런 생각의 난점은 역사와 (일상생활에 관한 역사를 넘어서서) 사회사를 인식할 때 하나의 통합된 세계역사들 안에서 움직이는 총체적인 과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부하려는 데 있다.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 및 관료주의적 시설과 민족국가’라는 성공스토리 또는 발전에 관한 스토리와는 반대로 손해, 파괴 그리고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뿐만 아니라 비동시성, 저항, 이질성 그리고 상반된 가치의 공존이 지금까지 사회사에서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Iggers 1996, 73~74쪽).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역사학**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스티븐 그린블래트(Stephen Greenblatt)가 주장한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모두 나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토론들은 역사의 **다원화**와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개의 중대한 문제를 연결 짓고 있다.<sup>63</sup> 첫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사(낮선 것)의 두 번째 관점이겠는데,

---

62\_ Iggers 1996, 75쪽. 비판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의견은 Mergel 1996, 59~63쪽 참조. 18세기 말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과정이 수정되었다. Koselleck 1989 참조.

(이미 정착된) 변화와 스스로를 동질적이거나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구조와 문화의 사회적 통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가이다.<sup>64</sup> 또 선택, 구성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무한으로) 연관되어 있는 질서 및 이질적인 대상이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sup>65</sup> 만약 역사가 없어야 된다면, 없어도 된다면 또는 없을 수 있다면, 그러면 방법론적이고 법칙론적 질서의 파라미터는 더 이상 (정착되어가는) 외부로부터 자료로 모이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질서의 틀에서 구분되는 다층적이고, 특히 이질적인 부분을 진지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질서의 자의성과 임의성에 대한 비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구성에 관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우선은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진실성과 적합성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내용을 (아마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63\_ 이와 같은 역사에 관한 토론은 (과장된) 드라마틱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역사학이 유연한 새로운 위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hartier 1995, 31~37쪽; Kiesow/Simon 2000; 또한 Küttler/Rüsen/Schulin 1993 참조. 그린블라트(Greenblatt) 외에도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 1988)를 언급할 수 있다.

64\_ Lüdtke 1997a, Greenblatt 1991, 7~29쪽; LeGoff 1994; Kaes 1995 참조. 낮은 것 그리고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는 르네상스와 같은 시간적으로 다른 사회인 (다원화된) 역사에 접근하는 것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시에 부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거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항상 보편적인 역사로 기록되었다.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 간의 차이를 묘사한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이야기’의 문제점이다. [...] 거대한 이야기는 항상 보편적인 역사다. [...] 다른 것과 다름은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에서는 동일함당성을 요구할 수도 동일함 보편성을 지닐 수도 없다.” Rüsen 1998, 23~24쪽.

65\_ “문제는 [...] 다음과 같다. ‘역사적인’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실들을 근거를 대면서 연결할 수 있을까?” Baßler 1995, 11쪽.

해석학적 상황에 관한 다양하고도 대부분 인공적인 성찰이 보여주거나 적어도 암시한 바와 같이, 현대의 조건 하에서 질서와 결합의 우연성은 허구의 (기술적-생물학적-진화론적) 포괄적인 것에 대한 비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sup>66</sup>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 가능해졌고 역사와 역사서술은 순수한 환상이나 헛소리로 변모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재구성 파라미터에 대해 거부권이 있는 대상과 자료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논리가 있다(Eco 1992, 139~168쪽). 그린블래트와 샤틀리에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것이 절대로 분명하지 않더라도, 대상의 상호주체적인 검증이 가능한 질서를 조율하고 그럼으로써 재구성의 합당성을 보장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이것은 보다 자세히 조명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해석학적 안건이자 상황이다. 독자는 위치, 능력, 전통 그리고 계획이란 범위에 발을 놓고 텍스트 또는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접하게 된다. 즉 동시에 이런 자료들과 관계를 이

---

66\_ “내가 대학 생활 중 배운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식은 거룩한 문학적 권위를 밝히고 찬양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결국 그 권위가 저자가 비밀스러운 천재성을 발휘해서 만들어졌건 또는 어느 텍스트에서 이상하게 등장하건 상관없이 말이다. [...] 이와 같은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혹적이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에너지를 잡아두고 고정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문학이란 권력을 위한 튼튼하면서도 지속적인 원천을 발견하게 된 셈이고, 공동의 우연성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그것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한 가지 이유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우연성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Greenblatt 1990, 9쪽. 이와 같은 우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다머의 영향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이론의 장점’이 있는 것이다. Babler 1995, 13쪽. 이와 같은 이해는 데리다(Derrida)와 푸코(Foucault)와 같은 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철학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우선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사전에 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지도 않은 것이며, 둘째로 이와 같은 거리감과 낯설음을 감정이입과 같은 고전적인 해석학적 과정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sup>67</sup> 왜냐하면 탈주관적인 전달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사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해석자의 연속성이라는 가다머의 해석학<sup>68</sup>과는 달리 존재론의 지평의 융합<sup>69</sup> 후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 형성의 비연속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철학적 카테고리, 심리학적 경제, 경험의 형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Chartier 1989, 17쪽). 적어도 상대적으로 낯선 상황에서 독자들은 해석학적 가정들을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들은 독자의 현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선점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고 동시에 의미있는 문제에 맞는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서술적 구성’을 살펴야 한다(동일 참조문헌, 16쪽).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 경험의 재형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동일 참조문헌). 그러나 이것은 표현된 것의 서술 논리가 (차후의) 표

67\_ 삶의 객관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의 배경을 살펴봤던 것은 바로 딜세이(Dilthey)의 프로그램과 문제점이었다. “삶의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 [...] 정신과학은 삶의 객관화를 다룬다. 삶의 객관화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의 것과의 관계를 내면에 간직하게 된다. [...] 그리고 바로 이런 것에서 정신과학이란 용어가 완성된다. 정신과학은 이해를 하는 범위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이해란 바로 삶의 객관화를 통일된 대상으로 두고 있다.” Dilthey 1961, 147~148쪽. 불확실성은 이와 같은 시간을 초월한 지속성에서 존재할 수 없다.

68\_ “이해란 그 자체가 주관적인 행동이 아니고, 전수된 사건 속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Gadamer 1965, 274쪽.

69\_ 만프레드 프랑크(Manfred Frank)는 헤겔의 세계관과 효과역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연계를 강조했다. 따라서 존재론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Frank 1977, 46쪽 참조.

현을 위한 조건을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의 상황적 관계가 나타나다.

이와 같은 해석의 형태는 우선 고립된 자료를 특정 상황에 적용하면서 동일하게 압축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자료들과 문맥상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의 텍스트가 어떤 보편적 문제 상황과 일상적인 것, 배열, 그리고 전체 속에서 대답하고, 기록되는지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텍스트들 또는 아주 일반적인 역사학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자료들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도의 산물’, 표현, 발자국 또는 ‘사회적 에너지’의 공시이기 때문이다(Greenblatt 1990, 10쪽). 개별적인 표현은 그에 상응하는 표현 양상들의 한 요소이다.<sup>70</sup> 해석자는 예를 들어 토포스 또는 극장, 특히 표현, 왕실의 행사에서부터 (일상적인) 텍스트를 쓰는 것까지 ‘사회적 에너지의 순환’을 따라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sup>71</sup> 이와 같은 행위의 목표는 (일상생활의 역사에서와 같이) 한편으로는 역동성, 다원성, 변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체제 간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고, 협력을 통한 의미의 이

---

70\_ 이는 이미 듀이(Dewey)가 1931년 연설에서 예술품을 예로 언급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미학과 건축사적인 요소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정치 그리고 일상적인 삶 또한 깃들여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파르테논 신전은 다양한 문화적 단계와 범위의 집합체이자 의사소통의 장소다.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점은, “생각의 특정 지점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토론을 벌였던 그리고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아테네 사람들을 떠올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국가종교와 동일했으며, 이 신전이 바로 세계경험의 표현이었던 아테네 사람들을 떠올리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품이 아니라 국가질서를 나타내는 기념비다.” Dewey 1980, 10쪽.

71\_ 그린블라트(Greenblatt)는 셰익스피어 드라마 몇 편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본보기적으로 제시한다. Greenblatt 1990, 25~65쪽.

동을 우선은 논증과는 먼 요소로 밝히고 있다.<sup>72</sup> 또 다른 목표는 문화적인 순환과 상호작용에 놓여있는 제도화된 틀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Montrose 1995, 69쪽). 이를 통해 문서들 간의 (모든 형태의) 연결고리들을 살필 필요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상황의 양상에 따라 방향이 제시되어진다. 다음 세대의 세계관에서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며, 자료 자체들을 (상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설명을 찾을 수 있다.<sup>73</sup>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뒷문으로 통하지 않고도 전수된 역사나 문화적 공간의 (시대)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 준다. 조율에 대한 비밀스러운 논쟁도 없고 상대주의, 임시적인 것, 단편적인 것 그리고 재구성의 다원성을 피할 수 없다. 해석자의 과제는 항상 평가를 내리기 위한 준비, 선택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론추측, 전문적으로 분리된 중심사상, 이해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윤리적인 사전인식의 영향을 받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방대한 자료를 동질화하려는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통해

72\_ 그린블라트는 이를 '문화의 시학'이라 표현했다. Greenblatt 1991, 107~122쪽.

73\_ 이와 관련하여 Greenblatt, Lützel 1990; Kaes 1995 참조. 뤼트커(Lüdtke)는 일상생활 역사를 위해 바로 이런 복수적이면서도 제한된 자료들 내부의 연계를 위한 맥락상의 느낌을 위해 한편으로는 임의성을 앞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비연속성을 강조했다. "우선 재건관련자들은 그들 자신도 개관할 수 없는 맥락 또는 '네트워크'에 놓이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이들 재건관련자들의 (차근차근 연구해 나가는) 움직임으로 보다 뚜렷한 형체를 갖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는 모든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형성한 수많은 연결점들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점들이 지속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며 동일한 강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보다는 특정 힘에 의해 그리고 관련자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우 취약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전달을 위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상, 암시방식이나 행동규칙이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Lüdtke 1989, 20쪽.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또한 예술사에서도 유명하다. Diers 1997 참조.

폐쇄적이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sup>74</sup> 둘째로 특히 다양한, 공동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야만) 교차되는 영역들이 보다 촘촘해지고 비판할 수 있게 되고 자극을 통해 다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75</sup> 여러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성공, 적절성, 프레젠테이션과 역사적 재구성의 ‘진실’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항목을 폐쇄적이고도 연결되지 않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들을 상대화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성은 정체성의 특별함과 특정 가치체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역사 해석의 상대주의에 의존적이다. 그 밖에 진실은 다양한 관점들 간에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방법론적 원칙이다.”<sup>76</sup> 내적인 연계는 해석자의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외적 구속력과 상대성으로 인해 명백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연성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다.<sup>77</sup>

---

74\_ 메딕(Medick)에 의하면 상대적인 우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체계적인 해석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해석의 분명함, 확실성, 결정이란 (잘못된) 암시를 일으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다. Medick 1989, 61쪽.

75\_ “원칙적인 것으로부터 이별을 고할 때는 지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들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필요도 없다. [...] 역사가가 실제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대상들뿐만 아니라 도구들과 해석을 위한 틀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역사가는 항상 사례별로 발견하게 되는 강조점, 관점 그리고 결점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학은 “규칙이나 기본규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읽기의 방식, 연결되어 있는 점, 이어지는 점 등을 중요시 한다.” Konersmann 1994, 53~54쪽.

76\_ Rüsen 1998, 27~28쪽. “해석학적 분석의 목표는 역사의 의미나 세부사항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모순 없는 설명이다. ‘해석학적 순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텍스트 해석의 ‘유희’를 관찰한 세상을 또는 이를 규칙으로 입증하려하지 않고, 다른 대안의 해석으로 보여주려 한다.” Bruner 1998, 57쪽.

77\_ 진리로 표현되는 것은 특정 관점과 용어들에 대한 관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참된 진술로 여겨지는 것은 특정 용어와 실제상황 또는 보편적인 지식사회로부터 영향을 받

이것은 역사가 단지 기표들의 야심이 없는 순수한 게임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심지어 역사를 문헌들이 수식하고 신호들이 나오는 ‘현실을 (관련자도 역사)’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자주 언급된 비난<sup>78</sup>때문에 실제적인 의도에서 벗어나고 논리적인 실

는다.” Reckwitz 1999, 21쪽.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가 문학과 역사와의 연계라는 특징을 보인다면 (Fluck 1995, 229쪽), 구조적 유사점을 보이고 지금까지는 문화사에서 (아쉽게도) 인식되지 않은 철학적-문학적 해석학을 적용해야 한다. 슈테판 오토(Stephan Otto)는 자신의 텍스트/자료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을 세웠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설명의 다원성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와 같은 다양성이 질서의 합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의 제한된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텍스트/자료] **자율적인** 표현방식에 관해서와, 이질적이고 설명적인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가 주장하는 현재의 번역 가능성은 지난 실제 상황에 새로운 표현을 위한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Otto 1992, 118쪽. 그러나 텍스트에는 또 다른 맥락에서 텍스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오토는 ‘텍스트의 상(Textlage)’이라고 표현했다, 즉 ‘문제, 동기 그리고 언어습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 했다. 동일 참조문헌, 112~113쪽. 이로써 어느 한 텍스트에서 알아낸 그 텍스트의 설명가정이 또한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텍스트의 층과 호환가능한지, 즉 연계될 수 있는지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무한히 해석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결론내릴 수 없다(infinitely interpretable and ultimately undecidable)’이라고 했던 H. 화이트(H. White)의 주장을 부인해야 한다. White 1992, 38쪽.

78\_ 앵커스미트(Ankersmit)는 (피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History here is no longer the reconstruction of what has happened to us in the various phases of our lives, but a continuous playing with the memory of this.” Ankersmit 1994, 179쪽. 이와 동일한 논리적 오류는 (피할 수 있었던) 포스트모던을 마감하는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소칼/브릭몽(Sokal/Bricmont, 1998, 929쪽)은 포스트모던에서 “혼잡한 아이디어들의 신기함, 인식적 상대주의 [...], 주관적 확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 [...] 그리고 사실과는 반대로 담론과 언어의 강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또는 더 심각한 것은 [...] 사실이 존재하거나 이에 수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칼/브릭몽은 이와 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포스트모던’ 사상이 순진한 모더니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교정수단이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 참조문헌, 929쪽. 따라서 이와 같은 발상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수를 범하게 된다. 새로운 역사기록 방법은 (역사적) 사실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이고, **우리로부터** 어떻게 어떤 문헌들이 참조되고, 읽히고, 연결되고 해석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인기가 없거나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역사가의 책임감, 노력, 배려 그리고 정직함을 강조하며 다른 관점들과도 연관시켜 보고자하는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많은 역사내용들의 핵심은 성장적이라는 데 있다. **사회역사학자**들은 관료화, 산업화, 합리화 그리고 도시화 의미에서 진행되었던 현대화과정을 인정했다. “그러나 20세기의 90년대 입장에서 이 같은 과정이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Iggers 1996, 77~78쪽).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역사사실들의 한계, 손실, 비동시성 그리고 현대의 상반된 가치공존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 합리성의 분명하고도 발전적인 특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훨씬 단순화된, 추상적인 그리고 비선형적인 구조를 추구하게 된다.<sup>79</sup> ‘신 해석학적으로’ 불린 사회주의적, 사회사적 방향

---

어쩌면 일정한 형태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불분명하지만) 생산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포스트모던의 극단적인 형태가 [...] 포스트모던에서 보다 절제된 버전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동일 참조문헌. 어느 것이 파괴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두 형태 모두 배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79\_ “그러나 또한 (예를 들어 사회학) 분석들은 [...] 현대화라는 관점 하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순차적이고, 내적으로 모순적이며, 분야에 따라 비동시성 그리고 파괴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 과정의 [...] 현실을 이해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Vierhaus 1995, 8쪽. “기록 모델의 상대성과 출처들이 상황에 의존적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다. [...] 실제로 이것은 진리에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인식의 현대적 표상을 흔들어놓는다.” Konersmann 1994, 31~32쪽. 이미 막스 베버(Max

(Rüsen 1994, 125쪽)은 그 밖에도 (또는 철저하게) 현대화 이론의 재구성이란 용어와 질서를 자료에서 찾아내지 않고, 반대로 이를 척도로 여기면서 외부로부터 자료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사적) 역사를 반대한다.<sup>80</sup>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의 발견적 틀 내에서는 성찰적 현대화를 위한 유사한 점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두 학문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로도 바라볼 수 있다.<sup>81</sup> 따라서 한편으로는 (볼만과 라이쾅의)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가 일상사와 사회사와 연관될 수 있지만,<sup>82</sup> 다른 한편 정치 구조적, 정치 문화적 요소들을 혼합하여 동독 사회를 재구성하는 사회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sup>83</sup> 이때

---

Weber)가 현대의 손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대화 내에서도 다른 길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시점에서 관료주의의 확고한 감옥이란 니체의 유명한 표현을 인용하고 싶다. “어느 누구도 그 집에 누가 살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 엄청난 발달과정의 끝에 아주 새로운 예측들이, 혹은 낡은 사상과 이상이 부활하게 될지, 또는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모든 것이 화석화될지 모른다. [...] 그러나 이럴 때는 이러한 문화발전과정 중 ‘마지막 인간’을 위해 언어가 실제상황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정신이 없는 전문인, 마음이 없는 즐기는 사람’, 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류가 전에는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단계를 상상하게 된다.” Weber 1988, 204쪽.

80\_ 이렇게 코카(Kocka) 이후 그리고 코카와 함께 ‘분명한 용어와 카테고리 체제’를 지닌, 현대화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사회사가 작용하게 된다. 이 사회사는 “특정 조사해야 하는 역사적 대상을 인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설명하게 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출처에서 모두 충분히 알아낼 수 없게 되며, 출처로부터도 유도할 수 없는 것이다.” Kocka 1977, 2쪽. 바로 이런 형태의 현대화 이론 그리고 신해석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Rüsen 1994, 88~94, 188~208쪽 참조.

81\_ 바로 이와 같은 연계를 Rüsen 1993, 19~20쪽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Hanisch 1996, 213~215쪽도 참조.

82\_ W. 파첼트(W. Patzelt) 또한 ‘정치학의 일상사회학적 재방향화’를 요구했다. Patzelt 1991, 55쪽.

83\_ “정치적 사회사”는 “사회학의 다른 형태”다. “이는 특히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구

는 모든 대변자들이 아닌 몇 명에 의해 “‘현대화’의 해석학적 질서모델은 [...] 아주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공통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결국은 현상과 데이터의 다양성과 차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sup>84</sup> 이외는 반대로 적응, 저항, 반대 또는 정치적 활동이란 ‘부분용어’들을 이용하여 광범위하면서도 추상적인 자격을 너무 빨리 덮어버리는 삶의 진실과 그룹의 관계의 다양성을 직시하라고 제안하게 된다.<sup>85</sup> 이렇게 해서 정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학, 사회사와 일상사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구동독에서 현대화 이론의 거대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보다 작은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이야기들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인 진행과정과 신중함은 **문화인류학** 또는 민속학적 방

---

조, 과정 그리고 결정의 결과들을 다룬다. [...] 90년대의 정치적 사회사는 정치에 의존적인 그리고 정치가 영향을 미친 순간들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경험과 기대의 역사에 큰 비중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적인 차원, 문화적, 사회적 지식,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표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Kocka 1995, 61쪽.

- 84\_ Kleßmann/Wagner 1993, 13쪽. 두 저자들은 “정치를 뒷전으로 미루는 너무 좁게 이해되는 사회사”를 조심할 것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동일 참조문헌, 14쪽), 그 반대로도 “사회사와 정치사는 그들의 강조점이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일지라도 대안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동일 참조문헌, 11쪽). 켈블레/코카/쯔바르(Kälble/Kocka/Zwahr, 1994, 11쪽)는 정치학적 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989/90년의 변혁과정과 동독사회의 체제전환은 [동독 사회사에 관한] 이 책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동독이 붕괴되기 전의 위기의 다양한 차원들, 즉 경제적, 생태학적, 정신적, 권력적 차원 [...], 결국 체제를 붕괴시킨 역동성의 내적 외적 추진력, 핵심적인 갈등, 기능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해체문제를 다루게 된다.” 사회사의 광범위한 분야가 현대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Oexle 1996, 34~37쪽이 밝히고 있다.
- 85\_ Fulbrook 1996, 287~295쪽. 풀브룩(Fulbrook)은 (또한) 현대화 이론과 동독 사회사의 전체주의 이론을 반대한다. 이 두 이론은 또한 역사학자가 설명하는 것에만 치우치게 되는 가정을 사전에 갖게 한다고 했다.

법론 내에서도 새로운 이론들, 특히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이론으로 나타난다. 이 학문분과는 한편으로는 체계적으로 (사회)역사적인 방법과 (상이성/해석학적 다원성) 연결되어 있는 이중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역사학자와 아주 유사하게 사회역사학자 한스 메딕(Hans Medick)에 의하면 “민속학은 낯선 경험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낯선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해독해야 한다”고 말했다.<sup>86</sup> 다른 한편 ‘민속학’은 단순히 ‘현대 사회의 인정받는 학과’로 발전했을 뿐 아니라 (Lepenies 1997, 63쪽), 그 보다는 특히 사회학적인 체제전환연구로 새 연방주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sup>87</sup> 이런 의미에서 이는 특히 C. 기어츠가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파슨스 이론의 중요한 비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학문분과 간의 일종의 가교역할을 했다.<sup>88</sup>

클리포드 기어츠가 클로드 레비-슈트로스(Claud Lévi-Strauss)와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와는 달리 알아낸 것은 낯선 문화 또는 적어도 다른 문화를 조사하는 것은 ‘절대로 그 근원까지 근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완성으로 남는다’는 것이다.<sup>89</sup> 문화에 대해 기어츠는 ‘서로 간 개입하는

86\_ Medick 1989, 59쪽. 이와 동일한 내용 그리고 기어츠에 관한 내용은 Montrose 1995, 66쪽 참조.

87\_ S. 스피벡(S. Spülbeck)과 슈텅어(Stenger)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88\_ (사회)역사와 문화인류학을 연계하는 것은 현재 독일어권에서 미루긴 했지만, 거의 토포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Burguière 1994; Mergel 1996, 65~66쪽 참조. 기어츠에 관한 내용은 Reckwitz 1999, 24쪽 참조.

89\_ Geertz 1987, 41쪽. 반면 모스(Mauss)의 ‘사회적 형태론은 낯선 사회적 환경, 그것의 전체성과 복잡성’을 민족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Mauss 1989, 188쪽.

체제'로 각각 서로 모든 사회적 행동의 연관성과 제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sup>90</sup> 다른 말로 해서 상징적 문화적 차원은 제도적, 물질적 (예를 들어 경제와 지배) 차원과 또는 개별 관련자들의 행동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호체계 자체는 전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엄격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조절되며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승인하다/승인하지 않는다, 적합하다/적합하지 않다), 관련자들이 그들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그들 행동을 결정할 기본구조를 해석하는 복잡한 참조자료로 사용된다. 각 상황에 맞추어 관련자들은 두 순간들을 예를 들어 공공행동, 예식, 표현을 위한 언어활동 등으로 묘사한다. 이때 모방적인 수용에서부터 패러디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다양성을 보이게 된다 (Geertz 1988, 140~144쪽).

민속학자는 관찰할 때 문화적인 체계를 선택적으로 묘사하고, 그의 과제는 정렬되어 있는 표현방식에 따라 해석하고 서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은 필연적으로 과정에 따라 일어나는 '해석학적 학문분과'이다. "일어난 일들 사이를 헤매다가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표현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인식과 환상을 구성하는 것이다."<sup>91</sup>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제한되어 있는 표현, 메모, 정보를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90\_ Geertz 1987, 21쪽. 이에 대해 Lipp 1996, 92~94쪽도 참조. 파슨스-기어츠 관계 (그리고 벨라, Bellah)에 관해서는 Alexander 1987, 306~329쪽 참조.

91\_ Geertz 1987, 9쪽. 근본적으로 오토가 해석학에 관한 존재론적 모델에서 말했던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주 25 참조. 알렉산더(Alexander)는 또한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기어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developed a new, more hermeneutic emphasis [...] in sociological [sic!] theory." Alexander 1987, 311쪽.

것들 또한 해석이다), 증빙 문서들, 인위적인 예술품의 관찰들은 민속학이 다른 문화의 표현적 재구성의 역사라는 구성요소들을 연결시키고, (다층적인 배열에서) 기준점 및 연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용된다. 설명을 해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사실과 허구로 나눌 수 없다. 둘은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엮여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낱말의 힘과 ‘연관성’들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해석자의 선택적, 독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sup>92</sup>

따라서 다른 문화를 진실되게, 정확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해석했는지 논할 수 없게 된다. 그보다는 ‘단순히’ 조각조각들로 그리고 사회적 논리와 문화적 체계 재구성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항상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낯선 문화의 다시각적이고 다양한, 비교적 제한된 범위를 포괄하고 다양한 논리를 (항상 이탈을 하기는 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자세한 묘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Geertz 1987, 37쪽). 역사들 간의 (그리고 다른 낯선 민속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대립은 자체적인 암시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비판받게 된다. ‘예외, 다양성 그리고 불일치가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유연할 뿐만 아니라 경험에 가까워야 한다. 짧게 말해서 (비판을 포함한) 연관성을 허용하고 보장하는 ‘깨어있고, 쉬지 않고, 적응하지 않은 상태로’ 표현되고 연결해야 한다.<sup>93</sup> 이렇듯

92\_ 멀리(Merley)는 기어츠(Geertz)와 함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descriptions are still the describer’s descriptions and the ‘dialog’ ist still edited, constructed and presented by the ethnographer”. Morley 1997, 131쪽.

93\_ Geertz 1996, 65쪽. 이미 벤자민(Benjamin 1965, 82쪽)이 통일화에 치우친 그리고 비판적인 역사철학에서 유추해낸 요구의 요점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모든 시대에서는 전달된 내용을 조사할 때 대세에 순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 모습을 상대적으로 나열한 이질성 자체는 그럴 듯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표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식론적 정확성과 낮은 문화세계를 방사선과 같은 투시력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관심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야기들의 의미와 목표는 “집단의 의식을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위해 (일부분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일부분도) 열어주는 것이다”(Geertz 1993, 138쪽). 책임감이 있고 가능하면 정직함에 대한 요구를 따르는 의사소통방법, 재구성 그리고 이들 간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요구하는 것들로<sup>94</sup> 보고서의 구성은 문화 간의 대화를 가능케 해준다. 문화를 분산해주는 과정에서는 양측에서 자체적인 문화를 인식하는데 지역적인 새로운 구성 및 (선택적이고 부분들로 이루어진) 자체적이면서도 타인의 것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양측에게 새로운 차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분산과 통합의 과정은 불확실한 것으로 남고, 어떤 경우에서도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단계별로 낮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론 확립만이 목표가 아니라 제한된, 문화적-실용적인 통합이 목표이며, 분산도 빠트릴 수 없다.<sup>95</sup>

수잔네 스피엘베크(Susanne Spülbeck)는 이와 같은 문화인류학적인 발상을

- 
- 94\_ 양 ‘측’이 상호간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우월한 또는 객관적인 담론이 없다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자신을 고치기 위해 상대방을 다각적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정직해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M. Fuchs 1998. 민족학은 이로써 역사학자들로부터 정직성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게 된다.
- 95\_ 로티(Rorty) 또는 푸트남(Putnam)에서 실용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볼 수 있다. “실용-패러다임”이란 제목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Reckwitz 1999, 26~32쪽.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을 통일 후 튀링엔 지방에 통합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했다(Spülbeck 1997, 20쪽). 순수 현재의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저자는 문화적으로 배회하는, 다양한 정치적인 체제로 인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낮선 자’와 ‘다른 이’에 대해 읽어봐야 하는 역할 전형화와 구조에 관한 해석자의 입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허구는 대체로 세 개의 서로 다른 논쟁체제로(‘유대인’, ‘슈타지-감시’ 그리고 ‘마술’에 관한 논쟁)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자체적인 역사, 논리 그리고 내용과는 직접 교류하지는 않지만 ‘인식할 수 있는 역할’들의 지속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동일 참조문헌, 240쪽).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차원들을 훑어보면서 신드롬의 핵심이 발전하게 되는데, 스피베크는 전체주의와 제도화된 통일사회당(SED)-국가의 관리사무국을 그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와 같은 결론 없이 평가를 하려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꼭 반영해야 한다. 서독일 출신 해석자인 스피베크는 외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익숙함과 낯섬, 기대와 실망, 이해와 이해할 수 없음과 같은 서로 대립되는 공간을 조사하게 되었다(동일 참조문헌, 25쪽). 자신의 생각과 낯선 것의 모순 사이를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자료들을 다시금 재배치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의 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설득력을 얻게 되고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조와 문화의 혼합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와 의사소통의 방식과 연결시켰다.<sup>96</sup>

96\_ 슈텅어(Stenger 1997/1998)도 상대적으로 낯선 것을 경험하기라는 사상을 주장했

그러나 이것은 생활과 권력을 구성하는 경험의 단계들을 멀티미디어 텍스트에서 해석학적-단편적으로 편집하는 문화인류학적인 성찰을 다시금 역사학과 (동독일의) 일상생활의 역사로 되돌려 연결한다. 따라서 니트함머(Niethammer)와 다른 학자들은 동독에서의 “민족 자체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자국의 민속학적 모험’이라고 표현했다(Niethammer/von Plato/Wierling 1991, 33쪽). 그 밖에 **문예학**에 관한 두 개의 학과 간에 가교역할을 수행한다.<sup>97</sup>

이때 뷔히너(Büchner), 플로베르(Flaubert) 그리고 니체(Nietzsche)가 벌인 역사 편찬을 원칙적으로 문학과 분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그리고 소설이나 문화인류학적 연구와 같이 사실적인 동시에 허구라는 논쟁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sup>98</sup> 그러나 그보다도 야우쓰(Jauß), 블루멘베르

---

다. 슈팅어는 우선 동독의 지식체계의 체제전환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이한 점들을 추출했다. 이것은 낯선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부터) 구성하는 것이 두 지식(학문)세계의 해체 또는 낯선 상태로 머무는 과정에 숨어있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해와 통합 가능성을 위한 지식을 (직접) 규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97\_ 다음도 또한 거의 토포스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모음집 Eggert/Profitlich/Scherpe 1990 참조. 이 모음집에서는 역사의 문학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소개될 뿐만 아니라 해석의 실례도 수록되어 있다. 뤼츨러(Lützeler 1997, 177쪽)는 “신 역사학(New Historicism) 만큼 독문학 작업을 수행할 때 적절한 방법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다원주의라는 관점에서 뤼츨러는 독문학, 문학 그리고 민족학 간에서 다음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신역사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성은 어마하다[...]. 방법들은 학문사회적인 사회사에서 유추해냈다. 실용주의[...].에서 따온 사고를 볼 수 있다. 데리다(Derrida)의 포스트구조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빅토르 터너(Victor Turner) 그리고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주장한 문화인류학의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동일 참조문헌, 176쪽. ‘일반적인 혐의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다.

98\_ 이 문제를 다뤄온 지난 30년의 과정을 예를 들어 하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그(Blumenberg), 이저(Iser)와 같은 저자들이 (사회)역사와 민속학과 같은 비슷한 문제들과 방법론적 접근방법을 언급했다. 가다머의 영향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와 해석자의 주관적-구성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보장해주는 지평 혼합이란 행위 안에서 포괄적인 연속성을 주장했는데, 야우쓰는 예를 들어 르네상스 텍스트의 상이함과 낯섬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텍스트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고 답을 주고 있는 의도, 의미와 문맥상의 문화적 의미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탈주관적인 전달행위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 그보다는 ‘현재의 이해지평 속으로 과거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낯선 지평의 초안’보다 확실히 ‘상위개념’이다(Jauß 1984, 668~669쪽).

블루멘베르그가 주장한 것은 해석자가 그의 입장, 위치 그리고 기대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 바로 뒤에 의미 있는, 그리고 해독을 위한 틀을 **고안해 낸다**는 것이다.<sup>99</sup> 이는 일차적인 행동으로 가다머의 연속성 대신 비연속성을 전승 전통에 도입해주기 보다는, 즉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계산한다는 뜻, 의미있는 전달과 그룹화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오토와 비슷하게 야우쓰도 해석학적 전달행위만 유일하게 ‘미학적으로 중재된 변화’를 통해, 즉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의 관계와 해석하게 될 사람의 내적인 상황 논리 속에서 다

---

역사의 시학을 언급했다. White 1991, 101~122쪽. 이 문제는 이미 역사의 근원지에서 19세기의 학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고 도로테 키미히(Dorothee Kimmich, 2001)가 말했다.

99\_ 블루멘베르그(Blumenberg)는 해석학의 과제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진술과 교리, 사변과 계명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즉 기록된 것의 배경에 투시된다”고 말했다. Blumenberg 1966, 444쪽.

소간 설득력있게 조절되었다고 했다(Jauß 1984, 672쪽). 이해는 묘사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전승내용을 과도하게 주관화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대체행위가 아니라, 모든 표현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경험과 논쟁에 관한 해석은 항상 (실제로도 그러하다)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며 추정으로 남게 된다.<sup>100</sup>

동시에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신 역사학(New Historicism)’에서도 드 망(de Man)이 주장한 포스트모던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두 학문분과와 해체현상에 의해 해석학적 의미와 의미의 연관성의 **통일**이 부정되기도 하고, 차이와 상이성이란 개념에 따라 조정된다.<sup>101</sup> 그러나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라는 의미에서의, 의식적으로 모든 문맥화를 거부하는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직접 견뎌낼 수 없지만) 수사학적인 해체방법을 중지하면서 해석학은 차이에 비해 단호하게 (부분으로 이뤄진) 해석해야 하는 내용을 역사적 범위에 포함시킨다.<sup>102</sup> 그리고 이와

100\_ Blumenberg 1998, 23~48쪽; 텍스트/독자, 규정/배제 간의 ‘무한의 게임’과 비슷한 내용을 Iser 1993, 405~41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1\_ 뮐러(Müller)는 “[...] 해석학적 독법을 상대화시키는 상이한 문헌을 위한 (해체주의의) 변명”이 “특히 해석학이 전제된 의미와 그 다음 입증된 의미를 [...] 찾을 때 숨길 줄 아는 조화로운 권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고 옳게 지적했다. H. Müller 1993, 105쪽.

102\_ ‘신비평(New Criticism)’은 자세히 읽기를 통해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 텍스트를 해체하려 노력했다. 텍스트의 모순적인 논리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폴 드 망(Paul de Man)도 결국 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해체는 차이점 해석학에 근접하게 된다. Fohrmann 1993, 89~95쪽; Renner 1996, 283~286쪽.

같은 범위는 리오타르(Lyotard)가 보여줬듯이 정치적인 것으로 ‘큰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면서 직접 정치적인 그리고 결국 윤리적인 함축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들이 흘러가 버린 언어놀이이고 통합적인 그리고 패권을 쥐고 있는, 큰 권력이 정치적인 상황을 결정하는 현재 국가의 자기합법성이 ‘큰 이야기’라면, 사회적, 정치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책임감과 의식적 태도를 받아들이려는 요구는 명제들 사이에서의 비연속성, 미완성, 단절과 우연성을 강조한다.<sup>103</sup> 이런 의미에서 해석학적 상이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포스트모던의 임의성과 고의성으로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문학은 우선 지적 논쟁맥락을 이해하는 것이지 사회실제적인 행위, 행동양상 그리고 관련자들의 마음가짐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시 관계 및 재구성의 관계는 뚜렷하게 또는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문학적 텍스트가 시대를 특징짓는 사회의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즉 포퍼(Popper)가 주장했듯이 사회사적 세계의 한 구성요소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04</sup> 또 다른 하나는 문학작품에서는 사회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상황, 사고, 문제 그리고 처리방법, 일종의 ‘상상’을 찾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은 사회 전체의

103\_ “정치란 직접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문장의 범위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모순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Lyotard 1989, 234쪽. Lyotard 1981; Jameson 1987; Welsch 1988, 227~231쪽; Derrida 1999; Mouffe 1999, 29~34쪽; Thumfart 1996b, 10~11쪽; Thumfart 1999a; 211~213쪽.

104\_ “사회적 해석학적 의미의 지평을 보다 자세히 해독할 수 있도록 문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은 사회의 문화적 기억의 일부다.” Hanisch 1996, 227쪽. 이를 실제로 보여준 내용은 예를 들어 Hanisch 1994; B. Wagner 1996이다.

논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자신만의 합리성, 역사, 생산방식을 가진다. 또한 문학은 사회의 단순한 거울이 아니고,<sup>105</sup> 문학은 당연히 시간의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속해있다. 그래서 문학과 정치적 문화연구의 일부는 문학을 (넓은 의미에서) 통일 전후 시대의 정치적-제도적, 문화적 상황을 가늠하는 측도로 삼는다. 카를-루돌프 코르테(Karl- Rudolf Korte)는 (다소 강한) 가정을 내놓았다. “소설은 국가의 상태에 관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시대정신의 프롬프트로 문학은 [...] 시대의 진단들을 내놓는다. 독일의 상황에 대해 문학적 비평들은 농축된 형태로 통일의 정치적인 논쟁들을 내포하고 있다.”<sup>106</sup> 암호를 해독할 때 개별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sup>107</sup> 그리고 그것이 문학과 사회적, 정치적 주변 분야에 대해 납득할만한 배열에 이르게 되든지 간에, 각각의 문학적 해석이 해석학적으로 다소간의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된 해석세계에서 제각기 전문화되고 서로 다른 정치적인 문학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텍스트의 배경을 투영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다.<sup>108</sup>

105\_ 이 내용은 이미 안토니오 그람스키(Antonio Gramsci)가 알고 있었다. 동독-문학에 관해서는 Emmerich 1996, 15쪽 참조.

106\_ Korte 1996, 27쪽.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 문헌은 Hanke 1998; von Bormann 1998이다. 이레네 디슈(Irene Dische) 그리고 베르너 슈타인베르그(Werner Steinberg)를 실례로 사용한 문헌은 Klockmann 1996.

107\_ 문학은 예를 들어 문화정치적, 제도적, 교육적, 형식적, 내용적 또는 수용적으로 읽을 수 있다. von Bormann 1998, 32쪽.

108\_ 그라이너(Greiner)는 ‘문학적 과거의 표현을 독서방법의 관찰’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어땠는지 결정하는 사람은 무엇이 어떤 것인지도 결정할 것이다.” Greiner 1990, 59쪽. 특히 미미크리(Mimikry)의 동독 문학에 관한 다양한 독서방법, 적응 그리고 이탈은 모음집 Rütther 1997, 249~478쪽 참조. B. 바그너(B. Wagner)는 또한 “서면의 출처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 역사는 [...] 문학의 독서기술, 이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듯이 일상사, 문화인류학적 그리고 문학적 해석학은 이미 브로니스로프 말리노브스키(Bronislaw Malinowski)가 시사했던 사상에 바탕을 두면서 사회를 다양한 층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와 자료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문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sup>109</sup> 그러나 이것은 사회가 텍스트란 뜻이 아니라 사회와 그의 사회적인 세계가 ‘상징적인 질서’를 통해 문자 체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즉 사회가 이런 세 학문으로 인해 **상징적 질서**에 관한 문자 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sup>110</sup> 역사적 형성으로 사회는 각각 특별한 관점에서 사회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을 소개하고, 묘사하고, 강화하고,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생산되는 제도적인 대표적인 전형, 문화적인 암시세계 그리고 그룹 특징적인 행동양식 간의 간섭의 짜임으로 볼 수 있다.<sup>111</sup> 따라서 이들은 원문 그대로의 고문서 또는 텍스트와 유사한 (기호로 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외에는 실제상황이 없고,

---

과정의 해석학적 점검에 의존적”이라고 강조했다. Wagner 1996, 29쪽.

109\_ 말리노브스키(Malinowski)는 ‘많은 실들이 서로 엮어진’ 트로브리안더 협회의 ‘섬유’에 대해 언급했다. Malinowski 1981, 27쪽.

110\_ 레비츠(Reckwitz)는 해석적 패러다임을 설명할 때 해석학적 사회학에서 중요한 세 개의 범위 또는 출처를 강조했다. 이 세 출처는 그에게 있어 역사/민족학(실용-패러다임, 예를 들어 Geertz), 구조주의(Glaserfeld, Luhmann) 그리고 문화학적 기호학(텍스트 패러다임, 예를 들어 Derrida, de Saussure, Eco, Foucault)이다. 이것은 필자가 조사하거나 규범을 선택할 때도 대체로 따랐던 것과 일치한다. 레비츠는 또한 “모든 세 가지의 표현 형태를 위해 사회는 상징적 질서로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Reckwitz 1998, 40쪽.

111\_ “사회적 실제를 조사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실체’와 (언어적 또는 그림문자적인) ‘표면’ 간, 그리고 현실의 자체적인 입증, 즉 개별적인 행동과 문법에서의 사회적인 연관성을 위계질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와 텍스트, 그림문자 또는 제스처에서 보이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Lütke 1997a, 12쪽. Rabinow/Sullivan 1987, 6~7쪽도 참조.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상징 질서를 통해, 예를 들어 언어표현의 형태로 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상은 특히 문화인류학, 사회학의 특정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에 의해서(도) 확장된다. 왜냐하면 지난 사회를 기록된 상징적인 질서로만 바라보도록 확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화된(구조적, 문화적) 구조와 행동들도 주로 언어적으로 기반을 이루고, 구조를 이루며 중개자로 소개된다. **사회와 그 사회의 제도 및 이런 맥락에서 행해지는 행동들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의 생산물이거나 행동을 이끄는 구조에서 언어적인 텍스트를 따른다.**<sup>112</sup>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급하고 소개했던 재구성 학문분과들에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게 된다. 바로 현실에 대한 집단적인 언어적인 구성인 셈이다. 이와 같은 집단적인 방향은 결국 해석적 패러다임의 형태로 되어서 사회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게 되어 순환계를 이루게 된다.

우선 기본적인 틀을 묘사하자면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이란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원래는 동일한 (새로운)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되는) 이 세계의 사물들은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물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

---

112\_ 이와 관련하여 Levi-Strauss 1981 참조. U. 에코(U. Eco)는 전체적인 인간문화를 (자연과는 달리), 즉 “대상, 행동양식 그리고 생산관계 및 가치관계”를 “정확한 기호학적 규칙을 따르는” 기호학의 현상이라 했다. Eco 1990b, 41쪽. 그리고 알렉산더는 철학자 폴 리코르(Paul Ricoeur)와 클리포드 기어츠 간의 연관성을 유추해냈고, 이 둘을 결국은 사회학과도 연관시켰다. “Sociology, to use a concept of Ricoeur’s [...], would have to be more concerned with action as a **text**, but it should not forget **context** in the process.” Alexander 1987, 311쪽.

들 사물 중의 몇몇은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산되는 것들이란 뜻이다.<sup>113</sup> 이와 같은 의미부여는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언어적으로 기반을 잡고 있는 상호작용, 세계의 의미부여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을 형성하고 생성해내는 발전기이다.<sup>114</sup> 서얼(Searle)의 이론에 연결하여 설명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세계의 사물들을 들어 개, 고양이 그리고 산과 같이 언어로부터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류와 언어에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경제학자들 또는 (정치적인) 기관들과 같이 직접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되는 부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기능을 지닌 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적) 상징화라는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엇은 무엇을 뜻한다’라는 관계가 나타나는 상징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제 존재하는 사물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현실은 최하위 단계에서 본질적인 규정에 따라 사물에 의미를 부여

113\_ 카르납(Carnap), 쉘릭(Schlick) 그리고 베르그만(Bergmann)을 포함하는, ‘언어적 전환’이란 표현이 탄생하게 된 비엔나 협회의 원래 의도는 논리적인 통사론에 따라 언어사용을 분석하면서 철학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Rorty 1992, 4~15쪽. 이와 같은 변혁에서부터 언어 및 그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동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사상, 언어 또는 ‘which constitutes human knowledge’ 그리고 ‘interfaces between the knowing subject and the world’하는 ‘공적 논쟁’으로 이끌어졌다. Hacking 1975, 187, 53쪽. 이제 다음으로는 재현이란 용어가 있는데, 재현의 방법을 결정하고 재현 없이도 가능할 지점이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한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사상은 예를 들어 구드만(Goodman 1984, 134~170쪽) 그리고 로티(Rorty 1989, 25~47쪽; 1994)가 포기했다. 이것은 언어가 사물에게 우선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114\_ “언어는 하나의 세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우리는 언어가 없었더라면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사물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를 것이다.” Schnädelbach 1985, 71쪽.

하게 된다. 이는 곧 잠재적 관련대상의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들은 개와 고양이 그리고 별을 창조해낼 수도 없고, 단지 개와 고양이 그리고 별들에게 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가능성만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화는 존재론적 카테고리인 돈, 재산 [...] 그리고 정치적 기관들을 만들어낸다”(Searle 1997, 85~86쪽). 우리는 고양이나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고양이나 사람으로 명명할 때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연방총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연방총리’라는 의미를 부여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시 총리가 되기에 필요한 규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게 되며, 또 다시 이 규칙들이란 예를 들어 법규를 집단적으로 확립하여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탄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등이 정해져야 한다. 이 모든 제도적인 사실들은 (서얼의 존재론적 카테고리) 결국 (또 다른) 의미 체계가 (상징적인 질서) 생성되고, 설치되고 그리고 제도화될 수 있는 언어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sup>115</sup>

그러나 동시에 언어를 통해 세계를 설계하는 주체들은 스스로를 이와 같은 주체로 만든다. 주관성 또는 특정 합리적인 주관성은 필수적인 무엇인가로

---

115\_ 이와 같은 입장은 또한 (Wittgenstein과 관련하여) 최근 해석적 정치학을 위한 출처로 거론되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대변했다. “문화를 정의하는 의미의 조직은 테일러의 이론과 함께 [...]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인 실체에 의미와 형태를 부여해주며 의미와 용어의 대조적인 (그리고 규범적인) 영역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 정신의 본질적인 장소는 언어다.” Rosa 1999, 168쪽. 이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와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모든 기관의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언어를 언급했다. Thumfart 1994.

표현의 수단으로 연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언어 밖 또는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Ch. 테일러(Ch. Taylor)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것들과의 주관적인 관련짓기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언어유희 내에서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니체의 철학이 나온 이후 관점주의적이고, 언어적으로 생겨난 이미지 속의 세계에 관한 (집단적인) 해석과 소유를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지 않은 채<sup>116</sup> 사회학적 이론 형성에서는 최근 들어서 정치학에서도 적어도 ‘혼적’은 찾을 수 있는 일종의 해석적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17</sup>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사회학적 토론과의 연관성이란 틀 내에서 우선적으로 알프레드 쉬츠(Alfred Schütz), 페터 L. 베르거(Peter L. Berger), 토마스 룩만(Thomas Luckmann), 조지 허버드 미드(George Herbert Mead) 그리고 헤르베르트 블루머(Herbert Blumer)가 주장했으며, 철학적인 이질적인 출처에서 나오는 사회학적, 보다 정확한 학문사회학적 이념에서 나타나게

116\_ 이와 관련하여 Abel 1993의 뛰어난 설명도 참조. 이것은 사실 르네상스의 철학적 휴머니즘이 이미 만들어낸 사상이기도 하다(Grassi 1973). 이때 르네상스의 정신철학은 유아론(唯我論)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를 주제로 삼지 않았다. Thumfart 1996a, 472~479쪽.

117\_ Nullmeier 1997, 101쪽. 놀마이어(Nullmeier)는 정치학이 “지금까지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일 참조문헌. 이것은 그러나 정치적 이론과 사상의 역사 내 규범적-우연적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제해석학적 설명만 있었기 때문이다. Ball 1995; Gebhardt 1999. 겐하르트(Gebhardt)는 피글린(Voegelin)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학적 해석학의 규범적-인류학적 관점에서 실험에 중점을 둔 정치학의 관점주의를 이끌어낸다.

된다(Dewey, James, Husserl; 전반적인 내용은 Abels 1998 참조). 거의 고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헤르베르트 블루머는 상징적인 상호작용이란 표현을 빌어 해석학적 패러다임은 세 개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람들이 ‘사물’을 대할 때 사물이 소유하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사물’이란 사람이 그의 세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것은 나무와 의자와 같은 물리적인 사물들일 수 있다. 또는 어머니와 판매원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와 적과 같은 사람들의 분류일 수 있다. 학교와 정부와 같은 기관일 수 있고, 개인적인 독립성 또는 진실성과 같은 중심 사상일 수 있다. 명령이나 소망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일 수 있으며,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은 이와 같은 사물의 의미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파생시킨 것이거나 생성된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가정은 사람들이 만나게 된 사물을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충돌들을 잘 다루고 변형시키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sup>118</sup>

따라서 주관적인 의미부여는 집단적인 언어로 표현한 지시 그리고 상징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갈등에 빠진 투쟁적인 과정에서는 해석을 탄생시킨다. 이와 같은 충돌은 항상 존재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계속적인 제도화와 비제도화 과정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sup>119</sup> 따라서 끝없는 충돌

---

118\_ Blumer 1973, 81쪽. 이것은 또한 서얼의 의견이기도 하다.

119\_ ‘질서의 원칙과 유효한 요구사항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제도화를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가치와 규정의 양식화’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Rehberg 1994, 56쪽) 표현을 둘러싼 투쟁은 탈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은 통합과 해체현상이기도 하다.<sup>120</sup> 모든 다양성을 가진 ‘현실’은 관찰력이 있는 새로 결합시킨 사회의 사회적인 해석이다(Charon 1998, 178~189쪽). 이중 2격(Genitiv) 문장구조는 모든 개별 가담자가 예를 들어 나이와 같은 상황들을 드러내고 이의를 제기하여 특정 제도화된 해석체계로 자신을 이해시키려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해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을 해석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이론이라고 표현한 ‘사실’들은 (해석의) 해석체이다. “이론의 형성은 해석 과정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대상의 차이를 해석자로서의 원칙적인 대등성에 유리하게 배척한다”(Nullmeier 1997, 106쪽).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사회의 사회학적인 분석이 해석과 관점의 특정 ‘영역’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비슷한 다른 사회의 사회학적인 이해가 해석적으로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표면적인 그리고 가능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달해주는 역사적, 민족적 그리고 문학적 해석학,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과 ‘정황’의 사회학적, 방법론이란 이론의 이해 간의 차이를 해소해 주었다(Vielmetter 1999, 63쪽; Reckwitz 1999, 43쪽). 만약 그렇다면 세 개의 규칙의 틀 안에서의 **해석학**이란 성찰단계에 의존적인 모든 진술들은 **또한** (해석학적으로 진행되는) 정치학적 이론을 형성하고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연구프로그램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체제전환연구의 세 단계에서 이미 알아낸 결론들을 반복하여 드

120\_ 부르디외(Bourdieu)가 차별화와 통합과 같은 구별을 집단적인 표현 차원에서 잘 보여줬다. 부르디외가 사회와 일상생활사학자들로부터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질 것이란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Gilcher-Holtey 1996.

러내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검증된 학제간의 **논증의 대열**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이상을 말해주는 체제전환연구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에 관해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체제전환연구는 동독과 서독의 자기해석과 구조와 문화의 표현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체제전환연구는 현재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표현할 때는 통합적인, 추상적인, 내용적으로 결정된 전제를 사전에 세워서는 안 된다.
- 체제전환연구는 정치적 체제의 서로 다른 지역과 요소들에 집중해야 하며 모든 부문에 대해 특별한 집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체제전환연구는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따라서 체제전환연구는 맥락에 예민하게 그리고 대상에 특화되게 다양하게 작업해야 한다.
- 체제전환연구는 연구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표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많은 묘사들이 혼합되거나 교차된 후에야 결정화될 수 있다.
- 한편으로는 개별 분야에 특화된 분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의 부분들 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체제전환은 다양한 해석적 설명에서 자료의 종류의 차이(데이터, 텍스트, 필름 등의 수적이고 질적인 차이)를 완화시켜야 하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것으로부터 실험적인 실증주의적인 접근방식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

- 기는 복합적이고, 학제간으로 고안된 진행방식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sup>121</sup>
- 체제전환연구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자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과정을 따라야 한다.
  - 또한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연구는 통합과 해체과정이란 주제를 중심사상으로 삼아야 한다.

#### <방법론적, 내용적 그리고 규범적 요소로서의 통합>

체제전환연구란 통합과 해체를 다루어야 한다는 마지막 항목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정적이고 결국 체계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역사적 표현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화 및 비제도화 과정의 대립과 혼합을 통한 문화와 구조의 실제역사적인 차원과 가깝다. 그러나 정치학적 연구방법 때문에 계속 강제성을 지닌다. 해석적 접근 자체에서, 게다가 서로 간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관점에서 통합과 해체란 개념이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다. 방법에 관한 토론에서 재구성을 위한 (상대적인) 일관성이란 다른 관점들을 지닌 비판적인 결합과 연관성에서 행해지게 되며, 여기서부터 동시에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러 관점들의 광

121\_ 하우스저(Hauser) 등은 “포스트사회주의적 체제전환의 내용 및 과정적 차이는 서방과 다른 현대화 및 ‘현대화 이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에 비해 [...] 이론적 확장과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체제 전환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하고 분석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해결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역설한 것을 배경으로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가장 전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최소한 근접하게 만족시킨다고 말한다. Hauser/Glatzer/Hradil/Kleinhenz/Olk/Pankoke 1996, 476~477쪽.

범위한 관점으로의 **통합**이라는 **방법론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다. 즉, 통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을 중심으로 다른 관점들과 관리를 상호간 그리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방법으로 한편으로 연결가능성과 연계들을 찾게 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점들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적 요소는 동시에 **내용적인** 것이기도 하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접근과 구분, 통합과 해체 및 재통합, 적합성과 비적합성 그리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을 위한 **과정**이다.<sup>122</sup> 이것은 특히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후의 상황을 (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변혁과정 중에는 사회적 정치적 통합의 기반이 바뀌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통합 시 발생했던 형태들은 대체로 모두 그들의 효력을 상실했고, 다른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조성해야 했다.<sup>123</sup> 어떤 사회적 정치적 분야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통합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가 사회학적, 정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

122\_ 놀마이어(Nullmeier 1999, 233~236쪽)가 정치학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것을 담론분석의 한 방법으로 추천했을 때, 이것은 해체와 재통합의 내용적인 과정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이때 담론분석의 가능성이란, '변화'를 건설적으로 보여 주거나 '인정받은 의미의 공간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정치적 핵심 관련자가 해석과 방향성을 갈등의 형태가 바뀌는 결과를 낳도록 어떻게 바꾸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123\_ "Major historical changes are 'revolutionary' to the extent that they alter the basis of unity and integration of a society. [...] The outcome of such changes is a new 'social contract' that involves some widely shared understanding at the basis of the new order [...] how individuals and functions of a society shall be coordinated and held together." Offe 1996a, 10~11쪽.

그러나 해석학적 재구성의 방법론적 내용적 요소는 동시에 **규범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다. 사회적 정치적인, 그리고 기관들에 내재된 상징적인 질서는 실제로 규범적으로 특징지어졌다. 관점적인 해석학에 관한 고찰들은 관찰자와 관찰된 것, 이론과 대상범위가 원칙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해석학적 관점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회의 상징적이며 규범적 질서에 귀속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124</sup> 이것이 역사적 해석에 관한 이성의 특징이다. 사회학적 분석은 그것의 복잡성과는 상관없이 우선 규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관점의 해석학은 역사 문화적 그리고 역사 구조적으로 ‘(현재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낯설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해석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해력의) 해석의 과정 내에서 양측 또는 파트너가 이해를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낯설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성공적인 또는 실패하는’ 이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학적인 체제전환연구에 적용하면 이것은 방법론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구조적, 경제적 과정과 형태통합의 재구성은 항상 ‘성공적’인, 그리고 ‘실패한’ 통합 및 해체라는 규범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25</sup>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야에서 그리고 어떤 대상이 성

124\_ 언어철학적, 인식론 분야에서 이것은 브랜덤(Brandom 2000, 863~901쪽)의 핵심 이론으로 사회적 이해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125\_ “사회학에서의 질서 또는 통합이란 용어는 아마도 ‘진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특정 규범적인 요소, ‘성공적인’ 또는 ‘성공적이지 못한’ 사회화에 대한 포괄적이거나 명확한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Peters 1993, 24쪽.

공적인 혹은 실패한 통합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위자와 이론들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통합하는 의사소통과정과 이해과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고정된 청사진은 해석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의 비판, 고집 그리고 혁신은 항상 긍정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sup>126</sup>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체제전환연구에서 암시한 해석적 과정의 이념을 이런 과정이 동반하는 논리적인 관계를 설명하여 규범적인 실행을 획득하고 입증해야 한다.<sup>127</sup>

따라서 ‘규범적 통합’에 관한 정치학적 논문은 정치체계의 다양한 분야들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정치체계의 실질적인 요소들과 분야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스별, 주제별 역사적 세부내용, 전사(前史) 그리고 초기조건을 다루어야 하며, 자료의 논리를 될 수 있는 한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다른 관점들도 고려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건들을 선택하여 토론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하고 개별

---

126\_ “이렇듯 비판이 관점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관점의 차이에 연결할 수도 있고 차이와 다른 것의 존엄성을 위한 공간을 주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다.” Rösen 1998, 29쪽. 긴즈부르크(Ginzburg)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규범적 중심사상이라고 적었으며, “관점이란 용어는 (그리고 또한 해석(Interpretation)) 더 이상 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 간의 장애물역할을 하지 않고, 그보다는 만남의 장소, 말할 수 있는, 토론하고, 싸울 수 있는 장소로 변했다고 했다.” Ginzburg 1999, 231쪽.

127\_ 따라서 나는 ‘오래 그들에서만 머물렀던 규범적 고찰이 [...] 다시 부각되는 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동독일 체제전환과 연관해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Glaeßner 1999, 598쪽.

주제들의 복합체에서 가능한 연결고리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폐쇄적이거나 조화롭게 엮어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줄 뿐만 아니라 해석이란 계속 연구해야 하는 선택적인 사실을 생각하게 해준다.<sup>128</sup>

동시에 이와 같은 작업은 체제전환의 목표가 규범적인 통합이란 관점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수용이란 튼튼한 제반기관을 통한 통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게, 분야에 특화된, 다층의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는 접근, 고집 그리고 혁신의 통합과 해체의 방식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서로 전혀 다른 통합된 그리고 해체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실제 역사적 과정의 다양성에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매우 광범위한 프로젝트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책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적어도 이 프로그램의 몇몇 핵심적인 분야들을 설명하도록 노력했다. 이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제외했고, 이 책에 언급한 선택된 내용을 독자를 비판한다고 해도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며, 결국 전체적인 연구과정의 역사와 논리의 다원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28\_ “그러나 학계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술과는 달리) 연구한 것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운명이다. 이것이 바로 학문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다.” Weber 1973, 592쪽.

## II 규범적 통합의 기본요소



지금까지 체제전환연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층들을 드러내고 구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대안적인 또는 추가적인 접근방법을 다루었으며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규범적인 통합을 유추해낸 후, 이제는 문제점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다 유용한 실제상황테스트로 적합한 연구접근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규범적 통합의 기본요소들을 구상하고 조사방법을 명확하게 할 것이다. 본인은 현실의 구조적인 모델화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규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의 발전과 의미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98년 추운 겨울 당시 독일의 시간의 파노라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8년 12월 7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사설에서 라인하르트 뮐러(Reinhard Müller)는 통일된 독일이 아마도 ‘행복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Müller 1998). “1965년 기민당(CDU)의 뒤셀도르프 성명에서 ‘독일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행복한 국가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은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된 후에도 행복해지지 않았다. [...] 1989년과 1990년의 일

회적이었던 부흥의 분위기는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았다. 그 당시에는 동독에 있는 독일인만이 그들의 자유에 대해 기뻐했고, 서독에 있는 독일인들은 이제 제약 없이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 서유럽 외국인들이 동독에 있는 같은 민족 사람들보다 더 가깝다고 설교했던 사람들 또한 기쁨에 휩싸였다. 당시 독일인들은 거의 모든 희생을 감수할 태세였다. 그러나 서독인들은 전체적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란 그들의 절제된 약속을 고수했다. [...] 장벽이 무너지는 날의 분위기를 다시는 재현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그 당시에는 법적인 그리고 행정기술적인 영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었던 통일을 실제로 ‘완성’시킬 기회가 존재했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때 서독 잠정협약으로 설립된 분단국가인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제일 중요한 국가목표를 완성시키는 것이겠다. 그것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이전된 재원들은 당연한 것들이라 했다. 그리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서독인들은 실제로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동독에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할 것을 요구하지만, 고마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서독인들은 오히려 통일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에 대해 사실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캐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통일되지 않았더라면 서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찾아오지 않을 이와 같은 기회를 동독에서 펼칠 수 있는 (사업)가능성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금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 지역들인 튀겐(Rügen), 작센 스위스(Sächsische Schweiz) 또는 오버라우지츠(Oberlausitz)에 대해서도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순간에서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았던, 다른 일상생활을 보냈던, 정치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전혀 다

른 이해를 갖고 있는 동족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 아직까지 존재하는 분열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 동독은 서독에 법적으로 흡수되었기는 하지만 옛 서독은 옛 동독의 편을 들어주기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 선출된 총리는 바로 이러한 점을 그의 정치적인 이념의 핵심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연방주의 경제적인 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한 바가 없다. 현재 독일은 매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동독에서 그렇다. 동독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한 산업분야 전체가 사라지기도 했고, 서쪽과는 달리 실업률이란 통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이었다. [...] 그러나 경제가 전부는 아니다. 서독일인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동독인들을 ‘오씨(Ossi, 동독 출신 독일인)’라 부를 때 불쾌한 생각이 든다면 내적인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고, 독일은 행복한 국가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이것은 생각해보아야 하는 성찰들이지만, 이것으로 구동독의 국가독재와 정당독재로부터 나왔던 ‘부당성 문화(Unrechtskultur)’를 지목할 수는 없다. 1998년 12월 7일 튀링어 란데스차이퉁(*Thüringer Landeszeitung*)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sup>129</sup>

“슈타지-문서. 에르푸르트 시민들의 관심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에르푸르트 국가안보문서를 위한 외부사무국에는 에르푸르트에서만 130,550개의 신청

129\_ “슈타지(Stasi, 구동독 국가안전부, 비밀경찰)-문서보관소’의 문이 열렸다. 에르푸르트 문서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튀링어 란데스차이퉁(*Thüringer Landeszeitung*), 288호, 1998년 12월 7일, 1쪽.

서가 접수되었다. 이는 문서검열 담당자인 요르그 피텔코브(Jörg Pittelkow)가 토요일에 실시되었던 개방일 행사에서 말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111,292개의 문서를 상세히 분석했다고 한다. 특히 비공식 슈타지-직원들의 이름을 해독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약 1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이 작업은 아직도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 문서검열을 위한 신청서의 수는 일 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매달 약 800개의 새로운 문서가 추가되었다. 통일 이후 확보한 문서들의 검열 작업은 겨우 74% 진행된 상태다. 나머지 문서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서류더미로 쌓여있다고 한다. 이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모든 문서를 보려면 앞으로 10년은 걸린다고 보관소장 에델트라우트 모르겐로트가 말했다. 따라서 슈타지라는 주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여전히 최신 뉴스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외에도 튀링어 란데스차이퉁에는 다른 기사들도 실렸다.<sup>130</sup> “민사당(PDS)의 계획인 ‘벽을 보호한 자들’, 그리고 통일사회당(SED)-지도부들을 사면하고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분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유대인 주정 부단체 위원장인 볼프강 노센(Wolfgang Nossen)은 튀링어 란데스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끝장을 보는’ 기질을 경고했다. ‘나치-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없듯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월 600마르크에 달하는 구속 보상에 대해 노센 위

130\_ Harmut Kaczmarek, “새들은 분개의 목소리를 요구한다. 민사당(PDS)은 통일사회당(SED)-범인들을 배상하려 한다”, 튀링어 란데스차이퉁(*Thüringer Landeszeitung*), 288호, 1998년 12월 7일, 1쪽.

원장은 아직까지 희생자들도 보상받지 못한 현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컬었다. [...] 주의회 의장인 프랑크-미하엘 피츠(Frank-Michael Pietzsch)는 민사당(PDS) 계획에 대해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들이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밀케(Mielke)가 수천 마르크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동독시대 체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통일사회당(SED) 지도부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이하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에 보도되었던 이 세 개의 신문기사는 단지 **상황적인 시발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장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준다. 즉, 규범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과 예나 지금이나 독일통일과정에서는 심각한 문제와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의 규범적인 통합에 관한 질문들은 이제 정치학적으로 새로운 연방주에 관한 분석적인 점검과 조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사용될 토포스는 거시, 중간 그리고 미시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 분야와 중심적인 영역에 조사의 초점을 둔다면, 그것으로 독-독 문제영역의 규범적 통합을 위한 실험적인 그리고 복잡한 이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 Ⅲ

## 자료검색체계



분석적인 토포스 자료검색체계는 사회학적인 문헌에서 필터링하고 과학론적인 인식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규범적인 통합의 기본요소에 적용된다. 자료검색체계는 근거 상으로도 바람직한 프로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분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의 중점적인 관점이 간과될 수 있다는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복잡함을 줄이고 노동경제학적인 사고라는 이유에서 필자는 방법론적 접근방법을 다음의 다섯 개의 자료검색체계로 제한했다. 이들은 분석적으로만 분류하면 되고, 다년간의 현실이 긴밀하게 엮인 현상들을 나타내 준다. 조사해야 하는 현실에 관한 다섯 개의 시각들은 유용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혼란함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양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발견적 자료검색체계의 위치를 지니고 있고, 분석적 현실 의미에서의 구조적인 방향에서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들 자료검색체계의 다섯 개의 방법들 역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구분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인식을 얻기 위해 분석도구의 성찰적인 사용으로 얻을 수 있었던 시각들을 정당성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성을 지닌, 정치적 문화의 문제제기를 해소하는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Thumfart 1999a 참조).

우선 자료검색체계 다섯 가지를 짧게 묘사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관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료검색체계는 관점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했다.

- 멤버십
- 갈등조정
- 여론
- 연대감
- 가치연계

멤버십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학적으로 사용된다. 멤버십(membership)은 집단적 정체성과 행동력의 사회통합적인 요소이며, 멤버십의 조건들은 포함과 제외를 위한 규칙을 정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에 따라 기대와 실망 사이의 모순이 문제로 대두된다.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권(citizenship)이란 시민사회적인 토포스가 멤버십에 속한다. 자유성, 권리, 책임 그리고 미덕이 어느 정도는 이것과 관련되며, 제도적 기본구조에 관한 요구도 마찬가지다.

개방적인 사회도 연대적인 사회와 그룹 멤버십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고, 동질성의 압력은 받지 않으면서 차이점과 다양한 멤버십들을 허용한다. 사회

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회에 관한 복잡한 평등성이란 틀 안에서 공공재화 분배의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세계화의 일환으로 관대한 국민권이 논의되고, 그것은 실용적인 보편주의에 대한 요구로 나아가고 있다. 탈경계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관련자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사회적 것의 집중화 및 확장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사회가 형성된다.

**갈등조절**은 규범적인 통합의 또 다른 기본요소다. 갈등과 특정 사회정치적 분열(cleavages)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이다. 정치적 체제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가는 동시에 역동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유발시킨다. 갈등이 평화롭게 조절할 수 있고 관심사를 교환하는 것에 기여한다면, 이는 사회통합적인 역동성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갈등조절은 특정 조건에 얽매어있다(규칙, 제반조건). 이때 다원주의 이론을 따르면 관심사의 조직과 갈등능력이 특히 중요하며, 최소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집단 자율성 간의 복잡한 의사소통, 주어진 관심사와 희망하는 관심사의 통일화작업이 필요하다.

역동적-반응적 민주주의 맥락의 규범적인 통합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를 위한 사상의 지배가 합리화될 수 있으며, 이때 여론의 구조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논증적 민주주의는 열린 토론과 정치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연대감과 감정이입능력, 말하기와 경청하기는 공적인 정치적 발언과 행동의 수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로 전달되는 여론이란 조건 하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당성을 생성하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항목이라고 논증하는 것은 규칙보다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적인 것은 모두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인 공존을 공적인 관점에서 조절하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범적 통합의 기본구성성분인 **연대감**은 다르게 맥락화될 수 있고, 전통적으로 사회적인 통합화와 연관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연대감은 덜 호소력을 갖게 되고, 협상비용을 삭감하는 관점에서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념사적으로는 에밀 뒤르껼(Emile Durkheim)의 스코틀랜드 도덕철학과 이념화와 연관시킬 수 있다. 현대적인, 즉 작업이 분배되어 조직화되고 기능적으로 분류된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를 위한 형태를 요구한다. 연대감은 차이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며, 연대감 안에는 상호관계에 관한 사상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연대감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구조적 연대감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연대감이란 특히 협력, 관용 그리고 정당성에 향하고 있지만, 다양한 연대감들은 복잡한 동기에 의해 나타나고 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가치연계**(value commitments)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규범적 통합의 토포스에 속한다. 규범적-문화적 체제차원의 구조구성성분이며, 실험적 사회과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가치들이 근본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며, 유동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한 사회적인 희망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도 참여하며 사회문화적인 ‘당연한 요소’로 집단적인 기억에 포함된다. 가치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위해 의미 있는 방향설정의 성과를 나타내고 내면화되어야 하며 습관화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사회의 사고, 말하기 그리고 행동의 재생산에 의존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선택과 중계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로써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과 제도적인 규칙의 이해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가치들은 또한 협력해야 하며 사회우위의 수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되어야 한다. 기능적으로 서로 달라진 체제들이 상호간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 대해 개방할 수 있는 현대의 사상과 구조가 형성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리하르트 뮌히(Richard Münch)는 점점 늘어나는 상호영향력이 전체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형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과정은 권력, 연대감, 교류 그리고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관계에 기능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적인 통합은 항상 새롭게, 특히 세계화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3의 현대’로의 길로 형성되어야 한다. 개인 권리와 관심을 최대한 현실화하는 옛 정치는 상호주체적인 사상에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즉 포괄하는 합의라는 카테고리를 투입할 수 있도록 상호 문화적으로 분류되고,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좋은 삶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도 특히 아비샤이 마르가리트(Avishai Margalit)의 단정한 사회의 토포스와 오노라 오닐(Onora O’Neill)의 부당성에 관한 주제를 연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훑어본 자료검색체계는 현재 규범적 통합의 기본요소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후 독일 통일과정의 정치 분야들과 주요 부문들을 적용시킬 것이다. 그 때에는 현재 정세를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에까지 펼쳐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검색의 틀과 조사의 틀을 살피면서 정치적인 문화 및 정당성이란 관점 하에서의 결과의 개관에 관한 질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문화의 분석은 규범적인 통

합의 문제들을 서로 엮어주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적절하며, 특히 지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시화시켜 준다.<sup>131</sup>

## 1. 멤버십

규범적 통합은 ‘멤버십’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념화될 수 없다. 멤버십의 조건들은 연대사회(Solidargemeinschaft)로서의 사회적 단위의 한계들을 정의하고, 포함과 제외를 위한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멤버십은 집단적인 정체성과 행동능력의 구성요소다.<sup>132</sup> 이렇게 함으로써 ‘일치와 불일치’간의 줄다리기를 배재할 수 없게 된다.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1977)는 다른 성격에 따라 멤버십을 분류했다. 능률, 권력 그리고 집단적 책임에 관한 불일치, 기본권과 국민들 구성원의 지위상의 평등이 그것이다.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포함/제외는 차이의 원칙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논리적 관계를 따르고 있다. 재가입(re-entry)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외된 것은 제외된 상태로 남는다. 전통적으로 퇴적된 사회는 포함이란 개념을 가족 또는 협력에 고정된 장소를 부여해주면서 조절했다. 이와 같은 포함메커니즘이란 쉬운 해결책도 기능적인 차별화로 넘어가면

---

131\_ 이와 관련해서 Blasius, Faulenbach 그리고 Steinbach의 *Parlament*(정치와 현대사에 관하여) 기고문 참조, 1998년 12월 11일(B51/98).

132\_ Preyer 1998a; 또한 Rohe 1994a, 160도 참조. “정치적 단체의 조건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서 버려야 했다. 직접 획득한 지휘형태(achieved status)와 관련된 새로운 포함원칙은 민주주의이론적인 이름인 자유와 평등성을 얻게 되었고, 시민권과 인권이란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자유란 사회 속에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결정과 타의결정을 혼합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평등이란 기능체제를 직접 결정하는 포함원칙 외에는 어떠한 다른 원칙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Luhmann 1997a, 1075쪽). 부분체제의 멤버십은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이것은 특히 정치적인 포함, 즉 현대 사회에서는 집단적인 결정에 참여할 때 기회의 평등이 훨씬 더 많이 부여된다는 뜻이다.<sup>133</sup> 다양한 포함들이 가능하며 상호모순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체제로의 포함은 다른 곳으로의 포함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대 (그리고 ‘개방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로의 사회적인 통합은 전체적으로 훨씬 수월해졌다.<sup>134</sup>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와 비교했을 때보다 기대와 실망 사이의 모순이 보다 큰 문제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가시화되며, 사회적인 이동성이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상승/하락), 즉 과정이나 위치는 위로 또는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통합이 이행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이론적 관계에서의 멤버십은 시민사회적인 시민(citizenship) 토 포스에도 속한다.<sup>135</sup> 최신 정치학적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제를 설명하

133\_ Münch 1984, 296쪽.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포함도 확장되었다.

134\_ 더불어 부분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종의 도미노-효과를 유발시킨다.

135\_ 이와 관련하여 Beiner 1995 참조; Demaine/Entwistle 1996; Callan 1997;

고 있다. “시민을 다루는 적절한 이념에 관한 정치적이고 이론적 논쟁에서는 1990년대의 분열된 포스트산업사회와 국가사회주의적 연대감 상실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다시금 시민에 관한 자유로운 그리고 공화주의적 이해와 반대되는 전통적인 논쟁이 일어난다. 자유주의는 시민을 국가에 대한 개인 자유권을 통한 부르주아의 거부권으로 정의한다. 정치적 권리는 여기서 권력의 제한과 권력의 관리를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적 권리는 개인 자주권의 안정과 재건에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이 반면 공화주의는 시민이 그리스의 폴리스(Polis) 전통에 따른 생활방식으로, 즉 시민(Citoyen)이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지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맞게 공동체주의는, 시민의 자유로운 이념에 관한 비판에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란 개인의 자유와 선에 대한 권리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형성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 정치적인 문화 등)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권은 정치교육과 직접 민주주의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미덕을 회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상실될 수 있다. 현대 세계에 맞는 시민권 이념은 자유, 평등, 연대감, 공동 번영과 개인적인 권리(Civil Society, 헌법 애국심),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정치적인 멤버십과 경쟁적인 인종, 종교 등의 소속감(다문화주의) 간의 해소할 수 없는 갈등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Rieger 1998b, 84~85쪽).

시민권(citizenship)은 (Citoyenität 의미에서도) 항상 특정한 정도의 자율

---

Janoski 1998; Milligan/Miller 1992; Oliver/Heater 1994; Steenberger 1994. 독일 정치학에서는 특히 토마스 엘바인(Thomas Ellwein)과 돌프 슈테른베르거(Dolf Sternberger)가 시민의 미덕에 초점을 두었다.

성과 권리, 책임감 그리고 미덕을 필요로 한다. 시민권은 동질성에 관한 압력이 없는 정치적인 공동체 내<sup>136</sup> 멤버십의 표현이다. 또한 시민권이란 단순히 시민에게 부여한 위치(status)가 아니라 정체성 형성과 체계적인 논리와 가치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 없이는 충분하지 않을 사회적, 정치적 행동능력의 획득에 관한 문제다. 문화적인 다양성,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지자치의 차별화는 헌법의 틀 안에서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낸다.

열린사회(offene Gesellschaft)에서도 연대감으로 정의된 사회공동체와 멤버십이 없으면 안 된다. “현대 사회 공동체의 핵심은 개인들의 결합체로서의 시민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선출되고 전문화된 연맹들의 다원화를 허용하며 자유권과 평등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적인 관계의 공식적인 권리를 포함하며 정치적인 권리 위에서 성장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문화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자란다. 시민(citizen)의 연대감은 이와 같은 시각들로 형성된다. 연대감은 자유, 공식적인 합법성 그리고 보편성을 서로 연결해준다”(Münch 1991, 328쪽).

시민권/시민사회에 관한 논의에는 주제를 넘어서 사회철학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Reese-Schäfer 1997). 정당성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정치와 시민권의 위치화가 규범적 통합이란 관점 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정성이란 이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표현되었다. “1.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기본

136\_ 이것은 공동체주의적인 표현과는 연관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세계시민까지의 다양한 멤버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과 자유의 지극히 적합한 체제에 대한 동일한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는 동일한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것만 유일하게) 공정한 가치로 보전된다. 2. 사회적이고 경제적 불일치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공정한 기회의 균형이란 조건 하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관청과 인물들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혜택을 제일 적게 받는 사회의 일원을 위한 가능한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Rawls 1998, 69~70쪽). 정치적-실용적 행동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규범적-도덕적 경향까지는 아직 멀었다.

미하엘 발처(Michael Walzer)는 민주주의 시민권이란 어떠한 위계질서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Michael Walzer 1994, 394쪽). 복잡한 평등성이란 틀 안에서 모든 시민은 권력의 잠재적인 참여자, 잠재적인 정치가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잠재력은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민주주의적 정치에서는 모든 목표들이 임시적인 것이다. 즉 옛 논증은 새롭게 점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논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시민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동일 참조문헌, 437~438쪽). 발처에게는 조연상답이란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은 “일정 주어진 시간에 그의 주변시민들과 더불어 조연을 얻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동일 참조문헌, 438쪽).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야 한다. 기존 사회는 ‘구체적인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갈 경우, 즉 구성원들의 공동의 사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 경우’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동일 참조문헌, 441쪽).

규범적인 것이란 오래된 유럽적 카테고리에 분류할 수 있다(Steinfath 1998).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찰적 주관주의와 둘째는 좋은 삶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다. 주관적인 것은 좋은 삶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각 사람들의 비인식적인 입장을 관련짓는 반면, 객관적인 시도는 예를 들어 기아와 빈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쁜 것이고, 개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한다. 초개인주의적이고 세계사회적인 분류는 멤버십 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접근한다. (모든 생명체의) 좋은 삶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는 지금까지는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사용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좋은 삶은 [...] 자유로운 세계의 만남이란 수단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sup>137</sup>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을 일환으로 멤버십의 대대적인 (그리고 도덕철학적인 의미에서의) 확장은 가능하다(Albrow 1998). 중심사상인 현대성을 대신 하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점점 더 세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핵심주체인 마르틴 엘브로우(Martin Albrow)는 ‘실용적인 보편성’과 ‘관대한 국민’ 의미에서의 새로운 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티(communities)**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세계사회는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화형태의 역동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오늘날 민족국가에게만 적합한 제도적인 분야는 없다. 한계를 점차 없애고 사

137\_ Seel 1998, 280쪽. 모든 지각능력이 있는 개인들의 복지는 삶의 움직임이란 공간에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안전과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지, 그들의 상상력과 가능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동일 참조문헌, 281쪽.

회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제도적이고 개별적 관련자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로써 문화적 사건에 대한 세계적인 참여의 기술적 전제를 마련한 후에 문화의 무제한성이 다시 만들어진다. 또한 개별인은 세계의 다양성 때문에 동시에 여러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된다(동일 참조문헌, 234쪽). 증가와 다양화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확장한 새로운 공동의 커뮤니티로서의 부분문화를 이끌 수 있으며, 관용의 시민사회적 미덕을 장려할 수 있다. 또한 탈영역화는 “적절하지 않은 사회학적이고 행정적 이념의 구체화를 없애준다. 공동체와 구체적인 장소의 연계를 끊어주는 것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상상의 부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화를 가능하게 한다”(동일 참조문헌, 247쪽).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념은 집중과 확장과 관련하여 강화된다. 발생하는 경계를 초월하는 연계는 국가 간 또는 탈국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을 보이며 옛 질서를 정확히 점검하게 된다. “세계화가 사회적, 문화적 체제전환으로 인정되는 곳에는 정치의 새로운 이념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운 조건을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와 민족국가정부를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265쪽).

## 2. 갈등조절

갈등과 특정 사회정치적인 분열(cleavages)은 “고정된 사회적 사실들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Giegel 1998, 16쪽). 갈등은 체제에 스트레스를 주고 동시에 조절할 수 있고 관심사를 교환하는 데 기여할 경우

역동성을 향상시킨다. 갈등은 프레임링(framing)과 갈등능력을 필요로 한다 (동일 참조문헌, 16~17쪽). 민주주의적 맥락에서 공공 재화와 자원에 관한 갈등은 그것이 부족하고 가치들이 배분된다는 관점 하에서 평화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갈등조절은 포함/배제의 의미에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민주주의 연대감의 공식을 내용적으로 전문화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협상, 중재, 조정, 강제적인 조정에 의한) 갈등조절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 몇 가지는 전에 파슨스와의 논쟁에서 일종의 부수물로 나타난 내용을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가 분석한 것이다. “이에는 (1) 갈등이란 일반적으로, 비록 간혹 다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정당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갈등을 싫어하고, 그것을 꿈꾸어온 정상적인 상태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갈등의 불가피성을 단념한 듯 인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갈등에서 유용한, 그리고 창조적인 원칙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2) 갈등에 가하는 모든 개입이 그의 형태 규칙을 제한하고 원인해소를 위한 헛된 시도들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명백한 개별 주제들과는 달리 갈등의 원인들은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을 조절할 때는 가시적인 외형에서 시작하여 다양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3) 주어진 충돌들을 서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이루어진다. 갈등단체의 조직과 같이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조건을 이룬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명백하게 하는 것이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기관들은 유용하지 않다. 모든 전제조건이 잘 마련된 후에는 다음 단계에서

(4) 참여자들이 그들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정 ‘물’을 정하게 된다. 이것이 분명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단계들과도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물’, 총괄협정, 헌법, 규약 등과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참여자들을 선호하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거나, 갈등의 형식적인 관점에 제한하거나 모든 의견차이의 구속력이 있는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sup>138</sup>

특히 다원화 이론의 틀 안에서의 민주주의 이론을 따른 조직능력과 갈등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복수 그룹 이론은 관심사의 균형과 타협에 초점을 두어 갈등을 평화롭게 조절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의견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논란이 있고 없는 분야 간을 구분해야 한다. 에른스트 프랜켈(Ernst Fraenkel)의 신다원주의는 조화와 대립을 선택할 때는 분쟁 **그리고** 의견일치를 위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된 갈등이란 용어가 도입된다고 정의하고 있다(Fraenkel 1990b). 따라서 갈등을 평화롭게 조절하고 해결하

---

138\_ Dahrendorf 1961, 227~228쪽. 서로 다른 관심사의 갈등하고 있는 그룹 간 ‘옛’ 그리고 ‘신’ 정치의 이분법이 적용되면 새로운 그룹결성의 대표자는 처리 및 인식 분쟁에 대해 화를 내지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중심적인 과정으로 여기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새로운 그룹의 성공적인 자기주장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새로운 정치의 엘리트’들의 요구 프로파일에 대해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적극적인 민주주의’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의 항목들과 성격들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그룹이 동원자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1) 근본적으로 비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원해져야 한다. (2) 반대의미의 심볼들과 이데올로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 정도로 교양이 있어야 한다. (3) 체제전환 움직임의 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직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사회이론과 정치적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5)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동기가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한다.” Etzioni 1975, 546쪽.

기 위해서는 일정의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합의란 민주주의적 실행방법으로 갈등을 느끼는 당사자들 간의 최소한의 일치, 물 그리고 공동의 제반조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는 항상 이질적이고, 모순이 많으며, 갈등이 있고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다. 사회의 행동원칙은 일반적인 관심사의 다원주의이며, 정치적인 틀은 경제적 시장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경쟁이론이다. 다양한 관심사와 사회의 차별화는 다양한 그리고 논쟁이 일고 있는 관심사가 상호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경우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다원주의적 이론에는 다음의 기본적인 가정도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어느 관심사가 너무 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는 그와 반대되는 힘이 형성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갈등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경쟁은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풍요롭게 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해관계와 이념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전체적인 번영은 조정적인 사상으로 작용하고 경쟁싸움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쟁을 하는 그룹간의 분쟁, 갈등 중재 그리고 타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집단자율권의 복잡한 증개와 주어진 다양성을 통일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 이념은 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 자료로도 적합하다. 그렇게 하면 삶의 모순들을 찾아내고 일원적인 영역들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원주의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반론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좁혀지고 견고해진 상황들을 다원주의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sup>139</sup>

갈등 이론적으로는 상황을 강조해서 그리고 요약해서 바라보는 까닭에 해체의 현상들이 더 강하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잭 나이트(Jack Knight)는 그의 갈등 이론에서 사회적인 기관들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관련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방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했다. 여기에서는 두 단계를 구분한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기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기반을 이루고 있는 비공식적 규칙이 그것이다. 비공식적 관습과 규칙 네트워크의 새로운 형성은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서 발생하는 권력의 불균형인 분배갈등의 부산물로 여겨진다(Knight 1992).

갈등은 당연히 사회적 관계에 있어 건설적인 또는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위한 추진력 외에도 새로운 통합과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게오르크 지멜(Georg Simmel), 루이스 코저(Lewis Coser) 그리고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가 언급한바 있으며, 갈등에 있어서도 특정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렌도르프 외에도) 알베르트 O. 히르슈만(Albert O. Hirschman)이 주장한 것과 같이 말이다. 갈등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은 기술적인 발달과정과 더불어 항상 불균형과 모순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는 오로지 다원주의-시장 경제 사회 내의 합당한 또는 ‘허용된’ 갈등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또 그 반대로 ‘직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 사회 정당성에 대해 예민한 시민들도 역시 선동하는’ 부정적

---

139\_ 오늘날까지 신험력주의가 다원주의 이념을 상대하거나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는 정치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Schubert 1995 참조.

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다원주의 시장경제는 그들 자체적인 과정의 이론과 전형적인 갈등에서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힘을 이끌어낸다. 왜냐하면 항상 “균형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자기 관심사뿐만 아니라 공동의 안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요구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시장경제 사회의 생명력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밀은 이와 연관되어 있다”(Hirschman 1996, 252쪽). 이와 관련하여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유를 특히 갈등억압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비생산적인) 노력, 유출과 모순의 기나긴 억압에 대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sup>140</sup>

다원주의에서는 사회생산물 분배에 관한 갈등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형태의 갈등들은 히르슈만(Hirschman) 이념에 따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양자택일 형식의 카테고리 또는 근본적인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Hirschman 1996, 254~255쪽). 또한 다원주의 민주주의 이론의 근거에 관한 타협은 최종적인 해답이 아니라 새롭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조절은 체제 기능적이고 진화적인 요구사항이다. 갈등 상황 내에서 드러난 모순들은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것과 방해 요소들을 고발하면서 경고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동시에 기능적인 대등한 요소를 찾는 과정을 지원해주며 사회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전체사회는 갈등뿐만 아니라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가치들의 연계에도 의존적이다. 랄프 다렌도르프는

140\_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Hirschman 1993 또는 Hirschman 1996, 19~56쪽 참조. 또한 카테고리 이론에 대해서는 Hirschman 1974 참조. 히르슈만 이념에 관한 토론은 Rodwin/Schon 1994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복합체(심층구조, 소속감 또는 연계, 표면적 행동)라고 했으며, 이것을 삶의 기회라는 맥락과(사회적인 구조에서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에서) 연관시켰다. 삶의 기회는 개인의 수식어가 아니라 형태들이고, 이들은 서로 간 독립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사회 안의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각 기회와의 특정 연계에 기본을 이루는 옵션과 합자의 기능이다”(Dahrendorf 1979, 49~50쪽). 이런 맥락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새로운 그리고 다른 대상들인 이론, 예술, 삶의 기회 등을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갈등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하지만, 대체로 공격성이 없는, 폭력이 없는 갈등에 대해 말하게 된다.

### 3. 여론

널리 알리는 기능으로서의 여론 그리고 이와 규범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투명성과 같은 의견의 다양성은 역동적이고 반응적인 민주주의의 척도이자 기회의 조건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관련자들이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되지 않았다는’ (Habermas) 특징을 지니며 의사소통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정치적 지배위치와 정치적인 결정을 시민의 선호대상들과 연결하는 것은 여론의 중개적 체제로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맡아준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 여론을 통해 정치적 체제의 시민들과 관련자들을 상호간 관찰할 수 있다. [...] 이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의사소통하는 공적인 의견 형태의 여론체제

의 생산물을 관찰하고 동시에 공공의견의 일반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Gerhards 1998, 269쪽).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그의 유명한 **여론의 구조변화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란 연구(1962년)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의 유례와 변형을 조사했다. 이 여론의 중심사상은 개개인이 관객으로 모인 공공연한 토론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조언을 통해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자본주의에서 정치적인 여론기관은 우선 조직과 행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규범적으로는 시민여론의 자유로운 모델이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들을 색출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를 보고 불평하는 관객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관객으로 변했다. 여론은 개개인과 짜맞추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여론분야가 있는 긍정적인 통합문화가 확산되었다. 하버마스가 다시 권리를 부여해주고자 했던 기능적인 시민여론의 자유로운 픽션이 우리 시대에 민주적으로 배열될 것으로 기대한다. 1990년 신판에서 하버마스는 이 이론을 수정하고 추가설명을 넣었다 (Habermas 1995, 21~27쪽). 이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의 통합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론의 구조변화는 그것의 인프라 또한 변화시켰고 (전자 매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정보의 혼합, 증가하는 자원 그리고 공개시설의 높은 조직력) 미디어권력으로서의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형성했다. 또한 정치문화와 정치행동의 차원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그의 기본적인 의도를 고수하고 다시금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여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회국가적 대중민주주의가 자신의 규범적인 자기이해를 자유로운 법치국가 원칙과 연속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 실용주의 정치철학이 최근 새롭게 습득하는 것을 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존 듀이(John Dewey, 1996)의 여론연구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여론과 그것의 문제점들**에서는 집단적 행동의 과정과 문제를 조사하고, 이때 듀이는 근본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의 민주화를 주장한다. 그의 신념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집단적인 자기관리 사상을 사회질서원칙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듀이는 정치적인 사건들은 인간의 요구와 평가능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여론수단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란 부정적인 결론을 실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는 단순 정치적인 정치형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사회적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는 이념이 숨어있다. 특히 사회적인 병들을 밝혀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비판을 위한 광범위한 공개, 사상의 자유와 지식이 자유로이 사용되어야 한다. 듀이는 공공관심사(res-publica)에 집중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형태와 사회적인 요소에 관한 사상의 비교적 민주적인 습관들은 공공토론의 성격을 일정부분 지니고 있으며, 적어도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인 상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강요했다. 대의제는 적어도 공공관심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지배받는 자들의 요구사항을 우선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동일 참조문헌, 153쪽). 듀이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구는 “토론, 논쟁 그리고 설득의 방법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론의 문제다”(동일 참조문헌, 173쪽).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없는, 분리되고, 발언할 때 다시 나타나는 사상들은 독백에 불과하고, 독백이란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완성되지 않은 사상이다”(동일 참조문헌, 180~181쪽). 실제적

인 행동은 공동주의를 만들고 요구, 관심사, 희망이란 민주주의적 행동과 실행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반응(Herzog 1998; Pitkin 1967, Popp 1996; Uppendahl 1981a, 1982; Schüttemeyer 1998b), 그리고 그룹연대(Hechter 1983)로 형성되는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규범적인 통합은 온전한 여론 내의 대화를 통한 교류형태가 없어서는 안 된다.

벤야민 바르버(Benjamin Barber)는 자신의 연구에서 ‘강한 민주주의’(Barber 1994; Waschkuhn 1998a, 102~108쪽)란 참여하는 정치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시민공동체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활동하는 삶(vita activa)과 자유롭고 의식적인 결정으로서의 공공의 행동은 상호 접근해야 하며, 전체적인 정치적 합리성을 장려해야 한다. 강한 민주주의는 논증적 민주주의이며 모든 차이들을 해소하려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정치적 과정의 자율권은 모든 가치들을 동일한 단계로 설정한다. “개개인의 모든 설득과 의견은 동일한 출발선 상에 있고, 정당화는 이전의 인식 이론이 아닌 공공 연설과 공공 행동 과정 중에 나타나는 설득과 의견들에 연결되어 있다”(Barber 1994, 126쪽). 공공 논쟁들과 갈등들은 계속적으로 조언을 듣게 되고(조언적 기능의 요소들), 결정을 내리게 되며(결정적 관점) 행동하게 된다(관련자 및 상호교류 차원). 연대감과 감정이입능력, 말하기와 경청하기는 공공 정치적인 발언의 수단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써 정치적인 판단이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치적인 공공의 말하기는 “세계를 창조하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말하기다”(동일 참조문헌, 174쪽). 여기서 바르버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민주주의에서 살 때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막는 날이 없다”(동일 참조문헌, 197쪽).<sup>141</sup>

결정의 합법성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논증은 매스미디어 조건 하에서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론의 관련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관중의 집중력을 얻어야 하며, 그들의 입장에 대해 논증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에는 포괄적인 암시 시스템에 주제들과 의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모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의견들이 정의되거나 의사소통되는 것은 아니다. 관중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관련자들은 암시모델을 형성하여 그 도움으로 정치적인 주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사회의 사회적인 갈등선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erhards 1998, 271쪽). 정치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결정들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공격적이거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상 정치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는 사람들인 그들 사회적인 삶의 공적인 관점을 조절하려 노력하는 곳들에서 항상 일어나고 생성된다”(Rohe 1994a, 136쪽).

#### 4. 연대감

연대감은 규범적 통합의 기본적인 구성성분이고 다른 맥락을 따른다. 에밀 뒤르켐의 현대, 즉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사회는 “기계적인 연대감에서 조직적

---

141\_ 본문 중에 추천한 제도화형태에 대해서는 Barber 1994, 241~289쪽 참조. 바르버의 직접민주주의 계명에 관한 토론은 Luthardt/Waschkuhn 1997, 68~71쪽 참조.

인 연대감으로 넘어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연대감이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기계적인 연대감이란 공동 특징과 전통이란 긴밀함에 관한 의식을 주장하는 반면, 조직적인 연대감이란 노동이 분배된 조직적인 사회에서 필요한 협력과 의존성이란 특징을 나타낸다. 규범적인 사상으로의 연대감은 개개인 또는 집단적인 것 어느 것에도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개인은 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목표의 의도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번영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연대감은 신분연대감이란 형태로 노동자운동의 중심사상이었으며, 지원주의라는 용어와 함께 가톨릭적인 사회이론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sup>142</sup>

자유 민주주의에서 연대감은<sup>143</sup> 호소력 기능을 가진 (Krüger-Potratz/Kaminsky/Winter 1996) 사회주의적 투쟁의 모럴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계를 위해 추구할 가치가 있는 형태이다. 즉 시장과 지배적인 위계조직 원칙을 통해 행동을 조율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특정 조정원칙을 따른다(Hondrich/Koch-Arzberger 1992; Gabriel/ Herlth/Strohmeier 1997, 14쪽; Kaufmann 1984). 연대감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분리된) 상황과 즉흥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조정 장치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공동 관심사를 지닌 공동체의 관계망을 말한다(Kaufmann 1984, 167~171쪽, 아담 스미스에 이어서). 이런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견해<sup>144</sup>는

142\_ Rieger 1998a, 586쪽. 그러나 지원주의 사상은 가톨릭적인 사회이론에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Waschkuhn 1995a 참조.

143\_ 이 용어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유행하게 되었다. 구유럽 의미론에서는 *philia/amicitia* 라고 표현했었다. 이에 대해 Luhmann 1997a, 533쪽 참조.

144\_ 여기서 사람의 본성은 감정이입(*sympathy*)이란 수단 또는 상호간의 확신이란 방

오늘날에도 규범적 통합의 주요한 항목이다.

연대적 조정의 원칙은 행동과 다양한 규범과 관심사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연대감이란 자원을 현대화조건과 세계화과정에서 바라봤을 때 분석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예를 들어 신뢰, 정체성, 연계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삶의 전제들과도 연관되어 있다(Gabriel/Herlth/Strohmeier 1997, 25쪽). 연대감이란 차이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연대감 내에는 적어도 잠재적인 상호관계가 내재되어 있다(Hondrich/Koch-Arzberger 1992, 13~14쪽). 그러나 연대감과 비연대감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화와 연대감은 또한 서로 대립하고 있지도 않다. “개인화를 개인에게 부여되는 행동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전통적으로 강제적으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연대감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동일 참조문헌, 25쪽).

연대감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기묘사의 다양성만이 다양한 연대감을 위한 공간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대감의 다양함에서 개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속감을 나타내주는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연대감을 거부하는 이상적인 이기주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

법으로 내용적으로 분명해진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fellow-feeling’으로 정열의 파괴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에 대해서는 Huber 1990; Mund 1994; Waszek 1986 참조.

된다”(동일 참조문헌). 연대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한계는 바로 연대감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대적인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대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이미 존재한다”(동일 참조문헌, 26쪽). 이것은 또한 연대감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스펙트럼이 연대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내적으로 모순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연대감의 경쟁은 [...]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반해 행동력이 부족한 것에서 나타나고, 또한 행동목적의 갈등 및 사회적인 소속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존성은 연대감을 혼란시키지만, 연대감을 바탕으로 깔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회적인 조정 메커니즘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연대감이란 기반이 약하고 너무 좁게 형성되면 정치적인 강요와 물질적인 자극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책임회피, 저항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늘어나게 된다”(동일 참조문헌, 27쪽).

게다가 문제의 복잡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을 세계사회적인 연대감의 연관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과도하게 연대감을 요구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연대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며, 그보다는 오히려 연대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을 경우에는 연대감의 잠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적 연대감을 가늠하고 사용할 때는 실험적인 사회연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지배적인 세력을 도우는 일뿐만 아니라, 연대감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권력의 원천이 되는 약소한 사람들에게 말이다”(동일 참조문헌, 29쪽). 연대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정치적인 조정의 결정되어 있지 않은 자원이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하는 문

제 때문에 현대 사회는 (1) 무질서의,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2) 고갈되지 않은 연대감에 대한 잠재력이 필요하다. 이때 이런 연대감은 정치적인 조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어렵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주요 관심사를 해치는 곳에 투입된다. 잠재적 연대감은 일종의 기동력이 있는, 정치가 제한적이고 위기상황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사회적 자체조정 성격의 대체원임을 말해준다”(동일 참조문헌).

연대감은 새 연방주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1990년 4월 4일 ‘원탁회의’ 이후 독일민주공화국 헌법 초안의 머리말에 작가 크리스타 볼프(Christa Wolf)가 적은 문구에 따르면, 구동독 시민들은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 남성여성의 평등화를 보장해 주고, 당연히 자연을 보호하는 민주주의적이고 연대적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브란덴부르크 헌법에는 시민들이 “사회적 평등성에서의 공동생활을 조정하기 위해” 헌법을 “권리, 관용 그리고 연대감이란 전통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Denninger 1998, 320쪽 인용). 작센안할트와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헌법에서는 연대감을 교육의 목표로 기술하고 있다.

연대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력, 관용 그리고 정의에 달려있다. 그래서 연대적인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의 존중과 자신의 권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안정’이 아닌 ‘번영’으로 나아가는 관심을 요구한다. 그 밖에 연대적인 행동은 “낮선 이와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준비에서, 즉 그것이 행동이건 또는 의견을 제기하는 ‘도덕적인 지원’이건, 의견을 표출할 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낯선 사람’을 그의 다른 성격과 함께 받아들이고 지원한다는 뜻이다.” 연대적인 행동은 “복잡한 동기 [...]에서 유발된다. ‘무자비함’ 또는 기본법의 언어를 그대로 옮기자면, 위협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원조행위는 미달되지 않는 최소 기준과 초기의 동기를 나타낸다.” 결국 연대적인 관계는 “원칙적으로 열려있는, 끝낼 수 없고, 대부분은 비대칭적인 관계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연대감은 “대부분의 경우 현대 자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관심이 넘칠 경우 발생하기 때문이다”(Denninger 1998, 335~336쪽).

“연대감 약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인종-문화-종교적 소수를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약속에 대한 필요성”은 “내적 외적으로 일차원적인 인종중심주의와 공격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인 자기 확산”으로 작용한다(동일 참조문헌, 341쪽). 외국인 기피증과 같은 수많은 흉악한 예들은 이것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대적인 행동은 민주주의 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적인 도덕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친구-적-사고를 배척”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동일 참조문헌, 342쪽).

뒤르켐의 현대-조직적인 연대감의 형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덕으로서의 협력과 연대감을 말한다(Göbel/Pankonke 1998, 486쪽). 파슨스(Parsons)의 구조기능주의에 의하면 사회적인 차별화에 대한 가치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인화와 조직적인 연대감의 형태는 규범적으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협력관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는 동질화된 통합관점을 반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5. 가치연계

가치연계(value commitments) 또한 규범적인 통합의 토포스에 속한다. 가치연계를 주장했던 파슨스(Parsons)는 사회적인 상호시스템에 속한 관련자의 도덕적인 의무를 언급했다. 가치연계는 가치구조의 정직성을 강화시키고,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것은 일종의 상부구조(Überbau) 현상을 뜻한다. 규범적-문화적 체제차원의 구조구성원으로서의 가치는 제도화를 통해 실험적 사회과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면, 제한된 특정 범위를 위한 가치형태를 특화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조건(condition humana)’을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의 이념화를 말하기도 한다. 파슨스의 통합이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삶의 기능적인 연계를 고려하면서 문화적인 틀의 형성을 시간-공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파슨스는 항상 우선적으로 문화적 코드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험과 행동의 연관성을 항상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때 “항상 옛 실수로 돌아가지 않고, 경험한 틀을 또 다시 꺾지 않고, 낱아버린 수단을 통해 다시금 옛 웅덩이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미 오래 전에 찾은 목표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Jensen 1984, 158~159쪽). 권리와 진실이라는 미디어가 추가된 상호작용을 하는 수단인 돈, 권력, 영향력 그리고 가치연계는 사회적인 승인기능도 지니고 있다. 이 밖의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교류미디어들은 예를 들어 믿음, 사랑, 우정 그리고 신뢰다.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로서의 미디어들은 선택을 전달하고 체제의 과정적인 성격을 교류할 때 다른 요소들과 확립해주는 추가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Parsons 1980).

규범적 통합에 관한 파슨스의 이론(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Gerhardt 1998 참조)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규범적 통합을 현대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여긴다. 규범적 통합은 사회적 연대라는 용어로 작용한다. 규범적 통합은 다문화, 차별화된 사회를 인식하기 위한 공식으로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와 관련하여 상호작용미디어의 복잡한 효과의 범위들과 사회공동체를 파악하고 ‘정치형태(polity)’를 규범적 통합의 결정화 차원으로 분석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계 때문에 해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합법성, 안정 그리고 합리성에 영향력을 받는다. 합리성은 사회적인 교류, 상호간의 행동, 설득하기와 설득되기, 통찰, 이해 가능성 그리고 행동과 관점의 실행 가능성 및 상호 연관성에 의존적이다(동일 참조문헌, 286~287쪽). 체계적으로는 규범 및 가치의 유지를 말하는 것이다.<sup>145</sup>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사회의 상징적-문화적 부분체제의 과제로 분류된다. 문화적 방향성 유지를 위한 수단은 가치설득 및 가치연계이며, 이때 사회의 모든 하위체제들은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는 그들 가치 안에 연계를 위한 힘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Gerhardt 1998, 298쪽). 전체 사회에 대해서는 활동적인 사회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파슨스는 사회공동체(societal community)라고 설명했다. “강요보다는 이해로 형성되는 공동체여야 한다.” 사회공동체는 하나로 되어 있는 가치의 체계

145\_ 파슨스(Parsons)의 AGIL-스키마(adaptation, goal attainment, integration, latent pattern maintenance)에서의 L-기능의 과제(latent pattern maintenance and tension management = 체제 고유의 행동과 가치구조의 유지 및 성공적으로 갈등을 극복하기). Waschkuhn 1998b, 26~27쪽 및 346쪽 참조.

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사회공동체란 “체제 속의 연대감과 개인 속의 신임 위에 다원주의적으로 기초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다양한 집단형성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말한다”(동일 참조문헌, 299쪽).

파슨스에 의하면 사회적 규범은 광범위한 문화적인 가치방향에서 탄생하고, 역할의 틀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하는 방향의 네트워크화된 구성요소들이다. 사회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로, 동일한 기본권, 동일한 국적, 동일한 역사, 동일한 문화 등을 경험한 시민들로 이뤄진 공동체다”(동일 참조문헌, 307쪽).<sup>146</sup> 광범위한 사회화에서 근본적인 평등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과정구조의 자체적인 통합이 이뤄진다.

정치적 통합이 완성된 틀 내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공동체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동독시민들을 ‘이등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규범적 통합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한 동화와 확장된 독일의 동과 서, 양 정치문화의 상호간 축진의 중점적인 문제는 서독의 포스트모던, ‘포스트 물질주의적’(Inglehart) 라이프스타일의 ‘늦은 문화’와 동시에 동독의 ‘물질적인’ 작업방향성, 커져가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 심각한 안정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전환과 연관된 엄청난 문제를 지닌 결핍사회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Greiffenhagen 1993, 1997).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가치척도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발전과 현대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치들은 근본적이고 선호대상으로 “가치에 위배되는 것

---

146\_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한때 적대적인 사회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통일과정에서 규범적 통합의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아니라면, 의사소통 중 관찰될 수 있을 때 고정된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다.” 또한 “가치들은 의사소통에 전제되는 것이고, 함께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의사소통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들은 선호되는 것이지 주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가정이나 거부 또는 수정하는 ‘예, 그러나...’ 라는 말투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가치들 자체는 우선 선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19세기부터 가치라는 용어에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요구도 내포하게 되었다. 가치는 “가치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떠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Luhmann 1997a, 799쪽).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란 존재할 수 없다. 가치란 의사소통에 포함되고 특히 ‘정당한’ 관심사라는 형태로 대변되기 때문에 체제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각인된다(동일 참조문헌, 800쪽). 가치들은 강한 또는 덜 강한 형태로 사회문화적 ‘자명함’이 되며, 사회적인 행동에서 방향성을 지시 받는다. 따라서 가치들은 내면화되어야 하며 습관화되어야 한다. 즉 가치들은 사회의 사고, 말하기 그리고 행동 재생산의 영향을 받는다.<sup>147</sup>

또한 서로 다른 부분문화들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포괄적인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유추해낼 수 있기 위해 중개와 통합과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Rawls 1998, 219~232쪽 참조). 이로 인해 행동

147\_ Rohe 1994a, 162~163쪽 참조. 정치적인 문화는 “사회의 역사적이고 현안적인 정치경험과 사회적 협회의 정치적인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색했던 결과들인 ‘해답들’을 나타낸다. [...] 정치 문화는 규칙체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체제는 ‘사람들이’ 사회 협회 내에서 비공식 사회적 제재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정치적으로 말하고 정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능력과 조절가능성을 동시에 진행시킨다. 상호작용 관점에서 가치들은 “제도화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집단적인 선호대상에 불과한데, 이들이 생성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Boudon/Bourricaud 1992, 659쪽). 옵션과 선호대상을 뜻하며, 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결정, 즉 선택을 뜻하기도 한다(Esser 1993, 463쪽). 가치들은 소속된 곳이 있고, 그래서 가치들의 통합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가치체계에서 핵심과 핵심이 다양한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는 것이다”(Boudon/Bourricaud 1992, 663쪽). 가치들은 협력적인 행동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호응을 얻어야 한다. 가치연계는 통시적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사회 전체에 그리고 정치분야에 분배되어 있다. 리차드 뮌히에 따르면, 발달되고 노동이 분배된 조직사회는 비교적 세분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부분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열린사회에서 의견, 의지형성 그리고 결정추구 과정을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는 논쟁으로 인해, 공동의 가치인식과 갈등조절에 대한 관련자의 연계 그리고 열린 정치적 시장을 통해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일반적인 가치에 관한 정치적 결정의 논증이 예측된다(Münch 1982a, 127쪽). 하위체제를 혼합하고 상호 간 간섭하는 것이 관련자들의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상호간섭 현상(상호간의 관철)으로 하위체제의 차별화가 서로 간 동일하게 개방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 사상이다(Münch 1982b, 120쪽).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 체제를 다른 부분체제로 유입하는 현상으로 하위체제의 특별한 성능들을 통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민주주의 정치 결정과정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개개인 또는 집단의 단순한 행동만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는 관심사를 말하고 자원을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논증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타협 찾기와 갈등해소 과정으로 포괄적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집단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Münch 1982a, 128쪽).

뮌히의 주된 주장은 사회적인 차별화 및 각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조건이 점점 더 서로 통합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대립적인 가치원칙들이 통합의 가능한 형태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가들은 역할자로 항상 권력, 연대감, 교류 그리고 이해관계라는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정치적인 체제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계는 이중의 권력코드(권력이 있다/없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했다. 즉 연대적인 지원을 받거나 받지 않는다. 자원을 생성하거나 생성하지 않는다. 합법성을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적인 과정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정치와 정치적 조정(합성, 경쟁, 중앙권력의 강화 그리고 타협이란 기본적인 형태로)의 가능성이 실제로 “창조하는 인간주체에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도에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Münch 1996, 111쪽).

연대적인 통합으로서 통합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제2의 현대에서 제3의 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하다. “복지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의 연계는 제2의 현대를 나타낸다. 이것은 제1의 현대에서 자유 자본주의와 자유 법치국가의 연계로 인해 생성된 사회적인 배척에 대한 답이다. 이제 우리는 제3의 현대에 다다랐다. 자금시장과 노동시장의 새로운 세계화 과정, 노동분배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민족

국가의 통합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층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사회에서 사회적인 통합을 다시 획득하는 행위가 추구된다. [...] 개인의 권리와 관심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옛 정치는 상호주체간 분배된 그리고 장기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Münch 1998, 7쪽).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고 아직은 보완해야 하는 본 연구프로그램에서는 객관적인 관계와 행동이론을 다루고 있다. 즉 각각 분야에서 이중의 의미로 사회정치적 분야의 구조와 다양하게 편입되어 있는 외형의 구조 간의 관계를 말한다(Bourdieu 1998, 7쪽 참조). 그 밖에 현재와 연관되어 있는 분석은 과거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즉 집단적인 기억과 사회학적 발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다룬다(König/Kohlstruck/Wöll 1998; Friedrichs/Lepsius/Mayer 1998). 현재란 ‘과거의 미래를 구분’하는 것 이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Luhmann 1997a, 581쪽).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과 기대감들을 엮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작용한다.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평등에 관한 이론은 우선 오노라 오닐(Onora O’Neill, 1996) 그리고 아비샤이 마르갈리트(Avishai Margalit, 1997)의 두 이론을 참조해야 한다(Thumfart 1999a도 참조). 반면 오닐의 행동이론적인 명제는 부당성 논증의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예를 들어 상처/익숙해진 사회관계의 변화). 마르갈리트는 지금까지 평등에 관한 토론에서 제외되었던 존엄성의 정치를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비슷하게 표현했다. 즉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해치거나 모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를 형성하거

나 이에 필요한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갈리트가 표현한 존엄성이란 특정한, 그러나 항상 상호주체적-문화적인 맥락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엄성은 공적으로 정당화된 행동을 해치는, 그리고 결국 부당하게 표현하는 추가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존엄성이란 개념은 (오늘의 도덕 이론과 같이) 시민들 스스로가 성찰적이고 자기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존엄성이 실제로 제도적인 행동으로 모욕을 당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행동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했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과 문제에 관한 평가는 규범적 통합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 또는 미완성으로 남을 지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



# 정치통합현실 제2부





## I

## 연구의 구성: 정치 제도의 제반 분야



이미 소개한 대로 정치 제도를 소규모와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차원이란 세 가지 서로 다른 분야로 구분한 것에 따라 지금부터는 이 분야에서 선별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요소들을 다룸에 있어 선택과 순서는 한편으로는 정치 제도 전반의 기능적 구조 논리를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전히 시간적인 생성 순서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병행하거나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독의 광범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구조변화는 이미 1990년 5월에 동독의 인민회의를 통해, 말하자면 새로 생겨난 주들에서 의회가 구성되기 몇 달 전에 이미 일어났다(Wollman 1996a, 106쪽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규정들을 작업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원래는 모든 주의회의 과제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문제를 야기한다. 민주적 대의제가 가지는 의회 중심적 특성으로 인해 먼저 기능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구조로 발전되기 이전 상태의, 통일 이후의 이 단체들의 제도화에 대해 기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 편에서 이미 특수한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즉 입법부 구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전문적 엘리트 혹은 관심사라는

형태의 특수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 때문에, 시간적인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발생적인) 관점에서 먼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소들이 분석되어야 했으리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별적 요소들의 특별한 상호의존적 관계, 그리고 상호침투성 관계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Münch 1984, 305쪽). 기능적인 배열은 시간적인 (그리고 구성적인) 배열과 같음을 빗을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차원에서 상호 영향관계에 있는 한 명제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는 이미 잠정적인 구성 혹은 그것의 변화 속에서 정치 시스템 속의 개별 요소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시간적 배열 혹은 다른 단계로의 통합, 분산, 그리고 쌍방적인 해석이란 문제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기술목적과 보다 잘 개관할 수 있기 위해 몇 가지 부분에서 방법론적으로 괄호 속에 묶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정치제도의 각각의 본보기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분리되고, 체제전환 과정 내부의 자체적인 역사 속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관련짓고 연결시키고 분리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지나치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이 같은 요소와 제도 사이에서 통합과 분산이란 서로 다른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각 단계별 (예를 들면 정부) 요소가 전반적인 정치제도 속에서 철저히 그 자체의 기능과 과제, 그리고 체계적인 합리성과 절차방식을 가진다는 것, 다시 말해 비교적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Waschkuhn,

1977a, 247~248쪽). 이것은 물론 그것들 사이의 상호침투성이 결정적으로 입헌적 기능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배경 앞에서 나는 정치제도의 다음과 같은 요소들 혹은 제도들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1) 의회, 정부, 그리고 정부부처의 관료제과 같은 거시적 차원, (2) 정당, 단체, 매체, 교회와 같은 중간적 차원, (3) 미시적 차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 자치적 혹은 지역적 민주주의와 자치단체의 자기 관리(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 매년 개별 헌법(Verfassungen)들이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 선택이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스포츠 (스포츠단체), 환경단체, 아니면 정치학 연구 (정치 자문의 형태를 가진) 자체를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사법부를 전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적어도 법률이란 맥락 속에서 거론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광범하고 상세하고 경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 책의 연구 범위를 뛰어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서 언급된 분야들과 더불어 중요한 서로 의존적인 요소들이나 대상영역들을 다룰 작정이다.

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각각의 분야를 위해 우선 정치이론적인 접근방식 하에서 그것의 의미와 기능, 역할과 권한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속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거기서 특별한 비중은 규범적 통합 과제 위에 두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각각의 분야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고,

그 자체적으로 독특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이어 가능한 한,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한에서 동독의 정치적-사회적 제도와 역사 속에서 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하는 것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1989년 ‘평화로운 혁명’ 이후 동독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제는 새로운 그리고 통일된 독일연방이란 정치제도의 해당 분야를 개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구조들과 문화들의 특수한 결합과 연계, 혹은 분열이 매번 통합과 분산과 함께 이해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요약할 것이다. 그것에 이어 각각의 단계들에서는 정치 이론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각 장의 결과들을 이론적 명제와 같은 보다 넓고 시사적인 맥락 속에서 창조적으로 구축하고 정치학적 (체제전환)이론의 바람들을 거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 정치제도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법적, 혹은 종교적 제도와 더불어 그 사회의 하나의 하부구조만을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화되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하부구조로서 정치제도는 그 사회에 각별히 중요한 업적,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을 내리고 관철시킨다는 업적을 낳는다.<sup>14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와 주민들의 지지에 의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거나 혹은 정치외적인 규범적 방향설정과 적용을 요구하는 절차방식과 주요 이념을 따르게 된다. 그밖에도 첫 번째 요소는 ‘정

---

148\_ 이에 대해 우리는 괴러(Göhler)의 정의를 따른다. 정치 기관들은 “구속력 있고, 사회전반에 중요한 결정들을 창출하고 관철하는 규칙 시스템이다.” Göhler 1994, 22쪽.

치문화'라는 총체적 명칭 하에서 파악된다. 이것은 개별적 데이터들에 근거하는, 정치제도의 상이한 영역과 행위자들에 대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방향과 태도를 의미한다(Gabriel 1997c, 387쪽, 전반적으로는 Pesch 2000).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두 번째 부분에서 논증적이고 합리적인, 공개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판단과 (정치 제도의) 정의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sup>149</sup>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만으로도 정치문화와 정의의 문제가 이 연구의 또 다른 주제 영역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는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산과 통합이란 특수한 형태들이 제시될 뿐 아니라,<sup>150</sup> 그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제도와 정치제도의 구조와 문화의 결합을 넘어서 사회전반적인 가치영역으로, 특히 정치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고전적 정치사상가와 제도이론가들의 핵심요소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sup>151</sup>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제도가 사회적 영역과 더불어 유지하는 네트워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에 관한 규범적인 표상들은 자기편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적 입장

149\_ 다렌도르프(Dahrendorf)는 바로 점점 커져가는 세계화라는 조건 하에서 정의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 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컬었다. 의사소통적, 공개적 사회화, 대의적 민주주의, 법과 정의의 연결에 관해서는 당연히 하버마스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Habermas 1992, 특히 516~537쪽; Thumfart/Waschkuhn 1998, 29~33쪽.

150\_ 전환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 바로 이 정치문화 연구는 엄청난 비약을 경험한다. Gabriel 1997a, 10~11쪽.

151\_ 기관들을 포함한 공동체와 시민들의 관계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나 혹은 폴리스에서 시민들은 어떤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Aristoteles 1984, 107~112쪽. 이 질문은 몽테스키외와 데이비드 흄에게서 다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Thumfart 1996b 참조.

과 태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잠정적 지지대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언급된 바대로, 문화적 미시차원을 둘러싸고 제도적, 지역적인 미시차원을 보완하고 다양하게 할 것이다.<sup>152</sup>

그것을 넘어서 정치문화와 정의라는 이 두 가지 주제영역이 제도화되어가는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통합을 통해 이미 언급된, 방법론적으로 괄호 속에 묶어두는 것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거될 것이다. 이전부터 다소간 정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 두 주제영역은 제도내적인 동시에 제도외적인 유효성 구조, 결정 구조와 관련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제도의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영역별로 특수한 표현들을 전제하게 된다. 이들은 정치제도의 영역들을 연결시키고, 동시에 분리시키기도 한다. (이것들이 정치제도를 주변세계와 연결시킨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중의 코드를 가진 관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개념을 중재하는 영역들 상호간의 결합과 다른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이 개념들을 중재하는 중간영역간의 결합(intrasphärische Konnexionen)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중재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를 설명해줄 뿐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상이한 관계 속에 설정하게 된다. 나아가 이것은 이 중재가 작동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차이와

---

152\_ 이것은 문화적 미시차원이 단지 제도적인 것에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laußen 1997, 344~347쪽. 이것은 단지 미시차원의 표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상이한 요소들 안에서 이중화가 제시될 것이며, 이 이중화의 관계를 제도적인 미시차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주목할 것임을 의미한다.

모순들과 저지나 방해 혹은 단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약은 결국 영역별로 특수하게, 그리고 전체체계의 구조와 관련하여 통합과 분산 메커니즘 혹은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식이나 도표 속에서 기간을 한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독에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규범적인 통합을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치적-기관적, 문화적인 지식을 가진 정치행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주된 방향들과 제안들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연구와 무리 없이 연결될 것이며, 차이와 고집과 다수성을 상실하지 않고도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연구들은 언젠가는 끝이 나야 하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표(시대색인)를 취하게 된다. 이는 아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실현가능할 것이다.

## II

###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의회주의와 주의회



의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의회적-민주적 대의제는 근대와 현대 정치철학과 이론화작업의 핵심적인 토포스와 발상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sup>153</sup> 동시에 실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sup>154</sup> 의회적 대의제에 관한 (이념사적이고 역사적인) 상이한 작업과 설명, 그리고 근거 제시는 저자에 따라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구별되고 차이가 나지만, 철학적-인류학적 기본입장, 인식론적 사전이해, 그리고 방법론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한 세트에 포함된다. 그것들은 현대적 국가의 역사적인 조건 하에서 규범적인 방향을 취하는 민주주의 이론의 또 다른 부분이며,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실현

---

153\_ Kluxen 1983. 인간적이고 상호적인 행위를 통한 사회적 정치적 제도들의 고안에 관해서는 Berger/Luckmann 1987; Walzer 1990; Abels 1998, 91~113쪽 참조. 굿맨(Goodman 1984, 20~31쪽, 114~133쪽)은 인간적인 상호행위(언어)를 통한 발상 잠재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대의제를 특히 외연적(denotative) 발상이라고 특징지었다. “외연은 재현의 핵심을 이루고 유사성과는 무관하다.” von Beyme 1999, 253쪽에서 재인용.

154\_ 적어도 20세기 후반에 적용되는 이 테제를 위해 사람들은 헌팅턴(Huntington)이 제안한 세 가지 물결의 모델을 가지고 작업하였다. Held 1995; von Beyme 1999, 61~121쪽.

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의 초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Waschkuhn 1984, 1쪽; von Grevelde 1999, 148~164쪽). 이 같은 프로젝트로서 이 초안들은 역사에 의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사적인 상황과 위상 속에서 규정된다. 이것들은 시대사적 상황과 위상에 대해 특별하게 반응하고, 문제 상황이나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언어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Ball 1995 참조). 따라서 의회주의의 개념은 스스로 맥락과 관련된 역사를 지니고, 그 역사가 흐르는 동안 세분화, 상세화, 그리고 중심이동이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현실 역사적인 발전양상을 가진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설명담론은 항상 서로 교차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sup>155</sup>

여기서는 이념사적 성찰의 노력과 사회역사적인 주변조건들의 이처럼 뒤엎히고 폭넓은 상호관계를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회주의의 이념의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에 관해 집중함으로써 이 같은 복잡성을 줄이고 우리의 문제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동독의 전환 과정에서 통합과 분산이란 문제를 어떤 영역에 따라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서는 정치기관들의 권한 속에서 대의적 기구의 중심에 관한 서로 연결된 표상, 행위자에 바탕을 둔 내적인 구조화와 이해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의 자체의 문제, 다시 말해 대변하는 사람과 대변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sup>156</sup>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단지 형식적인 이 요소들이 실제

155\_ Hofmann/Riescher(1999, 1~2쪽)는 의회주의의 개념이 “그것의 사용에 있어 혼동스럽고 다층적”일 뿐 아니라 “의회민주주의는 [...] 긴 의회역사의 끝에 서있다”라고 아주 타당성 있게 강조한다.

로는, 그리고 지속되면서는 상관관계 형태나 혹은 상관관계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적 차원에서는 의회 자체의 (현실적) 기능구조와 일치할 뿐 아니라,<sup>157</sup> 이를 통해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정치제도의 상이한 시스템 차원 사이에서 상호침투성을 암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연결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대의적 기관이 계속해서 정치제도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이상적으로 자신을 입증하고, 동시에 그렇게 표현된다면, 이것은 용어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정치제도의 다른 영역과의 병합을 열어줄 뿐 아니라, 역으로 이 영역들이 의회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 이 장이 의회주의를 가지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일 뿐 아니라,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논리적-표현기술상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항상 다시 ‘의회주의’라는 영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회대표제의 이 세 가지 본질적인 (형식적인) 요소들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내용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대와 현대의 몇몇 정치 이론가들의 이론을 끌어와야만 한다. 그들의 이론을 끌어들이는 것은 모든 기초정립에서 문제외적인 이론요소들을 주제화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운데, 주로 연대

---

156\_ 이 세 가지 요소의 선택은 Scheuner 1968, 417쪽을 따르는 것이다. 미국 식민지들의 구호 “대표가 없으면 세금도 낼 수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현대적 의회주의의 세 가지 개념의 내적인 연결을 아주 잘 보여준다. 이것과 더불어 “현대적 대의 의회주의의 역사적 출현이 이루어졌다” Schüttermeier 1995, 545쪽. 중앙의 의사결정기관 안에서 대표한다는 것은 ‘구세계’ 안에서 ‘신세계’에서 나온 것을 대변하는 사람인 새로운 행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성체에 연결되는 것이다.

157\_ “의회의 기능들은 상관관계 속에서 거의 전적으로 힘을 상실하고”, 그래서 상관관계 개념과 더불어 분석되어야 한다. Hennis 1991a, 226쪽.

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것의 초점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같은 이론적 포착은 의회주의 개념의 연속성의 방향을 보여준다. 둘째, 역사적 이론과정에서 그것의 내용적인 전환, 재평가 혹은 새로운 평가를 기술하는 것이다. 셋째, 요소들 가운데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이것을 통해 독일연방이란 정치제도 속에서 (현재의) 의회를 위한 근본요소들과 기초 이론적인 테두리를 언급하는 것이며, 다섯째로는 독일의 특수한 문제와 사고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 통치방식(즉 의회민주주의)의 사상적인 근거가 여전히 지나치게 부족한”(Hennis 1999a, 272~273쪽) 것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여섯째로 의회주의의 구조적 특징과 주도이념은 대표자들의 역할 모델과 역할 특수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할이란 개념으로의 방향설정은 이미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그것은 역할이해라는 문제를 조명하고, 이로써 문화역사적인 차원을 작동시킨다. 구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이런 결합은 마침내는 넓은 의미에서는 앞서 논의한 통합과 분산이라는 토포스에 의해 현재의 의회적 전환 형태와 통합 형태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과 주제화로 이어진다.

다섯 번째 점에서 논의된, 의회주의 개념과 독일의 특수한 어려움을 연결시키는 것은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이 1960년대 중반에 제기한 고찰들 속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프랭켈은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설정과 합법성의 근거 및 안정성의 조건이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대변되는 헌법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형태에 의해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았다. 이는 정치엘리트의 완벽주의가 “대중들의 의식 속에도 의회에 관한 염증”이란 감정을 낳았던 것이다(Fraenkel 1990a, 144쪽). 독일에서는 특

이하계도 의회주의의 새로운 설정 혹은 이식이 정치적으로 다소간 ‘집단적 무의식’과 교차되는 것처럼 보인다면(동일 참조문헌, 137쪽),<sup>158</sup> 20세기 독일에서 의회주의의 세 번째 (새로운) 도입에서 이 같은 전통을 명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동독의 정치 엘리트들에게서 보이는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설정과 더불어 한 사회의 ‘정치 문화’라는 복합체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단지 언급만 할 뿐이다. 전체적 윤곽에 대한 이런 암시는 특히 이 장에서는 의회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가능한 전환형태와 (내적, 외적) 통합과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의회주의에 결정적인 구조요소이자 통합과제를 수행하는 단체나 정당과 같은 중간 심급들은 나중에 다루게 될 것이다.

## 1. 이론적 접근

정치적 통치형태이자 정부형태로서의 의회주의는 영국의 역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실제 역사적 결과라는 관점에서나 이론적 제도화와 철학적 기초를 다진 인물들과 관련된다(Kluxen 1983, 17~88쪽 참조).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서서히, 처음에는 순전히 영국 귀족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지방귀족(landed gentry)’이 모여 대표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대

---

158\_ 이런 종류에 대해 프랭켈은 시종일관되게 정치학은 ‘일종의 정치이론적인 심리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 참조문헌, 137쪽.

표단은 군주제에 대해 반대세력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동의권을 통해 권력과 그것의 실행에 제한을 두었다(Hofmann 1995, 37~97쪽). 그것은 무엇보다 영국 시민전쟁의 결과였고, 그에 따라 의회적인 통치제도의 개념적 작업이 이루어졌다. 명예혁명 동안과 명예혁명 이후 휘그당의 대변자로서 존 로크는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법과는 무관한 절대적 주권 하에 복종하는 계약으로서의 사회계약 및 통치계약에 대한 답변에서, 대의의회주의 정부형태의 사상을 요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sup>159</sup>

로크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은 사회계약설과 통치계약설에 관한 특수한 표현과 분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부의 기준과 정치적 권한과 통치의 제약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의도로 삼는다. 이는 후자를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권력 장악이나 전제적 혹은 절대적인 형태와 구분 짓기 위해서였다. 사회계약설의 발생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노동을 통해 사물을 사유화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나 분쟁 시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쌍방 간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위임했다. 이 같은 논리적인 순간에 개별적인 사람들로부터 유일한 정치적, 그리고 특별히 주권적인 기관이 생겨나고, 이 기관의 기능은 구성원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으

159\_ 휘그당 정치가 샤프츠버리(Shaftesbury) 경은 로크의 논박문 **정부에 관한 두 가지 논문**을 위탁한 사람이었다. 직접적인 동기는 가톨릭계의 스튜어트 가문의 왕위계승이 절대주의적 상황을 다시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로크는 이미 1669년에 기본적인 개념화(2권에서 명시된 것처럼)를 시작했고, 필머(Filmer)의 책(1680년)과 스튜어트 가문에 대한 승리가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보았던 것이 많이 말해진다. Euchner 1996, 69~74쪽 참조, Laslett 1960, 45~51쪽; 세부적인 것은 Hugelmann 1991, 168~231쪽 참조.

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 있다(Locke 1977, 253~260쪽, §§87~95 참조).

주권은 계약당사자들에게서 아니라 계약으로 혜택을 입은 자(레비아탄 Leviathan)에게 있다고 주장한 홉스와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정치 단체 자체가 유일한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즉 의무적으로 규정되고 일치할 수 있는 사회관계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주권은 입법권한을 가진 핵심적 제도를 필요로 한다. 이 제도가 바로 의회이고, 이것은 국민 혹은 국민의 일부에 의해 선택된 대변인들로 구성된다. 의회의 통치는 시대에 대한 통치이며, 그것의 권한은 단지 주권에 의해 이양된 권한으로, 이 권한은 그 배경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입법의 심급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sup>160</sup> 이와 더불어 모든 법률은 국민의 주권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법률의 합법성은 생명과 재산에 관한 개인적인 자연법에서 깨어질 뿐 아니라 법률 자체에도 굴복하게 된다(Euchner 1979, 198~220쪽; Strauss 1989, 239~259쪽 참조).

대의기관인 의회는 정부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의’ 국가적 ‘공권력’이며, 입법을 넘어 국가목적(공동선)이란 의미에서 공동체의 힘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에 반해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해 통제되는,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어간 행

---

160\_ Locke 1997, 283쪽 (§134) 참조, 297쪽. 국민주권에 대한 고전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소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게 주어진다. [...] 그래서 공동체(Gemeinschaft)는 어떤 인물들의 공격과 침략 앞에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입법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상 그 자체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Locke 1977, 294쪽 (§149). 사유재산과 시민 유권자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이론은 Macpherson 1991, 278~294쪽 참조.

정부는 단지 법률 실행을 완수하기만 하면 된다.<sup>161</sup> 18세기의 데이비드 흄, ‘연방주의자들(Federalisten 미국의 북부 연맹 지지자들을 말함, 이하 연방주의자들로 표기-역자)’, 임마누엘 칸트 뿐 아니라<sup>162</sup> 약 100년이 더 지난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주권적 국민의 이름과 국민을 위해 명백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한 의회의 잠정적 규정에서 권력 분권적으로 조직된, 상호간의 권력 제한과 통제에 방향을 맞춘 정치적 지배기관의 설립이란 입장을 반복한다.<sup>163</sup> 물론 여기서는 몽테스키외와 연방주의자들에 의한 입법부, 행정부, 독자적인 사법부로의 보다 세부적인 분할은 제외되었다. 정치적 지배 체제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의회적 입법부는 의회주의 사상 내부에서 지속적 요소를 형성하고, 독일연방의 연방적인 정치체계의 바탕을 이룬다(Hesse/Ellwein 1997, 248~250쪽).

161\_ Locke 1977, 294쪽 (§150), 296쪽 (§153); Brocker 1995, 239~247쪽 참조.

162\_ 흄은 자신의 시대에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권력의 균형’이란 자신의 용어를 통해 권력분할을 기술한다. Hume 1988, 100쪽. 하나의 정부는 “일반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 속에서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권력 분할이 가능할 때 ‘자유롭다’고 불릴 수 있다.” Hume 1988, 34쪽. 의회의 중심적 위치에 관해서는 Hume 1988, 36~43쪽; Box 1990, 152~158쪽. 우리는 “정부의 내적 구조를 그것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가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쌍방 간에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Hamilton/Madison/Jay 1993, 319~32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형태의 정부에서는 입법부가 필연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동일 참조문헌, 320쪽. “그러나 모든 진정한 공화국은 국민의 대변적인 제도이며, 다르게 될 수가 없다. 이는 모든 국가시민 가운데 통일된 국민의 이름으로 의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이다.” 칸트 1984, 464쪽.

163\_ “대의적 정부의 의미는 전 국민 혹은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들 자신에 의해 주권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최고의 통제권을 실행한다는 것으로, 이 최고 통제권이란 모든 법령의 어디선가 존재해야 한다. 이 최고의 권력은 그것의 모든 완벽함 속에서 지배한다.” Mill 1991a, 97쪽.

로크와 흄, 밀은 분명히 의회적으로 구성된 정부라는 개념을 차단하는 입헌전제주의라는 표상의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sup>164</sup> 공동선을 지향하는 전체사회적인 조정과 결정중심부라는 이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기능규정과 더불어,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반정당적 감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데이비드 흄은 당파(factions)들을 특수한 현대적 현상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아마도 [...] 인간의 관심사가 등장하는 가장 특수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현상”으로 파악한다(Hume 1988, 56쪽). 정당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시민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감정을 지배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진,<sup>165</sup>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사에 근거한 양극화된 효과라고 하겠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흄은 다섯 가지 요소를 이끌어내었다. 첫째로 정당들은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Jäger 1971, 218쪽; Thumfart 1996b, 184~188쪽), 둘째로 정당의 대표자들은 의회 안에서 어떤 것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셋째로 그와는 반대로 의회는 회의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결국은 흄의 추종자들)에 의해 구성되며, 넷째로 감정을 추구하는 넓은 시민층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다섯째로 모범 기능을 통해 이들을 문명화된 회의주의자들로 교육시킨다는 것이다(Hume 1988, 61~76쪽, 291~300쪽 참조, Whelan 1985, 224~239쪽; Forbes 1978, 125~160쪽). 그 밖의 경우에는

164\_ Mill 1991a, 108~109쪽, 261~277쪽 참고.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연방주의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대통령은 선거인단과 국민에 의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제) 선출된다. Hamilton/Madison/Jay 1993, 404~408쪽 참조.

165\_ “이미 철저히 이성적인 원칙들은 종종 격정에 대해 힘 있는 저항세력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휘그당 혹은 토리당의) 이 모호한 원칙들이 지나치게 무력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Hume 1988, 68쪽.

시민들 사이의 논증의 자유를 강력히 변호했던<sup>166</sup>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사실을 반복하고, 부분적으로는 더욱 첨예화시키면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최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Aristoi*라는 의미에서) 의회 형태를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그 의회 형태의 과제는 정치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어느 의미에서는 무책임하고 이해관계에 휩쓸리며, 그래서 평등한 선거권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대중의 교육 이외에도 무엇보다 집단적이고 논증적인, 의회차원의, 공적인 합리성 증가를 통해 하나의 정치적 정황에 최선의,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sup>167</sup>

이것은 밀에게는 흠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의회적인 인물/행위자에게 허용 조건으로 거리두기와 모든 부분적인/정당적인 관심사에 대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전제한다(Mill 1991a, 81쪽; Schütt-Wetschky 1984, 145~146쪽, 151~156쪽). 왜냐하면 정반대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결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차단될 수 있고,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추후에 규정된 공동선이란 관점에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대변되지 않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사회에서 나온 이원화는 의회의 차원에서는 잠정적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 대신 의회의 공공성은 아주 분명하게 독

166\_ 여기에 인상적이고 아주 정확한 표현들 중 하나가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견해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면 본질적 악은 인간성에 관한 도둑질이며, 미래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의 인간성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Mill 1991b, 27쪽.

167\_ 단계적인 선거권에 대해서는 Mill 1991b, 169~190쪽; Röhrich 1981, 39~44쪽 참조.

점적으로 의사소통적이며, 상황적인 현실화로 이해된다. 이 현실화란 이미 사전에, 그리고 항상 나타나는 행위자(엘리트)의 이해가 집단적인 태도와 내재적인 엘리트적 규범지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의회주의는 이런 사전 징후 속에서 개인적인 태도의 폭넓은 단일성, 공동의 선이란 통일된 결과 속에서 서로 다른 내용상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행위자/엘리트들의 의사소통적인 통합, 그리고 입법기관 속에서 집단적인 자기보장과 자기성찰의 배타적인 자리매김을 의미한다. 의회주의는 시종일관 조직된 이익다원주의, 그리고 정당과 다수의 대중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배타성이야말로 의회적인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의적으로 사회적 통합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후자는 하나의 시대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언젠가 (성공적인 교육 작업에서) 배제를 지양하고 일반적인 포함과 통합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sup>168</sup>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유럽적인 맥락에서는 장 자크 루소의 정치철학이 성장하고 자리 잡게 된다. 그의 정치철학은 의회적인 대의정치의 가장 예리한 비판이자 대책점인 동시에 그것의 한 부분이기도 한다. 한 부분이란 의미는 정당이나 혹은 집단 형성이 공동체에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단호하게 거부된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루소가 대변자와 대변되는 사람들 사이의 분리, 정치적 엘리트와 민중 사이의 분리를 부정하고, 선형적으로 국민과

---

168\_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자신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는 공동의식 위에서 한 국가의 시민들은 대의적 정부를 성취할 만큼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다.” Mill 1971, 117쪽;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밀은 노동자 계층을 시민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으리라는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Röhrich 1981, 43쪽.

정부를 항상 포괄하고 통합하는 일반의지(volonte generale) 속에서의 일치  
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대척점이 된다.<sup>169</sup> 이렇게 해서 정당에 대한 비판  
은 -그것은 특별히 독일적 맥락과 의회사상에 관한 독일의 역사에 적용된다-  
항상 고전적 영국전통의 외적으로는 분리되고, 내적으로는 통합된 대의제 모  
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의회와 마찬가지로 결국 존재할 수  
없는 정부의 사전적인 일치 상태, 혹은 사전적인 통합이라는 루소적인 사상  
의 전통을 낳는다.

그것과는 달리 (그리고 루소에 대한 답변에서도) 1781/88년의 헌법자문이  
란 북미의 맥락에서는 의회적 대의제 형태가 발전되었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sup>170</sup> 해밀턴, 매디슨, 제이(Hamilton, Madison, Jay)는 바로 루소에  
의해 영감을 얻은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 받는 사람들 사이의 단일성에 대한  
표상과 그것에서 추론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변호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에

169\_ 사회계약설 속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전적이고 제한 없이, 다시 말해 ‘어  
느 정도는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다’면, ‘항상 완전히 존재하는 것, [...] 존재해야  
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일반의지의 선형적 주권에 관해서는 Rousseau 1981,  
282~283쪽 참고. 이 주권은 나누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특히 로크가 주장  
한 것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다.” 동일 참조문헌 288쪽.  
중복이 대변이 아니라 통합적인 정체성이라면, 대의적인 제도의 모든 가능성을 포  
함할 뿐 아니라 (“주권은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 참조문헌 350쪽) “국가 속에  
서 부분연결” (동일 참조문헌 292쪽), 즉 정당은 생각할 수 없다. “완전한 입법 속  
에서는 특별 의지가 [...] 무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동일 참조문헌 321쪽).  
그 결과 이 정부는 오로지 일반의지의 행정기관일 뿐이다. Kersting 1994, 159~  
179쪽 참조.

170\_ “연방주의자 문서(Federalist Papers)”는 다음과 같이 “대서양 혁명 시기의 서구의  
헌정국가는 [...] 역사의 완전한 빛 속으로 예시적으로 나타난다.” Gebhardt 1990,  
310쪽. 헤르츠(Herz)는 아주 정당하게 루소를 연방주의 문서의 ‘거명되지 않는 반  
대 모델’이라고 명명한다.

서 출발한다. 그것은 이해관계와 정당의 생성과 존재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는 인류학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사회라는 맥락과 자양분 속에서만 완전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71</sup> 그래서 ‘상이한 이해집단과 정당으로의 사회의 분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Hamilton/Madison/Jay 1993, 95쪽). 사람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이처럼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트 개념을 통해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로지 사회적 이해관계의 복수성과 분산, 심지어는 쌍방적인 적대감이 대변자를 통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대의적 의회주의를 통해서 이런 위험과 직면하게 된다. 대의제의 양상은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가장 똑똑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변자와 대변되는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이고 공간적인 거리가 생겨나는 데, 전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세련되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맹신주의가 감소된다는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98쪽 참조; Adams/Adams 1994, LII-LVII 참조; Buchstein 1997, 382~396쪽 참조).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네 번째 것으로 차이와 이해관계의 대립, 이해관계의 적대성이 대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위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킨다는 것이다.<sup>172</sup>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모두에게 공통된 준비자세가 존재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의 일부를 가치결합으로

---

171\_ “그렇다면 정당들의 생성에 관한 숨겨진 원인들은 인간의 본성 속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것이 도처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본다. 그때그때의 시민사회에서 지배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이다.” Hamilton/Madison/Jay 1993, 95쪽.

172\_ 짐멜(Simmel)도 나중에 이 점을 강조한다. Cacciari 1995 참조.

서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정하도록 내놓거나 게임규칙을 논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바라볼 때에야 얻을 수 있다.<sup>173</sup>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바로 이 같은 논증적인 충돌은 갈등중재와 갈등범위 정하기로 이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정당적인 차이와 논쟁이며, 이는 의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당파들 사이의 통합, 조절과 쌍방적인 통제를 낳고 촉진 시킨다(Morgan 1974, 867~878쪽 참조). 월터 베이지헛(Walter Bagehot)은 80년 후에 영국의 헌법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그와 관련하여,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반대해서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정당 조직은 대의적 정부의 생기 있는 원칙이다.” 물론 그는 강력하게 서열상으로 배치된 정당들을 원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Bagehot 1964, 59쪽; Schütt-Estschky 1992, 95~98쪽 참조).

대변자들이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특성은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대변되는 사람들을 정치제도로 포함시키고 통합하는 것과 일치한다. 다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의회 내의 반대파를 통해 이 같은 사회적인 방향설정은 논쟁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순간에는 아무런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법률 텍스트 속에 묻혀 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스스로 다수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다(Hamilton/Madison/Jay 1993,

173\_ 이것은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표현된 표상, 즉 맹신주의자들이 의회 속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에서 분명해질 뿐 아니라 대표자들은 대중 영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가정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Zehnpfennig 1993, 42쪽. 본인 자신이 연방주의자들 가까이 있었고, 특히 복수주의를 표방한 존 듀이(John Dewey)가 대표자들에게서 적어도 ‘자신들의 다른 욕구에 대해 공동선의 우위’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Dewey 1996, 75쪽.

343~346쪽, 352~357쪽). 그러니까 사회의 정치적 통합은 흠과 밀에게서처럼 서로 모순되는 엄격하고 엘리트적인 배타성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속적인) 정치적 표현, 사회적인 이해다원주의를 정당을 통해 수용하고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국민과 정당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게 연결된 그들의 대변자들 사이에서나 대변자 자신들 사이의 상호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sup>174</sup> 따라서 의회는 더 이상 정치적 사회적 자기반영의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 듀이가 ‘연방주의자’와 관련해서 강조한 것처럼, 정치적 자기 확신이 모든 제도화된 다원적인 ‘연상관계’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공적인 관심사를 조정하기 위해 이 연상관계에 참여한다.<sup>175</sup>

이렇게 다원주의에 근거한, 정당들에 의해 중재되는 의회적 대의제의 중심에 대한 내적인 이해와 사회에 관한 외적인 관계는 서독 전반의 의회주의 이해에 주된 이념을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서독의 민주화를 위한 고위 위원회(Hohe Kommission für Westdeutschland)의 초안의 일부이기도 하다(Rupieper 1993, 60~71쪽). 따라서 우리는 서독 의회의 공표 기능, 대표 기능, 입법 및 통제 기능을 그다지 무리 없이 미국의 고전적 전통,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전통과 결부

---

174\_ “연방주의자 문서는 대의제의 원칙에서 하나의 악이 아니라 공화적인 국가 형태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Herz 1999, 198쪽. 대의제와 상호성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는 Uppendahl 1981a; Herzog 1998 등 참조.

175\_ Dewey 1996, 158~163쪽 참조; 이에 대해서는 Fott 1998, 63~82쪽 참조. 우리는 듀이의 입장에서 연방주의자들이 그것을 대변했던 것처럼 의회적인 토론의 장의 연방적인 다원화의 확산이나 계획이 사회자체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Krüger 1996, 204~205쪽 참조.

시킬 수 있다(Kluxen 1983, 204~211쪽). 여기서 의회가 정치적 통합을 낳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라는 결론이 나온다.<sup>17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회의 이른바 선거 기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르게 보인다. 선거기능은 우선 로크, 흄, 밀, 그리고 ‘연방주의자’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동시에 둘째로는 ‘연방주의자’들에 대해 다원주의적 의회가 가지는 적대감의 특수한 중심이동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다원주의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하지만 말이다. 입헌제나 대통령제라는 조건 하에서 행정부와 의회(Gesamtparlament)가 대립된다면, 연방의 특성을 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연방총리나 수상의 선거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나오게 된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지능력을 가진 의회 다수파의 의회내적 이원론과 의회의 반대파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Rudizio 1996, 214쪽). 이와 더불어 의회 내부의 반대파의 통제 기능과 발언기능이란 영역이 더 커지게 된다(Schneider 1983, 245쪽 참조; Schneider 1989, 1060~1062쪽). 그들의 임무는 첫째 구체적, 정치적 계획이나 전반적인 목표제시에 대해 정부와 정부를 구성하는 다수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제도 내부의 오류검색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다(Patzelt 1997c, 174쪽). 둘째로 이들은 사실적 대안과 개인적 대안, 그리고 프로그램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선전하고, 이 같은 바탕 위에서

176\_ 의회를 통한 대의는 바로 이런 이념에서 “사람들이 보다 큰 단체들을 통일체로 경험하고, 조직하고 이해하려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인식된다. 이렇게 생각된 통일성은 그들의 정치적-국가법적 실현을 위해 어떤 기관을 필요로 하고, 사회의 이름으로 정체성 형성, 통일성 유지와 행위의 권한을 위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Hofmann/Dreier 1989, 165쪽; Rebenstorf 1993, 91~98쪽 참조.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셋째로 정부나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 배제되고 회피되고 무시된, 그러나 해결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회적 주제들을 의회의 의제로 상정함으로써 주도적 기능을 얻게 된다(M. C. Schmidt 1992b, 283~284쪽 참조; von Beyme 1997a, 179~182쪽 참조). 따라서 의회의 사업일정의 다양한 개혁이란 특징 속에서 이른바 소수자의 권리가 확대되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Ismayer 1992, 38~39쪽 참조).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합법적인 의회내부의 반대당은 첫째 의회의 대의 제도와 더불어 ‘두 번째로 위대한’ 정치적 발견임이 입증되었다.<sup>177</sup> 둘째로 이해관계와 그 이해관계의 대변자들 사이의 적대감은 ‘양극성’으로 옮겨간다(Hereth 1969, 156쪽). 여기에서부터 ‘연방주의자’와 대통령제에 대해 의회내부적인 통합과 소통적 통합기제라는 고조되고 예민한 문제가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자’들의 고려 속에는 어렵기로 악명 높은 대의(대표)란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립적인 측면들이 관통하고 있다.<sup>178</sup> 이 양면성 속에서 의회적 대의제란 개념의 발전 양상이 이 개념의 모호함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내부적 비판을 받는 사실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모호함은 특히 독일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했

---

177\_ Ruzio 1994, 214쪽; Waschkuhn 1998a, 587~592쪽 참조; Schneider 1994, 577~580쪽 참조; Steffani 1979b, 224~228쪽 참조. 볼링브로크(Bolingbroke) 경은 18세기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당이란 포기할 수 없는 반대세력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Hofmann/Riescher 1999, 127~129쪽 참조. 그것에 이어 란트루트(Landhut 1980, 409쪽)는 “의회의 반대파는 통치권 소유자에 대해 최후로 남아있는 자유의 수호자” 라고 일컬었다.

178\_ 철학과 정치에서 대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Thumfart 1997b, 188~200쪽 참조; Schüttemeyer 1995, Berthold 1997.

고 또 여전히 반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항상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혼란을 가져온 입장들에 대한 단초를 얻게 해준다.

해밀턴, 매디슨과 제이(Hamilton, Madison, Jay)는 이해관계의 분산과 경향들은 ‘재산을 획득하는’ 인류학적 ‘동동하지 않는 자질’에서 기인된다는 고전적이고 근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Hamilton/Madison/Jay 1993, 95쪽). 이해관계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에서 생겨나는 사유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이고, 이것만이 대의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다원적인 이해관계의 대변을 결정적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내용적인 사전 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대의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거나 정당 안에서나 정당에 의해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되어야 할 것이 정당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가능한 한 넓은 구간에 걸쳐 마련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sup>179</sup>

나중에 한나 F. 피트킨(Hanna F. Pitkin)이 상세히 표현한 것과 같이,<sup>180</sup> 연방주의자들이 이로써 정치적 대표란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수용과 창출이란 모순을 암시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이해관계가 동일하게 정당들

179\_ 쨬페히니(Zehnpfennig)가 “통치하는 사람은 진정한 국민의 뜻을 위한 해석의 독점권을 (가진다)”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Zehnpfennig 1993, 43쪽. 슈페터(Schumpeter 1993, 418쪽)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직업적인 정치가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표자들, 혹은 이런저런 형태의 이상주의자들의 집단은 국민의 의지를 형성하고 매우 넓은 범위 안에서 창출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180\_ 한나 F. 피트킨(Hanna F. Pitkin)은 정치적 대표를 (모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의미에서나 실제상으로 현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컫고(Pitkin 1967, Nohlen 1998b, 556쪽에서 재인용), 저 창출 동기의 ‘만들기(Machen)’란 개념 속에서 함께 거론했다.

에 의해 의회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에서부터 두 가지 상반되고 모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체로서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각각의 대표자들은 주권적인 선거인단, 투표자들의 의지와 투표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고, 직접-민주적-국민투표 방식의 특별한 임무와 연결된다.<sup>181</sup> 다른 한편으로는 에른스트 프랭켈(Ernst Fraenkel)과 부분적으로는 요셉 슈페터(Joseph Schumpeter)가 보여준 것과 같이, 독일 국가법 전통의 상당한 부분은 이 같은 이율배반성에서부터 정당들이 ‘국민의 뜻’ 혹은 ‘공동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고 조작한다고 읽어내었다.<sup>182</sup> 흠과 밀의 의미에서의 대의기관의 개념이 이 같은 정당 비판,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정당 거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sup>183</sup>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적) 사고방식

181\_ 프랭켈(Fraenkel)에 따르면 대의제란 “헌법에 맞게 요구된, 국민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국민의 구속적인 위임 없이 행동하는 국가의 한 기관이거나 혹은 자신들의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유래되고, 국민의 참된 뜻을 수행하는 공적 권력의 그 밖의 수행자에 의한 법적 권한을 가진 통치기능의 수행”을 의미한다. Fraenkel 1990b, 153쪽. 프랭켈(Fraenkel)은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가 “어느 정도로 분산될 경우라도 경험적인 국민의 의지를 가지고 [...] 우선권을 보장하는” “가정된 국민의 의지”에 대해 말함으로써, 대의제의 내재적 창안 잠재력을 의미한다. 동일 참조문헌 153쪽. 대의제에 있어서 문지기 메커니즘에 관한 상세하고 침예한 분석으로는 Sofsky/Paris 1994, 157~177쪽 참조.

182\_ Fraenkel 1990c; Schumpeter 1993, 397~426쪽 참조. 슈페터(Schumpeter)는 루소의 민주주의 개념을 주된 형태로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흠과 밀의 변형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적-전투적 (어느 정도는 연방주의자의) 의회대의제 대 반정당적-단일주의적 의회대표제의 차이가 각 주들의 특수한 전문사전 속에 반영되고, 그것으로 문화적 구성요소로 자질을 갖추게 된다.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사전에는 대의제가 항상 사회적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자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독일 사전들은 의회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Döhring 1997.

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적, 자유적 민주주의 자체가 거부되었다.<sup>184</sup> 이와 더불어 통치하는 자들과 통치 받는 자들의 일체감이 출발점을 이루고, 행정부가 오로지 저 불길한 공동 의지의 수행기관으로 나타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조건 하에서 당연히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된 의회 내부적 반대파 혹은 의회가 만드는 정부(행정부)와 의회의 다수당 사이의 결합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sup>185</sup> 이렇게 해서 정치이론과 정치 엘리트들은 -이것은 이차세계대전 후 서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의회의 현실에 완벽주의적인 표상을 갖다 붙였고, 잘못된 척도를 가지고 평가했으며, 스스로와 의회주의를 부인했다. 이것

183\_ 연방주의자들, 적어도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특수한 이해관계에 관한 배타성을 가지고 스스로 회의적인 의회엘리트들의 흠의 프로그램에 접근한다. 개념적인 '양면성'은 대표라는 개념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밀턴은 '보다 시종일관된' 다원주의를 대변한 반면, 매디슨은 '권위적(엘리트적)' 성향과 독법을 보여준다. Young 1985, 630쪽 참조. 이것은 아마도 매디슨은 특히 정당에 관한 흠의 부정적 이해에 근거하여 정당들의 비경제적인 요인들, 예컨대 열정 같은 것을 강조했다기 때문일 것이다. White 1987, 68~78쪽 참조. 그리고 나면 상당히 쉽게 엘리트적 대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동일 참조문헌 164~166쪽 참조; Gebhardt 1990, 328~320쪽 참조.

184\_ 의회주의는 '지금까지의 바탕과 의미를 상실'했고, '현대적 의회주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지배적이고, 이런 주장 속에는 여전히 매력 존재한다. Carl Schmitt 1991, 63쪽, 41쪽. 이에 대해서는 Lenk 1996; Lenk 1997 참조. 이탈리아와 스웨덴, 독일에서의 반의회주의에 대한 비교는 von Beyme 1999, 162~171쪽 참조.

185\_ 이 연관관계는 상당히 얽혀있다. 한편으로는 행정부와 국민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루어진 행정부(국가=군주)와 국민(사회) 사이의 명백한 단절은 프랭켈에 따르면 19세기 독일 의회에서는 의회가 '사회적 세력들의 대표자'로 이해될 수 없고, 규범적으로 군주의 반대자가가 되는 '국가기관'으로 이해된다. Fraenkel 1990a, 143쪽. 이렇게 해서 독일 입헌군주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의회에 의해 생겨난 정부라는 개념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사회적-다원적 이해관계의 대표라는 개념도 나타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Schönberger 1997, 70~182쪽; Kühne 1994.

은 “의회가 ‘정당들의 시시비비’의 장소나 ‘잡담 장소’ 또는 ‘산더미 같은 이해관계’의 집합소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치지 않는 무지한 자들의 불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Fraenkel 1990b, 144쪽).

예를 들면 칼 슈미트(Carl Schmitt)부터 게르하르트 라이프홀츠(Gerhard Leibholz)와 같은 사상가가 존재했고, 또 라이프홀츠와 더불어 과거 서독에서도 사상가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 모델은 동독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루소에서부터 칼 슈미트와 게르하르트 라이프홀츠에서 나온 풍부한 인용문들로 이루어진’ 구동독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통일사회당) 통치의 ‘진정한 민주적 성격’을 증명하고, 그렇게 해서 서독 국가법 학자들에게서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얻어낸,<sup>186</sup> 1949년에 나온 ‘동독 지역의 봉쇄제도에 관한 변명’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 하네스 R. 베허가 1952년에 쓴, 사회주의자라면 ‘자신의 열정 속에서 민중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일치한다’는 선언 이후, 이런 사고 모델은 통일사회당(SED)의 국가관이자 사회관을 관통한다.<sup>187</sup> 동독의 헌법에서 1974년에 기록된 ‘노동자와 그들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주도권 요구(Führungsanspruch)는 국민의 뜻(피통치자)과 ‘새로운 유형의 정당(통치자)’ 사이의 동일시를 통해 루소적인 의미에서 정당화되었다.<sup>188</sup>

통일사회당(SED)은 일관되게 의회주의를 ‘시민적 국가형태, 부르주아의

---

186\_ Hennis 1999a, 233~234쪽. 구서독에서 의회의 반대행위를 습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동일 참조문헌 249~265쪽.

187\_ Meuschel 1992, 81~101쪽 참조.

188\_ 1974년의 동독의 헌법 1조, Hornung 1996, 86쪽에서 재인용. 호르농(Hornung)은 통일사회당(SED)의 정당화 전략에 사용된 루소주의를 연구했다.

지배형태'로 정의했을 뿐 아니라 동독의 국민대표제, 특히 인민회의란 '의회로 초안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189</sup> 레닌의 마르크스 해석을 바탕으로 인민회의는 '파리 코뮌 [...]과 소련의 본질을 가진 국민 대의기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나아가 전적으로 루소가 말하는 동일시 개념 속에 배열되었다.<sup>190</sup> 법적으로 보자면 동독 헌법이 이미 의회내부의 반대파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민회의의 폭넓은 권한을 선취하고, 사실상 그리고 일관되게 후보자 제시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민족 전선'에서) 의석분배를 불인정하며, 여러 임무들이 점점 더 다른 위원회(예를 들면 국가위원회)로 옮겨짐에 따라, 인민회의는 통일사회당(SED)의 정치국 혹은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얻는 대신 무력화되거나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Lapp 1975, 210~264쪽; Weber 1991, 152~162쪽). 게다가 통일사회당(SED)이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객관적인' 국민의 의지를 표현한다면, 의원들의 활동 또한 '[...] 이해관계의 대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sup>191</sup>, 결국 통일사회당(SED)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적 의원직으로 변하게 된다(Rausch/Stammen 1974, 205쪽; Waldrich 1980, 171쪽). 동독은 루소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독일의 정치-문화적 의식의 이분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이분법이란 한편으로는 현실정치적인 국가 및 지배에 관한 거의 무제한적 인정으로 이어지

189\_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의 헌법(1969), Lapp 1975, 27쪽에서 재인용.

190\_ 동독의 헌법주석(1969), Lapp 1975, 256쪽에서 재인용. 여기에 발터 울브리히트의 1958년 4월 선언 "인민회의의 활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사적 포기를 의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191\_ DDR의 국가법 1978, Waldrich 1980, 171쪽에서 재인용.

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공동체의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리고 메타정치적인 형상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후자에 대해 정치적 과정과 무엇보다 일상적인 의회적 대의민주주의와 담론상으로 양분된 논증방식과 반대임무를 갖춘 정당들은 절망적으로 뒤쳐져 있고, 오로지 역사의 하데스(지하세계-역자)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뿐이다.<sup>192</sup> ‘대의제’의 양면성이 의회주의에 관한 비판과 정당성을 마련해준다면, 그 양면성은 개개의 대변자들의 역할의 특수성 속에서 핵심적인 토포스 중의 하나로 작동한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암시된 것처럼 이 역할 모델 속에서 동시에 서독의회들의 구조적 혹은 관계적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연방선거법과 의원법, 기본법이나 각 주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지위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결권과 정보권과 같은 의회의 권리를 부각시키며, 38조 1항은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와 ‘전 국민의 대표자’인 모든 의원들은 ‘위임이나 지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집단도 한 사람의 대표자에 의한 대의제의 변형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Klein 1987, 369쪽). 이 집단으로 유권자, 이해단체, 정당,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를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의원이 즉각 정치적-소통적으로 묶이게 되는 주변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상이한 의사소통적 영역들은 이상적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집단의 역할을 중간영

---

192\_ Vollrath 1990b, 272쪽. 폴라트(Vollrath)는 아주 쉽게 바뀐 관점을 더불어 프랭켈이 이미 비판한 바 있는 저 이상주의적이고 (아마도 비정치적인) 완벽주의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역의 행위자로만 암시한다.

이렇게 해서 정언적 의원직은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자유 의원직의 규범적 기본법 보장에 의해 거부되고, 이로써 의원의 자유는 이러저러한 유권자의 의지에 반대하는 정치적 결단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의 정해진 임기와 다음 선거에 출마할 필요성은 의원을 자기 선거구의 유권자들과 연결시키고, 사실상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것에서부터 소통의 구조가 생겨나는데, 그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자기’ 유권자의 자체적으로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유권자를 항상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Weßels 1993, 107~109쪽, 125~129쪽; Weßels 1991; Kevenhörster 1998, 295~296쪽). 이렇게 해서 외적인 소통에서 수용과 고안(그러니까 대의제)의 모순이 서로 연결된다면, 동시에 선거권자의 이해관계를 의회제도의 기능적 논리에 맞게 의회제도 속으로 공급하는 사회통합과 제도통합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개인화된 관계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선거구라는 특수한 경우든 혹은 초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일반적으로 이미 조직된 이해관계가 의원들을 향해 다가오게 된다.

제도통합은 의원들이 서 있는 다른 두 가지 관계들도 관통한다. 의원은 독립된 사람으로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상이한 조직 차원에서 스스로 주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한 정치정당의 대변자나 대표자로(정당 티켓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다시금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적 위치나 프로그램을 대변한다 해도, 이것은 이 대표자가 ‘자기’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정당프로그램을 위해 희생시키거나 역으로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정당정치적인 가치체계와 목표설정보다 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는 복잡한 위계질서의 구조 속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중재하고, 특수한, 유권자 전형적인, 현안적인 정치적 문제의 상황과 표상과 개념들을 상이한 정당내부적인 시설의 갈등영역 혹은 권력영역 속에서 확립하는 것(인정을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 이 또 다른, 단지 정당내부적인 소통은 특히 ‘직업으로서의 정치’(베버)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경력의 가능성, 즉 찬스와 위기와 함께 일어난다.<sup>193</sup>

관계망 속에서의 세 번째 갈등관계는 의원들과 원내교섭단체와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소통의 세 번째 형태로서 의회의 기능원칙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한다. 의회의 정부여당과 반대당 사이의 이원주의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선수단’의 형성, 즉 정부의 교섭단체와 반대당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서독의 다섯 정당제 혹은 여섯 정당제와 같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연방의 차원에서 참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때그때, 어느 정도는 팽팽하게 조직된 교섭단체 내부에서만 개별 의원들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거리두기와 결속력, 단체정신과 비판적 회피, 신뢰와 독자성, 배려와 요구 사이의 상호교환 작용이 지배하게 된다. 이 교환 작용은 정치구성력을 둘러싼 경쟁에서 의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과 도전에 반응하기 위해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sup>194</sup> 게다가

193\_ “정치경력은 한 정당 내부에서의 협력, 적어도 당원임을 전제로 한다.” Herzog 1975, 175쪽.

194\_ Patzelt 1996b, 188~190쪽; Hesse/Ellwein 1977, 280~289쪽. 잘펠트(Saalfeld 1995)가 1949년부터 1990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연방하원의 원내교섭단체 위원들의 투표태도에 따른 경험적인 분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섭단체의 결속력은 상황과

가 이 교섭단체에 충실한 태도는 (종종 충분하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교섭단체의 강제성’으로 기술되었다. Schütt-Wetschky 1984, 166~179쪽 참조) 지극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규정 자료라는 조건 하에서, 다시 말해 위원회들과 연구모임들에서 제도적인 의회의 정언적 명령이 기능하게 한다(Schüttemeyer 1992; Arndt 1989, 650~658쪽; Kaltefleiter/Veen 1976 참조).

이에 따라 개개 대표자들은 자신의 역할모델과 관련하여 시스템-구조적으로 소통하며, 즉 적어도 서너 가지 관계망과 커뮤니케이션 영역 사이에서 가까움과 거리두기의 긴장에 찬 결합 속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역할 모델들은 자유의원직의 규범적, 이상적 형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sup>195</sup> 이 세 가지 영역의 매우 복잡하고 규범적으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자기책임 하의 균형 속에서 의사소통적인, 일차적으로 동의를 추구하는 협상메커니즘과 정치적 행동 능력, 즉 대의적 의회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한다.<sup>196</sup>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 역할의 특수성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

정당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 따라서 의원들은 정당 교섭단체의 일개 사병이 아니며,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의지가 없는 실무가나 반역자가 아니라 순응과 거리두기라는 긴장 영역 속에서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행위자임이 드러났다.

- 195\_ 게르하르트 라이프홀츠(Gerhard Leibholz 1976, 351~353쪽)가 의원들의 자유의원직과 정당구속성을 대립적으로 보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연방헌법은 그에게는 때때로 기본법 38조 1항과 21조 1항 사이의 ‘원칙적 불일치성’을 입증하는 동안 연방헌법재판소는 때로는 그의 견해를 쫓았다.
- 196\_ Herzog 1989, 314~315쪽. 기능구조와 경계 사례에서 동일한 위치가 압력의 거부를 보장하기 위한 저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 ‘자유의원직’의 규정은 요청으로 이해될 수 있는 헌법상의 규정이다. 그것은 항상 말하자면 그 뒤에 머물러 있기 위해 현실이 엄격하게 따라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 Hennis 1999b, 186쪽; Demmler 1994, 66~71쪽. 쉬텐마이어(Schüttemeyer 1999, 489~492쪽)는 원내교섭단체 사이의 동의적 방향설정을 밝혀내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경험적으로 풍부한 체제전환연구를 위한 문제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하자면 유권자와 이해단체(선거권 작업)와의 관계, 각각의 정당과의 관계(정당작업과 정당경력),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비판적 단체작업)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로써 소통의 이런 형태들은 정치 통합이란 과제를 위한 형태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sup>197</sup> 마찬가지로 의회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 들어가게 된다.<sup>198</sup>

이 같은 이론적 배경 앞에서 새로운 독일 주들의 의회주의에 관한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연구를 위한, 그리고 그 의회주의 내부적으로, 특히 소통적-외부적으로, 규범적으로 규정된 통합 기제와 통합과정의 연구를 위한 장이 열리게 된다.<sup>199</sup>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된 이 관계들과 행위자의 역할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이다.

---

197\_ 파첼트(Patzelt 1996b, 186쪽)가 반응의 두 가지 마지막 형태의 과제를 ‘통합의 창출’ 속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사회통합이란 토포스 하에서 최초의 반응 형태로도 간주된다. “의원직은 [...] 대립되는 사회적 이해관계와 정당 정치적으로 갈등에 빠진 우선권들을 표현해 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연정구성과 이해관계의 균형과 타협 찾기를 위한, 즉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Herzog 1993a, 15쪽.

198\_ 아주 정당하게 헤어조크(Herzog 1993b, 125쪽)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적 인물들의 분석은 그들의 사회적, 제도적 행동맥락의 분석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으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치적 제도나 조직의 분석은 그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고려할 필요성을 가진다.”

199\_ 그 결과 체제전환이란 관점 하에서 의회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에서 “Pitkin 주변의 이론가들의 대의제의 이론적인 고찰들을 의원의 역할이해에 관한 경험적인 분석과 결부시키고, 이 복잡한 대의제란 메커니즘이 의원들의 직책과 대의제 이해 자체 속에서 하나의 반대자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지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파첼트의 명제에 대해서는 Patzelt 1993, 102쪽; Patzelt 1997a/b 참조.

## 2. 주의회의 제도화

동독에서의 공식적-제도적 주의회의 역사는 로타르 드 메이지에르(Lothar de Maizière)의 불안한 독일을 위한 연합당(Allianz für Deutschland)과 독일사회민주당(SPD)의 연립정부 하에서 1990년 7월 22일 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도입법(Ländereinführungsgesetz)<sup>200</sup>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 공식적인 역사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전의 과정, 결정 및 행위자들의 관계와 연결되는데, 이것들은 하부 요소들로 종종 함께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눈에 띈다. 나는 우선 오히려 명백한 제도화 과정을 다루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상황들의 드러나진 않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다루기 위해서 이다.

행정의 구조 및 개편에 관한 규정들과 입법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 이외에 1990년 5월 3일, “법치국가를 의무로 하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제”<sup>201</sup>의 원칙적 설립을 위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주도입법은 특히 구동독의 다섯 주가 1952년에 해체될 때 가졌던 영토상의 형태로 -이때 베를린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배제시켰다- 다시 혹은 새로 받아들이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Bönninger 1991, 9쪽 참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작센(Sachsen) 및 튀링엔(Thüringen)을 다시 조직하기 위한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고, 대

200\_ 주도입법 Ländereinführungsgesetz DDR-GBL. 1, No. 51, 955쪽 참조; Post/Wahl 1999, 446~455쪽에 인쇄, 여기서는 446~447쪽에서 인용.

201\_ 1990년 5월 3일 동독 내각회의의 결정, Rommelfanger 1996, 31쪽 참조.

안도 없지 않았다. 드 메지에르 정부의 일부는 처음에는 2개, 3개, 혹은 4개 주 초안을 수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튀링엔(Thüringen)과 헤센(Hessen) 기민당(CDU)에서는 특별히 헤센(Hessen)과 튀링엔(Thüringen)을 병합하여 하나의 주로 만들려는 구상이 있었다. 포어폼메른, 니더슐레지엔, 혹은 자유도시이자 한자도시인 로슈톡(Rostock)과 같은 여러 주들의 구축을 위한 지역적 혹은 지역주의적인 색채를 띤 착상들을 제외하고서도 말이다.<sup>202</sup> 5개 주 해결안을 위한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인 기능논리를 따른 함부르크(Hamburg) 연방상원의원인 호르스트 고브레히트(Horst Gobrecht, 독일사회민주당 사민당(SPD)) 혹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 지리학자들의 2개, 3개, 4개 주라는 몰개성적인 초안에서 나온 것만은 아닌 것으로, 동독 지역의 연방제에 따른 새로운 구획을 위한 정부위원회에서 만프레트 프라이스(Manfred Preiß) 장관의 주도 하에 전개되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역사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지역단체적인 이유에서 동독 주민의 55% 이상이 1952년 이전의 주 경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다.<sup>203</sup> 이 같은 자료조사와 바람에 반대되는 결정은 ‘중앙집권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에 따른 것처럼 보였고, 민주적 혁명 후의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과 특히 수많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sup>20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이 지역

---

202\_ Muszynski 1997, 41쪽 참조; Sturm 1991, 168~170쪽; Vornbäumen 1990, 3쪽. 가장 엄격하고 (가장 아이디어가 빈곤한) 2개 주 해결안은 북부 국가와 남부 국가를 구성하자고 계획했다.

203\_ W. Jäger 1998, 462~466쪽 참조. 이미 1989년 11월에 에르푸르트, 게라, 줄과 같은 도시에서의 주민데모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튀링엔(Thüringen)의 재건에 관한 목소리가 높았다. Marek/Schilling 1999, 61쪽 참조.

들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고 - 적어도 유사한 기능적인 서독 주들의 유사사례로- 인민회의 자체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와 더불어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한 연방 국가가 그 구성원들의 참여 없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05</sup> 베를린을 연방의 독립적인 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독자적인 규정과 더불어 동독 주들의 재도입을 위한 법적인 규정들은 - 중요한 재정적 제한과 더불어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1조에 포함되었고, 재가 되었다.<sup>206</sup> 이렇게 해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새로운 주들의 수립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고, 동시에 주도입법에서 마찬가지로 내려진 결정은 1990년 10월 14일 주의회 선거에 적용되었다.

204\_ 그래서 5개 주 규정을 전반적으로 ‘합리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했던 장관 프라이 쓰는 동시에 다른 결정에서도 ‘수만 명을 길거리로 뛰어나가게’ 할 만큼 ‘반(反)이성적’이라고 간주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0년 6월 12일자, 4면.

205\_ W. Jäger 1998, 463쪽. Kaufmann 1992, 93쪽 참조.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5월 15일에 ‘튀링엔(Thüringen) 주 구성을 위한 정치자문단’이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에는 인민회의나 혹은 자치선거에 관여했던 각 당과 단체들의 대표 33명이 들어 있었고, 기능적으로 원탁회의(Runder Tisch)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베를린과의 접촉은 없었고, 양쪽 모두 그것을 원치 않았다. Rommelfanger 1996, 23~24쪽 참조. 작센(Sachsen)에서는 작센(Sachsen)의 도입을 위한 협상회의가 “베를린에 있는 정부와 드레스덴에 있는 그 전권자에 의해 [...] 엑스트라 역할로 전략하였다.” Schubert 1998, 572쪽.

206\_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 1조 (1) 참조. 베를린 규정에 대해서는 같은 곳, 부기: Protokoll I, 1 (1) 참조. 제약은 지금까지 지역들의 재정의 법적 후계에 관한 것이다. 주도입법은 원래 §21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들어질 주들은 이전 지역의 관리 재산의 법적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조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조 (1)에 연방이 동독의 관리재산의 후계자가 된다고 명시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1949년 서독 수립 때와는 달리 새로운 주들은 그것의 수립 시에 이미 부분적으로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다. H.-P. Schneider 1992, 249쪽 참조.

### 가. 엘리트 순환의 세 단계와 동독 최후의 인민의회

1990년 3월 18일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선거와 5월 6일 지방자치제 선거에 따른 주의회 선거의 결과는 양대 국민정당인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다섯 개의 새로운 주들 가운데 4개 주에서 기민당(CDU)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지사를 당선시켰다(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기민당(CDU)/자민당(FDP) 연정에서).<sup>207</sup> 동시에 이 선거에서는 직능엘리트 교체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가 표출되었는데, 이것은 1989년 10월 동독-권력엘리트의 내부 몰락과 함께 시작되었고, 일 년이란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 중에 정치인사들 내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의 이 같은 엘리트 교체에 관한 분석은 (1990년과 1994년의 첫 번째 주의회 선거와 두 번째 선거까지의 인민회의 선거) 적어도 다섯 가지 이유에서 시급하다. 첫째는 체제전환연구의 일반적이고 보다 새로운 단초를 가진 틀 속에서는 ‘행위자’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행위자, 여기서는 특히 대표(Delegation) 엘리트들

---

207\_ 선거 결과에 관해서는 Wollmann 1996a, 77쪽 참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는 만프리트 슈톨페(Manfred Stolpe) 주도 하에 사민당(SPD), FDP(자민당), 연합90(Bündnis 90)의 적-황-녹 연정이, 작센(Sachsen)에서는 쿠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 치하에서 기민당(CDU)의 단독 정권이 구성되었다. 이 결과를 인민회의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비교하면 기민당(CDU)의 후퇴와 사민당(SPD)의 약간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투표율이 저조한 가운데 선거태도에서의 지속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Falter 1992 참조; Feist/Hoffmann 1991, 21~22쪽. 우리는 “정부” 장에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선거를 다루게 될 것이다.

통해 문화적 가치유지와 정치스타일의 모델이 확산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구조와 문화의 연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로 통일 위상에 근거하여 구 정치가와 새 정치가들의 양극성이 동독 엘리트와 서독 엘리트들과 얼마간은 겹친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sup>208</sup> 넷째로 다른 분석에서 이미 언급한 하위 텍스트의 모델 중 몇 가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수평적 차원(내부구조)과 수직적 차원(외부구조)에서 의회적 대의제의 이미 언급한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 메커니즘들 그리고 통합 혹은 분산의 모델이 의회의 엘리트 통합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209</sup>

엘리트 교체의 일 단계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그 특징을 기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트 교체가 거의 전적으로 선거의 메커니즘이 아닌, 사회통일당(SED) 내부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단계의 물결 속에서 크렌츠(Krenz)에서부터 모드로우(Modrow)까지의 정부에서는 구체제의 엘리트들은 처음에는 체제 옹호적인 엘리트들로, 그 다음으로는 체제 비판적인 반엘리트들에 의해 대거 대체되었다. 체제 옹호적인 반엘리트들은 주로 연합정당 출신들이고, ‘구정권의 성격을 띠다 면’(Derlien 1997, 351쪽), 체제 비판적인 반엘리트들로 구성된 ‘민족적 책임 정권(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은 주로 베를린 중앙원탁

208\_ 데를린(Derlin)은 엘리트 순환의 경우에 “동-서라는 변수가 구-신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Derlin 1997, 331쪽.

209\_ 1995년 포츠담의 엘리트 연구에 따라 뷔르클린(Bürklin)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엘리트 통합은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수평적 통합은 다양한 부분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관계와 관련되고, 수평적 통합은 엘리트와 그의 사회적 ‘어머니 집단’의 관계와 관련된다.” Bürklin 1997a, 13쪽에 수직적 통합과 관계된다.

회의(Zentraler Runder Tisch)의 병행의회 혹은 대체의회 출신의 시민 법률가들로 이루어졌다.<sup>210</sup> 이렇게 해서 인민회의가 순전히 형식적으로 원탁회의의 결정을 헌법상으로 보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체의회는 사실상 인민회의의 위상을 통제기능, 발기기능, 입법 기능과 관련하여, 공공기능과 심지어는 선거기능까지 넘겨받았다. 이와 병행해서 엘리트 직의 숫자가 대규모로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관직의 해체나, 직책으로부터 물러나거나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211</sup> 이 같은 두 가지 움직임은 통해 동독의 정부 시스템 속에서 체제동일적인 반엘리트를 포함한 구 엘리트의 수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현격히 감소했고, 이런 과정은 1990년 3월 18일 제10대 인민회의를 선출하기 위한 최초의 자유선거와 함께 지속되었다. 구 엘리트들은 더 이상 대의기관에 선출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칠 개월 사이에 호네커 정부의 구 엘리트들은 전혀 대체되지 않은 채 공직 생활에서 사라졌다. [...] 인민회의 역시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겪었다.

---

210\_ 1월 28/29일에 결국 중앙원탁회의(Zentraler Runder Tisch)의 당원들이 모드로우 2세의 행정부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극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Thaysen 1990, 82~98쪽 참조. 슈뢰더(Schroede)는 이 같은 맥락에서 모드로우에 의한 일종의 ‘포용정책’에 대해 약간은 과장해서 말한다. Schroeder 1998, 346쪽. 왜냐하면 바로 원탁회의의 이 같은 비판과 책임 떠맡기는 통일사회당(SED) 군단 내부의 여러 명의 사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11\_ 구정권에서 엘리트 직책의 정확한 숫자를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는 통일사회당(SED), 연합정당, 그리고 대중단체 내부의 위계질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과 학문적-문화적 기관들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수쿠트/슈타리츠(Suckut/Staritz)는 약 44,000명의 회원 명부에 대해 말한다(Suckut/Staritz 1994, 178쪽). 그에 반해 슈나이더(Schneider)는 통일사회당(SED)와 관련해 245개의 권력직과 644명의 인물에 대해 말한다. Schneider 1994, 77쪽. 데를리엔은 약 1,000명 선의 엘리트 직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호네커에서 모드로우 2세 정부까지의 엘리트 직책의 수는 197개로 감소되었다.

선거 메커니즘은 정당 내부적인 엘리트 계승으로 시작되어 반 엘리트의 충원을 통해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sup>212</sup>

그 대신 엘리트 순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97%의 초선의원들이 10대 인민회의에 들어갔고, 400석 중 388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인민회의의 성격은 엄청나게 변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선 소집 경로에 해당되고, 개별 의원의 소집기준에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된다. 1990년 3월 18일로 앞당겨진 새 선거를 통해 단 23일 만에 인민회의 선거에 입후보를 원했던 모든 정치 단체들은 자신들의 후보자를 지명해야 했다. 이 같은 시간적인 압박은 그 구성을 위해 개별 집단들마다 상이한 시간이 필요했던 선거연합회의 구성을 가져왔다. 기민당(CDU) 연합정당, DA(Demokratischer Aufbau, 민주주의 출발당), 독일사회연합(Deutsche Soziale Union: DSU)은 재빨리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을 구성했고, ‘자유민주연합(Bund Freier Demokraten)’ 새로 창당된 ‘자민당(FDP)’, 새로 창당된 ‘독일 포럼정당(Deutsche Forumspartei)’과 ‘Block-LDPD’은 지체 없이 형성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민당(SPD)’과 ‘민사당(PDS)’의 형성 또한 상당히 단기간에 진척되었으며,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에서의 결정과정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결국 ‘연합90’이란 이름하에 ‘이젠 민주주의(DJ)’, ‘평화와 인권 단체(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와 ‘신 포럼(Neues Forum)’이 입후보했고, ‘비종속 여성단체 연합(UFV)’, 그리고 ‘녹색당(GP)’

212\_ Derlin 1998, 7쪽. 호네커와 모드로우 치하에 있던 기능엘리트들의 극소수만이 다른 정치적 차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주의회, 유럽의회, 연방하원). 체제비판적인 야당의 13명의 인원은 연방하원에 들어갔다. Derlien 1997, 366쪽 참조.

이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는 동안, '통일 좌파(VL)'는 단독으로 선거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동독의 '국민 전선(Nationaler Front)'에서의 입후보자 소집과 비교하면 자율적이고, 정당이나 단체 자체가 책임지는 후보 지명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명 작업에서 적어도 네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이 나타났다. '독일을 위한 동맹(Allianz für Deutschland)'와 '자유민주연합'에 속하는 당들에서는 정당 신참자들과 비판적이던 정당 구 엘리트들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고, '사민당(SPD)'은 신참자들로 이루어진 정당을 구성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정당에 어울리는 조직형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에 반해 '민사당(PDS)'은 거의 전적으로 과거 '통일사회당(SED)' 당원들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미 의원들을 위한 소집 통로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분화된 정당에 기초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권리에 따라 움직였지만, 의원 지명을 위한 소집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1990년 8월 말 인민회의 의원들에게서 한 대표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독일사회연합당(DSU)과 연합90(B90) 출신의 의원들은 왜 자신들이 소속 단체에 의해 지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정치적 무혐의성'(평균 1.9)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단지 민사당(PDS)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지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전문지식'은 평균 2.2 점으로 여러 기준들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그 뒤에 '지명도'(2.3)가 뒤따랐고, 반면 '정치적 경험'(2.7)과 (초선 의원들에게서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의회 경험'(4.2)이 맨 마지막으로 나타났다.<sup>213</sup>

소집기준의 이 같은 유사성 혹은 거의 일치하는 현상은 모든 정당을 막론

하고 서로 다른 가치지향과 태도에서 불구하고 두루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정당의 의원들은 고르바초프의 정치와 동독의 시민운동을 평화로운 혁명과 전환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거 상황으로의 회귀를 막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업무의 주된 의도라고 불렀는데, 물론 ‘난민법의 오용’에 반대하겠다는 80%까지로 나누어진 (매우 우려스러운) 의견 또한 그들의 주요 정치적 업무에 해당되었다.<sup>214</sup>

이 같은 공통되는 미래지향은 어느 정도 공동으로 겪은 과거 경험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의원들의 77%는 여러 가지 결핍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좋은 측면’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독일사회연합당(DSU) 의원들, 그리고 또한 연합90(B90) 의원들도 체제전환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독에서의 교육 과정이나 직업적인 발전이 장애를 가졌다고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연합90 의원들은 심지어 국가안전기획부(MfS)의 괴롭힘과 체포 혹은 구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동기라고 밝혔다.<sup>215</sup> 의원들의 약 절반 정도(44%)가 1989년 10월 7일 이전

213\_ 위에서 언급한 다섯 정당 혹은 단체의 의원들은 1(매우 중요)에서 5(별로 중요하지 않음) 사이의 단계에서 ‘정치적 무협의성’에 평균 1.9점을 주었다(기민당(CDU) 2.0, 사민당(SPD) 1.7, 자민당(FDP) 1.4, 독일사회연합당(DSU) 1.4, 연합90(B90) 1.4). 그러나 민사당(PDS) 출신의 의원들은 2.6을, 그리고 ‘전문지식’에 1.8점을 주었다. Müller-Enbergs 1991, 247쪽.

214\_ Müller-Enbergs 1993, 255쪽 참조. 1부터 5까지의 점수에서 기민당(CDU)의원들은 1.2, 사민당(SPD) 의원들은 1.3, 민사당(PDS)는 1.4, 자민당(FDP)는 1.0, 독일사회연합당(DSU)는 1.0, 그리고 연합90(B90)은 1.4점을 과거 상황으로 후퇴하는 일을 막는 것에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했다. 동일 참조문헌, 254쪽. 난민법 오용에 관해서는 동일 참조문헌 261쪽 참조.

에 데모에 가담했으며, 62% 이상이 사적인 대화에서 반대 운동에 동의하였으며, 67%까지가 대화모임에서 그런 견해를 표했다고 밝혔다.<sup>216</sup> 이렇게 보면 반대운동에 대한 동조가 후보 지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217</sup> 의원들은 인민회의 자체에서의 활동을 상당히 유사하게 평가했다. 엄청난 시간적인 압박과 종종 법률을 통과하기 위한 거의 기습적인 요구에<sup>218</sup> 직면해 의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출석을 본회의나 혹은 현안 모임(Aktuelle Stunde)보다 현저히 더 중요하게 여겼다.<sup>219</sup> 이 같은 선호도를 제11대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한편으로는 위원회 활동의 중요도가 입

- 215\_ Müller-Enbergs 1993, 257~258쪽 참조. 놀라운 상황은 특별히 연합90(B90) 의원들에게 일어났다. 87%는 동독에서도 전망이 좋았다고 보았지만, 44%까지가 인민회의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한 동기를 체포와 구금이라고 답변했다.
- 216\_ 이 평균치는 물론 나누어졌다. 기민당(CDU)의 40% 내지 45%, 그러나 연합90(B90) 의원들의 80%가 데모에 가담했고, 그들 중에는 12%가 민사당(PDS) 의원들이었다. 대화모임에서는 민사당(PDS) 대의원의 28%가 자신들도 동조했다고 대답한 데 반해, 자민당(FDP) 의원들의 91%, 사민당(SPD) 의원들의 75%가 동조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Müller-Enbergs 1993, 257쪽.
- 217\_ 일종의 감시단체인 연방하원에서의 동독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경험을 찾아볼 수 있다. 70% 이상의 동독 출신의 연방하원 의원들은 2단계(1990~1994)에서 1940~1948년 혹은 1949~1957년 사이에 태어난 연령대에 속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갖지 않은 채 오히려 기술적인 혹은 기술 관료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생활과 경력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결집점은 체제전환 이전기로서, 그 시기에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절반 정도는 이미 이전에 연합정당이나 통일사회당(SED)의 당원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Krieger 1998, 78~108쪽.
- 218\_ 이렇게 해서 의원들은 약 800페이지에 달하는 이른바 ‘외투법(Mantelgesetz)’을 1990년 6월 1일에 받았다. 시민운동권 출신의 한스 요헨 취헤(Hans Jochen Tschiche)는 이 같은 절차를 간결하게 “힘 있는 자들을 믿어라. 그들이 너희를 위해 선을 행할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Müller-Enbergs 1991, 240쪽에서 재인용.
- 219\_ 1(매우 중요)부터 5(중요하지 않음)까지의 정도에서 평균을 보면 위원회 활동 1.3, 본회의 2.5, 현안 모임 2.5로 나타났다. Müller-Enbergs 1991, 242쪽.

증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회의 의원들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의원들보다 본회의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각 원내교섭단체와의 관계는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었다.<sup>220</sup>

따라서 인민회의 의원들과 연방회의 의원들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동독 의원들의 60%가 스스로를 유권자들의 대표자로(서독에서는 50%), 다시 말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보다는 시민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차이는 그 상당히 정확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불만 사항을 살펴보면, 자기 평가는 훨씬 더 벌어진다. 동독 의원의 89%가 (서독 의원의 37%에 비해) 시민들과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음을 유감스럽게 여겼고, 81%대 26%로 개개 시민을 돕는 과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였다(수치는 Scholz 1993, 278쪽에서 인용).

이처럼 외부적인 관계(소통)에서 의원직을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소망에 대한 일종의 연결끈이나 일종의 신탁통치로 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수행능력과 지도자의 과업 및 독자성을 뒷전으로 돌리는 역할 이해가 나타났고, 이와 병행해서 시민과의 친밀함과 의회 대표를 통한 ‘신탁통치’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한 보상으로 등장하는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의 이념은 서독 의원들에게서보다 훨씬 중시되었다. 서독 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의회(12%) 혹은 정부(5%)에 의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국민 설문조사라는 개념과 친

220\_ 인민회의: 위원회 모임 78%, 본회의 토론 29%, 분과위원회 정보 44%, 같은 순서로 연방하원: 59%, 8%, 43%, Scholz 1993, 277쪽.

숙하지 않고, 의회의 다수(16%) 혹은 소수(10%)가 발기하는 국민의 결정이  
나 국민의 열망을 (40%) 바탕으로 한 국민 의사결정의 이념과 친숙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인민회의의 평균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타  
나났다. 67%는 의회 다수의 발기에 의한 국민 결정을, 71%는 국민의 열망에  
의한 국민 결정을 선택한 반면, 35%는 의회가 주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수치는 Werner 1991, 424~  
425쪽).

외부와의 소통(자유의원칙) 속에서 대표자들의 정치적 구상능력의 최소화  
나 비판은 항상 회의와 거리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에 대한 거부감과  
이에 따른 정부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 사이의 의회내부적인 양극화를 가  
져왔다면 이 같은 연관관계는 입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민회의의 44%(서  
독 의원의 14%)는 인민회의 내의 권력 관계를 교섭단체 사이에서, 그리고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유연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야당에 의해 지지를 받고,  
정부 교섭단체에 의해 비판받을 수도 있었으며, 교섭단체의 경계를 넘어 특  
수한 결속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sup>221</sup>

이 같은 태도 속에는 ‘서독 의회와는 달리’ 분명 ‘**원탁회의**의 대화 모델’과  
체제전환 이전의 공동의 경험에 의해 훈련된 ‘**동의원칙의 형식들**’이 작동한다  
고 보았던 물러-앵베르크스(Müller-Enbergs)의 주장이 옳다면, 시민들에 대  
한 자신들의 의무가 존재하고, 교섭단체의 경계나 의회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

<sup>221</sup> 수치는 Scholz 1993, 281쪽. 이는 인민회의 의원들의 49%만, 그리고 서독 의원의  
85%가 의회에 관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과 일치한다. 동일 참조문헌 281쪽.

않거나 거의 고려하지 않은 ‘신탁통치’라는 역할 속에는 분명 직접 민주주의적이고 루소적인 민주주의 이해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혁명시기의 자식’에게서(동일 참조문헌, 271쪽), 그리고 동독에서 사회화된 행위자의 의회에 관한 경험 부재와 맞물린 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연방공화국의 지역 대의제와는 (아직) 그다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222</sup> 훈련, 학습 그리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

#### 나. 첫 번째 입법기 1990~1994년의 주의회의 구성

가능한 학습 및 숙달과정과 전문화 과정, 그리고 문화적 이해 지식의 가능한 영향력은 새로 편입된 주들의 주의회에 의해 서로 다르게 추구되었고,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거나 검토되었다. 이 점에서 나는 주로 엘리트 순환단계의 연대기에 의존하는데, 여기서 주의회의 최초의 입법기간(1990~1994)을 두 번째 단계로, 그리고 제2의 입법기간(1994~1998/99)를 세 번째 단계로 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한 테제는 다음과 같다. 동독 의원들에게서는 구조적, 행위적 조건에 따른 전문화와 문화적 프로그램들 사이의 특수한 아말감이 관찰된다는 점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동독 의원들의 특수한 프로파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몇몇 분야와 관점에서는 독일전역에서 주요 소수 정

222\_ 오버로이터(Oberreuter 1992b, 292쪽)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민회의의 ‘열광적 의회주의’를 칭찬하며, 그들은 “한때 그 같은 찬사가 서독의회에도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철저히 유지되어 오던 연방하원의 의회적 전통 속에 새로운 막이 열렸다”(동일 참조문헌, 294쪽)고 언급했지만, 부적합성은 지나치게 간과되었다.

당 소속의원들과 일종의 유사성을 가져서, 이런 점에서는 독일 의회주의의 아주 오래된 상수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마지막 요소는 동서독에서 의회주의의 오래 된, 그러나 항상 다시 현안으로 나타나는 이론적 토대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선 인민회의의 약 400명의 초선의원들 가운데 1990년 10월에 144명이 연방하원으로 옮겨졌고,<sup>223</sup> 86명은 최초로 선출된 주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 중 84%는 처음으로 의원직을 얻었으며, 95%까지가 구동독 출신이었다(Derlien 1997, 368~369쪽 참조). 그러나 이것은 의회 신참자들이 전반적으로는 정치초보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의회 의원들의 약 절반(45%)은 그 반대 경우였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1989년 10월 훨씬 전부터 통일사회당(SED)이나 다른 연합정당 소속이었으며, 10% 정도는 광역별 혹은 지방자치 차원, 혹은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erlien/Lock 1994, 72~73쪽 참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서 -주 단위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 대표엘리트 영역에서의 급격한 인적 물갈이가 적어도 연합정당 체제를 통해 제한되었으며, 동독 자민당(LDPD), 기민당(CDU)과 같은 연합정당들은 상응하는 서독정당(자민당(FDP), 기민당(CDU)) 속으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없이 통합되었다(Jesse 1997b, 105쪽). 따라서 이것은 인민회의 선거와 비슷하게 주의회 의원들의 약 절반 정도는 통일사회당(SED) 체제와 멀리 있었거나 계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

---

<sup>223</sup> 이 144명은 1990년 9월 28일 인민회의를 독일연방하원의 미래의 구성원으로 선출했다. Schindler 1995, 554쪽. 이 숫자는 12대 선거 기간에는 68명으로 증가했고, 13대 연방하원선거에서는 5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반드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히려 구체제 속에서 정치적 부담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간의 지명도와 결합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sup>224</sup>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인물들의 보유 정도가 드러났는데, 이 인물들을 취하는 정도는 정당들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기민당(CDU)이나 자민당(FDP)과는 달리 사민당(SPD)과 연합90(B90)은 이런 인적 자원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정도로만 가동시켰다.<sup>225</sup> 이렇게 해서 지방차원의 기민당(CDU)에서는 단지 초선의원들의 20%만이 정당 신참자들이었고, 자민당(FDP)에서는 30%인데 반해, 사민당(SPD)과 연합90(B90)의 원내교섭단체는 거의 정당 신참자들로 구성되었다(Wollmann 1996a, 78쪽). 그래서 튀링엔(Thüringen) 주지사 베른하르트 포겔(Bernhard Vogel)이 튀링엔(Thüringen) 의원들 전반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이, 한 정당 속에서 당원직을 얻는 것은 매우 우연적이고, 정당의 창당 시기에 달려있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절반’의 진실과 일치하며, (지역적인) (새로운 시작의) 토대신화가 되었다.<sup>226</sup>

이전의 정당방향과 정당 당원직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진실의 다

224\_ Müller-Enbergs 1993, 252~254쪽. 지명도라는 문제는 정당들 내부의 리스트 작성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225\_ Volkens/Klingemann 1992, 198~199쪽; Derlin 1997, 405쪽 참조.

226\_ 단상토론에서 베른하르트 포겔(Bernhard Vogel)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신 네들에게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주의회의 한 동료가 내게 말하기를 만약 우리 당이 수요일에 창당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정당으로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들의 창당일은 금요일이었거든요.” 단상토론, Saage/Berg 1998, 233쪽.

른 절반이다) 의원들이 정당의 습관적인-심리적으로 혹은 프로그램 상으로 ‘그들의’ 각자 정당에 대한 결속감은 대단히 느슨하고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27</sup> 이것은 역으로, 그리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주의회에서의 교섭단체의 원칙들이 서독에서보다 더 자주 어겨졌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sup>228</sup> 의원들은 구서독의 주의회에서보다 훨씬 더 자주 교섭단체를 바꾸었다는 것을 말해준다.<sup>2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처럼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리고 정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결합이나 결속이 분명하게 감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파첼트/쉬르메어는 특별히 주의회 내의 기민당(CDU)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당 신참자와 정치 신참자들 사이에, 그리고 과거정당의 새로운 정치가와 구정치가들 사이에 하나의 갈등 노선, 심지어는 하나의 분리선이 생겨났다고 밝힌다.<sup>230</sup> 베른하르트 포겔의 진술의 전반부에 관한 (이중적인) 지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병행해서 튀링엔(Thüringen) 초대 주지사인 요셉 두카스(Josef Duchas, 기민당(CDU))과 기민당(CDU) 당의장인 빌리발

227\_ Patzelt/Schirmer 1996, 24쪽. 여기서는 동서독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동독의 원들은 서독의원들에 비해 정당에 대한 충실도와 투표원칙을 7 대 23으로 훨씬 덜 중요하게 평가했다. 같은 의미에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 관해서는 Pawlowski 1997a, 38~39쪽 참조; Waschkuhn 1999b, 80쪽 참조.

228\_ Birsl/Lösche 1998, 15쪽. 연정구성이나 연정결합에 관해서는 Waschkuhn 1999b, 80쪽.

229\_ Hölscheidt 1994, 354~355쪽 참조.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의 원내교섭단체 바꾸기가 특히 눈에 띈다. 그래서 1992~1994년 사이에 마그데부르크에서 정부대변인으로 활동한 파블로프스키(Pawlowski 1994, 40쪽)는 최초의 주의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주의회의 ‘시민행드북’은 항상 현안에 뒤쫓아 따라갔다. 누가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되었는지는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230\_ Patzelt/Schirmer 1996; Wollmann 1996a, 79쪽에서 재인용.

트 뷁(Willibald Böck)을 둘러싼 논쟁을 읽을 수 있다. 1992년 1월 23일 두 카스의 사임, 그리고 1992년 8월 28일 뷁의 사임으로 이어진 이 갈등양상에서 흔히 ‘리코더(Blockflöte)’이라고 불렸던 다수파에 반대하는 의회 내의 신정치적 개혁자들 소수집단의 저항이 드러난다. 이 같은 상이함에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정당)프로그램 상의 문제보다는 과거나 과거에 관한 정치적 태도를 둘러싼 논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231</sup>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비록 폭발력을 갖긴 하지만,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다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내부적인 구조에 의해 묻혀 버리거나 둘러싸여 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상황과 관련하여 다른 갈등들이 생겨났다. 이 갈등들은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처해있다고 보이거나 (넓은 혹은 새로운) 정당 결합을 넘어서까지 작용하는 복합적인 초기 상황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우선 모든 새 의원들은 소속 정당 내에서의 일시적인 당원직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전반적으로 관직 경험이 없다는 것과 의회정치적인 실무에 거의 지식을 갖지 못하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의원들은 모두 집단적으로 초정당적인 학습 과정과 전문화과정의 필요성 때문에 직업 훈련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sup>232</sup> 그들은 전반적으로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게 될 엄청난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왜냐하면 주의회들은 나중에 지방헌법으로 전환될 임시법이나 지방

231\_ Kiefer 1996, 48~50쪽 참조. 요셉 두카스는 1990년 6월 11일의 효과와 더불어 여전히 로타르 드 메이저르에 의해 튀링엔(Thüringen)의 정부 전권자로 내세워졌다.

232\_ “동독 의원들의 대다수는 의원직에 들어올 때, 새로운 제도에 상응하는 정치가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전혀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들 이것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Patzelt/Schirmer 1996, 21쪽.

규례들을 정해야 하는 역할 뿐 아니라 서독의 제도와 비슷하게 다가가야 하는 마라톤 입법 작업을 해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sup>233</sup> 게다가 이 법률 작업과 표현에는 각 당의 파트너 주들의 정당과 행정관청들, 그리고 주로 법률적인 훈련을 받은 서독 출신의 전문가(임대관리)들이 새로 만들어진 지방관청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sup>234</sup> 바로 이점이야말로 의원들로 하여금 부분적으로는 후견인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전문 관리와 그들의 전문지식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것은 나아가서는 동독의원들의 훨씬 더 멀리 나가는 다른 직업적인, 그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발전노선과도 관계가 있었다. 주의회에서 대표 엘리트의 절반 정도(44.8%)는 대학에서 자연과학-공학 분야를 전공했고(서독에서는 15.9%), 1.9%만이 정치학이나 법학을 전공하였다(그에 반해 서독에서는 39.1%, Wetzel 1997, 210쪽). 자연과학과 공학 인재들의 높은 비율은(인문학 11.4%, 신학 8.1%<sup>235</sup>) 아마도 상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영역의 다른 분야에서는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들은 통일사회당(SPD)의 정치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주로 취하였고, 정치

---

233\_ 그래서 튀링엔(Thüringen)의 조사는 최초의 입법기(1990~1994)에는 인쇄면으로 3645쪽 분량의, 3068건의 청원과 1477가지의 의제를 가진 125번의 회의를 다루었던 반면, 다음 해들에는 (1994~1996년) 811쪽의 인쇄면에, 1363건의 청원, 26번의 의원 회의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Edinger/Lembcke/Lange 1997, 631쪽.

234\_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법 기간 동안 주의회가 통과시킨 500건 이상의 법률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규정이 모범이 되었다.” Köstering 1995, 87쪽.

235\_ Wetzel 1997, 210쪽. 비교를 위해 서독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문학 전공자 9.9%, 신학 2.1%이다.

적으로 깨끗하거나 비록 정당 당원이라 하더라도 동독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당선되었기 때문이었다.

체제전환기동안 원탁회의에서의 공동 작업 경험이 덧붙여진<sup>236</sup> 이 네댓 가지 요소들은 의회의 실무 작업의 일단계가 상당히 조화롭고, 특히 의견이 일치된 가운데, 매우 실무 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교섭단체와의 거리두기, 정당에 대한 소속감, 오히려 특수한 공동의 교육과정과 실무 방향을 지향하는 기능적 작업의 필요성은 -이미 인민회의에서- 위에서 거론한 고전적 양극화, 다시 말해 한쪽으로는 정부와 정부여당,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했다.<sup>237</sup> 의회 내의 이 같은 일치감은 많은 의원들이 부분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 드러낸 정부체제에 대한 선호, 즉 그 속에서 의회가 갈등적인 혹은 경쟁적인 교섭단체 내의 내적인 분열이 없이 전체로 행정부와 마주보고 있는 정부체제에 대한 선호에 투영되었다.<sup>238</sup> 이처럼 역사적인 부담 때문에 혹은

236\_ 이 같은 요소들의 표현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른하르트 포겔이 이미 인용한 단상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 다양한 교섭단체 사람들이 같은 원탁 회의에 앉았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인상적이다”(단상토론 1998, 223쪽) 라고 말한데 반해, 파첼트(Patzelt)는 “원탁회의의 통합적 에토스의 얼마 되지 않는 나머지”라고 말한다(Patzelt 1996a, 59쪽).

237\_ 모든 새로 편입된 주들의 주의회 의원들은 이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최초의 입법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처음에는 우리는 교섭단체를 초월하여 결정했다”(라이헤(Reiche)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사민당(SPD) 소속). 그리고 볼프강 비르틀러(Wolfgang Birthler 사민당(SPD))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별 당원들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처음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그런 점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당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Billerpeck 1998, 28쪽에서 재인용.

상황에 의해 생겨난 통합 에토스는 필연적으로 모든 원내 교섭단체들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 철저히 주제와 관련된 배타성은 이 같은 전반적인 테두리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통합과 배타성 사이의 이런 자발성은 임시 지방법 입안을 위한, 그리고 나중에 주헌법을 위한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의 자문기관들에서 본보기적으로 드러난다. 주도입법은 선출하게 될 주의회를 “헌법을 규정할 주의회”라고 명명했다.<sup>239</sup>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는 1990년 10월 25일에 바이마르에 있는 독일국립극장이란 역사적인 장소에서 구성되었고, 그곳에서는 가장 오래된 자문위원회를 (의회의장 기민당(CDU)과 두 명의 대변인 사민당(SPD)/자민당(FDP)) 동시에 임시헌법위원회로 결정했다(Rommelfanger 1996, 27쪽). 이 단체는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의회작업과 정부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헌법 작업을 위해 임시지방법을 작성해야 했다.<sup>240</sup> 1990년 10월 23일에는 연립내각(CDU/FDP) 정당들의 교섭단체 의장이 임시지방법의 최초 초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협상의 근거가 되었다. 초안에는 몇 가지 특수성과 불명확한 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21일이란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임 신청규정에서 불분명한 점을 보였고, 주지

---

238\_ 파첼트(Patzelt)는 기민당(CDU) 출신 동독 주의회위원의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전형적’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의회에서는 연설과 답변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와 작업그룹 사이에는 훌륭한 협력관계가 존재했다.” Patzelt 1996a, 64쪽; Patzelt 1997a, 319~320쪽,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239\_ 주도입법(Ländereinführungsgesetz) Gbl. d. DDR Teil I, Nr. 51, §23, Abs. 2, 958쪽.

240\_ 튀링엔(Thüringen) 주를 위한 임시지방규례 1991, 18조 2항.

사가 동시에 자신의 후임자를 택할 경우에 주의회가 주지사에게 불신임을 발효시킬 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 발전적 불신임 투표란 표현을 피하거나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sup>241</sup> 그 밖에도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주행정부는 주의회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sup>242</sup> 결국 그것은 기본권과 인권에 관해서는 단 하나의 언급도 포함하지 않았다.

주의회에 등장한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민사당 좌파리스트(Linke Liste-PDS, 이하 LL-PDS), 신 포럼/녹색당/이젠 민주주의(NF/GR/DJ)는 이어서 개정안을 제시했다. 놀랍게도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는 1990년 10월 25일과 1990년 10월 30일자의 (이 시간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두 번의 결정에서 어느 의미에서는 모든 다른 변화들을 포기했고, 10월 25일에도 “우리 주의 상황을 책임지는 [...] 미래지향적인 초안”<sup>243</sup>을 매우 모호하게 변호했다. 사민당(SPD) 교섭단체는 1990년 11월 6일에 두 가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중 처음 것은 주지사의 사면권 도입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두 조항의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었다.<sup>244</sup> 1990년 11월 6일에 기민당(CDU)/자민당(FDP) 교섭단체를 위해

241\_ 기민당(CDU)/자민당(FDP) 초안의 11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지방행정부에 관한 불신임신청이란 전제에 따르면 주지사의 새로운 선출은 21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주의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새 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튀링엔(Thüringen) 지방선거, 1990년 10월 23일 자 인쇄물 1~3장.

242\_ 기민당(CDU)/자민당(FDP) 교섭단체의 초안 §10 Abs. 2; 튀링엔 주의회 1990년 10월 23일 인쇄면 1~3쪽.

243\_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 교섭단체 신청안, 1990년 10월 25일자 튀링엔 주의회 1/7쪽 인쇄면.

244\_ 사민당(SPD) 교섭단체의 개정안 참조. 1990년 11월 6일 튀링엔 주의회의 1/13쪽 인쇄면.

앵겔만 의원이 결론적 추천(Beschlussempfehlung)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6가지 개정안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前文)’을 삽입하자는 것으로, 전문 속에는 “독일 연방을 위한 1부터 19까지의 조항에 명시된 기본법이 튀링엔에 곧바로 적용될 법안”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었다.<sup>245</sup>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적인 진행이다.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의 10월 25일 결정은 자신들 스스로는 별도의 제안을 내놓지 않은 채 기본법 목록이 빠진 것을 비난했기 때문인데, 10월 30일자에서는 ‘전문’을 지적하는 질책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sup>246</sup> 그러나 ‘전문’ 텍스트는 1990년 11월 6일에야 비로소 기민당(CDU)/자민당(FDP) 교섭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기민당(CDU)/자민당(FDP),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와 그리고 다른 두 교섭단체 사이에 의견조율을 위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한 다른 개정안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개정안의 내용상의 문구들을 정부 교섭단체에 넘겨버렸는데, 정부 교섭단체는 결국 정부에 대해 모든 교섭단체의 이름으로 공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튀링엔 의원들이 주도적인 행동규범으로 강조한 것처럼, 교섭단체들의 이 같은 일치된 통합은<sup>247</sup> 모든 점에서나 모든 교섭단체에서 적용된 것

---

245\_ 결론적 추천, 1990년 11월 6일 튀링엔 주의회의 1/11쪽 인쇄면. 여기서는 그중 1~3쪽의 다른 15가지 개정안 참조.

246\_ 주의회 의장에 의한 교시, 1990년 10월 30일 튀링엔 주의회의 1/10쪽 인쇄면.

247\_ Leunig 1996, 25쪽 참조. 튀링엔(Thüringen) 기민당(CDU)의 헌법 초안 작업을 위한 자문위원인 토마스 뷔르텐베르거(Thomas Würtenberger)는 “헌법위원회 내의 자문에서 [...] 가능한 폭넓은 동의가 추구되었다”라고 밝힌다. M. Schmid

은 아니다. 1990년 11월 7일에는 신 포럼/녹색당/이젠 민주주의(NF/GR/DJ) 교섭단체는 두 가지 서로 연관된 개정안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임시지 방법에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 첫 번째 것은 ‘예산안’에서 ‘공간배열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토지 이용을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sup>248</sup> 독성에 의한 토지의 오염 가능성에 관한 무지와 거기서 도출되는 불안과 망설임이 “튀링엔의 모든 농업분야를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다”<sup>249</sup>는 이 부당하지 않는 생각이 그 같은 배경과 이유를 제공했다. 두 번째 신청안은 우선 일종의 확대된 전문에서 주의회에 ‘다양성을 가진 연방성격의 주인 튀링엔(Thüringen)’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장려하는’<sup>250</sup>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인권 유지와 토지, 수자원, 공기와 모든 생물의 특별보호가 [...] 특별한 역사적 환경적 상황 때문에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51</sup>

‘혁명적 과정에서 야기된 국가적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관심사’가 지방법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표현과 반향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다.<sup>252</sup> 경제 촉진과 환경의 중요성은 이렇게 해서 (녹색

---

1992, 112쪽에서 재인용.

248\_ NF/GR/DJ 교섭단체 개정안, 1990년 11월 7일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의 1/14 쪽 인쇄면.

249\_ 동일 참조문헌.

250\_ NF/GR/DJ 교섭단체의 개정안, 1990년 11월 7일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의 1/15쪽 인쇄면.

251\_ 동일 참조문헌.

서구라는 의미에서) 연결되었고, ‘평화로운 혁명’이란 명칭과 더불어 설명되고 정당화되었다.

1990년 11월 7일에 주의회에서 결정된 튀링엔(Thüringen) 주 임시 지방법이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의 (철회된) 정책을 포함한 기민당(CDU)/자민당(FDP), 사민당(SPD)의 모든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전 약속대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신 포럼/녹색당/이젠 민주주의(NF/GR/DJ)의 두 가지 개정안은 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깥에 남아있었다. 이것은 동독의 시민에 의한 혁명적인 변화를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구조와 자기이해 모델을 위한 경고이자, 특수하고 독자적인 기준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노력과 직접 관련되는 유일한 개정안이었던 만큼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혁명 이후의) 교섭단체를 초월하는 동의와 통합에 대한 대표 엘리트의 일반적인 방향이 주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히 배제된 것에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든 약속된 규범이 깨어지고 무효화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명백한 다수파에서나 약간의 다수파에 의한 이 같은 배제는 소수파에게는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하거나 수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 된다.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의식적으로 그어진 새로운 분리선은 의회 내의 야당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협력적인 야당의 가능성을 저지시켰다. 셋째는 튀링엔(Thüringen) 의회의 대다수는 내부적인 요소

와 경험들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서독의 지방법과 일치에 이르기 위해, 그리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마지막 두 가지가 오히려 일반적인 두 가지 관찰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나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전환’을 함께 주도했고 이루어 내었던 시민 법률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정치적 제도 속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함께 경험했던 사건들이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선은 시민 법률가들이 환경과 농업의 중요성에 두었던 것처럼 주제적 초점과 연결되었지만, 출발 상황에서는 거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동의능력이나 통합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다.

적어도 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왜냐하면 1991년 초/여름부터 주헌법의 작업화를 위한 협상에서 1993년 10월 25일자의 ‘전문’에 ‘극복한 독재와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1989년 가을의 평화로운 변화의 성공’에 대해 주지하고 언급하였다.<sup>253</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포름/녹색당/이젠 민주주의(NF/GR/DJ) 교섭단체에 대한 수정불가능한 배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합의가 정확히 1990년 말처럼 주제영역에 남아있었다. 스벤 로이니히(Sven Leunig)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환경보호 문제와 자연적인 삶의 근거를 다루는 튀링엔(Thüringen) 헌법 조항에 관한 의회의 협상들은 격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Leunig 1996, 66~72쪽 참조). 사민당(SPD)이 이 복합적 주제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가 해당 소위원회에서 다수당 교섭단체(기민당(CDU)/자민당(FDP))의 초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철회하거나 수정했던

253\_ 독립주 튀링엔(Thüringen) 헌법과 독일연방을 위한 기본법 1995, 33쪽.

반면, 신 포럼/녹색당/이젠 민주주의(NF/GR/DJ) 의원들과 일부 민사당 좌파리스트(LL-PDS)의원들은 의회 내의 다른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다른 견해와 표현에 대해 ‘논증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동일 참조문헌, 71쪽)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했다’<sup>254</sup>(동일 참조문헌, 71쪽).

이 점에서 이 같은 거부는 이 교섭단체의 불명확한 아이디어에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 내의 기민당(CDU)/자민당(FDP) 의원들과 사민당(SPD) 대표자들 사이에서 사전에 암묵적으로 행해진 동의에서 기인되었다. 그것은 헌법위원회의 소모임에서 다수를 얻지 못한 제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동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헌법 전제를 위해 의회의 2/3 다수를 얻지 못했던 (그에 반해 다른 새 주들에서는 그것은 흔히 있었다) 튀링엔(Thüringen)의 특수성과 관련된다(동일 참조문헌, 26~29쪽). 긴급 상황에서 여당 교섭단체가 상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헌법 초안을 과반수를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 이 세 (전통적인 서독의) 국민정당들의 대표자들은 잠정적인 2/3 다수를 얻기 위해 그 점을 이해했다. 이 같은 일치는 무엇보다 여당 교섭단체의 고려에서 기인되는데, 그것은 1994년 5월에 두 번째 입법기간을 위한 주의회 선거시에 국민 투표에 붙이게 되는 이 헌법이 선거유세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Rommelfanger 1995, 59쪽). 이처럼 순전히 형식적인 사전 결정과 확정은 논쟁적인 문제에 있어

---

254\_ 로이니히는 사민당(SPD)에 관해 그들은 “모든 논쟁적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초안에 들어있던 표현들을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동일 참조문헌.

사민당(SPD)의 방향전환을 설명해줄 뿐 아니라 ‘군소’ 정당들의 논의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다. 의회에서의 논의는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중단해 버리거나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sup>255</sup> 우리는 독특한 흐름에 직면해 있었다. (과반수에 의한) 지속적인 배제의 가능성은 모든 교섭단체의 폭넓은 동의와 통합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회 내 야당의 상당부분을 포함한 충분한 다수의 결속을 한 지붕 밑으로 몰아넣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성이 없는) 반대하는 부분적인 집단들을 실질적이고도 명백하게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1990년 말부터 적어도 1992년 말까지 주제에 관한 특수한 모델을 계속 작동시켰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주로 정부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늦어도 ‘연방주의자들’ 이후부터는 의회의 가능성의 영역 속에 들어 있었다. 오히려 다음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첫째는 의회 내의 야당을 만드는 것은 의사소통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군소) 반대당들은 진지한 대화의 파트너가 되지 못했고, 다수가 될 기회나 타협을 끌어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sup>256</sup> 이렇게 해서 통합 대 차이의 메커니즘

255\_ 따라서 로이니히는 폰 프리트비츠와 더불어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Leunig 1996, 72쪽.

256\_ 그라이펜하겐(Greiffenhagen 1999a, 19~48쪽)은 독일인들 특유의 타협에 관한 반감을 지적했다. 그는 한편으로 타협에 대한 이 같은 거부가 현대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어쨌거나 서독의 정치문화에 적용되고, 동독의 정치문화에서는 그보다는 덜 적용된다”(동일 참조문헌, 48쪽)고 말했다고 할 때, 마지막 주장은 동독의 의회구성의 이 단계에 해당된다.

은 사라지고, 소수집단들을 단호히 배제시키는 것만 남게 되었다. 둘째로 오히려 데이비드 흘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존하는, (다수) 통합 대 사전의 태도 일치에 관한 이해가 이와 유사하고, 게다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의원들은 ‘자신의’ 정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 정당적 초안이란 과제는 결과이자 동시에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사민당(SPD)의 경우는 명백했다.

튀링엔(Thüringen)의 예는 적어도 1993년 가을 주헌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의회의 상황, 즉 협력과 갈등이 서독 의회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나아가서는 반대자로서의 반대당의 소수를 주변화시키는, 혹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바로 그 위에 놓여있는 의회의 수평적인 통합과 분산의 다른 형태들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sup>257</sup> 이 시기와 맥락이란 배경 앞에서 1993년 10월 25일자 튀링엔(Thüringen) 헌법이 ‘의회의 야당’을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적 구성요소’<sup>258</sup>라고 부른 것은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대의적, 의회주의적 정부형태의 근본적 특징들이 의원들의 역할 목록에 내부 구조상으로 전혀 혹은 그다지 제도화되거나 관습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sup>259</sup>

257\_ 이것은 동의를 지향하면서도 정당과는 거리를 두는 의회의 자화상이 상반되는 실제 효과와 결과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258\_ 독립주 튀링엔(Thüringen) 헌법 59조 1항, 1995, 51쪽.

259\_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 Pawlowski 1997; Waschkuhn 1999b, 78~92쪽 참조. 이것은 파첼트가 예로써 제시한, 단지 기이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한 동독의 야당원의 의견과 일치한다. “나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디에서 어떤 수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당은 반대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고 다수가 다르게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Patzelt 1996a, 67쪽.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억눌린 자(underdog)’의 역할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미 예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로써

의회 내부적인 양극성이란 이 같은 기질적-관습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튀링엔(Thüringen)의 경우에 암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입법기의 중간 무렵이나 끝날 무렵에 통과된 새로운 주들의 모든 헌법이 표현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본법이나 대부분의 서독 주헌법(예외: 함부르크,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스타인)과는 달리 반대파의 역할을 대의적 의회주의의 기능구조 속에 포함시켰다. 자비네 크로프(Sabine Kropp)가 어찌면 지나치게 혁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처럼 헌법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대파'는 직접 '하나의 제도, 즉 헌법적 기관의 위치로 부상'했다.<sup>260</sup> 그러나 반대당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동독의 지배체제 속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대답이라고 추측한다면,<sup>261</sup> 그것은 분명 빛나간 추측이다.

의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필수적이거나 근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야당은 베를린 헌법(25조 2항),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55조 2항), 작센(Sachsen)(40조), 그리고 튀링엔(Thüringen)(59조 1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이와 더불어 가능한, 그리고 필수적인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부는 배제되었다<sup>262</sup>). 그에 반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

---

선거의 기적을 통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결정적 배제가 정당성과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다.

260\_ Kropp 1997b, 376쪽. 인용문에 나오는 직접이란 표현은 S. 크로프의 언급을 더 상세히 기술한다. 의회법, 그리고 무엇보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조문은 당연히 이전의 서독에서의 반대당을 이미 '헌법적 기관으로 법적으로 명시화'시켜 놓고 있다. 비록 이미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언급이 기본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Zeh 1987, 400쪽.

261\_ 나치 독재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7년 바덴의 헌법 120조에 처음으로 강조된 야당의 기능은 바덴-뷔르템베르크(1953년)의 헌법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2\_ 모든 정당의 정부에 대한 이 같은 헌법상 배제는 적어도 법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메른(Mecklenburg-Vorpommern)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헌법에는 이 같이 분명한 표현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법적 정의만 내려진다.<sup>263</sup> 반대당의 정치적 기회균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모든 헌법은 언급하고 있는 반면, 반대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다.<sup>264</sup> 오로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만 -물론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함부르크(Hamburg)에 의거하여- 반대당의 교섭단체에 관한 명시적 언급, 말하자면 “주정부와 주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의 계획과 정부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sup>265</sup>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 때문에 우려를 낳는다. 이 같은 임무규정은 의회의 이원주의를 표현하지만, 동시에 정부 교섭단체들이 자신들에 의해 지지를 받은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하게 암시한다. 비록 이런 비판이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sup>266</sup>

없지 않다. Starck 1997, 368쪽.

263\_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주의회의 교섭단체와 구성원들은 의회의 반대당을 구성한다.” 1993년 5월 23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헌법, 26조 26항(법적 효력은 1994년 7월 29일부터). 1992년 7월 17일자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헌법 48조 1항 또한 거의 비슷하다. 반대당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1997년 작센-안할트에서 기민당(CDU)의 헌법소원의 배경이 되었다. 이 헌법소원은 민사당(PDS)의 반대당으로서의 위상과 사민당(SPD)의 소수정부를 용인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했다.

264\_ 단지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의 헌법만 12조 2항에서 ‘야당 당수’에 대해 언급한다.

265\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헌법 26조 2항.

266\_ 슈렉켄베르거(Schreckenberger 1994, 335~339쪽)는 연방 차원의 CDU/CSU/FDP 연정회의의 예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의원들은 정부에 충실한 원내교섭단체에 이끌린다는 사실은 동시에 몇몇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들이 연정회의를 무산시킬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한 정부의 정부교섭단체에 관한 관계

### 다. 두 번째 입법기 1994~1998/99년의 주의회

주의회들의 두 번째 입법기 동안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이미 주어진 여건과 그와 관련된 역할 요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의원들의 실제적인 행동모델과 이해모델 사이에 갈등과 틈새가 독특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각자의 당과 당기관과의 보다 강해진 소속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복잡하고, 때로는 겹치기도 하며, 무엇보다 모순적인 현상들과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동독 의원들에게서 철저히 모순적인 가치결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입법기에서 대의적 정부체제를 위한 저 ‘체제에 적합한 발전경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267</sup> 다른 한편 전문화를 통한 특수 분야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전적 의회 개념의 물질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관습적 사고방식과 사회화된 문화적 주도규범 사이의 갈등,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 제도의 표준화된 역할 기대의 갈등으로 점철된 결합이거나 복합적인 아말감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

그래서 서독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동독 엘리트들에게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주의회 대표엘리트들에서는 ‘사회적 약점을 지닌 결속력이란 감정’

---

또한 전혀 마찰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쉬텐마이어(Schüttenmeyer 1998a, 258~310)는 자신들의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원내교섭단체와 정부교섭단체를 특별히 연정 협의, 의회 내 직책 분담 및 입법에 참여, 정부 감시라는 맥락에서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라고 부른다.

267\_ Patzelt/Schirmer 1996, 27쪽. 두 번째 입법기 동안의 높은 캐리어 지속성 (거의 70%)에 대해서는 Derlien 1997, 369쪽 참조.

과 원칙적인 평등주의에 나온 강력한 사회국가적 참여와 동시에 -10차 인민회의 의원들에게서처럼-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적 질서에 대한 [...]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sup>268</sup> 서독 의원들에 비해 동독 의원들에게 국가는 훨씬 더 많이 사회적 분배 기능과 특히 경제적 조정능력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Bürkin 1997b, 247~249쪽 참조). 국민투표적 요소에 관한 선호도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직접적 참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택일적인 참여형태에 대한 강력한 선호와 지지가 생겨난 반면, 동시에 동독 대표엘리트들은 서독 동료들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법적 보호를 덜 중요시여기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볼 정도로 훨씬 권위적인 자세를 가진 것은 그와 대립된다.<sup>269</sup>

이 처음 몇 년 동안에 동독 의원들은 자신을 주로 ‘자기’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의 관리자로 이해했고, 의회활동을 위한 동기를 시민들을 ‘돕는’ 것이라 고 밝혔다.<sup>270</sup> 그러나 의원들은 ‘오늘날까지(1996년)’ 유권자와 피선거권자들

268\_ Bürkin 1997b, 253, 254쪽. 카이나(Kaina 1997, 386쪽)는 평등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동독 의원들은 서독 의원들에 비해 ‘23%의 차이’를 가지고 사회국가보장을 선호한다.

269\_ “서독 엘리트들에게서는 자유로운 목표,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법적 보호가 1순위에 놓인다(51%, 동독 29%).” Bürkin 1997b, 248쪽. 같은 의미에서, 그리고 동독 엘리트들에게서 안정과 질서에 관한 선호는 Kaina 1997, 380~381쪽. 그리고 빌러벡(Bilerbeck 1998, 20쪽)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동독 주의회에서 다루어진 정의의 문제에 관한 의회토론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기고에서 두 가지 ‘결정적 핵심 사안’을 지적했다. “(1) 이 입장들은 엘리트와 대표단에 의한 주도를 약간 권위의존적인 민주주의 이해와 연결시킨다. [...] (2) 더 많은 국민투표와 스스로 대변하는 것에 대한 관심, 즉 국가비판적인 태도에서부터 대중적인 태도가 그것과 대립된다.”

270\_ 동독 의원의 84.3%는 시민들을 도우려 한 반면, 서독 주의회 의원들의 68%만이 이것을 동기로 제시한다. Patzelt 1994, 19쪽.

사이의 지속적인 선거구 활동을 그다지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활동의 15%만을 선거구 활동에 바친다), 오히려 60%까지는 의회 내의 활동에 집중한다.<sup>271</sup> 이것은 특별히 “의회 조직 속에서 기민당(CDU)과 사민당(SPD) 의원들이 선거구 내의 주민들과 선거위원회로부터 일종의 ‘멀어짐’으로 이어진다(Patzelt/Schirmer 1996, 23쪽). 이렇게 해서 미디어의 활용이나 정치적 표현 혹은 민주 시민의 공공영역 속에서, 그리고 민주적 시민 공동영역 속으로의 정치적 표상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공적 활동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동일 참조문헌, 26쪽)<sup>272</sup>. 의원들이 훨씬 더 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의원들의 주민에 대해 반응하는 ‘연결조직 기능’은 서독에서보다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덜 발전된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26쪽). 이것은 특별한 관점에서는 개별 의원 자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아킬레스건일 뿐 아니라 새로운 주들에서 의회 제도의 전반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치명적인 결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권자에 대한 의원들의 이 같은 독특한 거리감은 다른 한편 비록 선택적이긴 하지만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으로 변화된 의원들의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 이 의원들은 선거들 사이에도 주민들과 그들의 관심사 및 이해관계에 귀를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Bürklin 1997b, 242~246쪽; Patzelt/Schirmer 1996, 22쪽; Kaina 1997, 376~379쪽). 소집

271\_ 수치는 Patzelt/Schirmer 1996, 22쪽 참조. “서독과 비교하여 동독의 주의회 의원들은 ‘선거구 노동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의원이었다.” 동일 참조문헌, 23쪽.

272\_ 의회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Patzelt 1998c, 435~436쪽 참조; Detjen 1998, 279~281쪽.

단 혹은 개개 시민들이 개별 대표자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전하는 이해관계를 의원들은 거의 단독적인 과정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같은 관심사를 둘러싼 공적인 정치적 논의나 선거운동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화된 수행전략이나 만족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습관화된 청원심리를 지속시켰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은 갈등을 빚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정치적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비정치적인, 다시 말해 개인적이고 다소간은 후견인 같은 대리보호기관이자 업무 수행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대두될 수 있는 실망이나 실현되지 못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의회 제도에 전가되거나 실망한 사람들에 의해 의회주의 전반의 문제로 돌려졌다.<sup>273</sup>

이렇게 해서 선거위원회-대표단 엘리트 관계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 상황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이미 10대 인민회의 의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러나 의회활동에의 집중은 한편으로는 ‘조력자’로서의 자기평가를 근거로 한 인물 중심적인 방향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투표적인 요소를 통해 보상되는, 정치적-공적 선거구 활동의 무력화로 이어진다. 여기서 공공 여론과 특히 선거구 유권자를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

---

273\_ 프리드리히 쇼를레머(Friedrich Schorlemmer)는 새로 편입된 연방주들에서 ‘정치적 인물 중심적 발전’ 양상에 대해 언급한다. Schorlemmer 1998, 96쪽. 그는 이에 대해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들 (예를 들면 유치원) 가운데 개별소그룹이 개개 의원에 주는 압력인데, 이 집단의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권위로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압력에 어떤 식으로든 관대하게 대하려는 의원들의 준비자세로서, 이는 후견인과 같은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동일 참조문헌, 96~99쪽 참조. 쇼를레머는 세 번째 요소로 개인적이고 사례와 관련해서 국가의 개입을 기대하는 동독의 청원 정서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거론한다.

서 보자면 일종의 소심함과 자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아주 비슷한 양상이 이해집단과의 접촉에서도 확인된다. 첫 번째 입법기의 의원들이 이해집단에 대해 아주 열려있었고, 이 집단을 전문적 주제에 대한 NGO적인 정보원으로 간주한데 비해, 두 번째 임기에는 그들에게서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자세를 보였다. 이제 의원들은 이해집단들이 정보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와 특히 모순을 가지고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것이다.<sup>274</sup>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확신과 설득력, 실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의원들은 그것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를 원치 않았다.

정당과의 반응 영역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 두 번째 입법기동안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것을 본보기적으로 보여준다.<sup>275</sup> 로제(Lohse)는 -에르하르트 크로메(Erhard Crome)에 의거하여- 의원들의 세 가지 유형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서 ‘구인사’, ‘혁신 세력’, 그리고 ‘신참자’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미 동독 연합정당의 구성원이었고, 두 번째 타입은 1989년 시민권리 집단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연합정당으로 옮겨갔으며, 그에 반해 세 번째 유형은 1990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후기연합정당(Noch-Blockpartei)이나 혹은

274\_ “의원들이 단체들과의 접촉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이들은 모순적인 역할 파트너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Patzelt/Schirmer 1996, 25쪽.

275\_ 뒤따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Lohse 1999 참조. 작센-안할트(Sachsen-Anhalt)는 의회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혼돈이 특히 눈에 띄는 사례로 적합하다. Lohse(동일 참조문헌, 117쪽)가 “한 연방주의 조사는 새로 편입된 주의회에서 직업정치 (즉 직업정치인의 양성)의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추론과 답변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다.

서독 정당과 합병한 동독 연합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

의원들의 약 1/3은 첫 번째 임기 후에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런 현상은 구인사 집단에서 두드러졌고, 그 다음에 신참자 집단과 혁신 세력 집단이 뒤 따랐다. 이 같은 탈락의 원인은 매번 다르게 나타났다. 구인사들은 각각의 당 계파와 교섭단체 내에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정당에서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이 유형의 인물들은 비전문적이거나 거의 속수무책으로 행동했고, '정치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소속정당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태도'(Lohse 1999, 133쪽)를 보였다. 신참자들은 의회 내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지만, 각자의 정당 내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세력 유형은 정당에 대해 오로지 실망만 하고, 다시 발기단체나 시민집단과 같은 의회 이전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두 번째 입법기간동안(1994~1999)의 상황을 살펴보면,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1994년에 처음으로 주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이고, 두 번째 집단은 이 입법 임기가 의원직의 연속을 의미하는 경우였다.

1994년 새로 당선된 의원들 (총 의원의 약 1/4)의 샘플에서는 구인사 유형과 (훨씬 많은) 신참자들이 우세한 반면, 혁신 세력 유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sup>276</sup> 그러나 새로 뽑힌 구인사들은 주의회 내의 자신의 정당에 특별한 참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통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직책 속에서 (시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 성공적으로 활동했고, 지역적인 지명도를 얻었거나

---

<sup>276</sup> 이 집단의 27.5%는 구인사이고, 10%가 혁신 세력인데 반해, 42.5%는 신참자들이다. 그리고 10% 정도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서독인들이거나 분류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Lohse 1999, 132쪽.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것은 신참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그들은 전문적인 직업능력 (환경 분야나 사회 분야)을 ‘소속 정당의 자치위원회나 주의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결시켰다(Lohse 1999, 128쪽).

그러나 다른 집단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가장 큰 집단은 이미 두 번째로 주의회 의원직을 얻은 의원들이었다. 이것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는 엘리트 순환의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의회에서의 캐리어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 샘플에서는 구인사와 혁신 세력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그 뒤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신참자들이 뒤따랐다. 그러나 첫 번째 (4년 후에 의회에서 탈락한) 집단의 구인사나 혁신 세력, 혹은 신참자와는 달리 이들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적인 참여와 정당 위원회나 지역적 차원이나 연방 차원에서의 활동영역의 주도적 기능들을 점차 넘겨받는 특징을 보인다(동일 참조문헌, 130~132쪽).

1989/90년부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준비해온 이 세 집단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로 정당과의 결속력이 없거나 정당참여가 없이 활동한, 정치적으로 대단한 의욕을 가진 인물들이나 이미 동독 연합정당에서 활동한 구성원들이 첫 번째 의회 임기 후에 주로 탈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대부분은 정당 활동을 통해 인상을 주었던 신참자들이 뒤따른다. 그와 병행해서 세 번째는 지속적인 캐리어를 가진 인물들이 (여기서는 특히 ‘구인사’와 ‘혁신세력’) 점점 더 강력한 정당결속력을 보이고, 의원직을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재당선의 한 요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sup>277</sup> 넷째로 이 인물들에게서는 첫 번째 임기 시작에 비록 정당 신참자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의회 신참자들은 정당과의 다소간 느슨한 결

속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정당 정치적인 전문화 과정과 함께 의회 행위자들의 고전적 역할 모델을 넘겨받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입법기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의회에 들어왔고, 그들의 정치적 캐리어는 정당과 더욱 밀접해지거나 아니면 이미 (2그룹의 신참자들의 경우처럼) 대단히 밀접한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커져가는 정당내의 당직이나 정당기능과의 (캐리어) 결합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전문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의원들 간의 관계에도 서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서 1995/1996년 의원들은 1990/1991년 의원들보다 정당의 원칙이나 원내교섭단체의 원칙 혹은 당내 결속력과 훨씬 더 연결된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Patzelt/Schirmer 1996, 24쪽; Patzelt 1997a, 338~340쪽).

‘ 옮겨 다니는 인물’ 혹은 충실하지 못한 인물들이 탈락하고 난 후, 첫 번째 의회 임기동안에 의원들의 대다수가 보여준 것처럼, 정당을 초월해서 동의를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과는 거리를 두는 태도가 점차 커져갔다. 그 결과 정당 내부의 위원회활동을 통한 더 강한 정당동질성을 넘어 의회 원내교섭단체들 사이에서 서로를 배제시키고, 이와 더불어 ‘정부 다수당과 야당의 이원주의’라는 고전적 모델이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Patzelt 1996a, 59쪽). 물론 이 같은 과정은 결코 안전하지 않고 끝까지 이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동독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진영과 야당 사이의 경쟁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원내

---

277\_ 집단들의 유형을 절차상 셋으로 나누면, 구인사 34.5%, 혁신세력 34.5% 신참자 24.6%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Lohse 1999, 132쪽.

교섭단체들의 결속력이란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이 확인되었고(Patzelt/Schirmer 1996, 26쪽), 그래서 당연히 의원들은 처음으로 '정치적 전문화의 노정'에 들어서게 되었다.<sup>278</sup>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의회임기동안에는 이 제도적인, 다시 말해 의회활동을 통해 생겨날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을 넘어서까지 행해지는 전문화가 물밑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해방식에 작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이해방식은 이미 언급한 바대로 독특한 분구를 낳게 되는데, 이는 첫 번째 임기의 동의적이고 일치민주주의적인 방향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회전체 사이의 일종의 대치현상을 인식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파첼트(Werner J. Patzelt)는 이 같은 결합을 '대통령제적 체제이해'라고 완전히 잘못되게, 근본적으로 빗나가게 강조했다.<sup>279</sup> 왜냐하면 앞으로 보여질 터이지만, 동독 의원

278\_ Lohse 1999, 117쪽. 비록 다른 이유에서, 그리고 동독 의원들이 처한 상황이 서독 의원과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내의 동독의원들에게서 아주 비슷한 태도가 나타난다. 동독 의원들은 자신들의 교섭단체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지나치게 빨리 중단되고, 동독의 시각이 거의 고려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양극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비난한다. Krieger 1998, 433~435쪽 참조. 이 같은 비난은 교섭단체의 결속력이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단지 건성으로만 수용하고 일종의 불운이라고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 동독 기민당(CDU-Ost) 의원의 직원은 크리거(Krieger 1998, 160~161쪽)가 전형적인 부른 태도를 실감나게 묘사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당신은 동독 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에서 정체성을 끌어내는 데 실패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그는 타협하고, 정치적인 타협과 함께 합니다. 그 점에서 그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수하고, 나중에는 자기 방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279\_ 파첼트에게서는 '전체 의회는 독자적 권력요소로 정부에 대립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대통령제 정부체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제에서는 (예컨대 미국) 행정부가 결코 입법부에 의해 선택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회에 의해 선택

들의 이 같은 선호는 항상 개별적인 양상을 띠는, 국민에 의한 (행정부의) ‘대통령’ 선출의 체제적인 조건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첼트의 결론을 적용한다면, 우선 제대로 되지 않은 유형학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현상 자체를 좀 더 확실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우리는 간편하다는 이유에서 이 현상을 ‘내적인 유사 대통령주의’라는 개념으로 부르 고자 한다. ‘내적인’이라는 부가어는 한 가지 체제 속에서 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중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동독의원들에게서는 ‘안정된 다수와 더불어 확고한 정치적 책임을 갖춘 정부 대신 소수내각을 설정하는’ 인지적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Patzelt/chirmer 1996, 27쪽).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 실제로 1994년 이후 실현된 이 같은 구성은 적어도 실질적인 적용으로부터 그때그 때의 소수 정부로 하여금 우선 주의회에 들어온 모든 원내교섭단체와의 경우에 따른 협상 과정을 강요한다. 이 교섭단체들은 그렇다면 자신들 편에서 상이한 협상 옵션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교섭단체들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단체와 정부와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대해서나 정부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초 교섭 단체적인 찬성 혹은 반대를 위한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분

---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첼트의 질문은 유형학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한 비판은 Günter 2000.

명한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관용적인 교섭단체가 자기편에서 책임을 떠맡는 경우가 없이도 의회주의의 다수정당에서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서로 관련되는 요소들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회상의 소수정부의 개념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그것은 첫째로 다수당의 정부와 야당이란 고전적 이원론의 저편에서 (혹은 이편에서) 의원들의 행동 옵션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선택사항들은 모든 경우에 현실로 옮겨질 필요 없이 일치 민주주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둘째로 전체로서의 의회는 정부가 정책을 구상하는 데 더 많은,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적어도 의원들에게는 오히려 실제 정치적이고 정당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정치형성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첫 번째 의회임기동안에 나온 논쟁적이고 특히 교섭단체를 망라하는 논의들을 계속하거나 계속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 사이 ‘참된 의회주의로의 회귀’로, 그리고 ‘도입된 서독 의회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Patzelt/Schirmer 1996, 27~28쪽). 게다가 이 같은 방향은 의원직과 정부 직책의 결합에 대해 동독 주의회 의원들의 당을 망라하는, 엄청난 유보적 입장을 통해 강화되었다.<sup>280</sup> 반대급부로서 오히려 대의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유사 대통령제적인 내적 형태를 선호하기 위해, 여기서는 정부와 의회의 정부 다수당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의회내부의 이원주

280\_ “게다가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새로운 의회주의적 정부시스템의 이 같은 핵심적 특징(즉 관직과 의원직의 연결성)은 동독 의원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보에 부딪친다.” Patzelt 1998a, 741쪽.

의에 대해) 결합에 대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방향은 물론 아주 제한적으로만 행동지침이 되었고, 혹은 오히려 의회의 일상적 실천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보적 입장이나 대립양상으로 물밑이나 배후에서 잠재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놀랍게도 동독 주의회에서 '내적인 유사 대통령제'에 대한 이 같은 유보적 입장이나 인지적 선호는 드러나지 않게 존재하는 바람이나 인지적 가치척도와 연결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독일연방의 모든 의원들 중 상당히 많은 소수파에서나 독일연방주민들에게서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설문조사는 독일국민의 61%가 독일은 의회주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16%는 -파첼트의 의미에서- 대통령제 정부시스템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6%는 둘 중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그에 비해 15%는 응답하지 않았다. 첫눈에는 약 2/3의 다수가 의회주의적 정부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라는 이상적 형태가 무엇이라는 물음에서는 즉시 달라진다. 여기서는 40%만이 기존하는 의회주의를, 19%는 무응답인데 반해, 33%는 정부와 의회가 마주 보고 있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원하고 있다(수치는 Patzelt 1998a, 739쪽).

이에 대해 우선 의원의 84%는 의회주의 정부형태에서 활동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6%는 대통령제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10%는 이 둘 중 아무 것도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의원들의 70%까지가 기존하는 의회주의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53%의 의원은 의회 전체가 (의회에 의해 선출된) 정부에 대립하는 대통령제 정부시스템에 찬성했고, 45%는 정부, 연합 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독자적인 행위자이자 권력 요소로 행동하는 -실제로 거의

기능이 불가능한- 혼합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표상하고 있었다(Patzelt 1997a, 319~320쪽; Patzelt 1998a, 740쪽).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훨씬 더 크고 다수적인 의회주의 정부형태에 대한 동의의 내부에는 그것의 실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시스템을 원하는 의원들도 상당한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281</sup> 의원들의 소수와 국민들의 다수는 이로써 결국은 '19세기의 국가실제'에서, 그리고 '과거에 매우 영향력이 컸던 국가이론'에서 나온 평가기준과 표상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Patzelt 1998a, 751쪽). 이 같은 양립 불가능성이 의원의 차원이나 새로운 독일주의 주차원이나 연방 차원에서 모든 대표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특별히 동독 의원들에게서 보다 많은 동의를 얻거나 다른 사회화된 문화적 해석모델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고, 때로는 매우 흥미로운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인데, 이 과정의 형성은 의회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선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즉 첫 번째 의회에서 두 번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 동독 의원에게서 전문화 과정이 입증되는데, 이는 주로 정당 활동에 의해 시작하여 의회주의적 이원론에 상응하는 역할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의회

281\_ 내적인 유사 대통령제를 희망하는 이 놀라운 양상은 서독 의원들에게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68년과 1989년에 연방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각각 27%, 39%가 대통령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ier/Rausch/Hübner/Oberreuter 1979, 28~30쪽; Herzog/Rebenstorf/Werner/Weßels 1990, 106~109쪽. 게다가 39%의 찬성자가(1989년 연방하원)가 53%로 (90년대 중반의 모든 주의회와 연방하원 평균치) 상승한 데는 적어도 동독 의원들이 특히 이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서의 ‘열광적인 의회주의’는 한편으로는 정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섭단체를 초월하는 활동이 후퇴함과 더불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경쟁모델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행동의 합리성으로 변형되었다. 이 같은 배경 앞에서 동독 의원들은 ‘새로운 정치 계급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회주의 제도 속에 유지되어온 정치 계급의 모델에 적응했다’고 말할 수 있다(Lohse 1999, 134쪽; 같은 의미에서 Patzelt 1999, 269~270쪽).

동시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동의를 지향하고 일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주된 이념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분규를 이루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는 배후에 자리 잡았다. 나는 이것을 파첼트의 이론과 같은 의미에서 ‘내적인 유사-대통령제’란 선택사항 혹은 희망사항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동독 의원들의 상당수에게서 서독 소수 의원들과 함께 하는 의회 이미지에 대한 방향조정과 적응이 일어났다. 이처럼 바닥에 깔린 이해와 희망사항은 의회의 역할 요구나 독일 의회주의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부적절한 의회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주 단기간의 이 과정은 훨씬 더 긴 흐름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흐름은 지난 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부분적으로는 동서독 의원들을 일치시키기도 한다. 이 같은 독일 특유의 역사적 물결 속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이 대립은 의회주의 정부형태라는 조건 하에서 ‘내적인 유사-대통령제’의 모델로 변하는 것이다.

19세기 의회주의의 독일적 모델은 의회가 시민사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동시에 의회가 국민의 의지를 왜곡시킨다는

과격한 독법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 다소간 열린 루소식 개념이 바로 동독에서 지속되었다면, 동독 의원들이 내적인 유사-대통령제에 대한 잠정적인 선호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적인 모델에 특별한 친근성을 갖지 않은 서독의원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역사적-문화적 신드롬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서독 의원들의 상당수를 제도적으로는 부적절한 전통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특유의 보완과 수용 혹은 독법을 통해 분리시키기도 한다. 그런 한 우리는 그것이 공동의 독일 의회역사에서 역사적으로 배운 잠정적이고, 배경 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전제로 통합되어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 체득한 불일치 속에서의 분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인용된 바 있는 일반적인 진술, 즉 동독 의원들은 새로운 정치 계급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회주의 체제에서 기존하는 정치계급의 모델에 적응한 것이란 진술은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잠재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실천적인 행동과 기이하게 어울리지 않는 표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일치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다른 것들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회주의 이론의 역사 내부에서 보자면 대통령제에 대한 애착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에 대한 거부와 함께 교섭단체 원칙의 거부와 연결되어 있다. 이미 언급된 대로 동독 의원들이 정당결속과 당내 직책 맡기를 통해 교섭단체의 반응에 어울리는 역할 모델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면, 앞에 나온 자료들에 의거해 교섭단체의 반응에 대한 평가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섭단체의 강제성’<sup>282</sup>이란 (논쟁적인 토포스의) 질문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여기서 연방이나 주차원에서 모든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의 의원들을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대상으로 삼는다면, 동독 대표자들에 대한 특수한 결론이 생겨난다. 이것은 이미 언급된 동독 의원들의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의 규범적이지 않거나 특수한, 혹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말한다.

독일 국민의 거의 2/3는 개개 의원들이 교섭단체의 원칙, 즉 교섭단체의 강제성, 다시 말해 교섭단체의 수뇌부가 ‘위’에서부터 지시할 뿐 아니라 개개 의원들의 의지에 반대하여 모든 정당 의원들에게 의견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강제성에 복종한다고 믿고 있다(Patzelt 1998b, 332~333쪽).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의원들이 -강제로 받아들여지는- 정당의 선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행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바람은 이 같은 평가와 일치한다.<sup>283</sup>

그것은 의원들 자신에게서는 분명히 다르고 훨씬 복잡하다. 거기서는 ‘교섭단체의 강제성’이란 개념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또 다르게 사용된다.

282\_ 역할의 성격에 관해 이미 이론적으로 밀받침된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섭단체의 강제성’이란 개념은 규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이 용어를 슬로건으로 선호하는 것은 이 개념과 그것의 적용에 관한 태도와 평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283\_ 의원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주민들의 86%는 공동의 선이라고 답변한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지 질문하면, 79%는 각자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Patzelt 1998a, 749쪽. 주민들 다수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제에서는 교섭단체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동일 참조문헌, 748쪽 참조.

대다수의 의원들은 각각 자신의 교섭단체와 관련하여 이 개념을 의원과 교섭단체 사이의 복잡한 상호성 관계에 대한 약어의 의미나 혹은 이해관계의 필연적이고, 의미심장하고 자발적인 결합이란 의미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강제성’이란 개념은 근본적으로 ‘교섭단체의 결속성’ 혹은 ‘단체 계입’으로 이해되고, 마침내는 자기표현을 위해 적절한 용어로 거부될 것이다.<sup>284</sup> 다른 교섭단체와 관련하여 (특히 정치적 적수들의) ‘교섭단체의 강제성’이란 개념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다. 이들 정치적 적수들은 ‘교섭단체의 강제성 밑에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인식되고, 표현되며, 결국은 탄핵의 정치적 전략에 굴복하게 된다(Patzelt 1998b, 339쪽; Patzelt 1998a, 746쪽). 이렇게 해서 모든 교섭단체 의원들의 대다수에게 실제로 교섭단체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것의 존재가 모든 정치적 적수들에게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겨난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쌍방적이라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의회와 각각의 위원들은 그것의 강제성 밑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민들은 주로 이 제 삼자의 입장을 취한다.

의원들이 공적이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도 국민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을 다른 교섭단체를 특징짓기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이들은 잘못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의적 의회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견고하

284\_ Patzelt 1998b, 340~342쪽. 파첼트(Patzelt)는 교섭단체의 결속력을 외부로부터의 결합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보는 의원들과 자발적이고 내부적인 동기로 부르는 의원들을 다시 한 번 구분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강제성’이란 개념은 단호히 거부되었다. Patzelt 1997a, 340쪽.

게 만드는 셈이다. “교섭단체의 강제성과 같은 ‘비딱한’ 개념은 한 사회의 정치제도에 대한 자기이해에서는 마치 독소처럼 작용한다. 그것은 대표자들과 피대표자들에게서 해석상의 골격과 논증의 습관으로 이어져서, 기능에 충실한 훌륭한 정부 체제의 설득력에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Patzelt 1998b, 347쪽).

우리가 이 같은 결론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동독 의원들의 정당 활동을 통한 교섭단체로의 결합이 자동적으로 ‘교섭단체의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의 결속력’이란 자기묘사가 -비록 자발적로든 아니면 필연적으로 의미하든 간에- 이 영역에서 전문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동독 의원들이 그들의 유사 대통령제적인 배경 개념을 몰아내고, 실제로 적용되는 ‘교섭단체의 강제성’이란 역할상과 일치시키려 한다고 무리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적인 유사-대통령제를 찬성하는 강력한 소수자들의 입장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장치의 존속은 그것과는 반대로 말하게 된다.

둘째로 전체적인 결론은 다른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동독 의원들은 의회 중심적이고, 서독의 동료들과는 달리 정치적 공공활동<sup>285</sup>을 무시하며, 유권자와의 관계나 선거구에서 정치적 주도력이나 형성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개별적 희망을 이용한다. ‘교섭단체의 강제성’을 둘러싼 논의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자기 묘사에서 오류의 목소리를 내는 결

---

285\_ 파첼트(Patzelt 1999, 256쪽)는 서독 의원과의 비교에서 동독 대표들의 분명 “뒤에서 절뚝거리며 따라가는 전문적 공공활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과를 가져온다면'(Patzelt 1997a, 351쪽), 동독 주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잘못된 공공의 이해에 반대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 그들은 의회에 관한 부적절한 가치척도를 불식시키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실제로 이것은 자신들의 역할일 뿐 아니라 새로운 주들의 새로 얻은 의회주의의 정착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동서독에서의 민주주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동독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1990년부터 처음부터 낮은 수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준다.<sup>286</sup> 게다가 이런 인지적-감정적 지지의 후퇴는 여러 가지 요소와 맞물려 있고, 민주적 제도의 상이한 요소들과 전반적으로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경계를 둔다 해도 한 가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는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한 의회적-민주적 대의제의 기능방식에 대해 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란 사실이다. 인지적 지형도와 그 속에 포함된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결여된 정치적 반응의 규범적 결함은 -동독의원들의 개인주의적으로 강조된 '조력자'로서의 활동과 연결되어- 이 같은 관점에서는 선출된 자와 선출하는 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결함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의회주의 구조와 사회적

286\_ 동독인들의 70%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국가 형태라고 여기지만(서독인의 86%), 독일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국가형태라고 믿는 동독인은 단지 31%에(서독인의 80%) 불과하다. Fuchs 1997a, 276쪽. 이 같은 수치는 1993년에 해당되며, 분석결과는 독일연방의 민주주의에 대한 동의 수치가 동독 주민에게서는 41%(1990)에서 27%(1995)로 줄어들었다. 동일 참조문헌, 278쪽. 아주 유사하지만, 단어 선택에서는 훨씬 더 분명하게 가브리엘(Gabriel 1999b, 856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동독 지역에서 목격되는 정부지지의 잠식 현상은 90년대 후반에 커져갔다. [...] 특히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주민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몇 가지 경고 신호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 사이의 공동의 혁신이란 관점에서조차도 결합으로 드러났다. 유권자와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의회주의 제도라는 규범적 통합의 주요 이념 밑에 놓여 있다면, 의원들은 이 통합을 거의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의회차원에서의 구조적-문화적 연결은 문화적-정치적 시민영역과는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을 뿐, 특히 관습적-심정적 결합이 동독 의원들에게서는 여전히 부실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 라. 요약: 통합과 이면세계

우리가 이런 결과들을 모두 요약한다면 실제로 동독 주의회 의원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의 차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87</sup> 이 같은 현상은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상황에서 나온 특수한 혼합이란 말로 보다 더 정확히 기술될 수 있다. 이것은 일부는 외부적 요인을, 그리고 다른 일부는 내부적 요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이기도 하다. 이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들 각각은 자체적인 특수한 시대적, 역사적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원은 페르낭 브라우델(Fernand Braudel)의 말을 빈다면 지속(duré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sup>288</sup> 1989/90년부터의 엘리트 순환의 세 단계에서 이 상이한 기간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갈등 상황과 지배 관계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전경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

287\_ 카이나(Kaina 1997, 382쪽)는 독일 엘리트 전반과 동독의 대표단 엘리트의 이해를 그렇게 표현했다.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적인, 이원적 코드를 지닌 역할체계에 관해서는 Krieger 1998, 348~386쪽.

288\_ 역사적으로 차이가 나는 길고 안정된 기간에 관한 개념은 Braudel 1990.

은 그런 다음 의회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 소통 관계이며, 이와 더불어 통합 형태이자 통합방식이기도 하다.

2단계, 즉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의 주의회의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지막 인민회의(1단계)에서 지배적이던 결합들이 대규모로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보다 거의 의회 신참자들만이,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신참자들이 이 의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느슨한 교섭단체 원칙들은 느슨한 정당 소속감과 일치해서, 두 가지 소통의 특성들은 (교섭단체 혹은 정당에 관한) 아주 미미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소통영역 또한 미발달되었다고 볼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다수는 직접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선택하고, 아주 인물중심적인, 제한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색채를 띤 소통영역 속에서 활동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외부관계에서 정치적 반응의 틈새를 위한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으로 표현된, 실제로는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루소적 의미의) 동독식 ‘의회’관에서 나온 내부적인 가치척도이자 가치 결합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sup>289</sup> 이렇게 해서 동의민주주의와 일치민주주의의 방향을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장려하기도 하는

289\_ 카이나(Kaina 1997, 386쪽)는 동독 대표단엘리트들에게서 “입장의 구조와 정치적 가치관의 위계에서의 동서독 간의 분명한 차이가 [...] 서로 다른 사회화의 영향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아주 유사하게 추측한다. 벨첵 또한 “사회화 과정의 발전논리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도 효과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Welzel 1997, 233쪽.

‘열광적인 의회주의’는 구조적으로 의심받는 서독 의회의 역할 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정당들의 구조와 새로운 방향을 통해, 그리고 의원들을 정당 구조와 지도부의 위치로 끌어들이므로써 전문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전문화는 정당의 소통과 교섭단체의 결속력이란 역할 모델에서 기인된 것인 동시에 의회의 양극성과 정부여당의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 사이의 경쟁이 확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과정은 주로 외부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민주주의적인 표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배후로 물러났다. 그런 가운데 이런 표상은 물밑에 잠재된 ‘내부의 유사-대통령주의’의 잠정적인 이상형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속에서 동독 의원들은 거의 동일한 의회의 이상형을 통해 서독 의원들의 대다수와 연결되어 있었다. 물론 분명한, 결국은 내부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동독 의원들은 계속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찬성하고, 심히 개인화되고 개인주의적인 색채를 띤 소통양식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철저히 분리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사성 혹은 연결자석을 가진 역사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독일제국시기의 독일 의회의 전통과 루소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동독의 의회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그래서 동독 의원들은 동시에 서로 중첩된 두 개의 시간층을 통과한다. 하나는 보다 새롭고 짧은, 그리고 외부적인 시간층으로, 그 시간층은 새로운 의회주의의 행동 모델 속에 적응하도록 작동하고 양극화된 경쟁 민주주의적인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다른 하나는 보다 오래되고, 내부적

인 시간층으로, 일치 민주주의적 모델을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특수한 양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동독 의원들의 가슴에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심장들은 서로 다른 박동으로, 서로 다른 강도로 뛰는 것이다. 이렇게 의회 차원의 통합은 우선 정당 혹은 교섭단체라는 소통 영역에서 촉진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까다롭게, 보장되지도 분명하지도 않은 채 진행 중에 있다. 둘째로 이와 병행해서 외부 관계에서는 정치적 소통의 틈새와 그와 함께 규범적인 통합의 틈새가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틈새를 문제가 많은 수단으로 (국민투표와 인격적, 개인적 소통) 내부적인 바탕 위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sup>290</sup> 바로 이 두 번째 것이 국민들과의 또 다른 지속적인 관계맺음(통합)이나 등 돌림(분산) 속에서 의회주의 체제의 정착을 위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는 다른 곳에서 (특히 정치 문화)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여기서 상술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한 체재

290\_ 이와 반대로 뷔르클린(Bürklin)은 ‘수직적이고 수평적 통합의 서로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 말한다. “엘리트 간의 밀접한 협력이나 사회적 혹은 조직적 토대와의 재결합이나 하는 양자택일에서 동독 엘리트들의 다수는 국민투표에 의한 시민들의 보다 강력한 결합에 찬성했다.” Bürklin 1997b, 245~246쪽. 이것은 나에게서는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에서 전반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다시 말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인다. 첫째로 양자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둘째로 이 같은 관계는 안정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엘리트들 사이의 밀접한 협력은 외부적으로 야기되는 이원론에 의해 밀려났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내부적 국민투표적-인물지향과 불편하게 공존한다. 단계로 나누기, 구조적인 역할 모델들을 세 가지 반응영역으로 분화하기와 역사적-문화적 결합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세분화된 양상을 가지게 된다.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의 구조와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 시간에 따른 유동성이란 이런 개념은 의회주의라는 맥락에서 요구되는 ‘정치가들의 전문화’가 제도적 환경조건의 변화란 문제와 결합하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Golsch 1998, 35~36쪽.

전환의 주인공들인 의원들은 한편으로는 의회민주주의의 구조적-문화적 요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모순적인 자신의 프로필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 3. 정치이론적 전망: 연구 방향과 요망사항

의회, 특히나 주의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잠재력의 상실을 겪고 있다. 그 이유가 이해관계와 이해집단의 증가하는 다원주의이든, 이러한 이해관계의 증가하는 이질성 때문이건 간에 이러한 현상들은 의회와 의원들이 잠재적인 의견일치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Thaysen 1966 참조), 사회적 차이들을 지나치게 선택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변하고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것이 연방주들의 중앙집권화 과정, 즉 정치적-행정적 집행자들이 주의회를 이미 사전에 협의한 결정의 동의기관으로 만들거나 격하시키는 것이든(Kropp 1997a, 260~264쪽; Zintl 1999), 아니면 정치적 결정공간을 제한하는 정치의 법제화 과정이든, 혹은 민족국가적 의회의 능력을 점점 더 보다 높은 결정기관으로 옮겨놓는 국제화와 초국가화 과정이든 간에,<sup>291</sup>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정치의 중심성과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의회의 주권을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이 세계화 시대에 (처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욱 예리

---

<sup>291</sup> 많은 참조문헌을 제시하는 할덴방(Haldenwang 1999)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나이어(Neyer 1999, 410쪽)는 이미 '(투표권을 갖지 못한) 자문 역할의 초민족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해진) 정치 전반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흐름의 조정능력이 덧붙여지는데, 이는 민족국가적 의회나 주의회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국가의 종말’에 관한 논의에 곁들여 아직 결정적이지는 아니라 할지라도(Albrow 1998, 101~105쪽, 260~265쪽; von Creveld 1999, 373~456쪽; Dittgen 1999는 비판적으로), ‘민족국가의 사회적 통합’이 잠식되는 것을 보게 된다(Münch 1998, 17쪽).

주의회의 잠재력 상실에 관한 이 같은 관찰들 중 적어도 몇 가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여기서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민족국가의 종말과 더불어, 나아가 다른 조정 기관이나 협상 기관들 가운데 의회는 이미 제도 자체가 무효한 기관(그러니까 핵심적인 조정능력을 갖지 못한)이라고 보는 인식과 더불어 의회의 종말을 전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하겠다. 세계화 과정은 지방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로써 민족국가란 미시구조 속에 있는 단체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Noller 1999; Kleger 1999, 385~388쪽 참조), 서독의 재연방화를 위한 계속되는 토론과 그 토론에서 주의회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는 것,<sup>292</sup> 그리고 특히 정치적 다원주의와 대의제 이론 자체에서 나타나는 명제, 특히 의회가 사회적, 정치적, 민주적 결정을 위한 유일한 무대나 토론장이 아니라는 명제가<sup>293</sup> 그 같은 사실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전개 양상에도

292\_ 영토상의 재분할이란 문제 외에 여기서는 무엇보다 각 주(의회들)들의 재정 정책을 위한 결정권한이 중요하다. Leonardy 1999 참조. 우리는 오스트제 지역의 예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화라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293\_ ‘연방주의자들’ 그리고 듀이에 관한 위의 설명 참조할 것. 폰 바이메(von Beyme 1999, 539쪽)는 전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탈의회화’를 주장한다.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같은 전개 양상 때문에 민족국가적인 차원이나 주차원의 의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용된다. “그래서 의회란 제도 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독점기관의 위상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주권이 위치하는 제도적인 장소란 상징적인 모습으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von Beyme 1999, 544쪽).

이 같은 전제에서 본다면 정치영역의 이념사적이고 상황적-경험적 문제화와 의회라는 문제의 복합성에 따라 결국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나아가게 되고, 앞으로의 연구들은 이 문제들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제도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베르너 J. 파첼트(Werner J. Patzelt)의 고찰<sup>294</sup>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며,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동독에서의 의회주의에 관한 설명이란 맥락 속에서 특별한 소통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게다가 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비록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제도이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출현한 정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의 제도상, 절차상 해결을 위한 시도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물론 사회와의 연결망이나 의원들의 일상적 활동들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정치제도들의 기능논리 이론과의 관련성 또한 마찬가지다(Patzelt 1995c, 357~358쪽 참조). 정치학은 대의제 이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바라보는 복합적인 의회이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동일 참조문헌, 360쪽).

---

294\_ Patzelt 1995c; Patzelt 1996c. 파첼트의 논문은 진화적인 인식이론의 관점과 언어에 의해 기술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명제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일단 제도로 도입된 의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억지로 유지될 필요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더 이상 대체가능한 것이 아니다(동일 참조문헌, 364쪽).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다. 대의제란 우선적으로 분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고도로 분화된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하게 전문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집약된 행동으로 이끌고, 그것에 필요한 절차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366쪽). 정치적 분업의 근본적 가능성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이다. 그 점에서 정치적 분업의 근본형태에서, 다시 말해 소수의 통치자와 다수의 통치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관리조직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호협력 모델과 같은 하위제도, 그리고 다른 관계구조들이 세분화된다.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 받는 사람들 사이에 대표단이 존재하고, 거기서 자유의원들은 유연한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여기서부터 복합적인 상호교환 관계와 기대치가 생겨난다(동일 참조문헌, 367~368쪽). 이것은 다시금 안정과 재빨리 짜여진 절차와 구조적인 보호(회의들과 위원회들)를 필요로 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정책을 짜는 일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있다. 그것을 넘어 의회의 대의적 상황들은 전체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의회와 사회 사이의 정치적 의사소통이 긴밀해지고, 이것은 또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선거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와 더불어 정치이전 공간의 사회조직과의 연결망도 가능해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동시에 기능적 중간 단계인 ‘위성제도’들(정당, 이해단체, 미디어

어)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매우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채널과 의사소통 채널이 의회에서 출발해서, 의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발전한다(동일 참조 문헌, 368~370쪽; von Beyme 1997a, 207~233쪽).

제도적인 전반적 배치는 단순히 반응과 조정력, 점진적이고 유연한 학습을 위한 기본조건일 뿐 아니라, 반응적 대의관계는 안정된 합법성이란 관점에서 규범적인 전제조건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대표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충분하지 않으며, 대표단과 대표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갈등 소지가 대의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 대의제는 [...] 제도적으로 보장된 갈등 소지가 정치적 실제에서 만족시켜질 수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 이것은 곧 대의제란 대표자들이 실천된 책임성과 응용된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는 수많은 심각한 갈등에 경계를 그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대표자와 피대표자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논쟁과 불화가 있을 지라도 말이다. 대의제를 구성하는 갈등 소지를 것처럼 만족시키는 것은 피대표자들의 이해관계가 실제로 대표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Patzelt 1995c, 375쪽). 이렇게 해서 의회와 의원들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아니 가능한 한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규정의 필요성과 규정의 가능성, 규정의 작동공간과 정치적 주도력을 지지하기 위한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정과정에 합법성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주도력에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그것은 피대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내려

진 결정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얻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책임성의 메커니즘은 전반적으로 정치 제도들이 ‘사회적, 사회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얻고, 인식을 이용하고, 결정하는 제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Patzelt 1996c, 275쪽; Waschkuhn 1998a, 576~590쪽). 정치 제도 전반과 의회의 이 같은 기능성과 학습능력, 합법성은 이렇게 해서 이중의 과정,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과정에 의거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의회에 익숙해지기’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책임성이란 메커니즘에 익숙해지는 것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익숙해짐을 통해 의회가 국민 속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95</sup> 이렇게 해서 의회는 갈등을 빚는 이해관계의 공적인 표현과 그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에 의거하게 된다.

동독의 의회주의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라는 맥락에서는 주차원의 의회 민주주의의 책임성이란 복합적 형태가 규범적으로 하위에 규정된 동시에 개인주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최근 의회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보다 일반적인 동독에 관한 다른 연구들도 이 같은 점을 더욱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Scarcinelli 1998 참조). 거기서는 특별히 의회의 대외의사소통이 주로 고찰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의회적인 대외의사소통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의회적-정치적 홍보작업에서부터 방문객을 배려하기 위한 조직이나 그것의 내부적 시설에 관한 교수법에 근거한 노력에까지 이른다’(Sarcinelli

295\_ ‘의회에 익숙해지기’란 매우 멋진 표현은 Schüttemeyer 1986, 272쪽에서 인용.

1994, 23쪽). 보다 폭넓게 이해된 의회의 ‘홍보 활동’은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이란 복잡한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는 다양한 청중의 관심을 매우 힘들게, 그리고 지극히 선택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의회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과 내용에 의해 사용되는 여러 매체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대변자일 뿐이다.<sup>296</sup> 이 같은 전반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의회의 공적활동은 다양한 행위자를 가진 세 가지 층위 혹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의회의 의원총회와 교섭단체 차원의 위원회들은 업무를 위탁하는 역할을 하고, 의회의 업무나 외부적인 대리기관들은 위탁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 외부 매체나 혹은 자체적인 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의회정기간행물, 인터넷, CD 롬). 정당의 차원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위탁자가 되고, 교섭단체 위원 혹은 외부적인 대리기관이 위탁받는 역할을 하며, 여기서도 외부나 혹은 자체적인 미디어가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개별 의원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의원사무실과 또 다른 위탁받은 대리기관들이 임무수행자가 될 수 있다(Marschall 1999, 706쪽).

이처럼 권력계산과 정당의 자기연출 밑에 놓여있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위해서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상의 (그리고 결국은 규범적으로 짜여진) 추천과 기준들이 마련된다. 왜냐하면 이 같은 기준들은 모두 ‘사람들을 의회적-정치적 실제 과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오게’(Sarcinelli 1997a, 265쪽) 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과 친숙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회주의에 대한 신뢰와 추

296\_ 일반적인 것은 Patzelt 1998c, 437~439쪽 참조; Bretterschneider 1997a, 571~577쪽.

가적인 합법성의 잠재력을 도출하거나 만들어내려는 목표에, 짧게 말하면 규범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목표에 기여한다.<sup>297</sup> 스카르키넬리(Sarcinelli)는 이 같은 의사소통적-반응적 통합을 여덟 가지의 권고로 압축했다. 이는 “의회의 복합성을 이해시키기, 의회 일정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기, 의회의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의회의 ‘업무 장소’를 보여주기, 다양하고 목표 집단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의회 정책을 주민들의 생활세계와 연결시키기, 정치중재의 가능성으로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그리고 ‘가해자 관점’과 ‘피해자 관점’을 연결시키기”<sup>298</sup> 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이제 독일 연방의 새로운 주들의 의회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차원을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은 동시에 이 의회 커뮤니케이션이 청중들에게 입장 변화라는 의미에서 어떤 결과 혹은 효과들을 불러 일으켰는지, 그리고 신뢰와 합법성 부여라는 상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시적 관점은 복합적인 거시적 관점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에 기초하지 않은, 의원

297\_ 스카르키넬리(Sarcinelli)는 “근대적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처음으로 합법성을 구성할 규모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arcinelli 1998, 552쪽). 그것은 연방주의자 문서에 관한 관련성 속에서 이 합법성이란 “지속적인 의사소통적 혁신을 필요로 한다.”

298\_ Sarcinelli 1997a, 273쪽. 스카르키넬리(Sarcinelli)는 다른 곳에서도 규범적인 성격을 띤 이런 권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인 재결속을 위한 의무(즉 소통적 의회 커뮤니케이션)은 열정적으로 말하자면 ‘bonum commune’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Sarcinelli 1998, 557쪽, Patzelt 1998a, 755~756쪽에서 같은 의미로 언급한다.

들과 주민들 사이의 직업적인 의사소통은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판단력의 전달이나 신뢰를 유발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99</sup>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주민들과 선거구의 유권자들, 그리고 이해집단에 대한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거나 작동시키라는 규범적인 요구를 동독 의원들에게 내놓을 수 있다. 여기서 의원들은 규범적인 통합과 ‘의회에 익숙해지기’라는 의미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 경우 앞에서 언급한 의사소통 기준을 되찾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의회적인 대표차원과 유권자가 결정하는 대표차원의 기준점들의 소외화’에 대항하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Steffani 1999, 792쪽 참조).

그러나 이 같은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의사소통에서 한편으로는 의원들의 의회주의와 의회라는 제도에 관한 이미지와 입장이 변화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와 입장이 변화했는지, 나아가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점이다. ‘내부적 의사-대통령제적’이며, 동시에 동의적인 의회주의라는 방향설정은 여전히 남아있는가? 직접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위한 선택사항은 지속되고 있는가(아마도 입에 발린 고백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적으로 강조된 의사소통 형식과 문제해결형식은 구체화되고 있는가? 19세기부터 혹은 동독의 사회화에서 유래된 기본 이념들은 지속되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상주의적 척도들을 서로 입증하게 해주며 강화하기에 이르고 있는가?<sup>300</sup> 혹은 여기서도 구조적 논리

---

299\_ “의회를 위한 본래적인 잠재력은 대중매체의 영역보다는 주민과 대표자들 사이의 만남을 구축하기 위한 다른 형태에 놓여있다. 여기서 지배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제공될 수 있다. 그것은 대표자들과 비대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도 의회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게 한다.” Marschall 1999, 713쪽; 스킨키넬리(Sarcinelli 1997a, 272쪽)도 같은 의미로 말한다.

속에서 (문화적) 역할 이해의 전문화와 설정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 같은 전문화와 동시에 유권자들로부터의 이탈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호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Waschkuhn 1998e)가 감소하는가? 이런 연구는 독일 특유의 문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주들의 주민들과 대표자들에게 의회주의를 (점진적인) 도입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 새로운 주들에서 하부민족적인 의회주의가 독자적인 형태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은 또한 주의회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심장하게 일반화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

300\_ “의사소통이 [...] 전반적인 정치지향에서 보다 높은 의견일치에 기여하면” (Weßels 1993, 137쪽), 잘못된 척도의 의사소통적인 전달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개념’인 교섭단체의 강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 정당과 정당체제



지금까지 의회주의와 의회주의의 주체들에 대해 이론적이고 경험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정당들은 뒤로 밀려난 채 중심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본장에서는 정당을 중점적으로, 정당을 독일 변혁기에 존재했던 이해전달을 위한 중간매개 시스템의 일부로 살펴보게 된다. 다시 말해 본 장에서는 정치 시스템의 중간층위를 다루고자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듯 정당은 정치인들을 선발하여 주의회(또는 지역 및 지방의 대표기관)로 보내주는 ‘티켓’의 역할을 담당한다.<sup>301</sup> 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통해 ‘정당이론의 전제가 민주주의 이론, 대의제 이론, 의회주의 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von Beyme 1995, 391쪽)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본장이 의회주의를 다뤘던 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몇몇 정치 이론가들이 콘코르디아(조화와 평등의 여신)의 가르침을 내세우며 정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

<sup>301</sup> “일반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주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Dittberner 1997, 69쪽.

사실은 대의제의 요소들에 대한 개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정당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 및 정당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는 독일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헤겔(Hegel)의 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국가중심주의적 시각은 국가와 사회, 전체와 부분을 위계적인 대치관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관료주의에 의해 더욱 첨예화된 (한편으로는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로 이뤄진) 개혁, 비정치적 태도의 전통, 갈등에 대한 비교적 강한 반발심을 갖는 전통 (이 두 가지 전통은 심지어 정치적 전통이기도 하다), 토마스 만(Thomas Mann)에 의해서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다의성에 대한 보수적 입장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 네 가지는 독일 제국 시절 이후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과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정당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했던 시절에 이르기까지 정당에 대해 내려진 긍정적 평가에 전면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sup>302</sup>

302\_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Wilhelm II.)는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던 당시 자신은 더 이상 정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오로지 독일인들만 있을 뿐이라는 유명하고도 악평을 받은 말을 남겼다. 또한 비스마르크(Bismarck)는 제국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 제국은 정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럴만한 정당이 없다. 우리는 모든 정당결성, 모든 원내 교섭 단체의 전략, 모든 선거지역의 규정에서부터 벗어나야 정치를 할 수 있다. [...] 원내 교섭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 그리고 이런 종류의 국민 대리인은 결국 작은 집단 속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게 된다.” Raschke 1982, 21쪽 인용. 국가중심주의와 정당의 연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Sontheimer 1993, 128~132쪽, 217~227쪽 참조. 뎀젠(Mommsen)은 1848년 혁명을 ‘비자발적’ 혁명이라 부른다. Mommsen 1998 참조. 그 외에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정당을 거부했다. (그 중 한 명이었던) 칼 슈미트(Carl Schmitt)가 국가이론을 토대로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노동당(NSDAP)의 절대권한 뿐 아니라 기타 정당들의 존재

정당에 대한 거부(당연히) 정당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의 발생, 강령에 따른 정당의 노선설정, 정당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설명하고자 했던 립셋(Lipset)과 로칸(Rokkan)이 제시한 균열구조이론을 바탕으로 보면<sup>303</sup> 다른 아닌 독일에서 삼각구도체제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삼각구도체제는 정당을 통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했지만 (후에) 1871년 독일 제국 건설 이후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모든 변혁을 넘어 지속되었다.<sup>304</sup> 카톨릭 교회와 하나의 진영을 구성했다. 그 외 하나의 국가주의적 진영과 두 개의 사회주의적 진영이 있었다. 사회주의의 양쪽 진영은 각기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단히 확고한 지지자들이어서 다른 진영으로 옮겨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및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노동당

---

까지도 정당화 했으면서도 히틀러와 괴벨스(Goebbels)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끔찍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괴벨스가 국가를 정당의 하위에 두려고 했기 때문이다. Koenen 1996, 509~557쪽.

- 303\_ 립셋과 로칸(Lipset/Rokkan 1967, 23~26쪽)은 19세기 정당의 발생과 설립을 다음과 같은 4개의 균열구조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중심-주변-갈등, 국가-교회-갈등, 도시-지방-갈등, 계층 간 갈등.
- 304\_ Rohe 1997, 47~56쪽 참조. 1870/71년 이전 여러 제후국으로 독일이 분열되면서 개별 국가 내 정당체제의 상황은 극도로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무의미할 정도였다. 19세기 정치적 흐름에 대한 설명과 정당(보수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 개괄은 Göhler/Klein 1991 참조. 네 가지 종류의 정당결정이 이뤄지는 네 가지 종류의 사회-윤리적 영역을 구분(Lepsius 1973)한 레피수스(Lepsius)의 개념은 삼각구도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너무 편협하고 다소 반역사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Shehaan 1983 참조; Rohe 1992, 14~29쪽. 예를 들어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고정된 ‘영역’에 예속되지 않는다.” Langewiesche 1998, 163쪽.

(NSDAP)의 급부상을 가능케 한 요인은 매우 복잡 다양하지만, 의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비롯하여 대다수 정치, 군사, 법률을 담당했던 엘리트들의 반정당 태도와 정당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외면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Holtmann 1997, 7~9쪽). 국가사회주의노동당(NSDAP) ‘운동’은 국가와 국가주의적 진영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적이고 점점 거세지는 논쟁을 촉진하여 울트라몬타니즘(Ultramontanismus)과 막시즘 정당에 대한 적대감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였다(Kershaw 1998, 특히 492~527쪽; Reichel 1982, 112~117쪽).

놀랍게도 시민정당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국가사회주의노동당(NSDAP)의 부상 및 승리 때문에 질식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Hennis 1974, 206쪽). 빌헬름 헤니스(Wilhelm Hennis)는 정당과 정당체제의 이런 자기변명이 (사민당(SPD)과 독일공산당(KPD)은 물론 제외) “본(Bonn)을 수도로 한 국가와 의회주의적 체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충분히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 했다. 동맹군의 감시(허가) 하에 개별 점령지대에서 다양한 정당이 탄생하던 구성시기(1945~1949) 이후 기본법이 수용되자 서독에서는 기민당(CDU)(이후 1959년 사민당(SPD)이 뒤를 잇는다)을 선두로 비교적 빠르게 시민정당(기사당(CSU) 포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시민정당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영역을 포괄하는 두터운 유권자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강령을 내세웠다.<sup>305</sup> 반면 명사들의 정당이었던 자민당(FDP)

305\_ 시민정당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 Bendel 1998, 696쪽; Mintzel 1948;

그리고 후에 녹색당(Grünen) (뒤를 이어 녹색당 역시) 이 발전에 동참하지 않았고 동참할 만한 역량도 없었다.<sup>30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서독의 정당체제는 대략 세 개 또는 네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된다. ‘1949년에서 1969년에 이르는 연맹(Union)의 지배시기, 1969년에서 1982년에 이르는 사민당(SPD)의 지배시기, 1982년에서 1998년에 이르는 연맹(Union)의 지배시기’로 구분이 되며, 자민당(FDP)은 단기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권에 참여했다(Jesse 1997a, 70쪽). 여기에 1998년 10월 27일 선거를 통해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후 시기 즉, 최초로 녹색당(Grünen)이 사민당(SPD)과의 연정으로 연방정치계에 등장한 시기가 추가된다.<sup>307</sup>

## 1. 이론적 접근

정당체제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며(Niedermeyer 1996b 참조) 단순히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정당체제를 양당체제나 다당체제로 구분하는 것은 개별 체제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

---

Rudzio 1991a, 61~67쪽.

306\_ 자민당(FDP) 관련 참조문헌. Verheugen 1948; Schiller 1990; Lösche/Walter 1996. 녹색당(Grünen) 관련 참조문헌. Raschke 1993; Poguntke 1993.

307\_ 개별 정당의 역사, 구조, 변화, 지속, 강령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다. 기민당(CDU)의 경우 Winter 1993; 기사당(CSU)의 경우 Mintzel 1993; 자민당(FDP)의 경우 Schiller 1993; 사민당(SPD)의 경우 Heimann 1993; Lösche/Walter 1992; 녹색당(Grünen)의 경우 Raschke 1993. 전반적 개관을 위해서는 Niclauff 1995; Lösche 1994; Hofmann 1993; Kaack 1971 참조.

서 정권을 형성하는 데 관계하는 모든 정당을 고려해야 하며 시간의 흐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오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와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에 따르면 정당체제는 다시 각기 하위분류를 갖는 네 개의 주요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양당체제로 두 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는 체제(미국, 뉴질랜드)이며, 두 번째는 일반 다원론적 정당체제로 연정을 구성하지 않는 여러 정당(영국 [4], 캐나다 [4])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는 체제와 상시 연정(호주 [3], 서독은 부분적으로 [3])을 구성하여 혹은 대연정(벨기에 [5], 스웨덴 [5], 스위스 [8])을 구성하여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는 체제가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는 양극화된 다원주의적 체제로 우파와 좌파로 대치되는 정당(바이마르 공화국, 스페인의 2차공화국)으로 구성된 혹은 중앙 집중화가 약화된 체제(핀란드 [8], 이탈리아 [8])가 있고, 네 번째는 패권을 장악한 한 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다원주의적 체제(아일랜드 [3], 일본 [6], 멕시코)가 있다.<sup>308</sup> 일반 다원주의적 체제와 양극화된 다원주의적 체제의 경계가 모호하고 (과거 서독과 현재 서독의 일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sup>309</sup>)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정당집단의 모델이 명확하게 경계 짓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구분은 정당체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에 앞서 정당(라틴어로 *pars*)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308\_ von Beyme 1984, 318~325쪽; Saftori 1976; con Beyme 1992b, 327~330쪽.

[ ] 안에 있는 숫자는 정권형성에 참여한 정당의 수를 나타낸다.

309\_ 적어도 1969년부터 1990년 독일 총선거에 이르기까지는 독일의 정당체제가 “자민당(FDP)과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으로 구성된 대(大)양당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Schultze 1995, 340~342쪽 참조.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정당은 다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정당체제는 이들 다수가 경쟁할 때 기능할 수 있다. 단일정당체제라는 말은 모순적인 표현(contradictio in adjecto)이며 레닌(Lenin)도 이러한 이유에서 ‘새로운 타입의 정당’에 대해 이야기 해야만 했다(Schultze 1998a, 458쪽 참조). 사실 정당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sup>310</sup> 정당은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집단으로 공동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의회 또는 지역의회에서 그들을 대표할 사람과 정치권에서 지지세력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Rohe 1997, 40쪽).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정당과 이해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해집단 중에는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 때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von Beyme 1984, 23쪽 참조). 따라서 추가적인 정의기준이 요구된다. 즉, 정당은 정당을 구성하고 정당을 정치적 목적 달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갖는 다수의 모임이라는 기준이 정의에 추가되어야 한다. 정당은 통상 ‘개별 사회적 이해집단들 보다 더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Poguntke 1997, 503쪽). 또한 정당은 특정한 내부 구조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집단으로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질적인) 사회적 이해를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치체제의 다양한 대표기관(의회, 지역의회)에 진출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경쟁하며 지지자들을 모은다. 때문에 정당이 사회적 체제의 속하기는 요소이기는

---

310\_ 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다양한 정당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Wiesendahl 1980, 164~184쪽 참조.

하지만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전달자일 뿐 아니라 시민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민주주의적 결정이 이뤄지는 국가 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시민참여를 위한 통로로서 민주주의 이론에 근거한 역할을 감당한다(Hesse/Ellwein 1992, 166쪽; Waschkuhn 1998a, 331~332쪽).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정당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기능의 특성과 정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정당은 첫 번째로 정치적 목표를 명시하며(명시기능), 둘째로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결집하고 하나로 묶어 비교적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결집기능) 시민 및 사회적 집단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 변형, 수정한다(정치적 커뮤니케이션기능)(Geißler 1982, 265쪽). 셋째, 정당은 지지자들 즉, 시민들을 정당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하며 ‘정당의 지지자들을 정치적 사회로 편입시키는 데 기여한다(동원 및 편입기능)’(Poguntke 1997, 504쪽; 동일한 의미에서 Lipset/Rokkan 1967, 4~5쪽). 넷째, 정당은 정치 인력을 모집하며(엘리트모집기능) 정치적 직책을 맡기며, 다섯째로 정당은 단독으로 또는 연정정당을 결성하여 정권을 잡고자 한다(정부구성기능).<sup>311</sup> 이 외에도 정당은 상이하며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사회적 이해를 수용 및 재규명하고 변형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시화한 후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해소를 담당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기본법 21조 1항은 정당을 이해집단 또는 시민단체와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공공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의하며, 해석을 필요로 하는 설명을 통해 정당의

311\_ Rudzio 1996, 107쪽; Oberreuter 1992a, 30쪽; Steffani 1988, 550쪽. 이런 기능은 1989년 1월 1일 이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법의 1조에 명시되어 있다.

내부구조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며 정당의 목표와 행위가 연방정부의 민주주의적인 기본규정을 위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이상 정당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한다.<sup>312</sup> 기본법에서 오직 정당에게만 헌법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신연방주의 주헌법을 비교해보면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험적이고 매우 복잡하고 분절된 정당연구는 정당의 이상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기능이 실현 가능한지, 또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이때 정당강령의 형성, 정당 내부의 조직구조,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당원 수의 변화, 정당과 시민들의 상호 교류, 정당과 정당체제에 대한 인식정착 및 수용(정치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키워드), 정당스펙트럼 내의 변화, 정치적 조정임무 및 조정성과(퍼포먼스)의 범위 내에서 정당의 기능, 정치 분야와 독일 연방정부의 중계 시스템(정당국가가 키워드)에 속하는 기타 분야에서 정당의 우세함과 존재 등이 정당연구 주제들이다.<sup>313</sup> 임머팔(Immerfall)에 따르면 이 상이한 주제들을 4차원 매트릭스로 체계화 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연구주제는 (1) 정당 내적 (2) 정당 외적 차원으로 구분이 되며 다시 (1) 위에서 혹은 (2) 밑에서 정당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Immerfall 1992, 173쪽 참조). 위에서부터 바라본 정당내적인 주제는 존속보장(I), 밑에서부터의 바라본 정당내적인 주제는 참여(II), 위에서부터 바라본 정당외적인 주제는 권력행사(III)이며 밑에서 바라본 정

312\_ 기본법 21조, 1항과 2항 참조. 정당법 6-16조도 참조.

313\_ 이것이 임머팔(Immerfall)이 말하는 요점이다(Immerfall 1992, 173쪽). Gabriel/Niedermayer/ Stöss 1997도 참조.

당외적인 주제는 홍보(IV)와 관련된다. 이하에서도 계속하여 이 매트릭스와 도식을 이용하겠다.

여기에서는 경험적 정당연구에 대한 논의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Niedermayer/Stöss 1993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형) 정당이 위기에 처했거나 심지어 정치적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70년대와 80년대에 대 두되었던 진단(예를 들어 Mintzel/Schmitt 1981; Dettling 1983; Krockow/Lösche 1986 참조)에 대해서도 역시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편으로 치우치거나 위기의 시대가 지난 지금 ‘정당체제가 안정화’<sup>314</sup>되었다든지 ‘정당체제가 재건되는 경향’이 있다(Veen 1996, 184쪽)는 식의 이야기 및 심지어 ‘대(大)국민정당이 강화’되고 있다(Oberndörfer/Mielke/Eith 1994, 16쪽)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정당과 정당체제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인은 ‘정치적 정당 없이 [...] 극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정치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하며(Klingemann 1994, 184쪽; 동일한 의미에서 Morlino 1995, 315~316쪽; Linz 1992, 184쪽) 정당이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정치 단체와 정치 체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최근의 정당연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sup>315</sup> 정당 간 경쟁이 존재하는 체제 속에서 앞서 강

314\_ 슈퍼선거의 해 1994년 말에도 폰 알레만(von Alemann)은 “거대 정당들이 안정화 되었다(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낸다. von Alemann 1995, 102쪽.

315\_ Schmitter 1994, 10쪽 참조; Merkel 1997a, 9쪽에서 참조 권유. 그러나 슈미터(Schmitter)가 “parties are by f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presentative structure in complex democratic societies”라고 했던 립셋(S. Lipset)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이해집단, 사회운동 및 시민 단체가 정당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고 보았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 때문에 정당의 독점지위가 통합

조했고 정당이론의 통합시도에서 언급되었듯 정당들은 정치적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적 즉, ‘합의 형성 및 총체적 정치체제의 기능 실현과 존속 보장’이라는 성과물을 생산한다(von Beyme 1995, 392쪽).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당의) 공적 위상이 손상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널리 퍼져 있는 ‘국민정당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을 근거로 들고 있다.<sup>316</sup>

때문에 경험적 정당연구의 몇 가지 전형적 주제들을 이용하여 신연방주에서 정당체제의 경험적 이행형태(와 성과 달성 또는 달성 실패)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큰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구동독 지역 연방주의 정당체제의 설립과 정당 내부의 구성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예를 들어 Segert 1997; von Beyme 1997c 참조) 정치학적 체제전환연구 및 변천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당이 변혁과 통합의 시기에 직면해야 했던 상황과 기본 조건을 살펴볼 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시민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정당과 정당의 내부 기관들이 기여한바와 기여하지 못한바, 그들이 가능케 한 것과 불가능하게 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규범적으로 정해진 견고화(Konsolidierung) 과제를 정당의 과제로

---

기능 및 견고화기능과 관련하여 약화된다는 반가운 설명도 덧붙인다. Schmitter 1992, 156~158쪽, 175~176쪽.

316\_ Wiesendahl 1998, 23쪽. 다른 부분에서 비젠달(Wiesendahl)은 정당 내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방공화국의 정당이 갖는 ‘약화문제 및 경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Wiesendahl 1997, 350쪽. 유사한 참조문헌 Immerfall 1998, 5쪽. 정당체제와 정당체제의 구조적 경직성 및 체제의 무절제한 확장에 대한 격렬하고도 다소 과장된 비판과 관련하여서는 von Arnim 2000 참조.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신생 민주주의의 정당들’에게 있어 ‘정착된 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자매기관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기본기능’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이다(Merkel 1997a, 13쪽).

여기에서 소개할 신연방주의 정당체제에 관한 연구는 구동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과거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상황과 구동독의 경우는 달랐다. 구서독의 정당체제는 중개적 성격을 갖는 시스템이 존재하여 서독 정당의 강령과 내부구조 그리고 상호 경쟁 지향성(“interaction resulting from interparty competition.” Satori 1976, 44쪽)을 이미 통일 이전, 아직 서독과 분단되어있었던 동독에 이전하였고 동독에서는 특수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최단기간 내 서독 체제가 그대로 복제되었다.<sup>317</sup>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독자적 발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은, 혹은 독자적 발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내 살아 저버리고 결국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기 못하게 된 상황은<sup>318</sup> 신연방주 정당들의 기능적 업적에 매우 독특한 특징을 부여하였고 구동독 정당체제가 갖는 외성적 성격을 통해 (성공적인 혹은 결함이 있는) 통합의 문제를 특수하게 조명하고 있다. 어느 정도 표면적 유사성이 있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볼때 동독의 정당과 정당체제가 서독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그러한 이유에서 서독에게 역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큰 것은 사실이다.

317\_ 솔직히 “이 과정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독 (정당)체제의 기본모형을 그대로 이천하고 수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Staritz/Suckut 1993, 211쪽. 동일한 의미에서 Jesse 1995a, 230~232쪽 참조; Kaase/Gibowski 1990, 25쪽. 여기에 동유럽과 동남유럽의 국가들과 관련하여서는 Elster/Offe/Preuss 1998, 131~140쪽 참조.

318\_ 1990년 초 동독에서는 그래도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Bund Sozialistischer Arbeiter)에서부터 독일사회연합당(Deutsche Soziale Union)에 이르기까지 16개의 정당이 등록되었다. 전독일 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 1990 참조.

서독의 정당체제를 다섯 개의 신연방주에 (거의 그대로) 옮겨 심었던 것은 (앞으로 보여 지듯이) 동독체제에서의 정당역사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Kreikenbom 1998, 24~25쪽 참조). 이는 서독의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이 동독의 연합정당인 동독의 기민당(CDU)과 동독 자민당(LDPD)을 형식적으로 통합했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다섯 개의 신연방주에서 민사당(PDS)이 통일사회당(SED)의 후속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이 된다. 따라서 동독에서 정당의 역사와 구조적 조건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통일사회당(SED)의 경우 명확하고 면밀하게 다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개괄이 축약적이고 비확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벽의 붕괴와 여러 자료의 공개로 인해 이제까지의 연구 외의 새로운 견해도 생겨나게 될 것이며, 특히 ‘조직적 동독 사회’의 종말 이후 통일사회당(SED)의 구조와 연합정당과 같은 다른 사회적 기관에 대해 통일사회당(SED)이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영향력과 지배권에 대한 개선된 그리고 세부적 설명을 가능케 할 견해가 부상할 것이다.<sup>319</sup>

---

319\_ 예를 들어 통일사회당(SED)의 구조와 기능방식에 대해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기본적인 설명이 없고 피르츠(Förtsch)의 설명은 1969년의 것이다. 반면 특수연구 또는 개괄적 묘사는 있다. Uschner 1993 참조; Meyer 1993; Henkel 1994, 19~96쪽; Kaiser 1995; Schroeder 1998, 387~420쪽; Wolle 1998, 97~112쪽. 통일사회당(SED)에 대한 소련공산당(KPdSU)과 소련군사행정부(SMAD) 및 ‘정당청소’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Bordjugow 1998 참조; Mählert 1998. 블록정당은 1945년에서 1954년을 제외하고 역시 덜 중요하게 다뤄진 연구 주제이다. Henkel(1994)도 이 시기에 중점을 둔다. 주쿠트(Suckut)(1994)도 공개되지 않았던 80년대 문서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헤이데만(Heydemann)은 ‘양독 통일 이후 현대사 연구의 대상이 된 전혀 새로운 상황’에 언급한다. Heydemann 1994, 11쪽. 예를 들

본 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에 따른 기준을 사용하였다.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주제만을 연구하는 행위를 그쳐야 한다. 본인은 가장 최신의 상황(2000년 여름)을 소개하고 적어도 1999년에 인식할 수 있었던 현황과 경향들을 그 이후 나타나는 결과와 대비시키고자 한다.

## 2. 새로운 독일의 통합된 정치체제

### 가. 동독의 정당

슈테판 볼레(Stephan Wolle)는 동독의 ‘정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사회당(SED)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독에 그 외에도 정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네 개의 단체가 더 존재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무시되었다”(Wolle 1998, 97쪽). 이러한 사실은 동독 정당의 역사가 (거의) 경쟁이 없었고, 통일사회당(SED)의 역사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6월 10일 그 유명한 소련군사행정청(SMAD)의 2호 명령이 떨어진 이후 독일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이 설립되었고 곧 이어 기민당(CDU)과 자민당(LDP, 독일 자유민주당)이 설립되었다. 기민당(CDU)과 자민당(LDP)은 이미 6월 14일 ‘반파시즘 민주주의 정당의 공동전선’으로 통합

---

어 사민당(SPD)과 독일공산당(KPD)의 (강제)통합에 대한 말리카(Malycha)의 Quelledition도 있다. 예세(Jesse)도 정당을 생각하면 “동독 연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기타 좋은 개괄자료에는 Jesse 1997b, 86쪽; Richter 1995a/b (CDU-Ost); Papke 1995 (LDPD); Nehring 1995 (DBD)가 있다. 통일 이전 연구 진행상황은 다음을 참조한다. Weber 1982; Suckut 1986.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인 전기적 관점의 자료로는 Wander 1996; Kunert 1997 참조.

되었다. 이들 정당들의 결정은 오로지 만장일치가 되어야 유효했기 때문에 공산당(KPD)을 대적할 연정이 형성되지 않았고, (강제로) 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을 합쳐져 통일사회당(SED)이 탄생한 이후 1949년부터는 ‘정당의 민주주의적 진영과 대중기관’을 목표로 한 ‘정당체제의 지배’에 기여했다.<sup>320</sup> 물론 1949년까지는 시민 정당들이, 1948년 설립된 독일 민주농민당(DBD)과 독일 국가민주당(NDPD)은 덜 했던 반면 특히 기민당(CDU)과 동독 자민당(LDPD)이 통일사회당(SED)의 전적인 지배 혹은 통제 하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sup>321</sup> 비록 독일인들에게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진 기독교적 사회주의로의 전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파시즘적 진영과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자유선거를 통해 뽑힌 기민당(CDU)의 당수 (그리고 전직 중앙 독일 제국 국회의원이었던) 야콥 카이저(Jakob Kaiser)는 스탈린화 즉, (인민의회의 운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주의 건설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의 뒤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947년 말 서독 진영으로, 서베를린으로 탈출해야만 했다(Neubert 1997, 44~46쪽 참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

320\_ Weber 1996, 4쪽. 1946년 4월 21/22일 독일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의 강제적 통합에 대한 반대시각은 Staritz/Weber 1989 참조.

321\_ 1946년 10월 20일 주의회 선거 시 통일사회당(SED)이 평균 47.6%의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자민당(LPD)도 24.6%나 되는 지지를 얻었고 기민당(CDU)도 24.5%의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LPD)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 29.9%의 지지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기민당(CDU)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34.1%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Jesse 1997b, 89쪽 인용. 기민당(CDU)과 동독 자민당(LDPD) 내 반발 초기에 대해서는 Henkel 1994, 120~130쪽, 152~156쪽 참조; Suckut 1986, 16~45쪽(여기에서 많은 참조문헌들을 소개한다.) 참조.

고 억압되었고 정치적으로 살해된 이후, 대중기관인 통일사회당(SED)을 전략적으로 반파시즘 진영에 편입하고 의도적으로 ‘고전적’ 시민정당을 약화시키기 위한 민주농민당(DBD)과 독일 국가민주당(NDPD)의 전략적 탄생 이후야 통일사회당(SED)이 1949년 10월 7일 동독이 건설된 이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절대적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sup>322</sup>

적어도 이때부터 네 개의 연합정당은 통일사회당(SED)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매우 특수한 부류의 시민들을 체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일사회당(SED)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독 기민당(CDU-Ost)의 목표대상은 대개 기독교 단체와 기능인 및 자영업자들이었고 민주농민당(DBD)은 대개 농업 협동조합원들을 목표대상으로 삼았으며 국가민주당(NDPD)은 전직 직업군인과 장교, 전직 나치당(NSDAP) 당원과 (후에는) 특히 선생들을 중점대상으로 삼았다.<sup>323</sup>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 국가정당인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종류의 정당’인) 통일사회당(SED)의 (이중)구조로의 체계적 편입은 다양하고 상이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sup>324</sup> 통일사회당(SED)에 대한 재정적 의존, 선전-행사의 개최, 정당 내

322\_ Lapp 1988, 12~16쪽. 통일사회당(SED)의 감시 하에 이뤄지는 인민의회 선거를 위한 단일후보 선출과 의석의 ‘배분기준’에 대한 동의는 기민당(CDU)과 동독 자민당(LDPD)의 반대운동의 최후를 의미했다. Richter 1995a, 2540~255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50년대 초반까지 (블록)정당 내 반대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Fricke 1999에서 확인 가능하다.

323\_ Lapp 1988, 71~78쪽 참조; Schroeder 1998, 412~414쪽; (국가민주당(NDPD) 관련하여서는) Gottberg 1994. 타깃집단의 구분은 이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민주당(NDPD)과 동독 자민당(LDPD)의 경우 보호해야 할 지지자들을 살펴보면 공통부분이 있었지만 전직 장교들의 지지는 확실히 국가민주당(NDPD)이 확보하고 있었다.

부 지도층 임명에 대한 통일사회당(SED)의 독단적 결정권, 정치적이고 행정적 직책에 대한 통일사회당(SED)의 임명권, 통일사회당(SED)의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는 각 정당의 선거강령, 통일사회당(SED)의 아량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다양한 인민의회 선거에서 통일사회당(SED)의 정책을 고려한 후보 지명 등을 들 수 있다.<sup>325</sup> 그 외에도 통일사회당(SED)은 각 연합정당의 사회적 구성과 구성원의 수까지도 규정하고 통제했다. 회원가입은 결코 자유가 아니었고 정해진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sup>326</sup>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연합정당들이 ‘알리바이 기능(공산주의적 일당지배체제를 숨기고 민주주의적인 체제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기능)을 갖고 있었고 독일을 통합하는 기능(서독과의 교류) 및 전달기능(다른 시민집단에게 통일사회당(SED)의 사상을 전파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sup>327</sup> 따라서 연합정당들은 50년대 초 이후 독자적 강

324\_ 여기에서 말하는 이중구조란 동독의 독특한 구조로, 정당체제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구조 및 지방 자치구에까지 이르는 경쟁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통제권한을 행사했던 정당의 구조를 의미한다. 개괄 문헌으로 Kaiser 1995 참조.

325\_ 동독 자민당(LDPD)은 1952년 이후 자체 정당강령이 없었고 동독 기민당(CDU-Ost)은 1952/53년 이래 무조건적으로 통일사회당(SED)의 정책을 지지했다. Henkel 1994, 140~142쪽, 171쪽 참조; 재정적 의존관계와 관련하여서는 Gerlach 1991, 79~92쪽(LDPD) 참조; Der Spiegel 34/1990, 34쪽(CDU-Ost); 정당별 공직 진출 현황관련 문헌은 Suckut 1994; Graumann 1995, 344~345쪽; Papke 1995, 2417~2420쪽 참조.

326\_ 반면 동독 기민당(CDU-Ost)과 같은 경우 노동자 수와 농업인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통일사회당(SED)은 점점 더 자주 개입하게 되었다. Richter 1995b, 2603~2606쪽. 동독 자민당(LDPD)은 상황이 약간 달랐다. 79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기술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지식인들의 수가 증가했다. 이는 통일사회당(SED)에게 불리했다. Papke 1995, 2431쪽. 동독 자민당(LDPD)의 상황은 Fröhlich 1995, 1553~1560쪽 참조. 1987년 기민당(CDU(D))의 당원은 140,000명, 동독 자민당(LDPD)은 110,000명, 통일사회당(SED)은 2,328,331명 이었다. Schroeder 1998, 414쪽.

명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을 통합하는 기능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연합정당이 동독의 종말 시점까지 통일사회당(SED)의 지배권 하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강하게 묶여져 있었고 이 체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대리인(Lapp)’으로서의 자격을 고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는다.<sup>328</sup>

다른 곳에는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달기능 및 통합기능이 실지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는 달성될 수 있었는지가 명시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의문점들이 제기된다. 연합정당의 당원들에 대한 통일사회당(SED)의 지속적 불신과 함께 연합정당들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MfS)의 수많은 요원들의 감시 및 심하게는 일시적이었지만 연합정당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논의는 뚜렷하게 나타난 거리감과 회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적어도 일반계층이 갖고 있던 최고지배층에 대한 거리감과 이데올로기적 전달기능 이행을 달성하지 못한데서 온 회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다.<sup>329</sup> 당원의 수와 정당들의 실질적인 사회적 연합 역시 민주농민당(DBD)을 제외하고는 통일사

327\_ Weber 1996, 8쪽.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1971년 취소된 동독 기민당(CDU-Ost)의 서독정책 관련 문헌은 Reißmann 1995,

328\_ Henkel 1994; Staritz/Suckut 1993, 218~220쪽. 다소 회의적인 입장은 Suckut 1994, 119~121쪽 참조.

329\_ 리히터(Richter)는 광범위한 조사는 아니었지만 1990년 2월 동독 기민당(CDU-Ost)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부분의 당원들의 생각과 중급 관리들이 주창한 표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Richter 1995b, 2624쪽. Kiefer 1995, 145~156쪽에서는 동독 기민당(CDU-Ost)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한다. 키퍼(Kiefer)는 그 밖에도 70년대 말부터 지방의 지배층 중 일부는 무의미한 형식적인 보고 이면에 정치적으로 지쳐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Schroeder 1998, 413쪽; Lapp 1995, 292~295쪽 참조.

회당(SED)의 기대와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지식인’, 프리랜서, 기독교인들 중 당원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Schroeder 1998, 412~414쪽). 여기에서 연합정당이 통일사회당(SED)-노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을 맡아서 무기력하게 만들면서도 스스로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 통일사회당(SED)-정책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다(Jesse 1997b, 99~100쪽 참조). 이러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동독의 정당체제가 마찰 흡수와 개방적 다자주의적 인상 심어주기라는 가장 주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고 수행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파라독스는 해결될 수 없었고 정당과 시민들 사이의 거리감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연합정당들은 혁명적 변화를 결코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1989년의 평화적 혁명을 위한 의미 있는 기여나 자극제를 ‘연합정당이 제공하지 않았다.’<sup>330</sup> 대중시위에 결정적인 영향력은 70년대/80년대 시민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교회가 제공한 장소에서부터 발생하였고 특히 1989년 9월 9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신 포럼(Neues Forum)’으로부터 나왔다. 몇몇 당원이 연합정당의 가입으로 체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나 동독 지역의 시민들은 연합정당과 모든 정당에 대해 약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발견할 수 있다.<sup>331</sup> 이 거부감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그대

330\_ Staritz/Suckut 1993, 221쪽. 기민당(CDU(D))의 1989년 9월 10일자 “바이마르로부터의 편지”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동독 자민당(LDPD)이 1989년 10월 18일에 발표한 비판적 문서의 내용처럼 지속적인 정당 외부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Neubert 1997, 845~848쪽.

331\_ 한 블록정당에 가입할 때의 다각적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시대증인인 볼프강 솔베어(Wolfgang Schollwer)(LDP), 귄터 비르트(Günther Wirth)(CDU), 아투어 폼메렌케(Artur Pommerenke)(NDPD)의 시각은 Fröhlich 1994,

로 유지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린네만(Linnemann)은 “동독시절에 경험한 정당에 대한 인식이 (뿌리를 내렸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통일사회당(SED)의 지배 이후 정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 정당은 오늘날까지도 의무적 행사, 중앙의 여론 통제 등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Linnemann 1994, 146쪽). 이런 분위기와 역사적 경험 및 동독의 정당 체제의 구조적, 기능적 조건은 (의미 있는) 헌법에 입각하여 성문화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연방주들의 정당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전 먼저 이야기하겠다.

## 나. 정당의 지위와 신연방주의 시민운동

여기에서 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은 1990년 4월 4일 인민회의의 중앙 원탁회의의 ‘동독의 새 헌법’이라는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헌법초안이다. 참조로 이 초안은 새로 선출된 인민회의에서 거부되었다.<sup>332</sup> 이 초안의 37조 I-IV항에서는 정당의 위치, 과제, 구성, 기능을 다루고 있다. I항에 다음과 같이 명

121~141쪽에서 소개된다.

332\_ 그 배경에 대해서는 Thaysen 1995, 1786~1792쪽, 1831~1843쪽 참조. 1990년 3월 12일에 있었던 중앙 원탁회의의 마지막 회의에서 동독-헌법을 위한 헌법초안을 논의하고 인민회의에 이를 제출할 것을 구상하고, 1990년 6월 17일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이 초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 제안을 내려고 했다. 그러나 3월 18일에 있었던 인민회의투표 결과는 이런 계획을 불가능케 만들었다. 자립적 동독은 더 이상 정치권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노동자단체 대표 중 한명인 (평화와 인권 단체(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의 게르트 포페(Gerd Poppe)는 ‘새 헌법’ 관련한 노동자단체의 과제가 곧 ‘자기 가치 의식을 갖게 해주는 일이며 국민의 명예’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았다. Thaysen 1995, 1787쪽 인용.

시되어 있다.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37조가 전체적으로 기본법의 21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기본법이 정당의 헌법적 우위를 다루면서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정당을 협회, 연맹, 이해집단과 구분(기본법 9조) 하고 있는 반면(Düring/Herzog/Maunz 1991; Kunig 1987, 125~128쪽) ‘새 헌법’의 초안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초안은 정당을 시민운동처럼 이해의 표출을 위한 체계적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두고, 시민운동을 심지어 정당보다 우선하는 영역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 속에서 정당은 의사형성 및 이해표출을 위한 특정 형태와 동일하게 취급받으며 제한된다. 다시 말해 정당은 다원주의적 의사형성과 대표를 통한 이해표출을 연주하는 연주회장에서 (단지) 여러 좌석 중 한 좌석을 ‘보장받을’ 뿐이다.

헌법초안에 대해 중앙 원탁회의 때 사민당(SPD), 민주주의 출발당(DA), 동독 기민당(CDU-Ost)의 대표들이 열띠게 반대했고 민주주의 출발당(DA) 및 독일 국가민주당(NDPD)은 초안 승인을 거부했지만,<sup>333</sup> 놀랍게도 신연방주 중 세 개 주의 주헌법에서 ‘구’ 연방주의 헌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전적으로 특정 역사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헌법을 근거로 한’ 정당의 지역 분열의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1993년 10월 29일 제정된 튀링엔(Thüringen) 주헌법의 경우 9조에 ‘자유국가에서는 누구든 정치적 삶에 참

333\_ Thaysen 1995, 1842~1843쪽. 동독 기민당(CDU-Ost)의 대표들과 1990년 4월 4일 서명한 사람들은 15일 후 반대하였다.

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시민의 권리가 ‘특히 정당 **그리고** 시민운동 참여로 실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334</sup> 이 조항의 구체적 해석에 대해서 ‘기본법이 이에 대응할만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항은 ‘정당과 시민운동의 동등한 위치를 뒷받침 하는 것과 거리가 멀지 않고 시민운동이 변혁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Linck/Jutzi/Hopfe 1994, 149쪽).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의 1차 임기 중 개별 원내 교섭단체의 법초안을 살펴보면 SPD(사민당)의 초안과 특히 NF/GR/DJ는 더 나아가서 시민운동의 내부 조직을 시민운동 자체에 맡기고 심지어 연맹과 ‘시민운동 및 시민단체에게 주의회 및 해당 위원회에서 그들의 요구를 제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35</sup> 특히 NF/GR/DJ는 헌법을 근거로 한 정당과 시민운동의 평등한 위치 보장을 통해 이해전달시스템 내에서 정당을 상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시민운동에게 대표층위에서 합법적 위임 없이도 일종의(영구적) 개입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sup>336</sup> 극단적이고 민주주의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최종

334\_ 튀링엔(Thüringen) 주헌법, 9조.

335\_ 원내 교섭단체 NF/GR/DJ의 법초안; Thüringer Landtag Drucksache I/659, 11쪽(27조, 3항); 사민당(SPD)의 원내 교섭단체의 법초안도 참조하라; Thüringer Landtag Drucksache I/590, 7쪽(18조, 1항); 튀링엔(Thüringen) 주의 헌법초안 일람도 참조; Blatt 2a, 3a. 최근에는 이 일람을 Schmitt 1995a, 321~345쪽에서 인쇄물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유별나게도?) 시민운동과 정당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36\_ 원내 교섭단체 NF/GR/DJ이 제안한 튀링엔(Thüringen) 법초안은 무엇보다 신 포럼(Neues Forum)이 ‘시민운동으로서 정부나 야당이 아닌 국가의 양심’이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Schulz 1992, 42쪽.

의결된 법안에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 서와 같이) 혁명적 새 출발의 분위기와 정당에 대한 거리감과 회의론적 견해의 흔적이 발견된다.<sup>337</sup>

이와 비슷한 경우로 1992년 8월 20일에 제정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헌법의 21조에도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가 언급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며, 시민단체, 연맹, 종교단체 및 정당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sup>338</sup> 부정적 자유권(개입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규정에 이어 “모든 사람은 공적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단체 또는 연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는 긍정적 자유권이 언급된다.<sup>339</sup> 정당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의 정치적 기능(예를 들어 대표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느슨하게 조직된 운동을 격상시키기 위해 참여 채널인 ‘정당’을 상대화하려고 한다. 자센(Sachsen)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주헌법 및 1992년 4월 2일 변경된 베를린(Berlin)의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 혹은 비슷한 규정도 없다.

언급한 헌법규정의 존재로부터 몇몇 (대개 경향적) 결론 또는 **가설**이 도출

---

337\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의 헌법적 기본 토대를 구성하는, 1993년 5월 23일에 제정된 3조 4항에 “정당과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정치적의 사형성에 참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헌법.

338\_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헌법, 21조 1항과 2항. 이 조항이 21조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339\_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헌법, 21조 3항.

되는데 이러한 결론 또는 가설은 신연방주에서 정당의 상황에 대한 전체 그림의 일부분 그리고/또는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주의회의 정당 대표들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당의 지배권 또는 절대적 지위에 대한 금지는 헌법을 근거로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1990년 예나(Jena) 대학의 교수들, 정치적 자문위원회, 라이란트-팔츠(Rheinland-Pfalz)의 법무부가 제안한 튀링엔(Thüringen) 주헌법 초안에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통에 따라 전적으로 정당을 정치참여 채널로서 인정했다는 예를 통해 잘 드러난다.<sup>340</sup> 의원들은 바로 이점에서 그들과 생각을 달리했다. 이는 한편으로, 그리고 **첫째** 의원들이 스스로 정당에 대한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정당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추측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둘째** 시민운동을 통한 정치 참여에 대한 요청과 함께 정치 체제의 중간영역에 속한 대체방법으로 정당에 대한 회의를 상쇄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 대표기능 또는 이해전달 기능의 결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극복하려는 것이다.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셋째** 정당들을 특정한 문제가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동독지역의 연방주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이 세 가지 결론 및 가설은 통합-이론적으로 볼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340\_ 여기에서 언급된 3개의 초안은 Schmitt 1995a, 252~320쪽에 소개된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우선 1989년 가을, 혁명적 변혁의 시기 중 그리고 그 이후 개별 정당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때 무엇보다 정당 역사를 관통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형성되기도 하고 현재 정당의 구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혹은 반드시 요구되는 각 정당과 관련한 상이한 비난, 문제 영역, 분열선(cleavages)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정당연구의 경험적 연구(예를 들어 정당의 경향과 추구가치)를 토대로 분석하고 조망한 후, 셋째 종합적 평가를 내리고 추가 연구주제를 찾아내고자 한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튀링엔(Thüringen), 작센(Sachsen), 베를린(Berlin)에서 1999년 가을에 실시된 주의회 선거 결과 특히,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결과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깊고 넘어가겠다. 두 정당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으로 주정부 수상을 배출하는 정당이다. 또한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FDP) 또는 민사당(PDS)과는 다른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 다. 1989년 ‘평화적 혁명’ 당시 그리고 그 이후의 정당들

### (1) 서독과 동독의 기독교 민주당

‘바이마르(Weimar)로부터의 편지’는 전체적인 정치상황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1989년 9월 10일 작성된 이 문서는 동독 기민당(CDU-Ost)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 문서의 저자와 이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블록 기민당(Block-CDU)이 ‘안티파시즘 블록’에서 탈퇴하고, 통일사회당(SED)으로부터 뚜렷하게 거리를 갖으면서 동독의 법치와 투명성을 위해 앞장서라

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기민당(DCU) 당수였던 게랄드 괴팅(Gerals Götting)은 늘 동독 기민당(CDU-Ost)을 통일사회당(SED)의 정책에 깊이 편입시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따를 수 없었고 따를 의지도 없었다. 바이마르로부터의 편지를 통하여 정당지도부와 당저변의 거리감이 가시화되었고 강화되어 결국 1989년 11월 2일 당수였던 괴팅(Götting)의 파면으로 이어졌다. 당시 동독 기민당(CDU-Ost)에 속했던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 몰락을 지지하였다. 동독 기민당(CDU-Ost)의 지도부는 1989년 11월 10일 로타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새로운 당수로 선출하고 동시에 신입투표를 실시하여 의장단과 사무국 회원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Schmidt 1997a, 49~72쪽). 그 이후 동독 기민당(CDU-Ost)은 몇 주간 분열 위기를 겪었고 결국 분열을 막지 못했다.

두 번의 중요한 회의에서 즉, 1989년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열렸던 지도부의 비공개전당대회와 12월 15일과 16일에 있었던 특별전당대회에서 개혁파와 구세력 및 드 메지에르(de Maizière)를 대표로 했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 쟁점은 통일사회당(SED) 및 서독 기민당(CDU-West)과의 관계, 동서독 독립국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주의개념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사회주의적 사고는 변형되어 보조성의 원리를 통해 그리고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주의적 평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계속 이어졌다(Schmidt 1997a, 73~86쪽). 기독교적 사회주의 진영 소속의 사람들은 이러한 견해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부정과 공격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당을 떠났다. 이와 동시에 강력한 (이중적) 당내 반대파가 형성되어 과거 당의 노

선에서부터 더욱 강력하게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추진했던 연정을 거부하면서 서독 기민당(CDU-West)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서독 기민당(CDU-West)과 정책적으로 동화해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sup>341</sup>

이러한 갈등적인 대치 상황은 두 개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서독 기민당(CDU-West)의 지도층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은 블록 기민당(Block-CDU)을 (타당성을 갖고) 통일사회당(SED)의 대표로 간주하고 강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반감을 갖고 있었다.<sup>342</sup> 동독 기민당(CDU-Ost)을 완전히 해체하고 동독에 서독 기민당(CDU-West)의 주도 하에 과거의 문제를 떨쳐버린 새로운 정당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무효화 되면서 동독 기민당(CDU-Ost)이 신생 정당이었던 민주주의 출발당(DA) 및 독일사회연합당(DSU)과 함께 ‘독일을 위한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수용되었다.<sup>343</sup> 그러나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이 단체들은<sup>344</sup> 많은 의구심과

---

341\_ 최초의 반대파는 동독 기민당(CDU-Ost)의 사무총장이었던 마르틴 키르흐너(Martin Kirchner)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Schmidt 1996a, 21쪽), 두 번째 반대파는 (훗날) 튀링엔에 속한 (카톨릭 세력이 강한) 아이흐스펠트(Eichsfeld)에서 구성되었다. 1989년 말과 1990년 초 아이흐스펠트에서는 싫어했던 베를린에 맞서기 위해 동독 기민당(CDU-Ost) 연맹을 해체하고 헤센주의 기민당(CDU) 주연맹과 함께 새로운 기민당(CDU)을 결성하고자 했다. Schmidt 1997a, 86~90쪽.

342\_ “동독 기민당(CDU-Ost)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1990년 1월 말 콜(Kohl)이 드 메지예르(de Maizière)와의 만남을 거부할 만큼 심했다.” Richter 1995c, 236쪽.

343\_ 로타 드 메지예르(Lothar de Maizière)와 민주주의 출발당(DA)의 볼프강 슈너어(Wolfgang Schnur) 그리고 독일사회연합당(DSU)의 에벨링(H.-W. Ebeling)은 1990년 2월 5일 서독에서 연방총리 콜(Kohl)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하였다. Hackel 1990, 45쪽 참조.

344\_ 민주주의 출발당(DA)은 1989년 12월 17일자 라이프치히 강령의 ‘서문’에서 민주주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결국 민주주의 출발당(DA) 소속 정치가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은 동독 기민당(CDU-Ost)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 출발당(DA)과 독일 포럼당(DFP) 간 연맹 결성을 추진했다(Linnemann 1994, 69쪽). 1990년 인민의회 선거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판명이 난 이 연맹 결성 전략에 대응하여 서독 기민당(CDU-West)은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고 아니면 ‘오늘날이 되어서야 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Schmidt 1998, 46쪽; Schmidt 1996b, 303~304쪽). 왜냐하면 인민의회 선거 이후 동독 기민당(CDU-Ost)은 다른 정당이 선호하는 당이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민주농민당(DBD) 지도부의 일부가 민사당(PDS) 즉, 동독 자민당(LDPD)/자민당(FDP)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독일민주농민당(DBD)은 동독 기민당(CDU-Ost)과 연합하였고 1990년 8월 초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 출발당(DA)도 연합하였다. 반면 독일사회연합당(DSU)은 ‘독일을 위한 동맹’에서 탈퇴하였다(Schmidt 1998, 45쪽). 라이너 에펠만(Reiner Eppelmann)이 이끌고 있었던 민주주의 출발당(DA)이 3월에 이 동맹에 가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첫 번째는 동독 기민당(CDU-Ost)은 1990년 6월 26일 베를린에 위치한 당본부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다시 아콥 카이저 하우스(Jakob Kaiser-Haus)라고 명명하여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기독교 사회주의 노선에 따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고 두 번째는 독일민주농민당(DBD)이 결국은 고전적 블록정당을 형성

---

의 출발당(DA)은 민주주의적 자결을 위한 ‘이 민중운동을 구성하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Demokratischer Aufbruch-sozial, ökologisch 1990, 52쪽.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드 메지에르(de Maizière)가 부당수로 선출되었던 1990년 10월 1일과 2일 함부르크(Hamburg)에서 열렸던 동독 기민당(CDU-Ost)과 서독 기민당(CDU-West)의 통일전당대회 이래 통합 기민당(Gesamt-CDU) 내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질적 정치적 힘의 산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Schmidt 1996a, 23쪽). 이어 다루게 될 이러한 산재는 통일 이후 갑자기 다가온 여러 일들 때문에 중단된 동독 기민당(CDU-Ost)내 당의 정책적 논의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논의의 쟁점이었던 동독 기민당(CDU-Ost)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독립된 정당정책의 수립과 ‘좌파’적 성향의 기본토대 구축은 결국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하거나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sup>345</sup> 그 대신 1990년 10월 ‘서독 기민당(CDU-West)의 기본강령이 통합 기민당(CDU)의 강령으로 적용되었고’(Schlumberger 1994, 27쪽) 1994년에는 1978년에 제정된 서독 기민당(CDU-West)의 루드비히스 하펜(Ludwigshafen) 강령의 ‘수정본’일 뿐이며 동독 기민당(CDU-Ost)의 요구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Schmidt 1996a, 26쪽) 통일된 독일을 위한 기민당(CDU)의 기본강령이 의결되었다.

이질적이고 부분적으로 적대적이기까지 한 세력들은 신연방주에서 기민당(CDU) 내 잠재적 갈등을 지닌 진영으로 나뉘고 구연방주 기민당(CDU)과 신연방주의 기민당(CDU)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테 슈미트(Ute

---

345\_ 동독 기민당(CDU-Ost)의 정책초안은 무엇보다 파시즘, 글로벌한 정의, 여성의 해방, 다문화 사회, 노동의 권리, 법적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의 보호, 인도주의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 정책을 담고 있다. Schmidt 1994, 53쪽. 이러한 것들은 ‘서독 기민당(CDU-West)의 강령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Schmidt 1996a, 26쪽.

Schmidt)는 동독 기민당(CDU-Ost)의 **엘리트집단**을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집단들은 각기 다른 시간에 등장하며 부분적으로는 1989년 말/1990년 초 이래 공존하고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보았다(Schmidt 1997a, 291~340쪽). 첫 번째는 과거 블록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으로 대부분 1989년 말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요직에서 제거당하고 더 이상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비교적 젊은 블록엘리트 집단으로 일부는 독일민주노동당(DBD) 혹은 동독 기민당(CDU-Ost)의 저변 출신이었으며 1990년 서독 기민당(CDU-West)에게 있어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였고 잠시 주정부 수상직에까지 올랐던 기스(Gies), 두하크(Duchac), 고몰카(Gomolka) 등과 같은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말한다. 사람의 수가 많은 이 집단은 주정부, 지방자치구, 정당 기관에서 직책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는 체제전환엘리트 집단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개의 '화해할 수 없는 전선'으로 분리되었다. 그 중 하나는 드 메지에르(de Maizière)(그리고 '바이마르로부터의 편지'의 저자)의 선두 하에 기독교-사회주의적 성향을 선호할 뿐 아니라 정당의 구회원과 신회원 통합을 달성하고자 했고, 안드레아스 키르히너(Andreas Kirchner)를 중심으로 한 다른 쪽 노선에서는 과거 동독 기민당(CDU-Ost)의 인사들과 정책들에 대한 강한 거부를 표명했다. 네 번째 집단은 스스로 이질적이고 혁신적 귀납엘리트 집단으로 (전직 환경부 장관이었던 아놀드 파츠(Arnold Vaatz)가 소속되어 있었던) 작센주의 '대화해(Gesprächskreis) 2000'처럼 시민운동 출신의 사람들(민주주의 출발당(DA) 또는 신 포럼(Neues Forum)), 경제자유주의자, 실용주의자, 도덕주의자 및 지식인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결성되었고 (혁명주의적 근본

민주주의자에서부터 보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비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지니며 오히려 개인주의적으로 정당과 정당 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앞장섰고 키르히너(A. Kirchner) 중심의 노선처럼 신연방주에서의 ‘정신에 대한 큰절’<sup>346</sup>을 강하게 거부했다. 다섯 번째로는 1993년 중반부에 등장한 집단으로 서독 출신으로 정치, 행정(정부부처, 주 수상청), 정당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직을 담당하게 된 체제전환 엘리트들의 집단이다. 예를 들어 튀링엔(Thüringe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주정부 수상직에 오른 베른하르트 포겔(Bernhard Vogel), 쿠르트 비텐코프(Kurt Biedenkopf), 베르너 뮌히(Werner Münch)가 있다.<sup>347</sup>

지역별로 상이한 특색을 지니고 있었고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이 다섯 집단의 존재는 동독 기민당(CDU-Ost)의 엘리트집단 내부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주의회에 나가있는 당의 원내 교섭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신/구, 혁명/현대화, 엄숙주의/온건주의, 동/서로 나뉘는 다양한 (강령 및 가치에 따른) 분열선을 따라 ‘통합문제’가<sup>348</sup>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

346\_ 아놀드 파츠(Arnold Vaatz) 인용. Die Zeit, 18호 (1998), 12쪽.

347\_ 일반적으로는 동독지역의 주정부 인사들의 삼분의 일이 서독 출신이다. Derlien 1998, 11~13쪽.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경우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작센-안할트의 경우 4년 동안 세 명의 수상이 탄생했다. 게르드 그리스(Gerd Gries)(CDU)의 후임자, 니더작센(Niedersachsen) 출신으로 전문대학교 교수였던 베르너 뮌히(Werner Münch)는 작센-안할트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부족으로 1993년 취임 일 년 반 만에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다. Pawlowski 1997, 17쪽; Waschkuhn 1999b, 106~108쪽.

348\_ Schmidt 1996a, 34쪽; 같은 의미에서 Schmidt 1997a, 324~342쪽.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기민당(CDU) 역시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1990년 이래 주의회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페터-미하엘 디스텔(Peter-Michael Diestel))와 (참담한) 주대표 사이에 권력다툼이 일어났고 (디스텔 역시 후에 기민당

다. 이 분열은 일시적으로 완화 될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늘 다시 문제가 되었다. 이는 기민당(CDU)이 패배한 1998년 연방하원선거를 살펴보면 확인이 되는 사실이다. 당시 당 내부의 동/서 관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91년 중/후반에는 드 메지에르(de Maizière)가 슈타지(Stasi)에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드 메지에르(de Maizière)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반면 볼커 뤼헤(Volker Rühe)를 앞장세우고 1994년 서독 기민당(CDU-West)의 기민당(CDU) 사무총장 페터 힌체(Peter Hintze)가 제안한 ‘빨간 양말 캠페인(Rote-Socken-Kampagne)’을 이용하여 몇몇 혁명가와 엄숙주의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편으로는 전직 통일사회당(SED)의 당원들 또는 통일사회당(SED)이 주도하던 정권의 요직인사들에 대한 기민당(CDU)의 엄격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글과 다른 한편으로 약한 동독 기민당(CDU-Ost)의 이해관철과 통합 기민당(Gesamt-CDU)에서의 동독 기민당(CDU-Ost)의 낮은 비율을 (정체성 및 대표 부족) 유감스럽게 표현한, 거의 동시에 등장한 문서가 동시에 등장했다.<sup>349</sup> 이 논쟁은 1998년 선거에서 동

---

-주대표가 되었다가 재선에 당선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6번째 기민당(CDU)-주대표가 선출되었다((전직) 베를린 내무장관이고 기민당-강경파에 속하는 요르그 쉰봄(Jörg Schönbohm)).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3일자, 3쪽.

349\_ 여기에서 두 문서는 동독 연방하원 의원 파울 크류거(Paul Krüger)가 1995년 12월에 발표한 논박문((기민당(CDU)의 동독 정책에 대한 14개의 논제)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주의회의 기민당(CDU)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에크하르트 레베르그(Eckhard Rehberg)가 1996년 1월에 발표한 ‘반박문’을 말한다. Schmidt 1997a, 332~333쪽 및 349쪽 참조. 1996년까지는 베를린에 있는 기민당(CDU) 연방사무소인 콘라트-아데나우어-하우스(Konrad-Adenauer-Haus)에 실질적으로 동독 출신의 기민당(CDU) 회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Der Spiegel* 8/1996, 32~35쪽.

독 측의 요구와 반대로 (작은) 양극화되고 서독의 기민당(CDU) 유권자들에게 맞춘 선거유세를 준비할 만큼 참여화 될 수 있었다(Schmidt 1998, 43쪽). 1998년 연방하원 선거 이후 에베르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과 새 기민당(CDU) 당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통일사회당(SED)의 당원과 간부들에 대한 강경한 경계를 해지하고 오히려 이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sup>350</sup> 1999년 1월 10일 열렸던 기민당(CDU) 연방대표단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거-엘리트-모집 또는 과거-엘리트에 대한 관심전환 전략은 ‘선거 전 승리 2002(Wahlsieg 2002)’라는 프로젝트로 선언되었다.<sup>351</sup>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뒤에서 언급하겠다)와 무관하게 드 메지에르(de Maizière) (와 디스텔과 레부르그) 이후 극복되었다고 여긴 논쟁이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렬하게 거부되었고 동독 기민당(CDU-Ost)(과 몇몇 시민운동가들)을 비난받게 했던 입장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용되었다.<sup>352</sup> 하

350\_ 쇼이블레(W. Schäuble)는 당구성원에 대한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과거 관계의 개선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프겐(E. Diepgen)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 “누가 어디 출신이며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 어디를 향하고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Die Zeit*, 1998년 11월 5일, 15쪽. 바로 직전에 쇼이블레가 다음과 같이 강경하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전직 통일사회당(SED) 당원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로타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가 지지하였다. *Der Spiegel* 43/1998, 1998년 10월 19일자, 39쪽.

351\_ “우리(기민당(CDU))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기본질서의 가치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했다. 때문에 동독 뿐 아니라 서독의 생활경험을 배경으로 한 가치논쟁 즉, 회원모집 행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동독에서 기민당(CDU)이 갖는 주요과제일 것이다.” 1999년 1월 10일 독일 기민당(CDU)의 연방대표의 결의(Beschluß des Bundesvorstandes der CDU Deutschland), 12쪽.

이너 가이슬러(Heiner Geißler)는 지방자치구 차원에서는 결코 희귀한 경우가 아닌, 민사당(PDS)과의 경우별 협력에 대한 제안으로 나사를 좀 더 세계조였고 동시에 서독 기민당(CDU-West) 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353</sup> 약 일 년 후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기민당(CDU) 원내 교섭단체 대표 크리스토프 베르그너(Christoph Bergner)가 민사당(PDS)을 가리켜 신식 좌파 시민당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민당(CDU)이 정치적

352\_ 특히 기민당(CDU)의 작센 주 주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직 통일사회당(SED) 당원을 기민당(CDU)에서 받아들이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Linnemann 1994, 158쪽 참조. 1996년 이래 작센 주 기민당(CDU) 당원이었던 전직 시민운동가 귄터 노케(Günther Nooke)는 1998년 중반 “동독 기민당(CDU-Ost)는 동쪽 색깔도 가져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또한 “널리 퍼져 있는 동독 시절의 기대 태도가 기민당(CDU)의 정책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베클렌부르크 출신의 기민당(CDU) 의원 레베르그(Rehberg)는 이 차이(와 전략선택)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정당지도부가 신연방주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미흡한 수준으로 고려했다”고 유감스러워했다. *Die Zeit* 18/1998, 18쪽 인용.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와 전직 작센주 시민운동가였고 이제는 기민당(CDU)의 연방하원의원인 아놀드 파츠(Arnold Vaatz)의 대화에서 이러한 차이가 다시 부각된다. 파츠는 이렇게 언급한다. “민사당(PDS)은 민주주의와 내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위협이다.” 반면 드 메지에르(de Maizière)는 쇼이블레(W. Schäuble)와 관련하여 민사당(PDS)과의 “화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Der Spiegel* 44/1998, 1998년 10월 26일자, 61쪽. 이미 1998년 초 슈미트(U. Schmidt)가 동독 기민당(CDU-Ost)과 서독 기민당(CDU-West)이 “오래전 극복했다고 믿었던 친구 회원 간 갈등을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존한다. Schmidt 1998, 44쪽.

353\_ *Süddeutsche Zeitung*, 1998년 12월 10일자, 1쪽 참조. 기독교사회당(CSU)의 주 단체는 가이슬러에게 반박하며 그를 ‘동지 밀고자’라고 비난했고,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와 기민당(CDU)의 새 사무총장 안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가이슬러(Geißler)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아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프리그니츠(Priegnitz), 우케르마르크(Uckermark)) 기민당(CDU) 후보들은 민사당(PDS)의 지원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고 귀스트로우(Güstrow)와 슈베린(Schwerin)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협력을 발견할 수 있다. Schmidt 1998, 42쪽.

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사당(PDS)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뤄야 한다고 하자 이와 비슷하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0월 2일자, 2쪽). (기민당(CDU) 당원이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의 주정부 부수상이 된) 요르그 쉰봄(Jörg Schönbohm)과 기민당(CDU)의 전 사무총장 페터 힌체(Peter Hintze)를 비롯하여 기사당(CSU)이 이러한 입장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민사당(PDS)과 기민당(CDU) 사이에 차이를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던 반면,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와 폴카 뤼헤(Volker Rühe) 및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에 파견된 새 원내 교섭단체 대표)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그리고 약간의 망설임 후에 (새 기민당(CDU) 사무총장) 안겔라 메르켈(Agela Merkel)까지 건설적인 대화를 요구했다.<sup>354</sup> 기민당(CDU)-엘리트들 사이에 존재 했던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갈등 노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의 존속보장 측면에서 (Immerfall) 통합에 결합이 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적어도 정당이 동독지역에서 ‘느슨하게 결합된 무질서’라는 문제도 드러난다.<sup>355</sup>

**일반 당원** 수준에서의 갈등노선과 집단형성 및 권력중심구성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동독 기민당(CDU-Ost), 독일민주농민당(DBD), 민주주의 출

354\_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0월 5일자, 1쪽; 1999년 10월 20일자, 1쪽. 안겔라 메르켈(Agela Merkel)은 처음에는 기민당(CDU)과 민사당(PDS)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후에 두 정당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9월 2일자, 2쪽; 1999년 10월 5일자, 1쪽.

355\_ 이 표현은 원래 미국의 조직행위학자 칼 웨익(Karl Weick 1985, 163~161쪽)이 했던 말로 페터 료셰(Peter Lösche)가 서독 사민당(West-SPD)을 묘사하기 위해 차용하였다. Lösche 1993, 35쪽.

발당(DA)의 1990년 초 (불확실한) 당원 수를 합치면 그 수가 2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6</sup> 이 회원들은 통합 기민당(Gesamt-CDU)으로 유입되었다. 통합 전당대회 후 40%의 극적인 당원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약 125,000에서 130,000명만이 기민당(CDU)에 남았고 여기에서 1992년 말까지 다시 35,000명이 줄어들었다(Wiesendahl 1998b, 19쪽).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는 절대값이다. 신규 가입자는 부분적으로만 집계된다. 만일 튀링엔(Thüringen)의 경우를 기준으로 경우로 볼 경우 1991년에서 1994까지 동독에서 신규 가입자가 전체 당원의 23~30%를 차지하며 다시 말해 35,000명 이상의 기존 당원이 탈당했다(Schlumberger 1994, 26쪽). 1992년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1997년 말까지 동독지역에서의 기민당(CDU)의 당원은 (극적으로) 추가로 약 30,000명 (그 중에는 신규 가입자도 있었다) 줄어들었고 현재 당원은 약 65,000명(통합 기민당(Gesamt-CDU)의 전체 당원의 약 12%)으로 지역에 따라 (남북이 차이가 있다) 매우 상이하게 분포되어있다.<sup>357</sup>

사회구조관련 수치는 동독과 서독에 거주하는 당원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동독에 사는 기민당(CDU) 당원의 경우 서독의 당원보다 젊고, 여성비율과 노동자 및 중업원비율이 더 높은 반면 교회와의 연관성은 매

356\_ 린네만(Linnemann 1994, 71쪽)은 당원 총계가 200,000명, 비젠달(Wiesendahl 1998b, 19쪽)은 233,000명이라고 했고, 그 중 약 130,000명이 동독 기민당(CDU-Ost)의 당원이었다.

357\_ 동독지역의 기민당(CDU) 당원 수는 1997년 다음과 같았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7,974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8,729명, 작센(Sachsen) 18,516명,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2,130명, 튀링엔(Thüringen) 16,342명이었다. Schmidt 1998, 49쪽 참조.

우 낮고 있다하더라도 거의 신교 위주이다.<sup>358</sup> 선거 시 태도의 차이가 있거나 가치관과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이질성이 발견된다. 이 이질성은 동독 기민당(CDU-Ost) 당원구조의 ‘분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블록 기민당(Block-CDU)과 민주주의 출발당(DA) 및 일부 독일민주노동당(DBD)과 같은 다양한 영역 출신의 기존 당원의 약 2/3를 차지하며 나머지 1/3은 신규 가입한 당원들이다.<sup>359</sup> 이 당원 구조와 당원들의 출신은 서독지역의 기민당(CDU)의 (시민적) 사회구조와는 맞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동독 내부의 격차가 문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 격차가 문제였다. 엘리트 층위와 비교할 때 일반 당원 층위에서는 동서 격차가 완화되는 듯 했지만 수직적인 동독 대 동독 비교축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다. (넓은 의미에서) 기존 회원 영역의 무게가 점점 밀려들어오는 블록 엘리트 즉, 체제전환 엘리트들(de Maizière)의 무게와 비등한 반면, 현대화를 추구하는 체제전환 엘리트와 유도 엘리트들은 일반 당원 층위에서 별 반응을 얻지 못하고 체제전환 엘리트들의 경우 일반 당원 층위의 (거의) 아무 영역도 대꾸하지 않는다.

358\_ Linnemann 1994, 71~72쪽; Weisendahl 1998b, 18~19쪽; Wiesendahl 1997, 351~353쪽; 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 1997, 197~198쪽; Schmidt 1997a, 128~133쪽. 1992년도 동독 노동자 31.9%, 서독 노동자 9%, 동독 공무원 2.1%, 서독 공무원 12.8%, 동독 자영업자 7.5%, 서독 자영업자 23.3%. 여성비율(1994년)은 동독 35.5%, 서독 23.5%. 연력에 따른 구조는 40세 미만(동독) 약 40%, 40세에서 50세까지(동독) 59.4%, (서독) 44.9%.

359\_ 슈미트(Schmidt)는 ‘행동영역’에서 ‘적응, 예측 [...], 하모니와 합의에 대한 그리움, 모순에 대한 두려움’을 짚어지고 다니는 블록 정당 출신의 당원과 동서-분단에서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선인 적진 시민운동가들 사이에 ‘분할’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Schmidt 1997b, 33~34쪽. 때문에 안겔리카 바르베(Angelika Barbe, 과거 사민당(SPD))와 베라 렉스 펠트(Vera Lengsfeld, 과거 연합90(Bündnis90))가 언급하듯 1996년 기민당(CDU)으로 이전한 시민운동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현상은 **정당 내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이 지도부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다른 아닌 비교적 당원수가 많은 기민당(CDU)의 작센(Sachsen)주 협회의 지도부 인사들 및 지방자치구와 의회에서의 당대표들이 정당의 저변이 정치적 문제와 논의를 위한 공명기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상부에서 내려다 본 이 시각을 통해 적어도 가능한 도구화에 대한 정당 저변의 유보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히 살펴볼 때에는 ‘정당의 저변이 일반 정치 의사형성시 사실 참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Patzelt/Algasinger 1996, 253쪽). 왜냐하면 정당의 저변은 일반 당원이 인사결정 및 정치적 지위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변에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회에서 토론을 위한 논제제공보다 통지의 성격의 일방적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Linnemann 1994, 77쪽).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정치적 행위를 위한 대표단’이 존재했고 당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도 않았고 수용되지 않던 블록 정당 시절의 정치문화가 계승된 듯하다.<sup>360</sup>

360\_ Meuschel 1992, 310~312쪽 참조, 여기에는 80년대 중/후반 시민들의 정치적, 개인적, 문화적 상황설명을 위한 동독의 개신교 연구에 대해서 명시한다. 슈테판 볼레(Stephan Wolle)는 통일사회당(SED)의 당회를 기준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당원들은 정당의 지시를 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 책임감을 갖고 결정하고, 청소년 및 노동조합의 업무를 활성화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모두가 침묵하였다. 이는 무의미한 회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Wolle 1998, 109쪽. 방지와 감내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현상은 (이 용어는 엔스 리더러(Jens Riederer) 박사의 도움으로 탄생) 블록 정당 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고 일종의 관습처럼 발전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조적) 참여도 부족에 대해서 말하기 보다는 모순적이고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의 **참여허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테 슈미트(Ute Schmidt)의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배경을 근거로 동의할 수 있고 동시에 ‘형식적 동독과 서독의 정당구분의 통합이 통일이 달성되던 해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점이 통합과정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과정이 오랜 시간 계속 된 것이다’라는 이러한 일반적 설명을 기민당(CDU)에 적용할 수 있다(Schmidt 1998, 39쪽).

## (2) 동독 사민당(SDP)과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당

서독 기민당(CDU-West)의 경우 파트너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 가지 가능한 파트너가 제안되었던 반면 서독 사민당(SPD-West)의 경우 곧바로 동독의 사민당(SDP, 동독 사회민주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 물론 두 정당이 아무런 문제없이 상호작용하거나 통합될 수 있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몇몇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그 문제점들은 오늘날의 서독 사민당(SPD-West)와 동독 사민당(SPD-Ost) 사이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89년 10월 7일, (오라니엔부르크(Oranienburg)의) 슈반테(Schwante)에서 열린 동독 사민당(SDP)의 공식 창당식은 43명의 창당 멤버들의 인생경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사건들의 (임시) 종점이었다. 하랄드 사이델(Harald Seidel) 또는 (후에 비공식

정보요원(IM)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된) 이브라힘 뵘메(Ibrahim Böhme)와 같은 창립 멤버들은 ‘프라하의 봄’ 이후 벌써 통일사회당(SED)의 정책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 아르트 노악(Arndt Noack),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같은 창립당원들은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의 추방 직전 또는 직후 교회의 보호 아래 시민운동과 평화운동을 접했다(Seidel 1993, 14~15쪽; Neubauer 1994, 75~76쪽). 시민운동과 평화운동 참여자들은 최소한 1989년 초부터 그리고 1989년 중반 이후 더욱 강하게 그들만의 **(시민)정당** 창당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그들이 꿈꾸던 정당은 시민운동을 통해 달성된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 및 경제적 평등과 통일사회당(SED)의 지배에 대항한 공적인 의사형성을 의회에 정착시키고자 하고 그래야만 하는 정당이었다.<sup>361</sup> 이때 칼 포퍼(Karl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직접적 토대로 삼았던 ‘열린사회’에 대한 제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이 제안은 (서독) 사민당(SPD (West))이 70년대에 극단적 합리주의와 그랬듯 당사자들은 전혀 인식 하지 못한 채 밀접한 관계(Liaison)를 만들었다.<sup>362</sup> 정책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사회주의인터내셔

361\_ 공동 창립 당원인 슈테펜 라이헤(Steffen Reiche)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무엇보다 정당이 있어야 했다. 수년에 걸친 시민운동 이후, 의회 제도로 인정받는 집단 없이 비의회적 야당활동 이후 반드시 정당이 필요했다. 정당을 통해 요구를 장기적으로, 의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Reiche 1993, 23쪽.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은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우리는 시민정당을 원했다.” Meckel 1993, 63쪽.

362\_ 하랄드 자이델(Harald Seidel)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동독 사민당(SDP)의 창립 세대의 동기에 대한 강연을 시작한다. “모든 유기체는 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나서 ‘칼 포퍼(Karl Popper)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미래에 대한 개방성, 실수 찾기 및 비차단성과 같은 비판적 합리주의의 주요 표현들을 소개한다. 그

널’의 보호 회원제)는 시민운동 참여자들을 결국에는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몰았다. 동시에 동독에서는 사민당(SDP)이란 이름으로 정당이 세워졌고, 이는 서독의 사회민주주의와의 결별을 의도한 것으로 1989년 10월 7일 제정된 정당규약을 채택할 뿐 아니라 ‘독일이 지은 과거의 죄의 대가로 독일이 독립된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훗날 약간의 변경은 있었기는 하다.<sup>363</sup>

그러나 시민운동단체에서 정당으로의 변이 과정에는 기본적인 갈등이 존재했는데 이 갈등은 동독 사민당(SDP)을 내적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민당(SDP)에 대한) 외적 상태를 규정하였다. 이때 무엇보다 동독 사민당(SDP)의 경우 그랬듯 정당 목표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니었다. 기민당(CDU)의 역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정당의 목표가 정당 규약을 위한 여러 초안을 넘어 항상 동일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sup>364</sup> 초창기에만 (‘제3의 길’의 의미를 갖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

예게는 이러한 강연이 ‘최소한 동독 사민당(SDP)의 창당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Seidel 1993, 13쪽. ‘리에종(Liaison)’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Waschkuhn 1999a, 10장 참조.

363\_ 동독 사민당(SDP)의 규약, 1989년 10월 7일 SDP, 130쪽; Lösche 1993, 36쪽 참조.

364\_ 1989년 9월 29일에 제시된 동독 사민당(SDP)의 규약초안은 콘라트 엘머(Konrad Elmer)/디터 카이저(Dieter Kaiser)/라이너 리흘레(Rainer Richle)가 쓴 것으로 2조에서 무엇보다 다음의 목표를 강조한다. “경제를 중점에 둔 사회 민주주의, 자치주의, 권력분립 및 의회중심의 민주주의, 정당다원주의, 경제의 민주화, 노동조합의 자유, 국가와 사회의 윤리가 달성되어야 한다.” 1989년 9월 24일(Elmer/Kaiser)의 두 번째 초안은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여성 평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1989년 10월 7일자 규약에서도 반복이 되며 요약한 형태로 라이프치히(Leipzig)의 1990년 2월 23일자 규약에도 등장한다. Sowe 1993, 111쪽, 116쪽, 121~122쪽, 167쪽.

수식어가 없는 ‘민주주의’로 기본 방향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의 큰 저항 없이 이뤄졌다.<sup>365</sup> 그러나 동독 사민당(SDP)의 내부 구조화와 조직형성과 관련하여 상이한 제안이 나오면서 갈등노선이 나타났다. 동독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직접적 반대 움직임으로서 정당의 밑에서부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대표를 뽑아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정당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정당의 구조는 (작은) 하부집단을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결정적 주체로 만들고 과도정치화를 방지할 뿐 아니라, 내부의 투명성과 30명의 대표로 구성된 정당의회<sup>366</sup>의 투명성 보장과 이 정당의회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한다. 동독 차원의 자체 정당대표는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자세한 사항 Dowe 1993, 111~120쪽; Elmer 1993a, 31~33쪽).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개념을 따른 콘라트 엘머(Konrad Elmer)가 주도한 정당의 이러한 구조(Elmer 1993a, 33쪽)에 대해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 헤겔철학을 따르는 신학자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sup>366</sup> 및 라이하르트 호프너(Reinhard Höppner)는

365\_ 일차 초안과 이차 초안(1989년 9월 20일과 24일)은 동독 사민당(SDP)을 ‘유럽 사회주의의 전통’에 예속시켰고(Dowe 1993, 111쪽, 116쪽), 1989년 10월 7일의 규약은 사회 민주주의(Dowe 1993, 121쪽)를 강조한 반면 라이프치히(Leipzig)의 규약(1990년 2월 23일)은 ‘민주주의’만을 언급했다(Dowe 1993, 167쪽). 콘라트 엘머(Konrad Elmer)의 라이프치히 규약 경과보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개념과 이 개념의 폐지에 관해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극히 작았다(Elmer 1993b, 161쪽). 동독 사민당(SDP)은 사민당(SPD)이 30년 동안 다뤄왔던 일은 4개월 만에 달성했다. Heimann 1993, 178~186쪽.

366\_ 라이헤(Reiche)는 구트차이트(Gutzeit)를 ‘자신의 헤겔(Hegel)을 가장 잘 알아본’ 신학자라고 묘사했다. Reiche 1993, 22쪽.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저항했다. 그들은 더 엄격한 구조와 강력한 지도부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두 진영은 결국 타협점을 찾았다. 인민민주주의적 조직은 대체방안으로 유보되었고 기타 정당구조 관련 작은 부분들은 그래도 유지되었다. 동시에 정당의회에서 선출된 단 한명의 당대표만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 당대표는 정당의회의 통제를 받고 동독 사민당(SDP) 정치적 포지션을 확고히 하며 공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거전을 관장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Dowe 1993, 168쪽, 172~174쪽). 동독 사민당(SDP)은 쉽게 말해 시민운동과 정당의 지위 사이에서 그 어느 쪽도 택하지 못했다.

수많은 요소들(무엇보다 역사적 환경과 다양한 선거, 당원 수의 변화 및 당원구조의 변화 및 1990년 2월 이래 사민당(SPD)과의 협력) 때문에 정당 조직의 불명확함과 그 이면에서의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화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

사민당(SPD)은 동독 기민당(CDU-Ost) 그리고 동독 기민당(CDU-Ost)에 편입한 독일민주농민당(DBD) 및 민주주의 출발당(DA)과 달리 베를린의 동독 사민당(SPD-Ost) 정당의회 이래 1990년부터 ‘단골가게’에서조차 회원 수가 30,000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기록했고 1997년에는 거기에서 3,000명이 더 줄어들어 결국 ‘형편없는 소정당 수준’에 만족해야 했다.<sup>367</sup> 전직 통일 사회당(SED) 당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

367\_ Wiesendahl 1997, 353쪽; 수치와 관련하여서는 Wiesendahl 1998b, 18쪽 참조. 1997년 다섯 개의 주협회의 회원수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6,868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3470명,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6,091명, 작센(Sachsen) 5,233명, 튀링엔(Thüringen) 5,589명. Schmidt 1998, 50쪽.

과 이에 대한 결정권이 정당 하부구조 즉 지방단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낮은 회원수는 대부분의 정당당원들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어 당원이 되는 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거부감을 주게 되었다.<sup>368</sup> 사회구조적 여건상 사민당(SPD)은 비교적 젊고 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들을 포섭할 수 있었고 목사-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였다. 비록 서독 사민당(SPD-West)과 비교할 때 35세 이하 당원의 비율이 더 높지만 여성비율은 더 낮다. 그 외 정당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sup>369</sup>

적어도 1994년 정도까지 중요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놀라울 만큼) 저조했던 신연방주에서의 사민당(SPD)의 선거 결과였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후원으로 1990년 1월 27일 고타(Gotha)에서 튀링엔(Thüringen) 주협회가 창립될 때만 해도 100,000명의 시민이 참석했고(Kiefer 1996, 42쪽) 사민당(SPD)은 (이 때문에) 큰 문제없이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

368\_ 동독 사민당(SPD) 당원의 약 40%가 의회에 진출하고 동시에 정당의 지도부였다. 튀링엔(Thüringen)의 바르트부르크 크라이스(Wartburg-Kreis)에서는 그 수치가 심지어 70%까지 달했다. Birsl/Lösche 1998, 12쪽. 브란덴부르크에서는 한 의원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Mehrfachmandat) 된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고 1994년 지방자치구 선거 때는 '사민당(SPD)이 인구 2,000명 이하 지역 중 1/3에서만 당선되었다.' Jann/Muszynski 1997, 195쪽.

369\_ Linnemann 1994, 80~82쪽; Neugebauer 1996, 53~55쪽; Wiesendahl 1998b, 18쪽. 대표적인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사민당(SPD)의 여성비율이 25.7%였다. Jünger 1997, 335쪽.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사민당(SPD)의 35세 이하 당원비율이 19%(연방정당: 15%), 60세 이상 당원비율을 17.6%(연방정당: 26%)에 그쳤다. Birsl/Lösche 1998, 14쪽.

것이라 확신했다.<sup>370</sup> 그러나 1990년 3월에 있었던 인민의회 선거 결과는 20.8%의 지지율로 실망스러웠고, 같은 해 5월 지방자치구 선거 결과(평균 20.2%) 역시 저조했다(수치는 Neugebauer 1996, 45쪽 참조). 단 한번 1990년 10월, 주의회 선거 결과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다(평균 25.2%). 그렇지만 사민당(SPD)은 결국 오로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만 주정부에 진출 할 수 있었다(신호등연정 사민당(SPD)/연합90(Bündnis90)/녹색당(Die Grünen)). 1994년 두 번째 주의회 선거 결과는 좀 나아졌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는 신호등연정이 깨진 후 1994년 (그리고 1998년)부터 슈톨페(Stolpe) 주정부수상을 앞세운 사민당(SPD)이 정권을 잡았다.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는 문제가 많았던 사민당(SPD)/연합90(Bündnis90)의 소수당정권에 이어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과 1998년 결별을 선언한 민사당(PDS)의 묵인(‘마그테부르크 모델’)으로 라이하르트 호프너(Reinhard Höppner)를 앞세운 사민당(SPD) 주정부가 들어섰다. 튀링엔(Thüringen)에는 1999년 9월까지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공동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다. 1998년 10월 이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힘겹고, 문제가 많았던 대 연정 이후 하랄드 링슈토르프(Harald

---

370\_ 흥미롭고도 명확한 예는 튀링엔 동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 슈멜른(Schmöln)이다. ‘붉은-단추-도시(Rot-Knopf-Stadt)’로 독일제국 시대 때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이르기까지 사민당(SPD)의 아성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 도시는 독일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의 강제 통합 이후에 항시 저항했고 1990년 1월 10일 설립된 사민당(SPD)의 동독협회는 전통에 따르지 않는 데 성공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받아들여졌다.” Walter/Dürr/Schmidtke 1993, 465쪽.

Ringstorff)를 앞세워 (문제를 덜 일으켰지만 여전히 힘겨운) 사민당-민사당 (SPD-PDS) 연정이 등장했다. 정부차원에서 사민당의 영향력은 강화되었지만 사회 전반의 지지율은 계속하여 낮아졌다. 당 가입회원 수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주고 있고 정치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협 중에는 사민당(SPД)의 여러 연구회가 없고 있다하더라도 그저 지루한 커피-만남만의 성격을 갖고 종종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다.<sup>371</sup>

이러한 개별 요소들은 사민당(SPД)이 1990년 이래 정당의 의회 내 주도적당이 되는데 서독에서 시작된 엄격한 정당조직의 구조조정과 간결화(Möller 1994, 199~200쪽)와 인민민주주의 모델의 목표와 함께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민당(SPД)은 초창기 카리스마가 넘쳤던 몇몇 정치가들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늘 중용의 이미지를 고수했다(Neugebauer 1996, 43쪽; Lösche 1996, 27~28쪽). 사민당(SPД)-엘리트들은 당의 하부층과 분리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서로 상이하고 교차하는 갈등노선을 따라 다양한 ‘개인고문단(Küchenkabinette)’이 형성되었는데 이 갈등노선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이력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결국 원내 교섭단체/주대표, 지방 및 지역/(대)도시, 사민당(SPД)-수용/사민당(SPД)거부, 강령에 의한 동/서 차이 등의 분열선이 두드러졌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시된 두 개의 분열선이 가장 두드러졌고 시간이 갈수록

371\_ Neugebauer 1996, 60~61쪽. 어떤 지역에는 청년사회주의자(Jusos) 대신에 그와 구별되는 ‘젊은 사회주의자’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Birsl/Lösche 1998, 12쪽. 사민당(SPД)지도부가 1992년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민당(SPД) 전당대회 시당원들은 ‘하품이 날 정도의 지루함’을 토로했다. Wiesendahl 1997, 361~362쪽.

더욱 심화되었다. 사민당(SPD-Ost) 내에서 마르쿠스 메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구트차이트(Martin Gutzeit)가 민사당(PDS)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내세우고 있던 반면 슈테펜 라이헤(Steffen Reiche)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는 만일 경우 민사당(PDS)을 지방자치구 차원에서 수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개혁전략을 추구했다(Schmidt 1998, 48쪽). 전자는 시민운동의 성향을, 후자는 중앙집권적 성향을 띄고 있었고, 두 진영은 서독 사민당(SPD-West)내 각기 다른 대화파트너를 두었으며 동-서-대립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나뉘었다. 중앙집권적 진영은 서독 사민당(SPD-West)의 좌파적이고 초국가적이면서 동독-성향 혹은 동독-논지와는 정반대되는 목표를 따랐다.<sup>372</sup> 반면 라인하르트 호프너(Reinhard Höppner)도 합류한 시민운동 중심의 진영은 그들에 대한 저항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연방차원에서 사민당(SPD) 지도부가 가졌던 자체 동독정체성과 행동방식에 대한 우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 중심의 진영의 동독정체성과 행동방식은 본(Bonn, 지금은 베를린(Berlin))에 있는 ‘바라크(Baracke)’의 일부 및 신연방주의 주협회의 일부가 거부하고 있다.<sup>373</sup>

372\_ “서독 사회민주주의에 속한 다수는 [...] (오늘날까지) 동독에 대한 지나친 접근으로 인해 정체성상실과 과거의 인민전선비난이 야기될까봐 겁내고 있다. 동독에서도 일부 심하게 서독 중심적이고 서독에 편입된 사회민주주의 지배층 일부는 동일한 입장이다.”고 한스 미셀비츠(Hans Misselwitz)가 말한다. Ritter 1997, 51쪽.

373\_ 당시 아직 총리 후보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는 “안정적인 정부는 관용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으며” 동독 사민당(PDS)의 지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호프너(Höppner)는 “독자적인, 동독의 길”을 주장했다. *Der Spiegel* 1998/20, 1998년 5월 11일자, 23쪽. 튀링엔(Thüringen) 내무부 장관이자 ‘에르푸르트(Erfurt) 성명서’의 공동 서명자인 자르브뤼켄(Saarbrücken) 출신의 리하드 데베스(Richard Dewes)는 주차원의 사민당-동독사민당(SPD-SDP) 연정을

분과형성의 최근 예는 전직 동독사민당(SDP) 지도부 부대표이자 마지막 인민의회에서 동독사민당(SDP)의 원내교섭단체장을 지닌 리하르트 슈뢰더(Richard Schröder)가 이끈 노동자 중심의 ‘신중도(Neue Mitte)’ 노선이다. 이 노선은 민사당(PDS)과의 협력을 전적으로 배제한다. 여기에는 우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진영에 속한 구연방주 출신의 몇몇 의원들 외에는 대부분이 신연방주 출신의 의원들과 동독 재건을 위한 연방총리실의 국무차관 롤프 슈바니츠(Rolf Schwanitz)가 속한다.<sup>374</sup>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와 한스 미셀비츠(Hans Misselwitz)를 중심으로 결성된 ‘동독 사회민주주의 포럼(Forum Ostdeutschland der Sozialdemokratie e.V)’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9일자, 5쪽) 및 (당시) 사민당(SPD)의 원내총무였던 오토마르 슈라이너(Ottmar Schreiner)는 사민당(SPD)의 이 노동자노선의 ‘불필요함’을 내세우고 사민당(SPD) 내 ‘점점 늘어나는 단체의 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sup>375</sup> 모순적이게도 ‘동독 포럼(Forum Ostdeutschland)’은 자신을 ‘정당협의회 외에 존재하는 정당 내 기반’(Ritter 1997, 53쪽에 미셀비츠(Misselwitz)의 표현)으로 생각하며 계속하여 분파를 형성하였다. 미셀

---

지지한 사람이었고 슈하르트(Schuchardt) 장관을 비롯한 사민당(SPD)의 주대표의 거센 반대를 경험해야 했다.

374\_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4일자, 5쪽. 리하르트 슈뢰더(Richard Schröder)는 사민당(SPD)과 드 메지예르(de Maizière)가 이끌었던 기민/기사당(CDU/CSU) 사이의 연정이 깨진 후 8월 20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우선 동독 사민당(SDP-Ost)과 달리 연정의 지속을 찬성했고 (당시) 원내 교섭단체보다는 동독이 더 오래 존속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Gröf 1996, 47~49쪽.

375\_ Ottmar Schreiner,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4일자, 5쪽 인용.

비츠(Misselwitz)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민당(SPD) 내 그리고 특히 동독 사민당(SPD-Ost)의 경우 ‘복잡한 산재농지’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적이면서도 좌파적인 공동의 목표설정’이 필요하고 ‘이 목표란 개인의 특성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엘리트층에서 볼 때 ‘분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1989/90년 이래로 나타난 마찰과 균열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다(Neugebauer 1996, 53쪽). 미셀비츠(Misselwitz)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 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사민당(SPD) 당원들이 사민당(SPD)이 민사당(PDS)과 협력하는 것에 반발하여 당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당(사회적 자유당)을 세우려고 하거나 이미 세운 경우도 있었다.<sup>376</sup>

페터 글로츠(Peter Glotz)는 사민당(SPD)을 둔중한 유조선에 비교한 바 있다.<sup>377</sup>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민당(SPD)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유조선처럼 하나의 동질적인 덩어리가 아니다.<sup>378</sup> 오히려 신연방주의 편입으로 더욱 더 이질적 성

376\_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2월 17일자, 5쪽 참조. 동독에서는 당내 파벌 형성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신중도(Neuen Mitte) 내 사민당(SPD) 측 의회 의원들(크리스티네 루시가(Christine Lucyga)와 한스-요아킴 하커(Hans-Joachim Hacker))이 창당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9년 2월 28일 이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는 브루노 슈크만(Bruno Schuckmann)을 당수로 한 사회민주당(SLP)이 존재한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3월 1일자, 6쪽 참조.

377\_ “대형조직은 마치 대형 유조선 같다. [...] 그리고 작은 배처럼 민첩하지 못하다. [...]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크고, 무거운 유조선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항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어야 한다.” Glotz 1982, 56~57쪽.

378\_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정권 말기에서부터 1989년 새 기본강령이 도입되기까지 있었던 파벌싸움에 대한 언급이다. 추가 자료를 소개하는 Heimann 1993,

격이 커졌다. 때문에 대형 유조선 보다는 (반대로) ‘소형함 부대’가 어울리는 비유로 이 부대의 ‘부대원’들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대부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주 싸움을 일으키고 극단적일 경우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방향에서부터 불어오는 미풍을 맞고 있다. 그리고 각 부대원은 자신이 최고의 선장이라고 믿는다.’<sup>379</sup> 이것이 단점만 갖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성에 대한 과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이 일반적인 한 추세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논의 될 것이다.<sup>380</sup>

### (3) 자민당(FDP)과 동독의 자유주의자

‘차선 정당’ 혹은 ‘하반신이 없는 여인’이라는 표현(Dittberner 1987; Wehling 1990, 8쪽)이 꽤 어울리는 자민당(FDP)은 통일 이전 구연방주에서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하며 잘 극복해낸 이력이 있다.<sup>381</sup> 자민당(FDP)은 ‘표 물이꾼’, ‘저울의 지침’이기도 하고, 1998년까지 연방차원의 일곱 연정정부에 참여하여 조정기능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1993년

160~169쪽 참조; Lösche/Walter 1992, 107~140쪽; Walter 1997, 1305~1313쪽.

379\_ von Alemann/Heinze/Schmid 1998, 35쪽. 이 비유는 이미 1990년에 널리 알려졌고 글로츠(Glotz)가 제안한 비유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Glotz 1990 참조.

380\_ 정당연구가들(특히 사민당(SPD))은 이것이 ‘틀정당(Rahmenpartei)’(Raschke) 또는 ‘파별정당(Fraktionspartei)’(Radunski)과 같은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때 지방/지역/초지역적 의원들이 정당정책은 해석적, 이질적으로 규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일종의 강령적 틀만 멀찌감치 존재한다고 보았다. Lösche 1996, 27쪽. Dittberner 1997, 191~201쪽.

381\_ Lösche/Walter 1996. 여기에서 말하는 위기란 정확히 1969년 9월 27일 연방하원 선거를 말하며, 선거 결과 결국 사회자유주의 연정이 탄생했다. Siekmeier 1998, 421~426쪽.

중반까지 모든 16개의 주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했고 연정정부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했다.<sup>382</sup> 자민당(FDP)은 1990년 연방하원선거 및 신연방주의 각 주의회 선거에서 예상 외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sup>383</sup> 1993년 말/1994년 초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신연방주에서는 주차원에서 자민당(FDP)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였다. 반면 지방자치구 차원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이것이 신연방주에서 두드러진 자민당(FDP)의 예상 외 특징 중 하나이다.

전독일 자민당(FDP) 설립의 다소 복잡한 역사는 네 개 또는 다섯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며 서로 크기가 다른 강줄기(와 시냇물줄기)가 합쳐져서 형성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1990년 2월 과거 블록정당이었던 동독 자민당(LDPD)이 (또 다시) 자민당(LPD)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당수 라이너 오르트렙(Rainer Ortleb)의 지휘 하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 남아 있던 자유주의적 뿌리에 의존하여 쉽게 서독의 자민당(FDP)으로부터 수용되기를 기대했다.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와 볼프강 미슈닉(Wolfgang Mischnik)이 자민당(LPD)에 속해있고 동독 자민당(LDPD) 당수로 만프레드 게르라흐(Manfred Gerlach)가 있을 때 그런 시도가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sup>384</sup> 그럼에도 자민당(FDP) 지도부는 이에 유보적 입장을

382\_ 1991년 9월 29일 실행된 브레멘(Bremen) 의회 선거결과는 지지율이 9.5%, 1992년 4월 5일 시행된 바덴-비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회 선거 결과는 5.9%였다. Vorländer 1995, 246쪽.

383\_ 자민당(FDP)의 선거결과는 (1990년 10월) 지역별로 상이했고 남북-격차가 두드러졌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5.5%,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6.6%,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3.5%, 튀링엔(Thüringen) 9.3%, 작센(Sachsen) 5.3%.

384\_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동독 자민당(LDPD)은 이미 ‘블록’에 강하게 묶여져 있었

취했고 새롭게 설립된 ‘독일 포럼당(Deutsche Forum Partei, DFP)’과 ‘동독-자민당(DDR-FDP)’의 연합을 정치적으로 나쁜 전력이 없다며 선호했다.<sup>385</sup>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전개한 ‘파트너 찾기’ 압력에 밀려 서독 자민당(FDP West)은 세 집단과의 통합을 결정했다. 당시는 ‘자유민주주의자 연맹(Bund Freier Demokraten-die Liberalen, BFD)’으로 이름을 바꾼 자민당(LPD)의 일부가 블록정당인 독일 국가민주당(NDPD)에 편입한 후였다.<sup>386</sup> 1990년 8월 11일 자유민주주의자 연맹(BFD), 독일포럼당(DFP), 동

---

다. 그러나 1989년 8월 이후 동독 자민당(LDPD)은 만프레드 게르라흐(Manfred Gerlach)의 주도 하에 통일사회당(SED)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르라흐(Gerlach)는 훗날 동독 사민당(SPD)의 일부가 그랬듯 사회주의가 인도주의적 얼굴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는 사회주의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1989년 11월/12월 ‘블록’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정당 기저의 요구와 시장경제에 대한 찬성 및 조속한 독일 통일에 대한 바람을 게르라흐(Gerlach)는 따를 수 없었고 따를 의지가 없었다. 이것이 1990년 2월 9일/10일 드레스덴(Dresden)에서 열렸던 특별 전당대회에서 게르라흐(Gerlach)의 해임이 결정된 이유이다. 이러한 (혁명사회주의적) 노선과는 달리 게르라흐(Gerlach)와 1989년 11월 베를린(Berlin)에서 만난 그라프 람스도르프(Graf Lambsdorff)의 지도하게 있었던 자민당(FDP)의 지도부는 극도로 회의적이었다. Pfau 1994, 105~110쪽.

385\_ Berndt/Jansen 1992, 67~69쪽. 한편 동독의 자민당(DDR-FDP)이 과거 동독 자민당(LDPD) 당원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창당되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Pfau 1994, 110쪽.

386\_ 동독 자민당(LDPD) 측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단순한 응급처치 또는 좌절행위였다. 동독 자민당(LDPD)은 동독 기민당(CDU-Ost) 또는 통일사회당(SED)/민사당(PDS)의 편에 서고 싶지 않아 했고, (2월 이후 정책적으로 가까워진) 동독 사민당(SPD)/사민당(SPD)의 측에 서서는 안 되었고, 독일사회연합(DSU)은 동독 자민당(LDPD)의 지도권을 넘겨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유민주동맹(BFD)만이 남아있었다. Höhne 1994, 130~133쪽 참조. 무엇보다 동독 자민당(LDPD)이 정치사회적 상황 때문에 계속하여 정책 변화를 감행했고 결국 보수적이고 우파적이면서 동시에 통일사회당(SED)에 순종적인 정당에서부터, 비록 자민당(LDP)과 독일포럼당(DFP)의 불신을 받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당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인민의회 선거 때에는 독립적으로 선거전에 나서야 했다.

독-자민당(DDR-FDP)은 자민당(FDP)에 편입할 것을 선언하고 이로써 최초의 동서 정당통합을 달성했다. 전략적인 이유로 인해 개개 편입정당의 당원 수를 (현재하게) 높게 잡고 이 때문에 당원 수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 편입 당원의 수가 125,000명이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신연방주에서 새롭게 편입된 당원의 수가 1990년 중반 자민당(FDP)의 당원수의 두 배에 달했다.<sup>387</sup> 편입된 새 당원의 약 90~95%는 블록정당 출신이었다(Vorländer 1992, 19쪽). 그러나 이 ‘황금기’가 지나자 동독지역의 당원수가 과장이 아니고 실지로 78%나 줄어들어 1995년 말 전국적으로 자민당(FDP) 당원 수가 80,000명밖에 안 되고 그 중 동독지역의 당원 수는 20,000명 만 뿐이었다(Wiesendahl 1997, 352~353쪽).

동독 자민당(LDPD) 그리고 독일 국가민주당(NDPD)도 부분적으로 볼 때 기술자, 자영업자, 농민, 교사 및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일부 지식인들로 구성된 정당이었는데 이는 현재 당원의 신상데이터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비율도 비교적 높다(튀링엔의 경우 30%). 이는 공무원, 일반 사무원, (점점 수가 줄어드는) 자영업자가 전체 당원 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FDP-West)의 구성원과 대조적이다(Falter/Winkler 1996, 49~50쪽; Schiller 1993, 136~138쪽).

1990년 실시된 지방자치구선거, 주의회선거, 연방하원선거 결과는 자민당

---

387\_ Linnemann 1994, 90~91쪽 참조. 125,000명 중 약 500명이 독일포럼당(DFP) 출신이며 약 2,000명이 동독의 자민당(DDR-FDP) 출신이었다.

(FDP)에게 예상 외로 성공적이었다. 특히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와 튀링엔에서의 선거 결과는 두 자리 수를 기록했고 신연방주 중 4개의 주에서는 자민당(FDP)이 주정부를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부정확한 해설이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겐셔-효과(Genscher-Effekt)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은 틀림없다. 그 외에도 예나(Jena)와 같은 동독 남쪽 지역에 자리 잡았던 자영기술자들과 자영업자들 또는 기술-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특별한 한 집단과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 및 출마한 후보자들의 개성 또한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설명해주는 이유이다. 1946/47년 튀링엔과 작센에서 자민당(LDP)의 지지기반 강화 역시 재인식효과를 퍼뜨리면서 기여했을 수도 있다.<sup>388</sup>

이러한 상황에서 4년 후 선거 결과는 특히 자민당(FDP)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1994년 자민당(FDP)의 주의회 선거결과 5%를 넘은 곳이 신연방주 중에는 단 한 주도 없었고 구연방주 중에서도 단 4개의 주(1995년 선거도 포함한다면 6개)였다. 연방하원선거에서도 동독의 경우 평균 3.7%만을 기록했다.<sup>389</sup> 1998년 연방하원선거 결과는 또다시 평균 0.4% 낮아져서 결국 43명

388\_ 1990년 선거결과 및 결과에 대한 해설은 Schiller/Weinbach 1996, 136~138쪽 참조. 1990년 연방하원 선거 때 동독에서 자민당(FDP) 지지자 중 20.4%가 농민이었다. 이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동서 격차의 한 가지 증거이다.

389\_ 상세한 수치는 Schiller/Weinbach 1996, 136쪽 참조. 함부르크(Hamburg)(1993년), 니더작센(Niedersachsen)(1994년), 바덴-비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1994년), 자르란트(Saarland)(1994년), 바이에른(Bayern)(1994년)의 주의회 선거 결과 자유당 후보는 한명도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1995년), 브레멘(Bremen)(1995년), 베를린(Berlin)(1995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Vorländer 1995, 245쪽; Falter/Winkler 1996, 46쪽. 1998년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주의회 선거에는 1994년의 선거 때 보다 참여율이 0.6%

의 연방하원 의원 중 단 5명만이 신연방주 의원이었다.<sup>390</sup> 16개의 연방주의 회 중 5곳에서만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FDP)은 1994/95년 이래 적어도 동독에서는 주의회에서는 (일단은)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겐셔(Genscher)의 사퇴, 여러 정당 내 직책 후임자 결정을 둘러싼 정당지도부 내 갈등, (연방 및 주차원의) 사건, 강령에 의한 당의 축소(‘고소득자의 정당’) 및 경제상황에 대한 실망 등은 동독에서의 심각한 실패의 원인이었다.<sup>391</sup> 특히 독일 동부의 당원 혹은 전직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통합과정 이후 자민당(FDP) 내 각 강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정당갈등이 동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1991년 말 술(Suhl)에서 열렸던 전당대회 때 자민당(FDP) 내 사회정치적 주제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한 동독 대표들의 불만이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부터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92</sup>

---

높아져 4.2%를 기록했다. 1998년 연방하원 선거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튀링엔(Thüringen) 평균은 3.4%로 약 54,233명이 참여했다.

390\_ 선거 관련 수치는 연방정부의 언론 및 정보청(Presse-und Informationsamt)의 게시판 No. 69 (1998년 10월 21일) 864~865쪽 참조. 브람텐부르크(Brandenburg)의 유르겐 튀르크(Jürgen Türk), 작센(Sachsen)의 클라우스 하우프트(Klaus Haupt)와 요아힘 귄터(Joachim Günther),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코르넬리아 비버(Cornerli Pieper), 튀링엔(Thüringen)의 칼하인트 구츠마허 박사(Dr. Karlheinz Guttmacher)는 연방하원에 나가 있는 자민당(FDP) 소속 의원이다. 하우프트(Haupt), 귄터(Günther), 구츠마허(Guttmacher) 중 일부는 장기간 동독 자민당(LDPD) 당원이었고, 하우프트(Haupt)의 경우 1989년 동독 자민당(LDPD)에 입당했다.

391\_ Vorländer 1995, 247~250쪽 참조. 다름 아닌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 원내교섭단체와 주대표간 갈등과 당수였던 브루너(Brunner)가 과거 슈타지(Stasi) 요원이었다는 추측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Vorländer 1996, 130~131쪽 참조. 1994년 동독에서는 과거 자민당(FDP) 지지자들의 49%가 자민당(FDP)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alter/Winkler 1996, 51쪽.

392\_ Vorländer 1992, 17~19쪽 참조. “대부분 서독의 자민당(FDP)의 강령을 그대로

반면 지방자치구차원에서는 자민당(FDP)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일관성과 상대적인 안정감을 유지했다. 비록 1994년 실시된 두 번째 지방자치구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는 1993년) 신연방주 전체에서 자민당(FDP)에 대한 지지도가 1%에서 약 3%까지 낮아졌지만 지지도는 전역에서 5%를 넘겼다.<sup>393</sup> 선거결과를 자세히 보면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튀링엔(Thüringen)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경우 1994년 선거 결과가 예나(Jena)에서 13.5%, 힐데부르크하우젠(Hildeburghausen)에서 13.3%, 술(Suhl)에서 2.8%, 잘(Saalkreis)에서 18.9%, 베른부르크(Bernburg)에서 11.3%, 마그데부르크(Magdeburg)에서 3.9%를 기록했다(Schiller/Weinbach 1996, 142쪽과 144쪽). 지방 사무소 또는 지방 ‘아성’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의 존재 덕분에 자민당(FDP)은 1994년 이래 튀링엔(Thüringen)에서 107명,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 58명의 시장을 배출했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예나(Jena)에서는 (1990년 이래) 광역시장에 배출되기까지 했다.<sup>394</sup>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아닌 접근적인 대답만이 가능하다. 힐데부르크하우젠(Hildeburghausen)

---

넘겨받았다.” Vorländer 1996, 129쪽.

393\_ 1994년 선거의 결과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7.9%에서부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의 5.4%에까지 이른다. (1990년에는 전자가 10.7%, 후자가 6.4%였다.) Schiller/Weinbach 1996, 139쪽 참조.

394\_ (과거 자유민주동맹(BFD) 후보, 현재 자민당(FDP) 소속의) 페터 뢰링거(Peter Röhliger)는 1990년 사민당(SPD), 자민당(FDP), 녹색명부(Grüne Liste)와 신포럼(Neues Forum)의 지지로 광역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기민당(CDU) 후보는 자기 원내 교섭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1994년 뢰링거(Röhliger)가 재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상대부호였던 사민당(SPD)의 후보보다 아주 작은 차이로 겨우 승리했다. Redlingshöfer/Hoffmann-Lange 1998, 703~704쪽.

과 예나(Jena)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공통점보다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힐테부르크하우젠(Hildeburghausen)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실업이 (1997년 기준) 15.7%에 달하고 높은 부채를 안고 있고 생산업이 44.4%를 차지하고 있지만 1995년 이래 부분적으로 큰 적자를 겪고 (건설업: 13%, 식료품산업: 48.6%) 있으며 이를 상쇄할 방법이 없는 곳이다.<sup>395</sup> 반면 대학도시인 예나(Jena)의 경우 실업률이 (1997년 기준) 18.4%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당 매출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이 58.2%를 차지하며, 기기생산 분야는 차이스-예나(Zeiss-Jena)가 예나옵티크(Jenaoptik)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세우는 덕에 668.4%의 성장을 보였다.<sup>396</sup> 당원의 수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예나(Jena)에서 자민당(FDP)의 당원 수가 1992/93년 이래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반면 힐테부르크하우젠(Hildeburghausen)에서는 거의 당원의 2/3를 잃었다.<sup>397</sup> 이 수치 외에 1993년의 참패로 인해 동독 자민당(LDPD)에 대한 연계가 약화되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정당의 강령이나 및 정치적 가치관 그리고 사회구조적 환경이 결정적이기 보다 후보의 개성이나 각 지역에서 후보의 인지도 및 후보의 각 지역의 정치적 참여도가 지방자치구 차원에서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더 결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398</sup>

395\_ 튀링엔(Thüringen) 통계청 1998년 인터넷 자료 참조. <<http://www.thueringen-online.de>>, 기준연도 1999년.

396\_ 동일 자료 참조.

397\_ Schiller/Weinbach 1996, 147쪽. 예나(Jena)에서 자민당(FDP)은 1989년에서 1992년 사이 당원의 2/3를 잃고 현재 450~500명만이 남았다. Möller 1994, 201쪽.

이와 함께 동독에서 자민당(FDP)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동독에서 자민당(FDP)은 지방자치구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하반신 없는 여인’은 아니다(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관계는 정당의 강령이 아닌 사람과 구체적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다.<sup>399</sup> 주차원이든 연방 차원이든 (추상적) 강령과 가치문제가 다뤄지는 즉시 동독 유권자들은 자민당(FDP)과 자민당(FDP)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등을 돌렸다. 자민당(FDP)은 통합과 유권자의 지지 얻기에 실패했고 이러한 사실은 슐(Suhl)의 경우가 입증해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민당(FDP)이 동독에서 처한 상황은 서독에서의 상황과 정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서독에서는 자민당(FDP)이 연방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의 유권자들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개별 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거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다.<sup>400</sup>

398\_ 1994년 예나(Jena)에서 있었던 지역자치구 선거에서 서독인이 단 한명도 선출되지 않았고 오직 동독출신의 후보만이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모든 정당을 통틀어 당선자들은 평균 34년 째 예나(Jena)에 거주하고 있었고 지역적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선자의 1/3만이 과거 정당(무엇보다 CDU-Ost 및 SED)과 연관되어 있었다. Redlingshöfer/Hoffmann-Lange 1998, 711~712쪽. 한편 예나(Jena)의 자민당(FDP) 지역 대표이자 연방하원 의원인 칼하인츠 구트마허(Karlheinz Guttmacher) 박사가 이미 1961년 LDPD에 입당하였다. 짧은 일화로 힐데부르크하우젠(Hildeburghausen)의 헬리겐(Helligen)에 있던 튀링엔(Thüringen)(을 비롯 모든 신 연방주)의 유일한 레닌(Lenin)기념비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헬리겐(Helligen) 시민들이 1990년 10월 3일 이웃하고 있는 바이에른(Bayern)주의 한 지역과 함께 (독일) 떡갈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28일자, 6쪽.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모순적인 입장이 존재했다.

399\_ 비슷한 추측을 바탕으로 한 참조문헌, Schiller/Weinbach 1996, 140쪽.

400\_ Vorländer 1995, 258~261쪽; Lösche/Walter 1996, 168~172쪽. 여기에서 노르

1999년 1월 동독에서 시행된 지방자치구 및 주의회 선거에서 이러한 상황이 부분적으로 그대로 나타났지만 후보의 개인개성과 지방에 알려진 사실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사라졌고 반면 강령을 통한 통합 실패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1999년 6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구 선거에서 자민당(FDP)의 선거결과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와 작센(Sachsen)에서 5%를 (간신히) 넘어 각각 5.6%와 5.2%를 기록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과 튀링엔(Thüringen)은 1994년만해도 5.4%와 6.2%를 기록했었지만 1999년에는 4.1%와 4.3%만을 기록하였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9년 6월 17일자, 6쪽에서 수치 인용). 1998/1999년의 주의회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자민당(FDP)의 자리가 주 차원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의미한 소수당의 지위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주차원에서 자민당(FDP)의 추락은 1998년 9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기록한 1.6%의 지지율이 확인시켜준다. 이어 1999년 9월 5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 1.9%, 1999년 9월 12일 튀링엔(Thüringen)에서 1.1%<sup>401</sup> 그리고 1999년 9월

---

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는 예외이다. 1999년 9월 12일 있었던 지방자치구 선거에서 자유당에서 23개 대도시와 32개 지역에서 지역자치구 대표자가 선출되었지만 그들의 극히 일부만이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울리히 폰 알레만(Ulrich von Alemann)은 자유당의 선거결과가 “결코 큰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결과는 아니다”라고 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4일자, 7쪽 인용.

401\_ 지역자치구 차원의 정치적 ‘아성’(예나(Jena), 힐드부르크하우젠(Hildburghausen))에서도 자민당(FDP)은 주의회 선거 결과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예나의 경우 4%에서 1.8%로).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9월 13일. 자민당-튀링엔(FDP-Thüringen)은 1999년 선거 때 ‘자민당: 새-보호(FDP: Vogel-Schutz)’

19일 작센(Sachsen)에서 1.0%를 기록했다. 자민당(FDP)은 동독에서 지방 자치구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마저 줄어들고 있다. 자민당(FDP)은 주정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녹색당(Grünen)과 시민운동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이하 연합-녹색당)은 1993년 5월 14일에서 16일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개최되었던 통합전당대회에서 정식 연합정당으로 탄생하기까지 (고전적)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독일 통일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서로 상이한 집단과 모임들은 동독과 서독에서 단기 동맹, 지연시키는 요인들, (정신적인) 친부살해, (개인 간의) 불화와 분리 등이 뒤따른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 여행은 공동의 정당이라는 이름의 ‘항구’에 도달하고 1998년 11월 연방정부에 소속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여행이 ‘해피엔드’로 끝났는지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지는 동독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1) (동독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Ost))과 (2) 전독일의 연합-

---

라는 선거포스터를 내걸고 희한한 방식으로 사민당-민사당(SPD-PDS) 정부에게 자신을 연정파트로 내비쳤던 반면 자민당(FDP) 주대표 하인리히 아렌스(Heinrich Arens)는 이러한 의도를 전혀 잘못 이해했다. 그는 선거 직전에 자민당(FDP) 지지자들에게 제2투표 때 기민당(CDU)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당에 해를 입히는 이러한 태도를 근거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불거졌고 자민당(FDP) 주대표 해임이 결정되었지만 아렌스(Arens)는 주전당대회 때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3일자, 6쪽;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9월 13일.

녹색당(Bündnis-Grünen)의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일이 살펴보지 않겠다.<sup>402</sup> 그러나 연합당의 설립 당시 서로에게서 갈라져 나가면서도 공유점이 있는 세 개 혹은 네 개의 갈등 노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갈등노선 문제는 서독을 비롯하여 특히 동독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로 당의 성격을 일부분 규정하기까지 한다. 동독에서 발생한 최초의 갈등 노선은 당을 시민운동으로 본 입장과 정당으로 본 입장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두 번째는 연합90(Bündnis90)과 ‘동독에 있는 녹색당(Grünen in der DDR)’ 사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서독 녹색당(Grünen-West)과 동독 녹색당(DDR-Grünen) 또는 동독 연합90(Bündnis90-Ost)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녹색당의 현실파와 근본주의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말한다.

1991년 9월 20일/21일에 평화와 인권단체(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IMF)), 이젠 민주주의(Demokratie Jetzt(DJ)), 신 포럼(Neues Forum(NF))의 일부가 연합90(Bündnis90)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신 포럼(NF)은 갈라졌고 처음부터 이질적이었던 세 집단은 단 한번도 정치적 공유점이나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세 집단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방법과 가치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에 이르기까지 1989년/90년 이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03</sup> 그 외 모든 참여자들은 기본

402\_Hohlfeld 1993a; Wielgoths/Schulz/Müller-Enbergs 1992; Müller-Enbergs/Schulz/Wielgoths 1992; Wielgoths 1994; Poguntke 1996; Kleinert 1992.

403\_ “정치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 [...] 이해에서 출발된 계산이 아니라 실용적 윤리이며 [...]

적으로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초지역적 정당구조 때문에 표기하려고 하지 않았다.<sup>404</sup> 때문에 1990년 가을 선거 때 신포럼(NF), 이젠 민주주의(DJ), 평화와 인권 단체(IFM) (후에 합쳐 연합90(Bündnis90)), 비중속 여성단체 연합(UFV), '구동독에서의 녹색당(Grünen)'의 정당 명부 결합(Listenverbindung)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고, 1989년 11월 24일 결국 (거의 권위적인) '구동독에서의 녹색당(Grünen)'이 '명확한 의회주의적 야심을 갖고' 설립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정당조직마저 신속하게 구성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sup>405</sup>

이는 '구동독-녹색당(Grünen-DDR)'의 주협회 다섯 개 중 네 개의 협회(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작센(Sachsen), 튀링엔(Thüringen))가 1990년 12월 2일 시행된 연방하원 선거 다음 날 (서독의) 녹색 정당(Grüne-Partei-West)의 연방협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더 분명

---

이론적 바탕을 둔 분석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다” Wielgoths/Schulz/Müller-Enbergs 1992, 33쪽. '이질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동일 참조문헌 24~25쪽 참조; Hohlfeld 1993a, 403쪽. 좌파적 성향의 집단이 내린 평가에 대해서만 합의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개개의 후보에 대해서도 그랬다. Hampele 1992, 309~314쪽.

404\_ 시민운동적인 특성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는 Wielgoths 1992, 37~39쪽 참조. 1990년 5월 지역자치구 선거 때 신포럼(Neues Forum)이 단독으로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약 1,600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동일 참조문헌 19쪽 참조.

405\_ Wiglgoths 1994, 146쪽. 녹색당(Grünen)의 설립은 예고 없이 상부에서 추진되었고 정당 또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위에 대한 모든 내부의 논의를 철저하게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일부 기본 생태-단체들의 거센 거부에 부딪혔다. Hohlfeld 1993a, 398~400쪽.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제외하고는 주차원에서, 1990년 연방하원 선거 때 NF.DJ/NF/Grünen의 정당 명부 결합(Listenverbindung)이 있었다(부분적으로 비중속 여성단체 연합(UFV)도 포함).

해졌다(Kühnel.Sallmon- Metzner 1992, 184~187쪽). 굳이 이 시기를 택한 것은 동독 협회를 서독 측에서 ‘인수’한다는 표현과 관련된 모든 내재적 의미를 방지하겠다는 동서 양측의 의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선택으로 인해 동독-녹색당(Ost-Grünen)의 두 대표는 지지율 5%를 넘기지 못한 서독-녹색당(West-Grünen)을 등에 업고 연방하원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였고, 연방하원에서 연합당(Bündnis)-지지도 5.9%를 획득한 신 포럼(NF)/이젠 민주주의(DJ)/평화와 인권 단체(IFM)/비종속 여성단체 연합(UFV) 출신의 의원들과 나란히 자리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sup>406</sup> (동독) 선거동맹 내부의 기존 긴장감에<sup>407</sup> 동서 녹색당(Grünen-Ost, Grünen-West) 사이의 긴장까지 더해졌다. 녹색-연방협회(Grünen-Bundesverband)에 속한 동독-녹색당(Ost-Grünen)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강령과 존재공간이 서독-녹색당(West-Grünen)으로부터 강하게 분리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조직의 중심의 응집력을 상실하였다.<sup>408</sup>

406\_ 총 8명으로 구성된 연방하원대표단의 구성원은 두 명의 녹색당(Grünen) 소속 (Vera Wollenberger, Klaus Dieter Feige), 두 명의 신 포럼(NF) 소속(Werner Schulz, Ingrid Köppe), 두 명의 이젠 민주주의(DJ) 소속(Konrad Weiß, Wolfgang Ullmann) 그리고 비종속 여성단체 연합(UFV) 한 명(Christina Schenk)과 평화와 인권 단체(IFM) 한 명(Gerd Poppe)이었다. Kleinert 1991, 28쪽.

407\_ 여기에서 말하는 긴장감은 지역적 차이로 인해 두드러졌다. 1990년에 시행되었던 주의회 선거 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의도적으로 녹색당을 제외한) 연합90(Bündnis90)의 강령은 민주주의, 시민권리, 생태학, 무장해제를 주요 문제를 삼았고, 작센(Sachsen)에서는 신 포럼/연합90(Neues Forum/Bündnis90)이 경제적, 생태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지역 발전, 건강 및 사회보장, 유럽의 통합을 쟁점화 하면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주변적으로 다룬 강령을 제시하였다. 신 포럼/연합90(Neues Forum/Bündnis90)은 녹색당(Grünen)과 함께 한 명단을 갖고 성공적으로 입후보 하였다. Müller-Ensberg 1992, 301~309쪽, 359~383쪽.

1991년 9월 정당으로서의 연합90(Bündnis90)이 설립된 이후 녹색당(Grünen)과 특히 연합90(Bündnis90)의 입장에서 경쟁적인 상황을 없애기 위한 구상이 이어졌고 특히 다음 선거와 선거권특별규정의 중단을 염두에 둔 통합당 형성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 이번에도 지도부는 확신이 없었다. 결국 연합90(Bündnis90)의 일부는 생태민주당(ÖDP)과의 협력을 주장했고, 한쪽에서는 수적으로 열세한 연합90(Bündnis90)에게 당원수가 많은 녹색당(Grünen)과의 연합이 제일 좋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또 한 번의 연합에 대해 아예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반면 네 번째 집단은 연합90(Bündnis90)이 우파와 좌파적 성향 모두를 지닌다고 보기도 하였다.<sup>409</sup> 1992년 11월 23일 연합90(Bündnis90)의 지도부 위원과 녹색당(Grünen)의 연방대표 사이에 체결된 연합합의서는 1993년 1월 17일 양 당에서 승인되었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해균형 찾기를 가능케 해주는 기준’을 제공했다(Wielgohs 1994, 165쪽). 그 결과 연합90(Bündnis90)의 대표로 구성된 수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의원이 연방하원에 나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대변인의 자리에도 올랐다. 또한 정지권(停止權)을 이용하여 ‘시민운동 포럼(Forum

408\_ Poguntke 1996, 89쪽. 서독-녹색당(West-Grünen)의 파벌 싸움은 원탁회의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동독-녹색당(Ost-Grünen)이 공동의 정당으로부터 큰 거리감을 비롯하여 개인적 거리감을 갖게끔 하였다. 순수하게 생태학적 일들에 집중하고 순환정책(Rotationsprinzip), 의원직과 공직의 분리, 소수보호를 다루는 자체 동독-기준은 (진실로) 그 분열을 더욱더 심화 시켰다. Hohlfeld 1993, 401~402쪽. 통합 이후 동독-녹색당(Ost-Grünen)의 정당대표와 대표단위원회가 해산되었고, 공동의 결합구조가 사라졌다. 동일 참조문헌 405쪽.

409\_ Hohlfeld 1993b, 840~843쪽. 이제는 안티-안티-정당(Anti-Anti-Partei)이 되어 버린 서독-녹색당(Grünen-West)은 마지막 세 개의 입장이 당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고 거리감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Bürgerbewegung)’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내부의 통합을 달성하고 작은 파트너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기본합의’를 위해 정당강령을 배제했다(Poguntke/Schmitt-Beck 1994, 97~100쪽). 이 기본합의를 토대로 생태학적이고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관심이 전환되었고, (자기 자신의 구조도 포함하는) 구조와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지역 시민운동으로부터 균형 잡힌 (루소(Rousseau)식의) 우대를 받고 있는 정당에 대한 유보적 입장과 함께 투표를 근거로 한 요소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sup>410</sup>

이러한 방향전환을 통해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강제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을 슬쩍 간과해버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설정갈등을 조기에 예약해놓은 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합90(Bündnis90)에게 유리한 강조점 변화’가 달성되었다.<sup>411</sup> 몇몇 영역에서는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연방하원 선거 강령은 다시 강한 서독 녹색의 경향과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적 양극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향을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 그리하여 연방군의 해산과 NATO의 점진적인 해체, 도청 거부, 연방국경수비대와 기동경찰대의 해산도

---

410\_ 기본적으로 “봉쇄 조항(Sperrklausel), 행정부의 비대, 교섭단체의 강제(Fraktionszwang),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 등에 의해 의회에서 민주주의가 불충한 수준으로 실현된다. [...] 우리 (연합90(Bündnis90)과 녹색당(Grünen)은 시민들의 직접적이 영향행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 우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독점적인 정당의 위치를 시민들을 위해 극복함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4~55쪽에 명시된 기본합의.

411\_ Wielgoths 1994, 165쪽. 이는 연합90(Bündnis90)이 연합합의서에 대해 언급한 다양한 논평에서 반복해서 드러났다. Wielgoths/Schulz/Müller-Enbergs 1992, 108~128쪽.

요구되었다(Bündnis90/Die Grünen 1994, 55~59쪽 참조). 동독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대다수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정치적 갈등전략을 거부하고 원탁회의의 정신에 부합하게 정당경계로부터 독립적이고 반대편에 존재하는 실용주의적-합의적 방식을 이용하여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루드거 볼메르(Ludger Volmer)가 제시한 전략 즉, 민사당(PDS)이 좌파 측으로 자신을 개방하여 동독에서 지지자들에게 표를 얻어내는 전략이 강하게 거부되었다(이 두 가지 점과 관련하여서 Hoffmann 1995, 277~278쪽 참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공동 정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녹색당에 의해 조정되는 스펙트럼이 산산조각 났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Hohlfeld 1993a, 405쪽). 강령과 사람의 갈림과 분열 그리고 심지어 독립화로 설명될 수 있는 균열(cleavages)이 옳은 표현일지도 모른다. 이 균열은 연방정치로의 통합을 이제껏 크게 방해해왔던 요인이다.

한편 동-서간 노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지만 이러한 갈등상황은 튀링엔(Thüringen) 주협회 차원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sup>412</sup> 이는 튀링엔

412\_ 1992년 11월 22일 (신 포럼(NF)) 지그프리트 가이슬러(Siegfried Geißler)와 마티아스 뷔흐너(Matthias Büchner)가 (이 둘은 정당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신 포럼(NF)/녹색당(Grünen)/이젠 민주주의(DJ) 연맹에서 배제된 이후, 1993년 6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연합이 달성되고 1994년 고타(Gotha)에서 (후에 물러간) 주대표단의 현실파와 근본주의파 사이에서 민사당(PSD)에 대한 접근과 정당내적 구조(전문화 대 기본에 충실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소위 인민재판이 벌어졌다. 그 결과 합의가 도출되었고 그것이 1996년 10월의 주규정이다. Kiefer 1996, 55~58쪽. 이 정관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주협회 연합 90/녹색당 튀링엔(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은 자기 정체성과 뿌리 및 정치적 경향이 시민운동을 근거로 한다. [...] 연합90/녹색당 튀링엔(Bündnis90/

(Thüringen)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1996년 10월자 (합의)규정에서 모든 ‘강령 관련 그리고 개인 관련 문제’에 있어서 ‘자주적’ 연방협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연방주의 협력을 상호 확대와 연방정치에 튀링엔(Thüringen)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데까지 이어졌다(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8쪽). (갈수록 커지는) 거리감과 정치적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구심을 더 명확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sup>413</sup>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동독에서 여전히 (과거) 서독-녹색당(Grünen-West)의 ‘이데올로기적 틀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다.<sup>414</sup> 한편 자주화는 조직의 분리 즉, 베를린(Berlin)의 정당대표와 대표단위원회의 해체 이후 다른 주협회와의 구조적 연계의 부족도 반영한다.

동독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경우 유권자 모으기와 동원에 명백히 실패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당원 수만 보아도 작센(Sachsen)에서는 1,000명

---

DIE GRÜNEN Thüringen)은 의회주의적이고 의회외적인 효과를 서로 동등하면서도 서로 보충해주는 정치의 요소라고 본다.” Bündnis90/DIE GRÜNEN Thüringen 1996, 58쪽. 이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413\_ 1993/94년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튀링엔(Thüringen) 주협회는 연방협회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것’에 대해 아직 그리고 단지 ‘고려할 뿐’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현실화되었다. Möller 1994, 209쪽.

414\_ Raschke 1993, 131쪽. 라슈케(Raschke)는 이와 관련하여 서독-녹색당(Grünen-West)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느린 공동의 추론적 합의찾기 시도와 ‘건설적 매개’를 이야기 하며(동일 참조문헌 135쪽) 끝으로 근본 민주주의적 개념의 의결도 거론한다(동일 참조문헌 651~653쪽). 건설적 매개와 관련하여서는 Raschke 1995에서 정당화(중간-정당)와 함께 눈에 띄게 진보했다고 보고 있다. 시민운동을 토대로 한 동독의 조직의 내적 ‘확장’의 자율적 관리는 이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중간정당 내 건설적 매개와 대응된다.

선을 넘겼지만, 다른 주협회는 당원수가 이보다 훨씬 적다.<sup>415</sup> 따라서 개별 지역 조직(Kreisverband)의 경우 회원의 수가 더욱 더 작고, 한 회원에게 여러 가지 임무와 기능이 부여된다. 또한 지방노동공동체(Landesarbeitsgemeinschaft), 대학단체(Hochschulgruppe) 혹은 지역 정치 작업단(Arbeitskreis)과 같이 정치의 전초기지에서의 수평적 편성도 서독의 주협회와 달리 매우 힘겹게 전개되거나 아예 전개 되지 못한다.<sup>416</sup> 정당 명부 결합(Listenverbindung) 덕에 1990년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6.6%), 작센(Sachsen, 5.6%),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5.1%), 튀링엔(Thüringen, 6.5%)에서 의회 의석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1994년에는 사민당(SPD)이 소수정부를 구성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5.1%)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그 사이 녹색당-연합(Grünen-Bündnis) 주협회가 된 협회들은 모두 5%를 넘지 못했고 의석을 차지하지도 못했다. 1998년 이후에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3.2%)에서도 결국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sup>417</sup> 반면 구 연방정부에서는 연합-녹색당

415\_ 1990년에서 1995년 말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Poguntke 1996, 110쪽 참조. 동베를린의 경우는 1995년 말 337명을 기록하였다. 1998년 9월 5일 연방협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428명,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555명,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550명, 작센(Sachsen) 1,042명, 튀링엔(Thüringen) 574명. 반면 구 연방주의 총 당원 수는 468,800명이었다. 1999년 1월 <<http://www.gruene.de/durch/struk/mitglied/mitglied98.htm>> 참조.

416\_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DAKT e.V (다른 지방자치구정치 튀링엔)이 1991년 설립되었지만 1995년 초까지 활동하지 않았다. 1995년 초 이후에는 정기적인 회람이 발간되었다. 페트라 켈리 재단(Petra-Kelly-Stiftung), 운테르네멘스 그륀(Unternehmens Grün) 또는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의 예컨대 바이에른(Bayern) 주 청소년증개소 등과 같은 녹색당 성향의 기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

417\_ 수치 관련 참조문헌은 Jann/Muszynski 1997, 193쪽(Brandenburg); Jünger 1997, 332쪽(Mecklenburg-Vorpommern); Patzelt/Amm 1997, 532쪽(Sachsen);

(Bündnis-Grünen)이 연방하원에 진출한 이후 자르란트(Saarland)에서 최초로 주의회 의석을 획득했고 1995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과 쉘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에서 사민당(SPD)과 (2000년 주의회선거 때 재결성된) 연정을 구성하였고, 바덴-뷔르테른베르크(Baden-Württemberg)에서 12.1%라는 영역국가(Flächenstaat)에서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비록 1999년 1월 7일 헤센(Hessen) 선거에서 지지율의 거의 1/3이 떨어져 나가긴 했다.

결국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정책은 동독에서는 주차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당 내적인 이유로는 약한 조직적 체계와 적은 당원 수, 이데올로기적 갈등, 조직상의 가치대립과 결단력 결여, 개인적 반감과 자금부족을 들 수 있다. 외적인 이유로는 강령의 반복, 경제사회적 변혁이라는 주제의 ‘감소’와 부정적 취급을 비롯하여 유권자들의 강한 경제 지향적 성향을 들 수 있다.<sup>418</sup> 분열된 외적 모습, 시민운동가들의 사임 그리고/또는 특수한 프로젝트단체로의 이동(Badelt 1999, 382~385쪽; Blattert/Rink/RU 1995), 구동독의 정체성을 집결시키는

---

Boll/Holtmann 1997, 569쪽(Sachsen-Anhalt); Edinger/Lembcke/Lange 1997, 639쪽(Thüringe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는 연합90(Bündnis90)과 녹색당(Die Grünen)의 명부가 분리되어 있었다.

418\_ 1991~1994년에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에서 ‘실업이라는 주제가 전 기간을 통틀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Gehring/Winkler 1997, 492쪽). 그리고 동독 시민들은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일 참조문헌, 498~500쪽. 동독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지지자의 대부분도 오로지 생태학적 문제 때문에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을 지지한다. Schmitt-Beck/Weins 1997, 338~339쪽, 350쪽.

데 더 성공적이었던 사민당(PDS)과의 경쟁 등도 이유로 꼽힌다.<sup>419</sup>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예를 통해 동독과 서독 간 다양한 정신적 문화적 차이가 **내적으로**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분리의 원인이자 **통합의 장애물**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서독 녹색당(Grünen)은 다른 무엇보다도 후기물질주의적(postmaterial) 가치변화, 생활방식의 다양화, 개별화된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시대 상황, 갈수록 정치능력이 많아진다고 평가되는 녹색당(Grünen)이 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경험 덕에 젊은 고학력자, 종업원, 공무원, 학생,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얻었다.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녹색당(Grünen)이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나 경험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을 선호하고 이를 선거 때 실질적으로 선택에 반영시키는 시민도 거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sup>420</sup>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서독에서 ‘중간정당(Raschke)’과 ‘제3의 권력(Kleinert)’으로 변화하는 과정

419\_ Hoffmann 1995, 298~299쪽에 비슷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420\_ 가치변화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Ingelhardt 1989,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차원적 가치공간 속에서의 가치구분에 대한 요구는 Bürklin/Klein/Ruß 1994 참조. 서독에서 녹색당(Grünen) 지지자들의 특성은 Kleinert 1996, 37쪽 참조; 나이와 서독 녹색당(West-Grünen)에서 ‘백발노인’들의 수적 증가에 대해서는 Klein/Arzheimer 1997 참조; 능력설명에 대해서는 Niedermayer 1997a, 120쪽;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동서독 지지자 간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와 정당에 대한 호감을 좌우하는, 11%의 차이를 타나내는 요소는 Falter/Rattinger 1997, 511쪽 참조; 사민당(SPD) 또는 자민당(FDP)은 3%의 차이만 보인다.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Schmitt-Beck 1994, 58~60쪽 참조; 선거 때 특정 정당에 대한 호감이 작용하지 않는 동독-시민에 대해서는 Jagodzinski/Kühnel 1997b, 460~468쪽 참조.

에 있는 반면<sup>421</sup> 동독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점차 살아져가고 있는 정당으로, 많은 경우 (그저) 사막의 설교자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때문에 동독 주차원의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동독 출신의 의원이 단 여섯 명 뿐인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동독 시민들이 이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여부에 따라 운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1999년 9월 시행된 주의회 선거의 동독 지역 선거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전역에서 참패를 맞보았다. 지지율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튀링엔(Thüringen)에서는 각각 1.9%, 작센(Sachsen)에서는 2.6%까지 떨어졌다. 연방차원에서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예를 들어 위르겐 트리틴(Jürgen Trittin)이 초반에 제안, 무개념한 핵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상, 녹색 주제를 특별하게 다루는 영역의 결핍<sup>422</sup>, 정당 내적 동-서-자율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거의 순수 서독-

421\_ 한편 최근에 들어 (사회-자유주의 연정 시절의) 자민당(FDP)의 위치를 요구하는 녹색당(Grünen) 내 젊은 분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녹색당(Grünen)이 차지하고 있던 선제후의 자리를 생각하면 특히 서독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제3의 권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Falter/Arzheimer 1999.

422\_ 예를 들어 튀링엔(Thüringen)의 선거단위를 살펴보면 지역(예를 들어 키프호이저(Kyffhäuserkreis), 운슈트루트-하이니히(Unstrut-Hainich-Kreis)와 같은 선거단위) 뿐만 아니라 도시(에르푸르트(Erfurth), 고타(Gotha), 바이마르(Weimar))에서도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 3.7%(1994년)에서 1.7%(1999년)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대학도시인 예나(Jena)에서는 지지율이 8.5%(1994년)에서 6.1%(1999년)로 낮아졌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4일자, 6쪽 인용.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포츠담(Potsdam)에서만 예외적으로 녹색당(Grünen)이 5.6%의 지지를 받았을 뿐, 지방에서는 녹색당(Grünen)이 아예 뽑히지 않은 곳(하벨란트(Haveland))도 있었고 아니면 녹색당

정당이라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이미지는<sup>423</sup>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래 동안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동독에서 주정치 차원에서 무의한 존재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만성적인 동독-지지세력 약화 현상이 반대로 연방정당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녹색당 대표 위르겐 수어(Jürgen Suhr)의 이야기 참조, *Süddeutsche Zeitung*, 2001년 8월 20일자, 6쪽).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FDP)과 유사하게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비교적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1994년 지방자치단위, 도시, 지역 차원에서 약 1000개의 의석을 획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때 임명을 받은 사라들의 ‘대부분’이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소속이 아니었다.<sup>424</sup> 여기에서도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된다. 자민당(FDP)에서처럼 이번에도 후보의 개인 특

(Grünen) 후보가 아예 출마하지 않은 곳(우케르마르크(Uckermark))도 있었다. 도심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선거구에서만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선출되었다. 튀링엔(Thüringen) 선거 이후 군다 료스텔(Gunda Röstel)이 한 말은 타당하다. “동독 지역에서는 녹색 화젯거리가 인기가 없다.” 동일 참조문헌 8쪽.

423\_ 작센(Sachsen) 출신의 여성으로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대표후보이며 정당의 양대 지도부대변인 중 하나인 군다 료스텔(Gunda Röstel)은 작센 토박이로 시민들에게 서독-정치가라고 인식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줄에 있는 서독의 조종자’들에 대한 퇴각이 요구되자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20일자, 4쪽 (저자가) 인용.

424\_ Poguntke 1996, 99쪽. 예를 들어 에르푸르트(Erfurt), 바이마르(Weimar), 예나(Jena), 뮐하우젠(Mühlhausen), 바르트부르크(Wartburg) 지역에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출신이 지역의회 또는 시의회에 각기 네 명에서 일곱 명까지 진출해 있다. 반면 술(Suhl)의 경우 잘레-올라(Saarle-Orla) 지역과 카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아이흐스펠트(Eichsfeld)에서는 한명도 진출해 있지 않다.

성과 인지도를 비롯하여 시민운동과의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뿌리 및 연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sup>425</sup>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여유공간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환경)정책에 필요성은 시민들이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을 선택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투표율 증가에 기여 할지도 모른다. 주차원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지방차원에서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정치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426</sup>

신연방주에서 1999년 6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구 선거와 유럽 선거에서 동독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경험해야 했던 참사에 가까운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입증해주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도 보여주었다.<sup>427</sup> 선거 결과가 확인시켜 준 것은 연합-녹색당(Bündnis-

---

425\_ 신취리히신문(*Neue Zürcher Zeitung*)에서 추측하듯이 특히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스승’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민운동가들의 ‘쓰라린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Neue Zürcher Zeitung*, Internationale Ausgabe, 1999년 1월 22일자, 17쪽.

426\_ 1998년 에르푸르트(Erfurth)에서 튀링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Thüringen)과 독일 환경보호연합(BUND)은 (지방)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전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33,40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결과 1999년 3월 24일 시의회에서는 단 한명의 반대 의견으로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식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다.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3월 25일자, 1쪽.

427\_ 1999년 6월 튀링엔(Thüringen)에서 시행된 지방자치구 선거 때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예나(Jena, 7.9%)와 바이마르(Weimar, 8.7%)를 제외하고 모든 시의회 및 지방자치구에 의석을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지지율은 3~4% 줄어들었다. 이는 유럽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2.30%). 그 원인은 시민운동을 통해 생겨난 ‘신 포럼(Neues Forum)’이 분리된 것과 관련이 있다. *Thüringer Allgemeine*, 1999년 6월 15일자.

Grünen)의 연방정책이 주차원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새롭게 발견되는 것은 연방차원에서부터 지방자치구 차원에 이르기까지 인식이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알려진 인사들은 별로 중요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문제가 되고 있던 코소보전쟁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개별 도시에서의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많은 경우 자기편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sup>428</sup> 그중 대표적인 유권자 집단이 시민운동적 성향이 강하고 코소보전쟁 참전을 기독교적-파시즘적 이유와 근본주의적 근거를 배경으로 거부한 집단이다. 이는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이 동독에서 작고, 주정치 차원에서 간과되는 정당으로 취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동독의 주협회가 매우 나쁜 선거결과로 인해 재정적 파탄 직전에 서 있고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29</sup>

428\_ 에르푸르트(Erfurth)에서는 1994년 녹색당(Grünen)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이 도심의 경우 부분적으로 16%를 넘기도 하고(브뤼러포어슈타트(Brühlervorstadt)), 조립식건물 밀집지역(리트(Rieth)에서는 그래도 7.9%를 기록했다. 1999년에는 그 비율이 도심의 경우 7%, 리트(Rieth)의 경우 2.2%였다. *Thüringer Allgemeine*, 1999년 6월 15일자.

429\_ 1999년 지방자치구선거와 주의회선거 때 튀링엔(Thüringen)에서의 저조한 선거 결과 때문에 주사무소의 모든 직원이 해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당 활동(세미나) 및 공공업무를 위한 자금도 거의 남지 않았다.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주대변인이었던 올라프 뮐러(Plaf Möller)는 물러나면서 정당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1999년 11월 말 주대표단회의에서는 수많은 위원회를 축소하고, 공동 대표제 철폐, 임원 수 축소를 결정하지 못했다. *Thüringer Landeszeitung*, 1999년 11월 29일자 (Thema des Tages).

### (5) 민주 사회당

신취리히신문(*Neue Zürcher Zeitung*)은 1999년 1월 16일/17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민사당(PDS)의 전당대회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호네커(Honecker)의 후손들이 사는 동독”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하였다(*Neue Zürcher Zeitung*, 국제판, 1999년 1월 18일, 2쪽). 그 이유로 불명확하고 결단력이 없는 강령 및 결단력부족, 애매한 표현 이면에 숨겨져 있던 대표단과 지도부, 정당 하부 층 사이의 합의 부족 등을 들었다. 불확실한 당의 정치적 방향성, 자기이해 및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 속에서의 불명확한 위치는 통일사회당(SED)의 후신으로 1990년 2월에 설립된 민사당(PDS)의 역사 내내 발견된다.<sup>430</sup>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동독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만큼은 유리했다. 1990년 선거 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이래 민사당(PDS)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졌다. 1994년 주의회 선거 때에는 신연방주의 모든 주의회의 의석을 차지했고 두 자리 수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또한 (간신히) 5%를 넘으면서 1998년 연방하원 선거 결과 네 명의 후보가 의원으로 뽑혔고 36명으로 구성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sup>431</sup> 1998년 이래

430\_ Brie 1995 참조; Hüning/Neugebauer 1996, 74~78쪽; Neugebauer/Stöss 1996, 42~117쪽; Bortfeldt 1992, 160~188쪽.

431\_ 1994년 주의회 선거 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22.7%,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22.6%,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18.9%, 작센(Sachsen) 16.6%, 튀링엔(Thüringen) 16.9%, 동베를린(Berlin-Ost) 36.3%, Hüning/Neugebauer 1996, 79쪽에서 수치 인용. 1990년 주의회 선거 결과는 평균 지지율이 약 7% 낮았다. 1998년 연방하원 선거 결과: 베를린(Berlin) 13.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23.6%,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20.3%,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20.7%, 튀링엔(Thüringen) 21.2%, 작센(Sachsen) 20.0%. Bulletin No. 69/1998, 864~965쪽.

민사당(PDS)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 사민당(SDP)과 함께 연정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는 비록 정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정권을 구성하는 사민당(SDP)은 소수지지 정부이다.<sup>432</sup> 다시 말해 민사당(PDS)은 동독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세 번째로 강한 당이 되었고 다른 정당에게 위협적이고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민사당(PDS)과 민사당(PDS)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설명되듯이) 특수한 방식으로 동-서-격차를 드러내며 동독의 다른 정당들 사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민사당(PDS)을 순수한 동독 정당으로 정의하는 것은 별로 문제 될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당(PDS)을 동독의 환경(Milieu)정당이나 저항정당(Raschke 1994, 1460쪽; Niedermayer 1996a, 182쪽), 혹은 ‘동독의 정부정당’(Winter 1996, 414쪽)이나 경우에 따라서 동독의 국민정당(Brie 1994, 937쪽)이라 부르는 것이 옳은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동독에서 당원수가 가장 많은 민사당(PDS)은 당원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1994년 동독에서는 123,751명의 당원(1996년에는 약 104,000명)을 확보했지만, 1994년 서독에서는 당원 수가 1,971명뿐이었다(Hüning/Neugebauer 1996, 72쪽; Glaeßner 1999, 594쪽). 민사당(PDS)은 그 사이 매우 탄탄해진 재정 상태를 자랑하며, 정당 당원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및 많은 지역단체와

432\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민사당(PDS)이 1998년 9월 27일 제2투표에서 24.4% 지지율과 20개의 의석을 얻었고 1998년 4월 26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제1투표에서 23.3%, 제2투표에서 16.6%의 지지율과 25개의 의석을 획득했다.

상이한 협회들과의 교류를 당의 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sup>433</sup>

민사당(PDS)은 자신을 동독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동독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sup>434</sup>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독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지, 또 어떤 이해를 대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며, 근본주의적 진영과 화용론적 힘의 정치를 주장하는 진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트첼/이메(Dietzel/Ihme)는 민사당(PDS)이 “자본주의적 사회에 저항하려 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저항이 곧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수용한다”는 말이 곧 ‘현재’ 민사당(PDS)의 분열을 ‘묘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sup>435</sup> 독일 연방공화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통일사회당(SED)의 후신으로 등장한 민사당(PDS)은 ‘민주사회주의’라는 이상을 어떻게 달성하고 실현할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강령 차원에서는 정당과 정당 엘리트 내에서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적 실현방법으로 네 개의 상이한 입장이 존재한다. 첫 번째 입장은 현대 사회주

---

433\_ 예를 들어 ‘시민권과 인간존엄성 보호를 위한 협회(Gesellschaft zum Schutz von Bürgerrecht und Menschenwürde)’는 민사당(PDS)의 산하기관에 속한다. 로메아우/랑(Moreau/Lang (1996, 55쪽))은 민사당(PDS) 관련 단체가 약 100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국민연대(Volkssolidarität)’도 그 중 하나이다.

434\_ 민사당: 연방하원에서 동독의 이해대변자 (PDS: Ostdeutsche Interessenvertretung im Bundestag), 1쪽.

435\_ Dietzel/Ihme 1995, 109쪽에서 민사당(PDS)-강령 인용.

의를 기준으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절과 구동독의 말기에 발달한 현대적 사회주의는 무엇보다 앙드레 브리(André Brie)와 같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주장했다. 현대적 사회주의는 통일사회당(SED)의 국가사회주의와 구동독의 체제를 전현대적 또는 부분적으로 반현대적이라고 공격했고 근본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및 시민들의 공동체 결성이 확대 되는 것이 시민국가를 후퇴하게 만들고, 결국 자유롭고 계급이 없는 사회라는 사회주의의 옛 목표는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Land/Possekel 1995, 114~124쪽). **두 번째** 입장은 사회적 또는 좌파 사회주의적 실용주의로 묘사될 수 있고, 좌파적인 케인스(Keynes) 학설에 입각한 경제정책 하에서 의회주의적 개혁 및 체계 내적인 변화를 내세운다(Brie 1995, 29쪽).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는 (전직) 당대표였던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가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사라 바겐크네흐트(Sahra Wagenknecht)를 대표로 공산주의적 기본형을 바탕으로 '좌파적' 국가사회주의적 방향을 추구하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볼 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의 좌파-우파 도식을 흐트러뜨린다. 이 입장은 비록 부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여기는 구소련(USSR)과 구동독(DDR)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때 시장경제는 강하게 거부되고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역시 사회주의적 사회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뒤로 물러 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입장은 민사당(PDS)에서 많은 지지자를 얻었지만 그들도 이 입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Neugebauer/Stöss 1996, 60~61쪽; Hüning/Neugebauer 1006, 75쪽). 1999년 1월 베를린(Berlin) 전당대회에서 사라 바겐크네흐트(Sahra Wagenknecht)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베를린 장

벽 건설이 곧 긴장완화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미하엘 벤야민(Michael Benjamin)은 공산주의적 입장의 대변인으로서 인원수를 늘린 정당지도부로 뽑혔다. 프랑크푸르(Frankfurt)의 음악-스파이이자 과거 사회민주주의자였고 전직 비공식 국가안전기획부(MfS) 소속이었던 디터 뎀(Dieter Dehm) 역시 공산주의적 입장의 대변인으로 민사당(PDS) 지도부의 의지에 반대하는 표결을 통해 정당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8일자, 5쪽, 9쪽). **네 번째** 입장은 청년동지 연구회(Arbeitsgemeinschaft Junge GenossInnen)와 깊은 관련이 있고 갈수록 많은 지지를 얻었다. 연구회는 극단-대안적인 사회주의 개념을 대변하며 반시장경제적, 반의회주의적이고 민사당(PDS)이 근본주의적 야당의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민사당(PDS) 내에서 이러한 입장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하엘 브리(Michael Brie)는 “민사당(PDS)의 다원주의는 [...] 다음과 같은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발전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일관성과 행위능력이 위태로워지는 지점까지 발전했고, 정당의 엘리트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한다(Brie 1995, 11쪽; Neugebauer/Stöss 1996, 144~146쪽). 반면 수쿠트/슈타리츠(Suckut/Staritz)는 “지금의 다양성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 요구되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달성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고(Suckut/Staritz 1994, 188쪽; Koch 1995b), 모로/랑(Moreau/Lang)은 ‘(연방공화국) 체제의 내부로부터의 붕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단지 방법과 전략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Moreau/Lang 1996, 61쪽). 모든 네 개의 입장이 개인의 기본권리가 강력한 국가개념의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공동의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사당(PDS)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기본법의 토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Hüning/Neugebauer 1996, 77쪽). 그리고 정당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노선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협약을 제안하고 의회주의적 체제와 분명한 거리를 둔 좌파적 위치를 요구한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가 1994년에 발표한 ‘잉골슈타트 선언문(Ingolstädter Manifest)’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작성된, 계급투쟁과 구동독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의 관념성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히려 혁명적인 성격의 ‘민사당의 미래를 위한 10개의 명제(Zehn Thesen zum weiteren Weg der PDS)’는 모두 정당의 하층뿐 아니라 정당 엘리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Neugebauer/Stöss 1996, 94~100쪽). 민사당(PDS)은 주치원에서조차 그렇고 정당 내적으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다. 민사당(PDS)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해나갈지는 다양한 정당 내부의 결정적 요소들과 (극단적인) 환경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가 당원 구조(1994)이다. 민사당(PDS) 당원의 약 97%가 과거 통일사회당(SED) 당원이었다(Wittig 1995, 65쪽). 그리고 대다수의 당원 즉, 64%가 연금수혜자이고 그 외 18%가 공무원 및 종업원, 6%가 자영업자이며 (노동 및 농업국가의 후신정당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은) 1990년 이래 집단적으로 민사당(PDS)을 떠난 단 1%만이 노동자였다.<sup>436</sup>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노동자 수가 오히려 2% 높았다는 것은 민

436\_ Gabriel/Niedermayer 1997, 291쪽. 1990년에만 해도 민사당(PDS)의 25%가 노동자였다. Wittich 1995, 62쪽. 한편 경제적 변화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이 조기 은퇴를 했는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사당(PDS) 당원구조 다른 당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며 나이와 관련하여서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당원의 39%가 65세 이상, 42%가 45세에서 64세 사이, 19%가 25세에서 44세 사이였고 24세 이하 당원은 아예 없었다.<sup>437</sup> 민사당(PDS)은 이러한 연령층의 편중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원의 30%가 구동독의 제3계급이었다.<sup>438</sup> 당원의 40%정도가 보통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다원의 50%는 소득이 2,500에서 5,000마르크(DM) 이었고, 이는 다른 정당의 경우보다 높은 수치로 심지어 고소득자들의 정당이라 불리는 자민당(FDP)보다도 높았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2,500마르크(DM) 소득자의 비율도 45%로 매우 높았다. 여성비율은 48%로 모든 정당을 통틀어 큰 차이로 가장 높았다.

앞서 소개한 당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둔 민사당(PDS)은 사회적 하락 또는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정치 및 경제체제 반대하기 위해 모여든 소위 변혁 시대의 낙오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반대이다. 민사당(PDS) 당원들은 많은 경우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통일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민사당(PDS) 당원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매우 높고 젊은 무리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고소득자와 경제적으로 약한 당원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

437\_ Gabriel/Niedermayer 1997, 294쪽.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는 당원의 71.4%가 61세 이상이었고 1.4%만이 30세 미만 이었다. Boll/Crow/ Hofmann/Holtmann 1999, 37쪽.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 있는 로스토크(Rostock)의 경우 민사당(PDS) 당원의 평균연령이 61세이고, 설문응답자의 57%가 '연금수혜자'라고 답했다. Probst 1997, 220년.

438\_ Wittich 1995, 63쪽. 정치경제계 인사가 8.5%, 상임 지도부 9.8%, 군소속 10.9%.

활동하는 당원과 결정권을 가진 당원에 국한해서 보면 당원의 사회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적극적인 당원들은 젊은 층의 사람들이며 결정권이 부여되는 자리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앉아 있다.<sup>439</sup>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비티히(Wittich)가 그랬던 것처럼 정당 내부 지도층인사들의 교체를 주장해야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사회당(SED)과 당원하층부와 큰 차이를 벌리는 변화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민사당(PDS)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일반적으로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동기와 목표설정을 조사하고 일종의 대조작업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찾아내게 된다. 이를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민사당(PDS) 지지자들의 구조와 사회적 데이터를 살펴보겠다.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의 42%가 25세에서 44세 사이였는데 이는 민사당(PDS) 당원 중 같은 나이대의 당원비율과 비교할 때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35%는 45세에서 64세 사이, 15%는 65세 이상 그리고 8%는 18세에서 24세 사이였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연령대는 실질 민사당(PDS) 당원 중에 존재하지 않는 나이 대이며, 이 연령의 유권자에 국한해서 볼 때 사민당(SPD) 또는 기민/기사당(CDU/CSU)보다 민사당(PDS)이 약간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사당(PDS) 지지자들의 교육수준은 당원의 교육수준과 비슷하여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소득수준은 당원과 차이가 있다. 소득을 2,500~5,000마르크(DM), 5,000~7,500마르크(DM), 7,500마르크(DM) 이상의 세 부류로

439\_ 지도부 엘리트 중 20% 이상이 자영업자로 다른 정당에 비해 그 비율이 높다. Wittig 1995, 84쪽.

나뉘 볼 때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기존 당원 보다 세 부류 모두에서 약간 높은 비율(4%~2%)을 기록했고 2,500마르크(DM) 이하 소득자는 36%로 약 9% 낮게 나타났다(모든 수치는 Gabriel/Niedermayer 1997, 293~294쪽 참조).

1994년 연방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 민사당(PDS)을 선택한 가장 큰 집단은 35%로 공무원이었고, 26%로 종업원, 서독 자민당(FDP-Wet)보다 조금 높은 24%로 실업자, 16%로 자영업자의 집단이 그 뒤를 이었고 노동자 비율은 단 14.7%뿐이었다.<sup>440</sup> 민사당(PDS)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70%가 장기적인 민사당(PDS) 지지자들이라는 사실과 이 수치를 이용하면 민사당(PDS)이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부유한 전직 통일사회당(SED) 엘리트와 지도층인사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선호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별 인기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물론 가장 수가 많은 25세에서 44세 사이의 나이 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구동독 시절 통일사회당(SED) 엘리트와 지도층인사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율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수의 비특권층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당(PDS)은 실업률이 높은 도심지역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비특권층을 무조건 실업자 집단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동일 참조문헌, 318쪽). 데이터가 임의적이고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의 연방하원 선거 결과 ‘민사당(PDS)

---

440\_ Neugebauer/Stöss 1996, 228쪽과 230쪽의 수치 인용. 자민당(FDP)은 서독에서 자영업자의 15.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표를 얻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동일 참조 문헌, 326쪽).

최근에는 유권자들이 민사당(PDS)을 선택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소개된다.<sup>441</sup> 이러한 요인들이 재고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연구자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가 최근 하나의 가설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 가설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다른 가설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 역시 특수한 결론을 도출한다.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설이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동기를 이상적으로 분석한다. 그 중 어느 하나도 단독요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요인에 무게 중심을 싣는다. **첫 번째** 가설은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들이 독일 통일의 실패자들이라는 가설로 널리 퍼졌었다(혹은 과거에 그랬다). 이 가설은 다시 두 개의 하부가설로 분류된다. 하나는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실패했다는 **주관적** 인식이 민사당(PDS)을 선택한 이유라는 가설(Schultze 1995, 344쪽)과 **객관적** 결핍이 그 이유라고 하는 가설이다(예를 들어 Gerner 1994, 247쪽; Suckut/Staritz 1994, 185쪽). **두 번째** 가설 역시 두 개의 하부가설로 나뉜다. 하나는 구동독의 기능엘리트들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 지위, 사회적 위신 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상실했기 때문에 민사당(PDS)

441\_ Moreau 1994; Schultze 1995; Neugebauer/Stöss 1996, 242~297쪽; Arzheimer/Klein 1997; Falter.Klein 1995; Wittich 1995; Klein/Caballero 1996; Deinert 1998.

을 선택했다고 본다(Brie 1995, 24쪽; Neugebauer/Stöss 1996, 167쪽, 198쪽). 반면 다른 하류가설은 통일 이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제적으로 그리고 출세전략상) 실패한 엘리트들이 민사당(PDS)에게 표를 던진다고 본다(Bortfeldt 1992, 251쪽). 세 번째 가설은 서독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와 향수(노스탈지아) 및 이데올로기의 ‘혼합’을 토대로 한다(Falter/Klein 1995, 341쪽). 네 번째 가설은 주로 (그리고 종종 약간 거칠게)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이야기한다(Moreau/ Lang 1996, 55~56쪽; Moreau 1996).

최근의 실제 자료를 통해 이 가설들을 검토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첫 번째 가설과 그 하류가설들은 모두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sup>442</sup> 두 번째 가설 너무 협소하다는 결론이다. 이 가설은 민사당(PDS)을 선택한 전체 유권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며, 선택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위, 권력, 경제적 능력의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로 제시되는 요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좌측 입장에 부합해야 한다(Klein/Caballero 1996, 245쪽). 세 번째 가설은 너무 일반적이다. 비록 불만과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연방헌법재판소, 일반 재판소와 경찰이 아닌 정당, 연방정부, 연방하원을 향한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사당(PDS)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전체 선거참가자들과 구분되지 **않는다**(Deinert 1998, 431쪽). 전반적인 향수 역시 너무 일반화된 것으로, 이러한 요인은

---

442\_ Klein/Caballero 1996, 243쪽; Deinert 1998, 437쪽. 민사당(PDS)은 1992년 지방자치구 선거 때 동베를린에서 고학력자들과 고소득자들의 3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다. Koch 1995a, 83쪽.

‘다변수의 모델 속에서 사라져버린다’(Klein/Caballero 1996, 246쪽). 반면 네 번째 가설은 한편으로 점점 더 타당성이 입증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다이너트(Deinert) 뿐 아니라 클라인/카발레로(Klein/Caballero) 역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는다.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선택을 결정한다는 가설은 극단적인 선거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된다.”<sup>443</sup>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란 폐쇄적이거나 말도 하기 싫은 ‘공산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 시각<sup>444</sup>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서로 혼합되지 않는 요소들의 불명확한 집합체를 의미한다(Deinert 1998, 437~438쪽; Neugebauer/Stöss 1996, 250~252쪽). 이는 다른 요인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혼합체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이 민사당(PDS)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나 민사당(PDS) 당원들 모두에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뜻이다.<sup>445</sup>

이러한 사실은 민사당(PDS) 당원과 지지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결합시킬 때 특수한 결론을 도출해낸다. **첫 번째**로 소위 말하는 사회화가설

443\_ Deinert 1998, 439쪽. “**결론:** 민사당(PDS)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민사당(PDS)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데올로기적 요소 때문이다.” Klein/Caballero 1996, 246쪽. 야고드친스키/큐넬(Agodzinski/Kühnel (1997a, 230쪽))도 선거결과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반영할 때 더욱 해석하기 용이해진다고” 보았다.

444\_ Moreau/Lang 1996, 56쪽.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두려움에서 탄생한 귀신을 벽면에 그리고 있다. 비판적 입장은 Neugebauer/Stöss 1996, 197~198쪽 참조.

445\_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로스톡(Rostock)의 민사당(PDS)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응답자의 ‘95%’가 “사회주의가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이 더 많았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90%”는 동독이 “독재적인 사회(복지)국가로 분류”된다고 하였고 55%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을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Probst 1997, 225~227쪽.

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가치관은 장기간에 걸쳐 저장된 해석 모형으로, 이 모형이 갖는 사회화 역할보다 오래 유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이 모형은 (다음에 소개되는 반대 실험에서 입증되듯이) 강한 동-서 바이어스 때문에 강화되었다. 즉 1990년 이후 민사당(PDS)에 남아 있었던 전직 통일사회당(SED) 당원들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두 **각인된** 이데올로기적 동-서-분열 개념을 갖고 있었다. 민사당(PDS)은 적지 않은 부분 ‘동-서 격차’ 덕에 ‘유지되고’ 강화된다(Neugebauer/Stöss 1996, 281쪽). 여기에 새로운 상황과 대치되는 구조-문화 연결이 뒤따라 작용한다. 이는 민사당(PDS)이 **앞으로도 계속** 서독으로의 확장 시도에서 실패할 것임을 의미한다. 1999년 6월 13일 유럽 선거에서 명백히 입증된 사실이다.<sup>446</sup> **세 번째**는 동-서 대치가 동독의 다른 정당과의 관계도 규정한다. 다른 정당이 이 분열선을 역사적 의미 없이 강조할수록 의회 차원에서 민사

446\_ 전국적으로 민사당(PDS)은 의석의 5.8%를 차지했고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 의회에서는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를 비롯하여 의원 6명을 배출하였다. 신연방주에서의 결과를 보면 민사당(PDS)은 1994년 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작센(Sachsen)은 5%에서 21%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는 2%에서 24.3%, 튀링엔(Thüringen)은 5%에서 20.6%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는 3%에서 25.8%로 지지율이 증가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은 3%가 줄어들어 24.3%의 지지율을 달성했다. 그러나 구연방주의 민사당(PDS) 지지율은 평균 0.7% 증가하였고 최저 기록은 7%(바이에른), 최고 기록은 2.6%(브레멘)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발췌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6월 15일자, 6쪽. 베를린(Berlin)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미시정치적으로 확인된다. 구동베를린에서 지지율은 40.9%, 구서베를린에서는 3.5%였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4년 6월 15일자, 4쪽). 민사당(PDS)의 선거결과를 볼 때 “신연방주와 구 연방주의 정치문화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 만하임선거연구소(Mannheimer Forschungsgruppe Wahlen)의 표현이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6월 15일자, 5쪽.

당(PDS)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다.<sup>447</sup> 그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의 연정 및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의 용인이다. 두 경우 다 사민당(SPD)이 연방-사민당(Bundes-SPD)에 대한 독립성과 동독 문제를 강조하고 내세웠다.<sup>448</sup> 이는 **넷째로**, 그리고 반대로 동-서 격차의 강조나 부각으로 민사당(PDS)과 같은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을 자기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강령차원의 ‘포용하기 또는 접근하기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원래 그런 입장을 가진 당을 선택하기를 선호한다). **다섯째로**는 (교육차원의 교정을 통한) 주관적인 상실감의 계몽이나 (객관적인) 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갖기가 이런 상황을 바꾸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449</sup> **여섯째로** 사회적인 인정의 문제도 오히려 이차적이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의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을 (거부감이나) 존중하는 것은

447\_ 때문에 새로운 민사당(PDS) 원내 교섭단체장은 매우 의도적으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주의회에서 사민당-민사당(SPD-PDS) 연정을 ‘동독의 소산’이라고 표현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28일자, 6쪽.

448\_ 통일사회당(SED)의 역사에 대한 민사당(PDS)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잘못되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때 역사도 중요한 요소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서는 사민당(SPD)과 민사당(PDS) 연정이 ‘화해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주장하였고, 이는 역사적 차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즉, 역사적 관련성 없이 사민당(SPD)과 민사당(PDS)의 정치적 접근이 가능했다(*Neue Zürcher Zeitung*, 1999년 2월 4일자, 6쪽). 공공 서비스 종사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가우크-관청(Gauck-Behörde)의 정기적 감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철폐되었다(*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5일자, 8쪽). 이러한 역사 퇴색전략은 기민당(CDU)의 새로운 ‘선거승리 2002’ 강령에서도 드러난다.

449\_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고 아직도 중요한 결과이며, 그 결과란 최초의 유권자-가설의 수용으로부터 발생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권할만하고 (대부분) 시행되지만 정치적 가치관 변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곱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동독에 강한 불분명한 사회주의 정당의 형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여덟째**는 이데올로기적 우위 이면에 민사당(PDS)을 위한 폭발적인 힘이 존재한다. 개별 전당대회에서 보여지듯 정당의 하층은 정당 엘리트들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불분명하고 분열되어 있다.<sup>450</sup> 당의 하층과 유권자들의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선호와 지지를 통해 나뉘고, 유지되고, 용인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히려 혁명적인 방향이나 사회주의적 근본주의야당 쪽으로의 접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베를린에 있는 민사당(PDS) 본부건물 앞에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Luxemburg) 기념 동상을 둘러싼 싸움은 이를 상징적으로, 불명예스럽고 불쾌하기까지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sup>451</sup> 이로써 민사당(PDS)의 정체성과 정당 **내부**의 통합

450\_ “당원들의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정당 강령을 바탕으로 한 논쟁과 함께 민사당(PDS)의 내부이질화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당 내부의 이질화는 서로 일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실지로 일치할 수 없는 정당에 상이한 견해와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기본신념을 허용하였다.” Neugebauer/Stöss 1996, 154쪽.

451\_ 이 동상은 1999년 1월 9일 칼-리브크네흐트-하우스(Karl-Liebkecht-Haus) 앞에 세워졌고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다음 아닌 민사당(PDS) 당원 몇몇이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들은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시각으로 볼 때 전직 동독-문화부장관이자 은퇴했다가 다시 정치계에 뛰어 들어 현재 튀링엔(Thüringen) 주의회에 속한 민사당(PDS) 의원 클라우스 호프케(Klaus Höpke)처럼 사회주의자의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호프케(Höpke)가 1965년 12월 5일 신독일(Neues Deutschland) 최초의 문화장관으로 볼프 비어만(Wlf Biermann) 추방에 나섰다 사실을 놓고 볼 때 지나치고 약의가 있는 표현이다. “비어만(Biermann)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Wittkowski 1996, 39쪽 인용). 호프케(Höpke)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분열과 지지자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아홉째**로는 이 과정이 어떤 경우에도 의회차원 혹은 정부차원의 협력전략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갈지, 이것이 민사당(PDS)의 매력상실, 과격한 진영으로의 분열, 커져가는 양극화 현상이나 국가우선주의적 정치스타일의 강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고 과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결과를 원하는지도 전략상의 문제이다.<sup>452</sup> 그러나 이러한 여

---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자유를 자체를 몰수해 버렸다. 민사당(PDS) 하부에서는 대부분이 호프케(Höpke)의 태도를 반겼다. 호프케(Höpke)가 동독의 후견인 국가개념을 (파괴적으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민사당(PDS)이 갖고 있던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당 지도부의 대변인 한노 하르니쉬(Hanno Harnisch)는 당황했고 ‘반민주주의적’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상 철거를 촉구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정당의 엘리트층과 하부층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및 불미스러운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거울 표면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2월 3일자, 10쪽.

452\_ 슈베린(Schwerin)에서 사민당-민사당(SPD-PDS) 연정의 경우 민사당(PDS) 측에서 여러 스캔들이 터졌고 연정결성 때문에 주의회 부대표였던 가브리엘레 슐츠(Gabriele Schultz)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장이었던 카테리나 무트(Caterina Muth)가 물러났다. 이러한 스캔들 때문에 민사당(PDS) 당수 헬무트 홀터(Helmut Holter)가 고백하듯 “원내 교섭단체와 정당이 손해를 보았다”(Der Spiegel 3/1999, 29쪽). 결국 당이 갖고 있던 매력과 힘이 사라졌다. 그러나 로타르 스포츠(Lothar Spöth)의 예견은 조금 선급했던 것 같다. “민사당(PDS)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순간 사라져버릴 것이다”(Der Spiegel 2/1999, 36쪽).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사당(PDS)이 내적으로 전적 실패만 맛본 것은 아니었다.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1999년 전당대회 때 헬무트 홀터(Helmut Holter)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자기부상열차(Trans-Rapid) 문제에 개입하고 이 열차의 도입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다. 사라 바겐크네흐트(Sahra Wagenknecht)는 슈베린(Schwerin)에서 민사당(PDS)이 정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당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1월 18일자, 5쪽.

러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당(PDS)이 내적으로 비록 분열되고 이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좌파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당원들에게 이데올로기적 루비콘 강(Rubicon)을 넘어 민주주의적, 다원주의적 연방정부의 정권체제를 연계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비록 내적인 통합이나 외적인 통합을 거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sup>453</sup> 통합이론적 시각으로 볼 때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고 동독의 구조적 문제와 반대 잠재성을 고려 할 때 결국 전체 정치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민사당(PDS)은 모든 매도와는 반대로 ‘연방공화국의 정치체제를 위해 요구되는 유용한 요소이다’(Neugebauer/Stöss 1996, 302쪽).

민사당(PDS)과 민사당(PDS)의 지지자들을 유형화하여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의 개념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동독 지역정당’이라는 표현은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이고, ‘환경 또는 저항정당’이란 표현은 대다수 당원들의 출신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현재 당원구조에 나타나는 차이와 변화를 간과한 것이며, 전체 유권자들과 민사당(PDS) 지지 유권자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렇다고 민사당(PDS)이 ‘동독의 시민정당’이지는 않다. 민사당(PDS)은 강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갖고 동-서 격차 위에서 발생한, 정신문화적이고 계승되는 가치관의 통합을 위한 도구를 갖는 동독 틀정당과 정면정당으로서의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

1999년 가을 주의회 선거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입증되었다. 그 중

---

453\_ 토마스 코흐(Thomas Koch)가 접속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실용주의를 관찰할 때가 되어서야 ‘민사당(PDS)이 내적 통합을 위한 정당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챘던 것이다. Koch 1995b, 195쪽.

에서 민사당(PDS)의 내적 구조와 우선적인 관련이 있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결론을 (아마도)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튀링엔(Thüringen, 1999년 9월 12일)과 작센(Sachsen, 1999년 9월 19일)에서 있었던 선거 결과 민사당(PDS)은 처음으로 기민당(CDU)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표를 많이 얻은 정당이 되었고, 특히 작센(Sachsen)의 경우 사민당(SPD)과의 표차가 매우 컸다.<sup>454</sup> 민사당(PDS)은 전체 선거 참여율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표는 줄었지만 사민당(SPD)보다 유권자를 획득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데올로기적) 정당에 대한 선호 및 문화적-전정치적 공간에서의 뿌리내리는 거의 고정되었고 과거 구동독에서의 이력 존중 문제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띠는 (동독을 기반으로 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의결핍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민당(SPD)로부터 차용한 ‘사회적 정의’라는 모토는 임금(및 권한에 대한 질투)의 격차와 관련성이 크고, ‘할머니의 연금에서 손 떼자’라는 선거 슬로건을 통해 동독의 연금수혜자들이 통일의 덕을 가장 많이 보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바로잡기가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예컨대 공무원/종업원) 개인의 경제적 상황 역시 민사당(PDS)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동시에 사민당(SPD)의 강령을 바탕으로 한 꺼안기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민당(SPD)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주 차원의 동독 유권자들에게는 정부정당은 물론 야당정당으로 뽑고 싶지 않은

454\_ 튀링엔(Thüringen): 민사당(PDS) 21.4% (사민당(SPD) 18.5%). 작센: 민사당(Sachsen PDS)22.4% (사민당(SPD) 10.8%).

정당이다. 이 (전자의) 역할은 민사당(PDS)이 담당한다. 때문에 민사당(PDS)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다양한 입장이 적어도 각 정당의 내부에서 영향을 미친다. 사민당(SPD)이 튀링엔(Thüringen)에서처럼 제한적으로 접근할지 혹은 작센(Sachsen)에서처럼 단호히 거부하게 될지는 민사당(PDS) 지지자들에게 무의미하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이것은 민사당(PDS) 내부의 분열선과 관련이 있는데,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가 튀링엔(Thüringen) 선거 이후 주차원에서 기민당(CDU)과의 연정을 장기간 더 이상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455</sup> 그가 고령층과 젊은 층에게 이 공산주의 입장의 혁명적 민사당(PDS)-전략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sup>456</sup>

2000년 4월 7일에서 9일 개최되었던 민사당(PDS)의 뮌스터(Münster) 전당대회가 분명히 보여주었던 이 전략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는 그해 말 당수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고,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분명 ‘더 이상 내적 분쟁으로만 규정되는 분열된 그림’<sup>457</sup> 때문만은 아니고 무엇보다 정당 내부에 공동의 갈등

---

455\_ “기민당(CDU)은 계속해서 민사당(PDS)의 적수였다. 그러나 적녹 연정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볼 때 ‘기민당(CDU)이 사민당(SPD)보다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9월 14일자, 8쪽.

456\_ 내부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켰던 장벽 설치에 대한 가비 짐머(Gabi Zimmer)의 설명을 제외하더라도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가 베를린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사실은 의회 개혁을 위한 기틀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2001년 여름에 시행된 논의는 여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해결이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장 명확한 징후는 2000년 3월 민사당(PDS) 강령위원회의 세 위원이 작성한 회람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엔스-우베 호이어(Jens-Uwe Heuer), 미하엘 벤야민(Michael Benjamin), 빈프리트 볼프(Winfrid Wolf) 세 사람이 그들의 강한 사회주의적 성향의 강령 제한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자 회람문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이 회람문에서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가 사민당(SPD)에게 ‘아양 떨기’를 하고 ‘전쟁할 준비를 갖췄다’고 비난할 뿐 아니라, 이 당수를 신임할 수 없다고 밝힌 사민당(SPD) 당원들의 서명까지 첨부하였다.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는 이런 행위가 ‘밀고’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런 것이 싸움 아닌가.”<sup>458</sup> 결론적으로 민사당(PDS) 내부의 일부가 공동의 정치적 언어를 갖지 못하고, 격차를 대화로 통합하고자 하는 가능성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라. 동독과 서독의 유권자

이미 몇몇 부분에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적인 생각과 거리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리감을 갖는 이유와 그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의 강령에 따른 내

457\_ 서독출신의 민사당(PDS) 당원인 불링 슈뢰터(Bulling-Schröter)가 꼭 맞는 표현을 했다. *Süddeutsche Zeitung*, 2000년 5월 23일자, 12쪽. 이보다 앞서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는 정당 내 정치문화가 정당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동일 참조문헌, 12쪽.

458\_ Lothar Bisky, *Süddeutsche Zeitung*, 2000년 4월 3일자, 11쪽 인용.

적 구조,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분열과 통합을 위한 역량과 결합을 보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리감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과제는 무엇보다 정치 문화 연구의 몇몇 측면 즉, 동독과 서독에서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시민들의 인식방식과 평가방식에 대한 조사는 정당이 시민들을 정치적 시스템에 어느 정도 통합시킬 수 있는지, 시민과 정당 사이에 이질화현상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이질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밝혀준다. 이 두 가지는 정치 체제 속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와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 첫째로 정당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사형성 통로로서 의미를 갖고, 둘째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동독과 서독에서 다르다는 것, 셋째로 정당이 강령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동서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파라독스한 명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명제는 넷째로 한편으로는 정당 내부의 동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더 일반적인 통합기술을 받아들이게끔 한다. 이는 다섯째로는 정당이 갖고 있는 사회 전체적 통합능력과 의미가 동-서 바이어스를 따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정당의 통합요구와 통합주도기관으로서 기능 사이에서 정당은 갈팡질팡하게 되거나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먼저 서독 즉, **구독일 연방공화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독에서는 유권자 토대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적어도 70년대 중반부터 연방하원 및 주의회 선거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불참자 비율이 증가했다.<sup>459</sup> 이와 함께 양대 시민정당 즉,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졌다.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군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특

히 녹색당(Grünen)의 경우 그랬다(Padgett 1993, 34쪽; Wisendahl 1998b, 18쪽 참조). 삼당체제(CDU/CSU, SPD, FDP)에서 사당체제로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잘 보여준다. 사당체제로의 변화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 약화를 배경으로 한다. 70년대 초반부터 서독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80%에서 50%로 줄어들었다(Bürklin 1996, 215쪽). 대부분의 정당연구 결과는 그 이유로 사회구조의 변화, 가치관 변화, 도시 서비스업종 분야에 종사하는 독립적인 신(新)중간계층의 확대, 생활수준의 차별화와 개인주의화, 정당의 탈안정화와 정당 간 정책의 유사함을 제시한다(Wiesendahl 1998b, 22쪽; Immerfall 1998, 4~5쪽). 이러한 각각의 요소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유권자영역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전통적인 구분이 흐려지고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회적 진영 그리고/또는 (예를 들어 교회와 연계된 또는 자본/노동-노선으로 나뉘는) 갈등노선이 유권자층 확보와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대 시민정당의 지지층도 약해졌다. 따라서 기민/기사당(CDU/CSU)은 ‘중간계층 및 (교회와의 연계가 있을 때(지지율 19%)와 없을 때(지지율 25%) 모두) 가톨릭 신자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약 11%), 반면 사민당(SPD)은 ‘노동조합 관련 노동자의 지지율을

459\_ 연방하원 선거 참여율 1976년: 90.7%, 1994년: 79.1%. Wiesendahl 1998b, 15쪽 참조. 약간의 증가추세는 1998년: 82.2%. 1999년 2월 7일 헤센(Hessen) 주의 주의회 선거의 참여율 66.4%가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 제국 시절 이후 역사상 최저 참여율은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Elifort 1994, 44~49쪽.

얻는데 있어서 (15% 이상) 상당한 손실을 보았으며, 교회와 연계되지 않은 노동자의 지지율(18% 이상) 및 노동조합 관련 새로운 중간계층의 지지율(약 11%), 교회와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중간계층의 지지율(약 13%) 그리고 무종교 시민들의 지지율을 얻는 데서 큰 손실을 보았다'(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f 1997, 195쪽). 이러한 결과는 정당연구에서 시도한 진영 나누기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고 과거 적용되었고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균열-모델 이론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진영 나누기가 완전히 쓸모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와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었다(Niedermayer 1997a, 115~117쪽).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 상황과 이슈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반면, 전통적인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나 지지가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sup>460</sup> 유권자들의 변덕은 점점 커지고 이러한 상황은 거대정당에게 있어 표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거대 정당이 통합 능력과 수용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지지자집단 뿐 아니라 사회체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가 점점 더 세분화되는 현상은 공공연하게 그 대가를 요구하고 거대 정당을 점점 더 좁아지는 통합의 범위로 몰아간다”(Wiesendahl 1998b, 28쪽).

---

460\_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심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기보다 정당에 제안하는 주제와 후보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유권자가 늘어났다.” Gabriel 1997d, 252쪽. 1999년 2월 7일 헤센(Hessen) 선거 결과가 좋은 예가 된다.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의 약 21%가 자신이 선택한 정당을 결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 전) 했고, 25%만이 장기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한 정당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저녁 ARD-분석.

“정당은 사회 주류에서 밀려난 층을 거의 정치사회로 통합시킬 수 없게 되었다”(Immerfall 1998, 12쪽). 놀라운 것은 변덕스러운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에 대해 반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중요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가 의미를 상실했다”(동일 참조문헌, 6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이제는 특수한 (서독)정당에 대한 지지 전통이 거의 존재 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동독을 살펴보자. 1990년 이후 실시된 여러 선거(연방하원, 주의회, 유럽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동독 지역의 선거참여율은 서독에 비해 매우 낮았다.<sup>461</sup> 동독에서는 선거 참가자의 특성을 비롯하여 선거결과가 서독과 차이를 보였다. 동독에서는 노동자(동독: 42.2%, 서독: 35.9%)와 종업원(동독: 49.1%, 서독: 45.4%)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공무원(동독: 2.0%, 서독: 7.9%)과 자영업자(동독 6.5%, 서독: 9.2%)의 참여율이 서독에 비해 낮았다. 전체 선거 참여인구의 개신교 신자는 약 25%, 가톨릭 신자는 약 6% 그리고 무교가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사민당(SPD)에게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과 1994년 선거 결과 기민당(CDU)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율이 서독보다 동독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고, 사민당(SPD)은 농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종교의 영향은 서독보다 동독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가톨릭과 개신교

461\_ 1994년 선거 불참자 비율은 유럽 선거에서 최대 40%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의회 선거 때 19%, 연방하원 선거 때 27.4%로 나타났다. 기타 수치와 설명은 Thumfart 1997b, 205~206쪽 참조.

신자의 대다수가 기민당(CDU)을 지지했고, 비종교적 시민들은 사민당(SPD)을 지지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만으로는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 사회집단과 직업별 집단이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sup>462</sup> 1994년 실시된 연방하원 선거 때 동독 노동자들은 가장 경쟁력 있고 일할 능력을 갖춘 당으로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기민당(CDU)을 선택했다(사민당(SPD)은 13%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함). 그러면서도 이해를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33%의 지지율로 사민당(SPD)이 기민당(CDU)(15%)보다 낮다고 보았고, 사회정책 역시 9% 밖에 얻지 못한 기민당(CDU)보다는 24%를 얻은 사민당(SPD)이 더 우수하다고 평했다. 사무직 종사자들은 실력과 능력 면에서는 41%가 기민당(CDU)을 선택(사민당(SPD)은 13%)했지만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11%만이 기민당(CDU)을 선택한 반면, 32%가 사민당(SPD)이 낮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노동자 집단은 이해를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28%가 사민당(SPD), 10%가 기민당(CDU)을 뽑았다. 한편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 집단은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33%를 얻은 민사당(PDS)을 선택했다. 동독 뿐 아니라 서독의 시민들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단연 기민당(CDU)을 지지했다. 기독교 신자들 역시 43%가 기민당(CDU)을(사민당(SPD) 6%) 지지했지만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32%가 사민

---

462\_ 다음에 제시되는 수치는 Gluchowski/von Wilamowitz-Moellendorff 1997, 201~205쪽 참조.

당(SPD)을 지목했다(기민당(CDU)은 15%). 이러한 수치는 우선 동독에서의 선거 결과는 개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됨을 보여준다. 동독 시민들은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정당을 선택하였다.<sup>463</sup> 둘째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문화적으로 정착된 특수한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거의 갖고 있지 않고 재이식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셋째 이슈-중심적이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영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극도로 현대적인 유권자와 집단적인 변덕이 발견된다.<sup>464</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독의 시민들은 서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의 약화 현상과 ‘현대적’ 유권자의 특징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다(Veen/Gluchowski 1994, 184쪽; Gluchowski/von Willamowitz-Moellendorff 1997, 200~201쪽).

(사회주의/시장경제 개념, 종교와 성도덕, 독립성과 자기개발이라는 주제 하에서) 문화적 가치가 유권자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인지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Jagodzinski/Kühnel 1997a, 214~215쪽). 서독에서는 ‘소득의 분배는 공평하다’에 대해 정당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16.0%를 기록한)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에서부터

463\_ 구동독 시절을 통해 사회주의화된 노동자들의 선택을 결정해주는 것이 계층(집단)의 이해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한 정당의 이해대변기능이란 개인의 이해대변을 말하는 것이니 노동자계층의 이해와 관련이 없다.” Gluchowski/von Willamowitz-Moellendorff 1997, 202쪽.

464\_ 다시 말해 연속적으로 시행된 두 번의 선거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동독에서 그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Arzheimer/Falter 1998, 34~35쪽 참조.

(43.1%를 기록한) 기민당(CDU) 지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30%가 동의했지만 동독의 경우 민사당(PDS), 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 사민당(SPD), 자민당(FDP) 지지자의 약 6%(정당 별로 3~9%사이)만이 동의하였다. 개인개발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동서 유권자들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종의 블록이 형성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민당(CDU)/사민당(SPD)/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자민당(FDP)을 지지한 동독의 시민들은 민사당(PDS) 당원들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대변해주는 민사당(PDS)에 대해 일종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65</sup>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네 가지 결론을 낼 수 있다. 첫째는 동독 모든 유권자들의 가치방향 설정이 여전히 ‘사회주의적 사회모델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Jagodzinski/Kühnel 1997a, 221쪽; Bauer-Kase 1994, 278쪽; Roller 1997, 144쪽). 둘째는 동독 시민들의 가치방향설정이 서독시민들의 경우보다 훨씬 동질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특정 정당을 선택한 동독 유권자들은 같은 정당을 선택한 서독의 유권자보다 다른 정당을 선택한 동독의 유권자들과 오히려 더 공통점이 많다는 점이다.<sup>466</sup> 넷째는 기민당

---

465\_ “이 분석은 신 연방주에서의 정당체제가 민사당(PDS)과 기타 정당 사이의 대립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Jagodzinski/Kühnel 1997, 228쪽; Schmidt 1998, 43쪽. 크라이켄봄(Kreikenbom)은 기민당/기사당(CDU/CSU) 지지자들과 민사당(PDS) 지지자간 심한 갈등이 있다고 보았고 사민당(SPD)과 민사당(PDS) 지지자들 간의 갈등은 그에 반해 약하다고 보았다. Kreikenbom 1997, 178쪽.

466\_ 야고트친스키/큐넬(Jagodzinski/Kühnel)은 (1997a, 231쪽) “신 연방주에서 기민당(CDU), 자민당(FDP), 사민당(SPD), 녹색당(Grünen) 지지자들의 가치방향

(CDU)/사민당(SPD)/연합90/녹색당(Bündnis90/Die Grünen)/자민당(FDP)과 민사당(PDS) 지지자들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이슈에 따라 나뉘는 명확한 갈등노선이 존재한다(Kreikenbom 1997, 185쪽). 그러나 동독에서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정당정치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만 정치 자체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민들은 정당을 지나쳐 개인적인 통로로 그들의 이해를 표출하려고 한다.<sup>467</sup>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블록정당과 통일사회당(SED)(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이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 갖는 유보적 입장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이 행하는 것 같은 일반적으로 길고 종합적인 행위의 고리로 구성되는 공공의 이해대변행위는 억압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사적인 작은 집단을 통해 그리고/또는 직접적인 교섭행위를 통해 개별이익 추구를 위한 효율적 관점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sup>468</sup>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관철 전략과 합의도출 공식이 많은 행위자가 가담할 경우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

---

설정에 큰 차이가 없다. [...] 서독의 기민당(CDU) 지지자들은 동독의 지지자들보다는 오히려 서독의 녹색당(Grünen) 지지자들과 공통점이 더 많다. 자민당(FDP)과 사민당(SP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한다.

467\_ “정치적인 행위의 새로운 형태는 (정당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정당에 대항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Wiesendahl 1998b, 23쪽; Immerfall 1998, 12쪽.

468\_ 볼프강 앵글러(Wolfgang Engler)는 구동독 역시 ‘교섭사회’였고 구동독에서도 여러 가지 영구적이고 교활하고 직접적인 전략(에서부터 훗날까지 입증될 수 있는 사회주의의 업적에 대한 열렬한 지지들)을 이용하면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 직위를 얻거나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힌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매우 정확한 묘사라 생각한다. 통일사회당(SED) 정권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드러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경우에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에게 공동의 간접적 행위가 별 효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심어주었다. Engler 1997 (사례도 있음). 개인적인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 방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실은 동독 주민들의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새롭게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다.<sup>469</sup>

#### 마. 요약: 새로운 정당체제로의 지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개별 분야를 살펴보고 엘리트층과 강령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 당원층을 비롯하여 선거차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반대방향으로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통일과 서독의 정치체제를 동독에서 그대로 수용한 것 때문에 모든 정당이 이질적으로 변했고 각 정당 내부적으로도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입장도 많아졌다. 결국 정당 내부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통합은 점점 더 절실해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 엘리트층과 일반 당원 층 사이의 기존 차이는 더 커지거나, 새로운 차이가 추가되기도 하고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은 1990년 이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동-서 격차의 갈등노선을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복합적 모형을 형성한다. 이 모형은 개별 정당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구동독 시절의 정당 역사뿐 아니라 민사당(PDS)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

469\_ 개인적으로 바르딘(Wardin)의 관찰과 명제를 매우 현실성 있다고 생각한다. “신연방주 시민들은 이해대면이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억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를 작은 집단을 통해서만 대변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당들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맡기를 원할 때 동독 시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고 거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Wardin 1994, 34쪽.

겉으로 드러난 강령 및 엘리트 격차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민당(CDU)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연방주에서 뿐만 아니라 신구 연방주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스펙트럼은 비교적 기독교적인 사회주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수적 가치를 갖는 입장 및 일부분 시민운동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민사당(PDS)에 대한 거리감을 넘어 정당정치적 논란이 많은 현대화파의 ‘싱크탱크(think tank)’에까지 이른다. 서독 기민당(CDU-West)은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령을 변함없이 제시했고, 한편으로 동독의 기민당(CDU)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위한 특수한 적응에 관련하여 강력한 경계 짓기 전략을 펼쳤다. 현재도 방향만 반대일 뿐, 동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CDU)은 연방정치 차원에서 볼 때 자신의 다양한 진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많건 적건 간에 서독 및 동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혹은 이제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된 집단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있다. 따라서 기민당(CDU)은 가치관형성과 그 가치관을 대변하는 엘리트 차원에서 강령차원의 통합미숙 또는 통합실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사민당(SPD)은 강령과 관련하여 방향설정의 갈등이 적었던 반면, 동독에서는 당 내부 조직과 구조에 대한 다양한 자기이해가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동독 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쪽과 민사당(PDS)과의 교섭을 논의하는 쪽으로 비교적 빠르고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사민당(SPD)은 여러 방향으로 분열되었지만 뚜렷하게 주류를 이루는 방향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신연방주를 통과한 연방정부의 움직임은 쟁점이 되고 있는 동독 사민당(SPD-Ost) 즉, 민사당(PDS)에 대한 경계와 동시에 한 연방주에서 연정정부를 구성한 동독 사민당(SPD-Ost)에 대한 거부감이 나란히

공존함을 보여준다.

자민당(FDP)은 강령을 바꾸지 않고 블록정당과 합병했다. 과장해서 말하면 자민당(FDP)은 통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합관련 문제를 격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반론에 부딪히는 이야기이다. 자민당(FDP)은 초창기 봄을 일으킨 후 신연방주의 주정치 차원의 전역에서 실패를 맛보고 무의미해져 버렸다. 서독에서뿐 아니라 동독에서도 “자민당(FDP)은 탈진된 상황이다.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힘과 아이디어 및 원동력을 찾을 수 없다”(Lösche/Walter 1996, 200쪽). 따라서 지역에서 자민당(FDP) 대표의 인지도 등이 자민당(FDP)에게 정치적 참여를 가능케 해주었는데, 이때 자민당(FDP)의 강령에 대한 입장은 전혀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될 필요가 없었다.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경우 동서 간 분리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강령차원과 통합을 거부한 엘리트층에서 자율화경향이 두드러지며, 신연방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난다. 통합 또는 최소한 연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민사당(PDS)은 정치체제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파 혹은 방향으로 분열되었다. ‘서독’으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것으로 강화된, 공유하면서도 분산된 가치관과 강령의 방향으로 결속되기는 하지만 분파 형성과 분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통합기계’ 로타르 비스키(Lothar Bisky)의 사퇴 후 원심력적인 경향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당원 차원에서는 볼 때 모든 정당 당원의 사회구조적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강한 동-서간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동독 지역의 정당들은 당원의 수, 나이,

문화적 사회화 (또는 문화적 시대) 등에서 서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는 각 정당의 내적인 통합에 영향을 미쳤다. 기민당(CDU) 뿐 아니라 자민당(FDP)에서도 정당의 하부층 당원들은 당의 활동과 그리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거나 오로지 교육받은 참여정신 때문에 겨우 활동에 참여한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개 오래된 당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사민당(SPD)의 경우는, 한편으로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새롭게 직책을 맡은 당원들은 여러 가지 임무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식적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당원들이 **계파 별로 응집하며 계파로 나뉘면서 응집**하는 반면, 일반 당원은 긴밀하게 연합하거나 묶여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은 젊은 당원일수록 적극적이지만 각자 소속된 지방협회 또는 지역협회에서만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은 더 넓은 차원의 광역지역 혹은 주 이상의 차원에 진출하거나 연계되지 못한다. 민사당(PDS)은 지도부를 포함하여 당원의 대다수가 나이가 많은 전직 공산당당원이며, 이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 갈수록 의견을 달리하지만 (아직까지) 공동의 강한 이데올로기적 가치관을 토대로 응집력을 나타내며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잘 정착해있다.

각 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당원의 사회구조적 데이터 차이와 마찬가지로 동서 간의 격차가 나타난다. 동독의 경우 일관성 없는 경향이 강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독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특성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나타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유대감 약화 현상은 사회주의화된 동독 특

유의 문화적 가치관 즉,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는 아니겠지만 일부 당원들도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민사당(PDS)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특수한 가치관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표출된다. **첫째로** 이러한 가치관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는 우선 무시된다. 그 결과 공동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당을 선택한다. 이해전달과 달성은 여기에서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1998년 연방하원 선거를 살펴보자. 사민당(SPD)이 신연방주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사민당(SPD)이 권위를 얻고 시민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정부(와 헬무트 콜(Helmut Kohl)<sup>470</sup> 개인)의 비효율성에 유권자 개개인이 실망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과 중심적’인 유권자들은 사민당(SPD)에게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 때문에 동독에서 사민당(SPD)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sup>471</sup> **둘째로** 동독의 경우 거의 모든 정당의 경계를 초월한 동독 유권자 전체

470\_ 이미 명시되었던 선거 때 유권자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1998년 연방하원 선거 때는 ‘총리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결정에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Gabriel/Bettschneider 1998, 32쪽). 이 선거는 헬무트 콜(Helmut Kohl)을 무너뜨린 선거이기도 했다. Klein/Ohr 2000에 소개된 실질 연구조사가 이를 뒷받침 한다.

471\_ 동독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위르겐 팔터(Jürgen Falter)는 사민당(SPD)을 선택한 전체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연정에 대한 선호, 다른 정당선호의 뿌리,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정치적인 기본방향, 구체적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두 개의 진영으로’ 뚜렷한 분열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Falter 1999. 결국 사민당(SPD)은 한 쪽 진영을 지지할 경우

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배경이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독의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명확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sup>472</sup> 이러한 현상을 서독 정당들이 보여주는 이질적인 정치적 입장과 통일 이후 두드러진 정당강령의 수정과 비교해보면, 동독 유권자들의 눈에는 서독의 그 어떤 정당도 연방 및 주차원에서 그들의 특수한 이해와 입장, 요구와 가치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방차원에서는 이해대변과 통합이 상당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민당(FDP)과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의 경우는 주차원에서도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동독시민들의 역사문화적 영향을 받은 이해가 선거결과에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동독시민들이 이해표출과 이해관철 자체를 우선 배워야 하는지 혹은 참여기회와 관철기회가 최소한의 수준밖에 안되는지 등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sup>473</sup> 서독정당들은 유권자(그리고 일부 당원)들의 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적 이해를 거의 수용하거나 이행하지 못한다(혹은 그렇게 할 수 없다).<sup>474</sup> 처음에 정당의 이해대변 및 이해표출기능 그

---

다른 한 쪽 진영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전술상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이 여기에서 소개하는 통합딜레마이다.

472\_ “어떤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결정은 출신지역의 영향을 받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와는 무관하다.” Gehring/Winkler 1997, 495쪽.

473\_ 다음 논의 참조. Immerfall 1998, 6~8쪽; Niedermayer 1997b, 335~337쪽; Falter/Rattinger 1997, 512~513쪽.

474\_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을 정당체제의 성공적인 통합을 재는 척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 당원의 35.6%만이 민주주의에 만족하며 반면 64.4%가 불만족하다고 나왔다. 독일 전체 인구 중 55.1%가 만족하고 44.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Boll/Crow/Hofmann/

리고 동원기능이 정당의 결정적인 통합능력을 나타낸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나열한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정당들이 동독의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매우 약한 수준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정치적인 이해전달체계와 정치적 시스템에 통합시키고 있을 뿐, 심지어는 아예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up>475</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우리는 세 단계 (강령과 엘리트/당원/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상호의존성을 기술하면서 같은 자리에서만 맴돌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독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동시에 거꾸로 서독의 정당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독일의 정당에 대한 접근, 예를 들어 동독-특성을 가진 정당은 (예를 들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의 사민당(SPD) 또는 작센(Sachsen)의 기민당(CDU)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는 데 유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나 엘리트집단에 서는 긴장감을 유발하거나 강화하였다. 연방 및 주차원에서 선호 결정은 동독 또는 서독에서의 지지자 상실로 이어지고 분열을 촉진하거나 지역에서 의 활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sup>476</sup> 이러한 상황은 결정적인 규범적인

---

Holtmann 1999, 41쪽.

475\_ 파첼트(Patzelt)는 1995년 “동독 사회 위에 존재하는 (떠돌고 있는) 새로운 체제가 사람들을 강하게 묶지 못한다”고 평했다; Patzelt 1995b, 77쪽.

476\_ 예로 (다음 부분에서 다시 쟁점화 되는) 튀링엔(Thüringen) 주교회가 주관한 ‘신과 세상’에 관한 52번의 설교 및 연설에 대한 논쟁을 들 수 있다.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도 연설자로 강단에 설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기민당(CDU)에 소속된 (대부분 시민운동가 출신) 연설자들이 연설을 취소하였다. 튀링엔의 수상청의 압력과 개신교 교회 일부의 거센 반발 때문에 결국 호프만(Hofmann) 주교는 연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교회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졌고 ‘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되었다. 정치적 동기를 지녔던 수상청

통합과 합의도출이 필요하고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때 한 부류 속에서의 통합이나 더 큰 차원에서의 통합은 모두 갈등노선의 발생을 반드시 수반한다. 정당은 요구, 촉구 그리고 이러한 요구 및 촉구에 대한 수정 사이에 끼이는 신세다. 더 이상 ‘catch-all’ 정당이 되기는 어렵지만 작은 정당 역시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지역에서만 성공을 거둔다. 이 정당들이 직업정치인들의 정당이자 정당하층 및 지지자들과 연계가 약한 정당 및 복잡하고 갈등하는 목표 설정과 표출기능과 대표기능이 감소한 정당으로 변하는 현상은 통일과 함께 가속화되고 집중되고 있다.<sup>477</sup> 이와 함께 사실 매우 필수적인 정당의 규범적 통합기능 역시 약화된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인 모양이다.<sup>478</sup>

이러한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어쩌면 동독 세 개 주의 주헌법에서 나타났듯이 이해전달체제 속에서 정당의 위치를 낮추고 시민운동으로 초점으로 돌리게끔 작용한 것이 경험, 관찰, 예견의 혼합물일지도 모른다. 시민운동이 정

---

의 영향력 행사는 민사당(PDS)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그음으로써 기민당(CDU)을 가깝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기민당(CDU) 안으로 확실히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Süddeutsche Zeitung*, 1999년 2월 8일자, 5쪽; 신앙과 고향(*Glaube und Heimat*). *Evangelische Wochenzeitung für Thüringen*, 1999년 1월 31일자, 9쪽.

477\_ 클라우스 폰 바이메(Klaus von Beyme)는 70년대 말 시작된 전 유럽적 정당형태의 변화 즉, 대중통합정당 혹은 시민정당의 개념에서부터 벗어나 ‘직업정치인들의 정당’으로의 변화와 그 결과를 소개한다. Beyme 1997b, 376~383쪽.

478\_ 뒤르(Dürr)는 우선 사회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의 모순을 고려하고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시민정당 전체를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개인적으로 이것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정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정치적 공존을 위한 통합적 기구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지만, 정당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성을 잃어가고 장기적 성공 여부도 점점 불확실해졌다.” Dürr 2000, 850~851쪽.

당의 통합력과 동원력을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대체방편인지 여부는 다양한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에서 결론 내리지 않을뿐더러 그럴 수도 없다. 동시에 정당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동독과 서독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연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민주주의적 체제의 합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도 (아직은) 결정해서는 안 된다(Immerfall 1998, 11쪽).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3. 정당이론적 차원의 전망

앞서 소개한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정당연구가인 엘마르 비젠달(Elmar Wiesendahl)이 제안하듯이 정당과 정당의 조직을 오늘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행위 이론적 시각으로 정당을 바라본 비젠달(Wiesendahl)은 정당은 모두 ‘조각나 있고 느슨하게 연결된 무질서’라고 보았다.<sup>479</sup> 그는 “정당연구가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 안정적 거대정당의 황금기는 이미 끝났고, 거대정당은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Weisendahl 1998a, 11쪽).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당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핵심 인사들과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Greven 1987).

479\_ Wiesendahl 1998a, 229쪽. 비젠달(Wiesendahl)의 이런 관점은 조직의 과정을 ‘느슨한 연결’ 또는 ‘느슨하게 연결된 무질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조직행위 및 조직심리학자 칼 웨익(Karl Weick)의 이론과 연결된다. Weick 1995, 12~131쪽.

끝으로 비젠달(Wiesendahl)이 새롭게 제안한 이론을 소개하며 이를 동독지역의 ‘상황’ 설명에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비젠달(Wiesendahl)의 일반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동독의 특성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젠달(Wiesendahl)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그 분야를 사실성 있게 잘 묘사했다고 평가되며 동독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최근 정당연구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현대 정당연구는 정당의 구조가 개방적이고 다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며, 자결적인 정치권참여 정당과 강령정당의 모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용자중심의 서비스 및 매개모델을 전제로 삼는다. 또한 통합과제와 이해집결을 정당의 주요목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의 선거자유와 자기조정권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정당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조직체나 존재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앞으로는 ‘한편으로 정당 내부의 완고함과 자율성으로부터 자원조직체로, 다른 한편으로 불가피한 원천에 대한 의존성과 행위의 제약으로 표출되는 정당의 조직구조상의 긴장과 모순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Wiesendahl 1998a, 94쪽). 비젠달(Wiesendahl)의 이론과 연구는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며 “정당의 자원적 성격의 핵심 문제와 그로부터 발생한 긴장과 모순에 집중한다. 이러한 긴장과 모순은 구조상 거부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정당엘리트, 지도층인사, 적극적인 당원, 외부 관련 단체의 기대와 무행위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동일 참조문헌). 행위 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정당의 조직특성과 기능방식이 당원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며 다시 재생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동일 참조문헌, 95쪽). 또한 체제전환연구에서 개념화 할 뿐 아

나라 여기에서 제시한 동독의 사례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듯이, 휴머니즘적 정당에서 행위자의 개념과 당원의 행위를 보다 높은 차원에 올려놓고 있다.

정당은 구체적 형체를 지니고 있지 않고, 행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형상화된다. 따라서 정당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볼 때 방법론적 개체에 가깝다. 자료검색 체계의 ‘멤버십’에 따르면 ‘형식적 조직체 내외에서 정당과 관련된 행위를 하며, 동시에 정당 당원의 역할을 하고 정당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정의된다. “조직체의 회원들이 제휴하여 행위하고 인적자원을 제공하며, 만나고 상호 작용하며 소통하고 정당조직을 위해 요구되는 정당 활동을 수용하고 정당 활동의 목표설정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 한, 정당을 사회적 개체로 볼 수 없다. 당원들의 생각과 행위, 그들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행위 하는데 있어서 서로 연계하고 맞춰가고 공동의 행위결과를 달성해나가는 방식 등이 정치 정당의 특성과 성격을 정의해준다”(동일 참조문헌, 110쪽). 정당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방향, 경험, 행위 틀과 같은 구조적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이런 토대는 개인과 공동의 행위목적에 추적함에 있어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행위의 연관성으로서 통합기능을 한다.

여기에서 제시된 자료검색 체계가 안정과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당 역시 공동의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특수한 공동의 정체성은 “당원들에게 특정한 기대, 상징, 원칙, 사건, 사람과 함께 구분되는 조직체에 대한 소속감과 단결 정신을 선사한다. 정체성을 초월한 경계 짓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와 외부에서 답변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당을 정당 주위의 환경 속에서도 발견하고 구분할 수 있다”(동일 참조문헌, 112쪽).

조직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체성의 특성은 단순히 새로운 정당의 형성 과정에서 방향 설정 및 탐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틀의 유연성을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상황과 연계되어 있고,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당 내적 학습과정과 특정 긴장관계에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이한 경험적 배경과 실현방법을 토대로 두고 있는 정당분류는 자기의 의미 지평과 문제 지평, 현실과 의미세계를 구현’하기 때문이다(동일 참조문헌, 131쪽). 위로부터의 의미관리와 아래로부터 오는 해석에 대한 압력은 서로 만나게 되며, 원칙적으로 중심적 해석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과 상충하는 기대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지 결정되어져 있지도 않고 불확실하다. 정당의 내부(그리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 명확한 목표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숙고된 행동계획에 따라 행위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정치적 과정은 유연성이 높고, 행위를 하는 도중에 목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차원에서나 모든 위원회에서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거나 숨기기 위해 형식화된 진행과정과 상호작용과정, 표준절차와 경로를 선호한다. 회의에서의 관행적인 형식주의는 ‘사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절차와 과제해결의 논리에 따라 발견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미 규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당원에 대한 일방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동일 참조문헌, 139쪽).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행동이 관습화되고 절차가 도식화되는 것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미리 행위를 규정하는 경직된 사전 구조화가 ‘한 개인의 행위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행위 전반을 구속하게 된다’(동일 참조문헌, 140쪽).

따라서 일반 의미부여의 틀과 자립적이고 지역적인 해석지식이 어떤 의미에서 반복되는 거의 모순적인 상황논리가 도출된다. “외적 행위의 규정밀도는 개인의 역할행위의 규정결핍과 직면해있고, 이는 행위주체에게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동일 참조문헌)

미시정치적으로 정당을 살펴봄에 있어 각 정당별 구체적 관찰이 요구되며 ‘수많은 정치적 직책, 지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인의 출세방법 및 미리 정해진 공동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개인적 관심사, 영향력 추구, 접촉과 연결, 사업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여가시간을 위한 사교적 소일거리에 대한 바람을 실현하는 장소이자 중개거래소’로서 개별 분석이 되어야 한다(동일 참조문헌). 그 결과 권력에 대한 생각도 변한다. 권력은 더 이상 실력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위조정능력을 갖고 있는 견고하고 제도적인, 미리 정해진 과두정치의 중심 개념이 될 수 없고, (푸코(Foucault)의 이론에 따라) 이해, 지위, 특혜 및 소유, 자원과 출세를 달성하고 관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유동적인 크기’로 간주되어야 한다(동일 참조자료, 145쪽; Foucault 1978, 1994, 201~218쪽; Sofsky/Paris 1994). 이는 비교적 자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동시에 타인과 타인의 행위옵션 및 행위실행을 제한한다. 완전하게 다른, 종종 갈등요소를 지니는 특성, 능력, 재능, 동기, 목표,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 모여 정당을 이룬다. 그리고 자생적인, 유연하고 변형 가능한 권력의 짜임 및 거의 총체적이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의 틀 속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에 따라 관례화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자기 강화 문제, 경계 설정 문제 혹은 한계 정하기 문제 등이 지속적이고 동시에 한정적이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조직과 강령의 접촉감소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의미 생산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자기와의 관계 및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원칙적으로 불안정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Wiesendahl 1998a, 200쪽). 따라서 지금 그렇듯 앞으로도 계속 다음의 문제들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며 느슨하게만 연결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란 ‘정당이 선거전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떤 집단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지,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목표와 관련하여 어떤 선호도를 가져야 할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 정당의 조직 활동을 통해 누가 제일 큰 이득을 보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다(동일 참조문헌, 208쪽).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정당은 ‘일차적으로 통일성이 아닌 다양한 모순을 조정한다’(동일 참조자료, 217쪽).

쉽게 인식할 수 있듯이 비젠달(Wiesendahl)의 최근 정당 이론적(그리고 많은 경험을 근거로 한) 개념은 통일 이후 동서독 정당이 처한 상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정당들은 모두 상호의존적인 세 개의 차원(강령/엘리트-당원/당 지지자) 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순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로써 통일성(다른 표현을 써도 좋다)을 달성하지는 않는다. 일시적인,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승자와 패자, 우선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강령을 기준으로 볼 때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힘겨루기와 조직의 견고화와 유연화는 모두 반복되며,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힘의 영원한 유동성이라는 개념 이외의 다른 (규범적) 개념은 부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몇몇 이론의 요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특히 동독의 현상문제 기술에 있어서 묘사의 정확성이란 면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중점적인 부분은 집단 정체성, 당원, 결속력을 비롯하여 일부 권력투쟁

과 관련된 문제로 구성된다. 통합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가 선별한 요소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은 모든 정당에게 필수적이다. 정체성은 종합적 관계와 의미의 구조를 구성하여 행위자들이 이 구조의 도움을 받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가치관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이 구조적 틀의 밖이든, 안쪽이든 열려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다원적 세계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각 정당의 엘리트층과 강령에 따른 지위의 층위에서는 이미 제시되었듯 비록 문제가 있기는 하나 각각 의문시 되고 있는 관계 및 상징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하며 무엇보다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다양한 의미를 두고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자민당(FDP)의 경우 엘리트층에서 동서독 간 공동의 ‘결속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 별로 당원 및 지지자와 관련된 특성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남아 있는) 동독 당원들은 기민당(CDU)과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n) 그리고 사민당(SPD) 일부에 대해 거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이유에서 행위자의 경험공간과 일부 목표방향성은 공동의 규범적 정체성과 집단적 ‘멤버십’으로 정착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로 연계된 두 가지 현상은 동일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다층화 된 권력투쟁에 개입하지 않고 비참여적인 태도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마저도 없는 상황, 다시 말해 ‘비판적’이고 갈등적인 집단/하부층의 부재로 인해 동독의 적극적인 기능엘리트들이 지역적, 초지역적 차원에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권력투쟁의 기회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반

대에 부딪히지 않은 채 자신들이 방향설정의 기준으로 제시 하는 것들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종종 각 연방정당의 위치와 제한적으로만 연결가능하다.<sup>480</sup> 둘째로 이 기능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행동 논리들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데 문제나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기능엘리트들은 서독 출신의 참여자와 소위 ‘보시(Wossi)’라 불리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배제시키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결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이 두 집단은 동독의 언어(방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를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독시민들에게 높은 지지도를 기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외에도 동독 정당들은 아직까지 자립적이고 각기 다른 ‘자기 사람 및 출신지역 원칙’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영향은 (전독일적인) 정당정체성이나 동일시 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sup>481</sup> 이 역시 규범적인 통합이 요구되고 있지 않거나 (넓은 영역단위가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예전처럼 여전히 ‘자기들끼리’의 삶을 찾는 ‘니쉐(특정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와 ‘원주민 거주지’가 존재하며, 자원의 원칙과 내부의 인정에 대한 요구를 갖는 정당들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집단적인 정당정체성의 기준은 한 정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와 정당지지자들에게는 완전히 무의미한 듯하다. 유권자와 선택을 받은 정당(민사당(PDS) 제외)의 가치관은 극히 작은 부분에서만 공통점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

480\_ 예를 들어 사민당(SPD)의 청년단체(Jusos), 녹색당(Grüne), 주차원에서의 민사당(PDS), 지역자치구 차원에서의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을 들 수 있다.

481\_ 예로 앞에서 제시한 예나(Jena)를 참조.

종합적으로 볼 때 비젠달(Wiesendahl)이 정의한 정당의 개념이 현재 전독일의 정당체제를 거시적 시각에서 매우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개념은 새로운 연방주에서의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새 연방주의 상황과 주민들의 의식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비젠달(Wiesendahl)의 종합적 정당 연구에 이어 동독의 통합격차와 통합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과 분석을 위한 세분화된 정당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설사 통합에 대해宿命론적인(그리고 잠재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또는(문제가 있고, 파라독스하게 여겨지는) 통합을 유보적인 자립성을 갖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세분화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sup>482</sup>

---

482\_ 뢰셰(Lösche)는 느슨하게 결합된 무질서 상태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또는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ösche 1994, 189쪽.

## 참고문헌

### A

- Abels, Heinz, Interaktion, Identität, Präsentation. Kleine Einführung in interpretative Theorien der Soziologie, Opladen 1998
- Adams, Angela/Willi Paul Adams, Einleitung, in: dies. (Hg.), Hamilton/Madison/Jay: Die Federalist-Artikel. Politische Theorie and Verfassungskommentar der amerikanischen Gründerväter, Paderborn u. a. 1994, S. XXVII-XCIII
- Adler, Frank, Zur Rekonstruktion des DDR-Realsozialismus. Strukturmerkmale-Erosion-Zusammenbruch, in: Micheal Thomas(Hg.), Abbruch and Aufbruch. Sozialwissenschaf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Berlin 1992, S. 36-59
- Agh, Attila, Demokratische Grundwerte and politische Realität in Mittelosteuropa,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g.), Grundwerte der Demokratie im internationalen Vregleich, Bonn 1994, S. 32-46
- Albrow, Martin, Abschied vom Nationalstaat. Staat und Gesellschaft im globalen Zeitalter, Frankfurt/M. 1998
- Alemann, Ulrich von: Parteien, Reinbek b. Hamburg 1995
- Alexander, Jeffrey C., Twenty Lectures: Sociological Theory Since World War II, New York 1987
- Almond, Gabriel A./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4th ed., Glenview, Ill. u. a. 1988
- Ankersmit, F. R., History and Tropology. The Rise and Fall of Metaphor, Berkeley 1994
- Arndt, Claus, Fraktion und Abgeordneter, in: Hans- Peter Schneider/ Wolfgang Zeh (Hg.),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rrepublik Deutschland, Berlin - New York 1989, S. 644-672
- Arnim, Hans Herbert von, Strukturprobleme des Parteienstaates, in: APuZ B 16/2000, S. 30-38
- Arzheimer, Kai/Jügen W. Falter, Annäherung durch Wandel Das Wahlverhalten bei der Bundestagswahl 1998 in Ost-West-Perspektive, in: APuZ B 52/1998, S. 33-43
- Arzheimer, Kai/Markus Klein, Die Friedliche und die stille Revolution. Die Entwicklung gesellschaftspolitischer Wertorientierungen in Deutschland seit dem Beitritt der Fünf neuen Länder, in: Oscar W. Gabriel (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 S. 114-140

B

- Badelt, Joachim, Die Bedeutung der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Ostdeutschland, in: Arno Waschkuhn/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Lehr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9, S. 359-401
- Bagehot, Walter, The English Constitution, with an introduction by R. H. S. Crossmann, London 1964
- Ball, Terence, Reappraising Political Theory. Revisionist Studies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Oxford 1995
- Barber, Benjamin, Starke Demokratie. Über die Teilhabe am Politischen, Hamburg 1994
- Baßler, Moritz, Einleitung: New Historicism, in: ders. (Hg.), New Historicism-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 M. 1995, S. 7-28
- Beck, Ulrich, Opposition in Deutschland, in: Bernd Giesen/Claus Leggewie(Hg.),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1991, S.21-27
- Becker, Carola, Kläglich versagt. Was die DDR- Forscher Frankfurt im Westen hinderte, die Wahrheit zu erkennen, in: Die Zeit, 24·5·1991, S.74
- Beiner, Ronald (Hg.), Theorizing Citizenship, New York 1995
- Bendel, Petra, Volkspartei,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 S.696-698
- Benjamin, Walter, Geschichtsphilosophische Thesen, in: ders., Zur Kritik der Gewalt und andere Aufsätze, Frankfurt/M. 1965, S.78-94
- Berger, Peter L./Thomas Luckmann, Die gesellschaftliche Konstruktion der Wirklichkeit. Eine Theorie der Wissenssoziologie, 5.Aufl. Frankfurt/M. 1987
- Berndt, Rolf/Silke Jansen, Organisationsprobleme und Organisationserfolge aus der Sicht der F. D. P., in: Frank Löbler/Josef Schmid/Heinrich Tiemann(Hg.), Wiedervereinigung als Organisationsproblem: Gesamtdeutsche Zusammenschlüsse von Parteien und Verbänden, 2. beard. Aufl. Bochum 1992, S.66-76
- Beyme, Klaus von, Parteien in westlichen Demokratien, München 1984
- Beyme, Klaus von, Parteiensysteme, in: Lexikon der Politik, Bd.3: Die westlichen Länder, hg. v. Manfred G. Schmidt, München 1992b, S.326-332
- Beyme, Klaus von, Parteientheorie,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 1: Politische Theorien,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 München 1995, S.391-396
- Beyme, Klaus von, Der kurze Sonderweg Ostdeutschlands zur Vermeidung eines erneuten Sonderweges: Di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im Vergleich der postkommunistischen Systeme, i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3/1996, S.305-316

- Beyme, Klaus von, Der Gesetzgeber. Der Bundestag als Entscheidungszentrum, Opladen 1997a
- Beyme, Klaus von, Funktionswandel der Parteien in der Entwicklung von der Massenmitgliederpartei zur Partei der Berufspolitiker,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b, S.359-383
- Beyme, Klaus von, Parteien im Prozeß der demokratischen Konsolidierung, in: Wolfgang Merkel/Eberhard Sandschneider (Hg.), Systemwechsel 3. Parteien im Transformationsprozeß, Opladen 1997c, S.23-56
- Beyme, Klaus von,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Entstehung und Funktionsweise 1989-1999, 3. völlig neubearbeitete Neuaufl. Opladen-Wiesbaden 1999
- Billerbeck, Rudolf, Gerechtigkeitsverlangen-Ostdeutsche Landtagsdebatten 1990-1994, Berlin 1998
- Birsl, Ursula/Peter Lösche, Parteien in West-und Ostdeutschland: Der gar nicht so feine Unterschied,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8.Jg., 1/1998, S.9-24
- Blattert, Barbara/Dieter Rink/Dieter Rucht, Von den Oppositionsgruppen der DDR zu den neuen Sozialen Bewegungen in Ostdeutschland?,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6. Jg., 3/1995, S.397-422
- Blumenberg, Hans, Die Legitimität der Neuzeit, Frankfurt/M. 1966
- Blumenberg, Hans, Paradigmen zu einer Metaphorologie, Frankfurt/M. 1998
- Blumer, Herbert, Der methodologische Standort des symbolischen Interaktionismus, in: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en (Hg.), Alltagswissen, Interaktion und gesellschaftliche Wirklichkeit, Bd. 1, Reinbek b. Hamburg 1973, S.80-146
- Boll, Bernhard/Everhard Holtmann, Sachsen-Anhalt, in: Jürgen Hartmann (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 u. aktual. Neuausgabe Frankfurt/M.-New York 1997, S.546-580
- Boll, Bernhard/Kimberly Crow/Bernd Hofmann/Everhard Holtmann, Sozialprofil und Einstellungen der Mitglieder von Parteien in Ostdeutschland am Beispiel Sachsen-Anhalts, in: APuZ 12/1999, S.34-45
- Bönninger, Karl, Verfassungsdiskussion im Lande Sachsen, in: Landesund Kommunalverwaltung, 1/1991, S.9-12
- Bordjugow, Gennadij, Das ZK der KPdSU(B), die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in Deutschland und die SED (1945-1951), in: Hermann Weber/Ulrich Mählert (Hg.), Terror. Stalinistische Parteisäuberungen 1936-1953, Paderborn u. a. 1998, S.283-311
- Bormann, Alexander von, Gebremstes Leben, Grotteske und Elegie. Litera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seit der Wende, in: APuZ B 13/1998, S.31-39
- Bortfeldt, Heinrich, Von der SED zur PDS? Wandlung zur Demokratie?, Bonn-Berlin 1992

- Boudon, Raymond, Theories of Social Change. A Critical Appraisal, Reprint Cambridge 1994
- Boudon, Raymond/Francois Bourricault, Soziologische Stichworte, Opladen 1992
- Bourdieu, Pierre, Praktische Vernunft. Zur Theorie des Handelns, Frankfurt/M. 1998
- Box, M.A., The Persuasive Art of David Hume, Princeton, N.J. 1990
- Brandom, Robert B., Expressive Vernunft. Begründung, Repräsentation und diskursive Festlegung, Frankfurt/M. 2000
- Braudel, Fernand, Das Mittelmeer und die mediterrane Welt in der Epoche Philipps II, Bd. 1, Frankfurt/M. 1990
- Bredow, Wilfried von, Perzeptions-Probleme. Das schiefe DDR-Bild und warum es bis zum Schluß so blieb, in: Deutschland Archiv, 24/1991, S.147-154
- Brie, Michael, PDS ante portas,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8/1994, S.543-567
- Brie, Michael, Das Politische Projekt PDS-eine unmögliche Möglichkeit. Die ambivalenten Früchte des Erfolgs, in: Michael Brie/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 S.9-38
- Brocker, Manfred, Die Grundlegung des liberalen Verfassungsstaates. Von den Levellern zu John Locke, Freiburg-München 1995
- Bruner, Jerome S., Vergangenheit und Gegenwart als narrative Konstruktionen. Was ist gewonnen und was verloren, wenn Menschen auf narrative Weise Sinn bilden?, in: Jürgen Straub (Hg.), Erzählung, Identität und historisches Bewußtsein. Die psychologische Konstruktion von Zeit und Geschichte: Erinnerung, Geschichte, Identität 1, Frankfurt/M. 1998, S.46-80
- Buchstein, Hubertus, Repräsentation ohne Symbole-Die Repräsentationstheorie des >Federalist< und von Hanna F. Pitkin, in: Gerhard Göhler u. a. (Hg.), Institution - Macht - Repräsentation. Wofür politische Institutionen stehen und wie sie wirken, Baden-Baden 1997, S.376-432
- Bündnis 90/DIE GRÜNEN Thüringen (Hg.), Wer wir sind und was wir wollen, 3.Aufl. Erfurt o. J. (1996)
- Burguière, André, Historische Anthropologie, in: Jacques LeGoff/Roger Chartier/Jacques Revel (Hg.), Die Rückeroberung des historischen Denkens, Frankfurt/M. 1994, S.62-102
- Burke, Peter, Stärken und Schwächen der Mentalitätsgeschichte, in: Ulrich Raulff (Hg.), Mentalitäten-Geschichte. Zur historischen Rekonstruktion geistiger Prozesse, Berlin 1987, S.127-145
- Bürklin, Wilhelm/Markus Klein/Achim Ruß, Dimensionen des Wertewandels. Eine empirische Längsschnittanalyse zur Dimensionalität und der Wandlungsdynamik

gesellschaftlicher Wertorientierungen,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5. Jg., 4/1994, S.579-606

## C

- Cacciari, Massimo, Gewalt und Harmonie. Geo-Philosophie Europas, München- Wien 1995
- Callan, Eamonn, Creating Citizens, Oxford 1997
- Charon, Joel M., Symbolic Interactionism. An Introduction, an Interpretation, an Integration,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1998
- Chartier, Roger, Die unvollendete Vergangenheit. Geschichte und die Macht der Weltauslegung, Berlin 1989
- Chartier, Roger, L'Histoire Culturelle entre >Linguistic Turn< et Retour au Sujet, in: Hartmut Lehmann (Hg.), Wege zu einer neuen Kulturgeschichte, Göttingen 1995, S. 31-411
- Croissant, Aurel/Wolfgang Merkel/Eberhard Sandschneider, Verbände und Verbändesysteme im Transformationsprozeß: ein zusammenfassen der Vergleich, in: Wolfgang Merkel/Eberhard Sandschneider (Hg.), Systemwechsel 4. Die Rolle von Verbänden im Transformationsprozeß, Opladen 1999, S. 329-355
- Czada, Roland, Vereinigungskrise und Standortdebatte. Der Beitrag der Wiedervereinigung zur Krise des westdeutschen Modells, in: Leviathan, 1/1998, S. 24-59

## D

- Dahrendorf, Ralf, Elemente einer Theorie des sozialen Konflikts, in: ders., Gesellschaft und Freiheit, München 1961, S.197-235
- Dahrendorf, Ralf, Die neue Freiheit. Überleben und Gerechtigkeit in einer veränderten Welt, 3. Aufl. München-Zürich 1975
- Dahrendorf, Ralf, Lebenschancen. Anläufe zur sozialen und politischen Theorie, Frankfurt/M. 1979
- Deinert, Rudolf G., Die PDS, die rechten Parteien und das Alibi der » Politikverdrossenheit « Die Beweggründe westdeutscher Rechts- und ostdeutscher PDS-Wähler auf dem empirischen Prüfstand,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9. Jg., 3/1998, S.422-441
- Demaine, Jack/Entwistle, Harold(Hg.), Beyond Communitarianism. Citizenship, Politics and Education, Houndmills-London-New York 1996

- Demmler, Wolfgang, Der Abgeordnete im Parlament der Fraktionen, Berlin 1994
- Demokratischer Aufbruch-sozial, ökologisch, in: Gesamtdeutsches Institut,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Hg.), Dokumentation zur Entwicklung der neuen Parteien in der DDR (Februar 1990-April 1990), Bonn 1990, S. 52-69
- Denninger, Erhard, Verfassungsrecht und Solidarität, in: Kurt Bayerty (Hg.), Solidarität, Frankfurt/M. 1998, S.319-344
- Derlien, Hans-Ulrich, Elitezirkulation in Ostdeutschland 1989-1995, in: APuZ B 5/1998, S.3-17
- Derlien, Hans-Ulrich/Stefan Lock, Eine neue politische Elite? Rekrutierung und Karrieren der Abgeordneten in den fünf neuen Landtag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5.Jg., 1/1994, S.61-94
- Derlien, Hans-Ulrich/Stefan Löwenhaupt, Verwaltungskontakte und Institutionenvertrauen, in: Hellmut Wollmann/Hans-Ulrich Derlien/ Klaus König/Wolfgang Rensch/Wolfgang Seibe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 S. 417-472
- Derrida, Jacques, Bemerkungen zu Dekonstruktion und Pragmatismus, in: Chantal Mouffe (Hg.), Dekonstruktion und Pragmatismus. Demokratie, Wahrheit und Vernunft, Wien 1999, S.171-194
- Detjen, Joachim, Pluralismus, in: Otfried Jarren/Ulrich Sarcinelli/Ulrich Saxer (Hg.), Politische Kommunikation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Opladen 1998, S.275-284
- Dettling, Warnfried (Hg.), Deutsche Parteien im Wandel, München- Wien 1983
- Dewey, John, Kunst als Erfahrung, Frankfurt/M. 1980
- Dewey, John, Die Öffentlichkeit und ihre Probleme, Darmstadt 1996
- Diers, Michael, Schlagbilder. Zur politischen Ikonographie der Gegenwart, Frankfurt/M. 1997
- Dietzel, Horst/Bernd Ihme, Auseinandersetzungen um die Programmatik der PDS, in: Michael Brie/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 S.102-111
- Dilthey, Wilhelm, Gesammelte Schriften, VII. Band: Der Aufbau der geschichtlichen Welt in den Geisteswissenschaften, 3. unveränd. Aufl. Göttingen 1961
- Dittberner, Jürgen, FDP-Partei der zweiten Wahl.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liberalen Partei und ihrer Funktionen im Parteiensystem der Bundesrepublik, Opladen 1987
- Dittberner, Jürgen, Neuer Staat mit alten Parteien? Die deutschen Partei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Opladen 1997
- Dittgen, Herbert, Grenzen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 Ende des Nationalstaates, i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9. Jg., 1/1999, S.3-26

- Döhring, Hans-Martin, Anhang: Der Repräsentations-Begriff seit 1800 in Deutschland, England und den USA, untersucht anhand von Fachlexika, in: Gerhard Göhler u.a.(Hg.), Institution-Macht-Repräsentation. Wofür politische Institutionen stehen und wie sie wirken, Baden-Baden 1997, S. 476-512
- Dowe, Dieter(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
- Dürig, Guenter/Roman Herzog/Theodor Maunz, Grundgesetz. Kommentar, 23. Aufl., München 1991
- Dürr, Tobias, Beschleunigung und Heimat. Paradoxien sozialdemokratischer Parteireform,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7/2000, S. 845-852

## E

- Eco, Umberto, Im Labyrinth der Vernunft. Texte über Kunst und Zeichen, Leipzig 1990b
- Eco, Umberto, Die Grenzen der Interpretation, München-Wien 1992
- Edinger, Michael/Oliver Lembcke/Erhard H.M. Lange, Thüringen, in: Jürgen Hartmann (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u.aktual. Neuaufl. Frankfurt/M.-New York 1997, S.613-653
- Eggert, Hartmut/Ulrich Profitlich/Klaus R. Scherpe (Hg.), Geschichte als Literatur. Formen und Grenzen der Repräsentation der Vergangenheit, Stuttgart 1990
- Eisen, Andreas, Institutionenbildung und institutioneller Wandel im Transformationsprozeß. Theoretische Notwendigkeiten und methodologische Konsequenzen einer Verknüpfung struktureller und kultureller Aspekte des institutionellen Wandels, in: ders./ Hellmut Wollmann (Hg.), Institutionenbildung in Ostdeutschland. Zwischen externer Steuerung und Eigendynamik, Opladen 1996b, S. 33-61
- Eisen, Andreas/Max Kaase/Frank Berg, Transformation und Transition: Zur politikwissenschaftlichen Analyse des Prozesses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Kaase, Max/Andreas Eisen/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Hellmut Wollmann, Politisches System, Opladen 1996, S. 5-46
- Elmer, Konrad, Vor-und Wirkungsgeschichte des Organisationsstatuts der SPD, in: Dieter Dowe (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 a, S. 29-39
- Elmer, Konrad, Einführung Konrad Elmers in die Statuten diskussion des Leipziger Parteitags Februar 1990, in: Dieter Dowe(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b, S.159-166
- Elster, Jon/Claus Offe/Ulrich K. Preuss(with Frank Boenker/Ulrike Goetting/ Friedbert W. Rueb), Institutional Design in Post-communist Societies. Rebuilding the Ship at Sea, Cabridge 1998
- Emmerich, Wolfgang, Kleine Literaturgeschichte der DDR, erw. Neuausg. Leipzig 1996
- Engler, Wolfgang, »Aushandlungsgesellschaft«DDR, in: Ulrich Beck/Peter Sopp(Hg.), Individualisierung und Integration. Neue Konfliktlinien und neuer Integrationsmodus?, Opladen 1997, S.37-46
- Esser, Hartmut, Soziologie. Allgemeine Grundlagen, Frankfurt/M. - New York 1993
- Ettrich, Frank, Gerechtigkeitsaspekte postkommunistischer Transformationsprozesse. Eine Problemskizze, in: Andreas Dornheim/Winfried Franzen/Alexander Thumfart/ Arno Waschkuhn(Hg.), Gerechtigkeit. Interdisziplinäre Grundlagen, Opladen-Wiesbaden 1999, S.120-167
- Etzioni, Amitai, Die aktive Gesellschaft. Eine Theorie gesellschaftlicher und politischer Prozesse, Opladen 1975
- Euchner, Walter, Naturrecht und Politik bei John Locke, Frankfurt/ M.1979
- Euchner, Walter, John Locke zur Einführung, Hamburg 1996

F

- Falter, Jürgen W., Wahlen 1990.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für die deutsche Einheit mit großen Überraschungen, in: Eckhard Jesse/Armin Mitter(Hg.),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Bonn 1992, S. 163-188
- Falter, Jürgen W./Markus Klein, Zwischen Ideologie, Nostagie und Protest: Die Wähler der PDS bei der Bundestagswahl 1994, in: Gerhard Hirscher(Hg.), Parteiendemokratie zwischen Kontinuität und Wandel. Die deutschen Parteien nach den Wahlen 1994, Hanns-Seidel-Stiftung 1995, S. 314-345
- Falter, Jürgen W./Hans Rattinger, Die deutschen Parteien im Urteil der öffentlichen Meinung 1977-1994,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 S. 495-513
- Falter, Jürgen W./Kai Arzheimer, Rein in die neue Mitte-oder raus aus der neuen Mitte?, in: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31. 8. 1999, S. 12
- Feist, Ursula/ Hans-Jürgen Hoffmann, Landtagswahlen in der ehemaligen DDR am 14. Oktober 1990: Föderalismus im wiedervereinten Deutschland - Tradition und neue Kontur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2. Jg., 1/1991, S. 5-34

- Feist, Ursula/Klaus Liepelt, Auseinander oder miteinander? Zum unterschiedlichen Politikverständnis der Deutschen in Ost und West, in: Hans - Dieter Klingemann/Max Kaase(Hg.), Wahlen und Wähler. Analysen aus Anlaß der Bundestagswahl 1990, Opladen 1994, S. 575-611
- Fenner, Christian, Das Ende des >realen Sozialismus< und die Aporien vergleichender Politikwissenschaft, in: Uwe Backes/Eckhard Jesse(Hg.), Jahrbuch Extremismus & Demokratie, Bd.3, Bonn 1991, S.33-51
- Fluck, Winfried, Die.>Amerikanisierung< der Geschichte im New historicism, in: Moritz baßler(Hg.), New Historicism-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M.1995, S. 229-250
- Fohrmann, Jürgen, Misreading revisited. Eine Kritik des Konzepts von Paul de Man, in: Karl Heinz Bohrer(Hg.), Ästhetik und Rhetorik. Lektüren zu Paul de Man, Frankfurt/M. 1993, S. 79-97
- Fott, David, John Dewey: America's Philosopher of Democracy, Lanham u. a. 1998
- Fraenkel, Ernst, Ursprung und politische Bedeutung der Parlamentsverdrossenheit, in: ders., Deutschland und die westlichen Demokratien. Mit e. Nachwort über Leben und Werk Ernst Fraenkels, hg. v. Alexander v. Brünneck, Frankfurt/M. 1990a, S.137-149(Original 1996)
- Fraenkel, Ernst, Die repräsentative und plebiszitäre Komponen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n:ders., Deutschland und die westlichen Demokratien. Mit e. Nachwort über Leben und Werk Ernst Fraenkels, hg. v. Alexander v. Brünneck, Frankfurt/M. 1990b, S. 153-203(Original 1958)
- Fraenkel, Ernst, Strukturdefekte der Demokratie und deren Überwindung, in: ders., Deutschland und die westlichen Demokratien. Mit e. Nachwort über Leben und Werk Ernst Fraenkels, hg. v. Alexander v. Brünneck, Frankfurt/M.1990c, S. 68-94(Original 1964)
- Frank, Manfred, Das individuelle Allgemeine. Textstrukturierung und Interpretation nach Schleiermacher, Frankfurt/M.1977
- Fricke, Karl W., Dimensionen von Opposition und Widerstand in der DDR, in: Klaus-Diemar Henke/Peter Steinbach/Johnnes Tuchel(Hg.), Widerstand und Opposition in der DDR, Köln-Weimar-Wien 1999, S. 21-43
- Friedrichs, Jürgen/Rainer M. Lepsius/Karl Ulrich Mayer(Hg.), Die Diagnosefähigkeit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sonderheft 38/1998 der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Opladen 1998
- Fröhlich, Jürgen(Hg.), >Bürgerliche< Parteien in der SBZ/DDR. Zur Geschichte von CDU, LDP(D), DBD und NDPD 1945-1953, Köln 1994
- Fröhlich, Jürgen, Transmissionsriemen, Interessenvertretung des Handwerks oder Nischenpartei? Zur Rolle, Bedeutung und Wirkungsmöglichkeiten der NDPD, in: Enquete-Kommission>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II, 2, Frankfurt/M. 1995, S. 1542-1578

- Fuchs, Dieter, Wohin geht der Wandel der demokratischen Institutionen in Deutschland? Die Entwicklung der Demokratievorstellungen der Deutschen seit der Vereinigung, in: Gerhard Göhler(Hg.), Institutionenwandel (=Leviathan Sonderheft 16), Opladen 1997a, S. 253-284
- Fulbrook, Mary, Methodologische Überlegungen zu einer Gesellschaftsgeschichte der DDR, in: Richard Bessel/Ralph Jessen(Hg.), Die Grenzen der Diktatur. Staat und Gesellschaft in der DDR, Göttingen 1996, S. 274-297
- Fürstenberg, Friedrich, Deutschlands Wirtschaft nach der Wende, in: Robert Hettlage/Karl Lenz(Hg.), Deutschland nach der Wende. Eine Zwischenbilanz, München 1995, S. 93-118

G

- Gabriel, Karl/Alois Herlth/Klaus Peter Stromeier, Solidarität unter den Bedingungen entfalteter Modernität, in:(Hg.), Modernität und Solidarität. Konsequenzen gesellschaftlicher Modernisierung, Festschrift für Franz-Xaver Kaufmann, Freiburg-Basel-Wien 1997
- Gabriel, Oscar W.,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n: Max Kaase/Andreas Eisen/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Hellmut Wollmann, Politisches System, Opladen 1996, S. 231-319
- Gabriel, Oscar W., Einleitun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Transitionaprozeß, in: ders.(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a, S. 9-33
- Gabriel, Oscar W., Politische Einstellungen und Politisches Verhalten, in: ders./Everhard Holtmann(Ug.),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97c, S. 379-497
- Gabriel, Oscar W., parteiidentifikation, Kandidaten und politische Sachfragen als bestimmungsfaktoren des Parteienwettbewerbs, in: ders./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d, S. 233-254
- Gabriel, Oscar W., Demokratie in der Vereinigungskrise? Struktur, Entwicklung und Bestimmungsfaktoren der Einstellung zur Demokratie im vereinigten Deutschland, i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9 Jg., 3/1996b, S. 827-861
- Gabriel, Oscar W./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
- Gabriel, Oscar W./Frank Brettschneider, Die Bundestagswahl 1998: Ein Plebiszit gegen Kanzler Kohl?, in: APuZB52/1998, S. 20-32

- Gadamer, Hans-Georg,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2. Aufl. Tübingen 1965
- Gebhardt, Jürgen, Selbstregulierung und republikanische Ordnung in der politischen Wissenschaft der Federalist Papers, in: Gerhard Göhler/Kurt Lenk/Herfried Münkler/Manfred Walther(Hg.), Politische Institution im gesellschaftlichen Umbruch. Ideengeschichtliche Beiträge zur Theorie politischer Institutionen, Opladen 1990, S. 310-334.
- Gebhardt, Jürgen, Was ist der Gegenstand einer empirisch-hermeneutischen Theorie des Politischen?, in: Michael Th. Greven/Rainer SchmalzBruns(Hg.), Politische Theorie-heute. Ansätze und Perspektiven, Baden-Baden 1999, S. 101-119.
- Geertz, Clifford, Dichte Beschreibung. Beiträge zum Verstehen kultureller Systeme, Frankfurt/M 1987
- Geertz, Clifford, Die künstlichen Wilden. Der Anthropologe als Schriftsteller, Frankfurt/M. 1993
- Geertz, Clifford, Welt in Stücken. Kultur und Politik am Ende des 20. Jahrhunderts, Wien 1996
- Gehring, Uwe W./Jürgen R. Winkler, Parteienidentifikation, Kandidaten und Issueorientierung als Determinanten des Wahlverhaltens in Ost und Westdeutschland, in: Oscar W. Gabriel(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n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 S. 473-506
- Geißler, Heiner, Das Verhältnis zwischen Bürgern und Parteien aus der Sicht der CDU, in: Joachim Raschke(Hg.), Bürger und Parteien. Ansichten und Analysen einer schwierigen Beziehung, Opladen 1982, S. 264-282
- Gerhards, Jürgen, Öffentlichkeit, in: Otfried Jarren, Ulrich Sarcinelli, Ulrich Saxer(Hg.), Politische Kommunikation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Opladen 1998, S. 268-274
- Gerhardt, Uta, Normative Integration moderner Gesellschaften als Problem der soziologischen Theorie Talcott Parsons', in: Soziale Systeme, 4.Jg., 2/ 1998, S. 281-313
- Gerlach, Manfred, Mitverantwortlich. Als Liberaler im SED-Staat, Berlin 1991
- Gerner, Manfred, Partei ohne Zukunft? Von der SED zur PDS, München 1994
- Giegel, Hans-Joachim, Gesellschaftstheorie und Konfliktsoziologie, in: ders.(Hg.), Konflikt in modernen Gesellschaften, Frankfurt/M. 1998, S. 9-28
- Gilcher-Holtey, Ingrid, Kulturelle und symbolische Praktiken: das Unternehmen Pierre Bourdieu, in: Wolfgang Hardtwig/Hans-Ulrich Wehler(hg.), Kulturgeschichte heute, Göttingen 1996, S. 111-130
- Ginzburg, Carlo, Der Käse um die Würmer. Die Welt eines Müllers um 1600, Frankfurt/M. 1983

- Ginzburg, Carlo, Die Benandanti Feldkulte und Hexenwesen im 16. und 17. Jahrhundert, Neuaufl. Hamburg 1993
- Ginzburg, Carlo, Distanz und Perspektive. Zwei Metaphern, in: ders., Holztaugen. Über Nähe und Distanz, Berlin 1999, S. 212-240
- Glaebner, Gert-Joachim, Transition und Integration.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DDR- und Deutschlandforschung nach dem Umbruch, in: Ilse Spittmann/Gisela Helwig(Hg.), Die DDR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Probleme-Perspektiven-offen Fragen. Dreiundzwanzigste Tagung zum Stand der DDR-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 bis 8. Juni 1990, Köln 1990, S. 46-151
- Glaebner, Gert-Joachim, Demokratie und Politik in Deutschland, Opladen 1999
- Glötz, Peter, Tanker in kleine Boote. Eine Diskussion mit Peter Glötz, in: Sozialismus, 16. Jg., 8/1990, S. 5-10
- Gluchowski, Peter/Ul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 Sozialstrukturelle Grundlagen des Parteienwettbewerb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 S. 179-208
- Göhler, Gerhard, Politische Institutionen und ihr Kontext. Begriffliche und konzeptionelle Überlegungen zur Theorie politischer Institutionen, in: ders.(Hg.), Die Eigenart der Institutionen. Zum Profil politischer Institutionentheorie, Baden Baden 1994, S. 19-46
- Göhler, Gerhard/Ansgar Klein, Politische Theorien des 19. Jahrhunderts, in: Hans J. Liber(Hg.), Politische Theorien von Antike bis zur Gegenwart, Bonn 1991, S. 259-656
- Golsch, Lutz, Die politische Klasse im Parlament. Politische Professionalisierung von Hinterbänklern im Deutschen Bundestag, Baden-Baden 1998
- Goodman, Nelson, Weisen der Welterzeugung, Frankfurt/M. 1984
- Gransow, Volker/Konrad J. Jarausch(Hg.), Die deutsche Vereinigung. Dokumente zu Bürgerbewegung, Annäherung und Beitritt, Köln 1991
- Grassi, Ernesto, Humanismus und Marxismus. Zur Kritik der Verselbständigung von Wissenschaft; m. e. Anhang: Texte italienischer Humanisten, Reinbek b. Hamburg 1973
- Greenblatt, Stephen, Verhandlungen mit Shakespeare. Innenansichten der englischen Renaissance, Berlin 1990
- Greenblatt, Stephen, Schmutzige Riten. Betrachtungen zwischen Weltbildern, Berlin 1991
- Greiffenhagen, Martin, Kulturen des Kompromisses, Opladen 1999a
- Greiffenhagen, Martin/Sylvia Greiffenhagen, Ein schwieriges Vaterland. Zur politischen Kultur im vereinigten Deutschland, München 1993

- Greven, Michael Th., Parteimitglieder. Ein empirischer Essay über das politische Alltagsbewußtsein in Parteien, Opladen 1987
- Gröf, Wolfgang, »In der frischen Tradition des Herbstes 1989« . Die SDP/ SPD in der DDR: Von der Gründung über die Volkskammerarbeit bis zur deutschen Einheit, 2. verb. Aufl. Bonn 1996
- Günther, Klaus, Zur Kritikbedürftigkeit von Werner Patzelts Maßstäben der Kritik an Volksvertretern und Volk,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41. Jg., 2/2000, S. 327-334

## H

-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M. 1992
- Hsckel, Norbert, Parteienforschung und die Metamorphose der CDU(Ost), in: Projektgruppe Parteienforschung am Institut für Politikwissenschaft, Humboldt-Universität Berlin(Hg.), Parteien der DDR im Umbruch, Berlin 1990, S. 36-46
- Haldenwang, Christian von, Staatliches Handeln und politische Regulierung. Die Legitimität politischer Ordnungen im 21. Jahrhundert,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40. Jg., 3/ 1999, S. 365-389
- Hamilton, Alexander/James Madison/Jhon Jay, Die Federalist Papers. Übers., eingel. u. m. Anmerkungen versehen v. Barbara Zehnpfenning, Darmstadt 1993
- Hampele, Anne, Das Wahlbündnis » Die Grünen/Bündnis 90-BürgerInnenbewegung «, in: Helmut Müller-Enbergs/Marianne Schulz/Jan Wielgohs(Hg.), Von der Illegalität ins Parlament. Werdegang und Konzepte der neuen Bürgerbewegungen, 2. erw. Aufl. Berlin 1992, S. 307-341
- Hanisch, Ernst, Der lange Schatten des Staates. Österreichische Gesellschaftsgeschichte im 20. Jahrhundert, Wien 1994
- Hanisch, Ernst, Die linguistische Wende, in: Wolfgang Hardtwig/Hans Ulrich Wehler(Hg.), Kulturgeschichte heute, Göttingen 1996, S. 212-230
- Hanke, Irma, Über das Schweigen reden Diktaturerfahrung und Literatur, in: APuZB 13/1998. S. 3-12
- Hauser, Richard/Wolfgang Glatzer/Stefan Hradil/Gerhard Kleinhenz/Thomas Olk/Eckhart Pankoke, Ungleichheit und Soziapolitik, Opladen 1996
- Hechter, Michael, A Theory of Group Solidarity, in: ders.(Hg.),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sociology, Philadelphia 1983, S. 16-57
- Held, David, Democracy and the New Institutional Order, in: Daniele Archibugi/ David Held(Hg.), cosmopolitan Democracy, Cambridge 1995, S. 96-120

- Henkel, Rüdiger, Im Dienste der Staatspartei. Über Parteien und Organisationen der DDR; hg. v. der Unabhängigen Kommission zur Überprüfung des Vermögens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Baden-Baden 1994
- Hennis, Wilhelm, Die Rolle des Parlaments und die Parteiendemokratie, in: ders., Regieren im modernen Staat. Politikwissenschaftliche Abhandlungen I, Tübingen 1999a, S. 226-273(Erstveröffentlichung 1974)
- Hennis, Wilhelm, Verfassung und Verfassungswirklichkeit, in: ders., Regieren im modernen Staat. Politikwissenschaftliche Abhandlungen I, Tübingen 1996b, S. 183-213(Original 1968)
- Hereth, Michael, Die parlamentarische Opposi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69
- Hertle, Hans-Hermann, Der Fall der Mauer-Sternstunde einer friedlichen Revolution, in: APuZB 43-44/ 1999, S. 12-19
- Herz, Dietmar, die wohlverwogene Republik. Das konstitutinnelle Denken des politisch-philosophischen Liberalismus, Paderborn u. a. 1999
- Herzog, Dietrich, Politische Karrieren. Selektion und Professionalisierung politischer Führungsgruppen, Opladen 1975
- Herzog, Dietrich, Was heißt und zu welchem Ende studiert man Repräsentation?, in: ders./Bernhard Weßels(Hg.), Konfliktpotentiale und Konsensstrategien, Opladen 1989, S. 307-335
- Herzog, Dietrich, Der Funktionswandel des Parlaments in der sozialstaatlichen Demokratie, in: ders./Hilke Rebenstorf/Bernhard Weßels(Hg.),Parlament und Gesellschaft. Eine Funktionsanalys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Opladen 1993a, S. 13-52
- Herzog, Dietrich, Politik als Beruf: Max Webers Einsichten und die Bedingungen der Gegenwart, in: Hans-Dieter Klingemann/Wolfgang Luthardt(Hg.), Wohlfahrtsstaat, Sozialstruktur und Verfassungsanalyse, Opladen 1993b, S.107-126
- Herzog, Dietrich, Responsivität, in: Otfried Jarren/Ulrich Sarcinelli/Ulrich Saxer (Hg.), Politische Kommunikation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in Handbuch, Opladen-Wiesbaden 1998, S. 298-304
- Herzog, Dietrich./Hilke Rebenstorf/Camila Werner/Bernhard Weßels, Abgeordnete und Bürger. Ergebnisse einer Befragung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und der Bevölkerung, Opladen 1990
- Hesse, Joachim J./ Thomas Eilwein, 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Bde., 8., völlig Neubearb. u. erw. Aufl. Opladen-Wiesbaden 1997
- Heydemann, Günther, Stand und Perspektiven der zeitgeschichtlichen DDR- Forschung. Versuch eines Überblicks, in: Jürgen Fröhlich(Hg.),>Bürgerliche< Parteien in der SBZ/DDR. Zur Geschichte von CDU, LDP(D), DBD und NDPD 1945-1953, Köln 1994, S 11-24

- Hirschman, Albert O., Abwanderung und Widerspruch, Tübingen 1974
- Hirschman, Albert O.,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 World Politics, 45. Jg., 1993, S. 173-202
- Hirschman, Albert O., Selbstbefragung und Erkenntnis, München 1996
- Hofmann, Hasso/Horst Dreier, Repräsentation, Mehrheitsprinzip und Minderheitenschutz, in: Hans Peter Schneider/Wolfgang Zeh(Hg.),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New York 1989, S. 165-197
- Hofmann, Robert, Geschichte der deutschen Parteien. Von der Kaiserzeit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93
- Hofmann, Wilhelm, Repräsentative Diskurse. Untersuchungen zur sprachlich-reflexiven Dimension parlamentarischer Institutionen am Beispiel des englischen Parlamentarismus, Baden-Baden 1995
- Hofmann, Wilhelm./Gisela Riescher, Einführung in die Parlamentarismustheorie, Darmstadt 1999
- Hohlfeld, Christoph, Exkurs I. Die Grünen in Ostdeutschland, in: Joachim Raschke, Die Grünen. Wie sie wurden, was sie sind, Köln 1993a, S. 395-416
- Hohlfeld, Christoph, Bündnis90/Grüne - eine neue Partei?, in: Joachim Raschke, Die Grünen. Wie sie wurden, was sie sind, Köln 1993b, S.839-846
- Höhne, Roland, Von der Wende zum Ende: Die NDPD während des Demokratisierungsprozesses, in: Oskar Niedermay/Richard Stöss(Hg.),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113-142
- Hollis, Mart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An Introduction, Cambridge 1994
- Hölscheidt, Sven, Die Trennung des Abgeordneten von Partei und Fraktio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5.Jg., 3/1994, S. 353-369
- Holtmann, Everhard, Die Öffentliche Verwaltung, in: Oscar W. Gabriel/ Everhard Holtmann(Hg.),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97, S. 289-324
- Hondrich, Karl Otto/Claudia Koch-Arzberger, Solidarität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Frankfurt/M. 1992
- Hornung, Klaus, Plebiszitäre Demokratie und totalitäre Diktatur. Historische Erfahrungen mit direktdemokratischen Ideen und Programmen, in: Günther (Hg.), Repräsentative oder plebiszitäre Demokratie-eine Alternative? Grundlagen, Vergleiche, Perspektiven, Baden-Baden 1996, S. 73-92
- Hradil, Stefan, >Lebensführung< im Umbruch. Zur Rekonstruktion einer soziologischen Kategorie, in: Michsel Thomas(Hg.), Abbruch und Aufbruch. Sozialwissenschaf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Berlin 1992, S. 183-197
- Huber, Gerhard, Adam Smith: Der Zusammenhang von Moralphilosophie, Ökonomie und Institutionentheorie, in: Gerhard Göhler u. a.(Hg.), Politische Institutionen im gesellschaftlichen Umbruch, Opladen 1990, S. 293-309

]Hume, David, Politische und ökonomische Essays, 2 teilbde. m.e. Einleitung v. Udo  
Bermbach, Hamburg 1988

I

- Immerfall, Stefan, Die letzte Dekade westdeutscher Parteienforschung zur  
Analogie der Defizite von Parteien und Parteienforschung,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3. Jg., 1/1992, S. 172-189
- Immerfall, Stefan, Strukturwandel und Strukturwächen der deutschen Mitgliederparteien,  
in: APuZB1-2/1998, S. 3-12
- Ismayer, Wolfgang, Der deutsche Bundestag. Funktionen, Willensbildung, Reformansätze,  
Opladen 1992

J

- Jäger, Wolfgang, Politische Partei und Parlamentarische Opposition. Eine Studie zum  
politischen Denken von Lord Bolinbroke und David Hume, Berlin 1971
- Jäger, Wolfgang, (in Zusammenarbeit mit Michael Walter), Die Überwindung der  
Teilung. Der innerdeutsche Prozeß der Vereinigung 1989/90, Stuttgart 1998
- Jagodzinski, Wolfgang/Steffen M. Kühnel, Werte und Ideologien im Parteienwettbewerb,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a, S. 209-232
- Jagodzinski, Wolfgang/Steffen M. Kühnel, Werte, Ideologien und Wahlverhalten, in:  
Oscar W. Gabriel(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b, S. 449-471
- Jameson, Frederic, The Politics of Theory. Ideological Positions in the Postmodernism  
Debate, In: Paul Rabinow/William M. Sullivan(Hg.), Interpretative Social  
Science. A Second Look, Berkeley-Los Angeles-London 1987, S. 351-364
- Jann, Werner/Berhard Muszynski, Brandenburg, in: Jürgen Hartmann(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 u. aktual. Neuausg. Frankfurt/M.-New York  
1997, S. 163-207
- Janoski, Thomas,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Cambridge 1998
- Jensen, Stefan, Aspekte der Medien - Theorie, in: Zeitschrift für Soziologie, 13.Jg.,  
1984, S. 145-164
- Jesse, Eckhard, Die Partei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Wienand Gellner/  
Hans-Jochen Veen(Hg.), Umbruch und Wandel in westeuropäischen  
Parteiensystemen, Frankfurt/M. u. a. 1995 a, S. 223-236

- Jesse, Eckhard, Die politikwissenschaftliche DDR-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einer Timmermann(Hg.), DDR-Forschung. Bilanz und Perspektiven, Berlin 1995b, S. 315-357
- Jesse, Eckhard, Die Parteien im westlichen Deutschland von 1945 bis zur deutschen Einheit 1990,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a, S. 59-83
- Jesse, Eckhard, Die Parteien in der SBZ/DDR 1945-1989/90,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b, S. 84-130
- Jünger, Erwin, Mecklenburg-Vorpommern, in: Jürgen Hartmann(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 uaktual. Neuausg. Frankfurt/M.-New York 1997, S. 306-347

## K

- Kaack, Heino, Geschichte und Struktur des deutschen Parteiensystems, Opladen 1971
- Kaase, Max/Wolfgang G. Gibowski, Deutschland im Übergang. Parteien und Wähler vor der Bundestagswahl 1990 in: APuZ B 37-38/1990, s. 14-26
- Kaes, Anton, New Historicism: Literaturgeschichte im Zeichen der Postmoderne?, in: Moritz Baßler (Hg.), New Historicism-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M. 1995, S. 251-267
- Kaina, Viktoria, Wertorientierungen im Eliten-Bevölkerungsvergleich: Vertikale Distanzen, geteilte Loyalität und das Erbe der Trennung, in: Wilhelm p. Bürklin/Hilke Rebenstorf u. a.,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rgration, Opladen 1997, S.350-389
- Kaiser, Monika, Herrschaftsinstrumente und Funktionsmechanismen der SED in Bezirk, Kreis und Kommune,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II., 3, Frankfurt/M. 1995, S. 1791-1834
- Kaltefleiter, Werner/Hans-Joachim Veen, Zwischen freiem und imperativem Mandat-Zur Bindung von Mandatsträgern in der Verfassungswirklichkeit der Bundesrepublik, in: Brnd Guggenberger/Hans-Joachim Veen/Albrecht Zunker (Hg.), Parteienstaat und Abgeordnetenfreiheit. Zur Diskussion um das imperative Mandat, München 1976, S. 237-266
- Kamper, dietmar/Willem van Reijen (Hg.), Die unvollendete Vernunft. Moderne versus Postmoderne, Frankfurt/M. 1987
- Kant, Immanuel, Die Metaphysik der Sitten, Gesamtausgabe Bd. VII, Frankfurt/M. 1984

- Kaufmann, Franz-Xaver, Solidarität als Steuerungsform - Erklärungsansätze bei Adam Smith, in: ders./ Hans-Günter Krüsselberg(Hg.), Markt, Staat und Solidarität bei Adam Smith, Frankfurt/M. 1984, S. 158-184
- Kershaw, Ian, Hitler 1889-1936, Stuttgart 1998
- Kersting, Wolfgang, Die politische Philosophie des Gesellschaftsvertrags, Darmstadt 1994
- Kevenhörster, Paul, Repräsentation, in: Otfried Jarren/Ulrich Sarcinelli/Ulrich Saxer (Hg.), Politische Kommunikation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Ein Handbuch, Opladen-Wiesbaden 1998, S. 292-297
- Kiefer, Markus, Innerparteiliche Lenkungs-und Kontrollstrukturen der CDUD und deren Wirksamkeit von 1952 bis 1989, in: Michael Richter/Martin Reißmann (Hg.), Die Ost-CDU. Beiträge zu ihr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Weimar-Köln-Wien 1995, S. 139-158
- Kiefer, Markus, Die politischen Parteien, in: Karl Schmitt(Hg.), Thüringen. Eine politische Landeskunde, Weimar-Köln-Wien 1996, S. 37-67
- Kiesow, Rainer M./ Dieter Simon(Hg.), Auf der Suche nach der verlorenen Wahrheit. Zum Grundlagenstreit in der Geschichtswissenschaft, Frankfurt/M.-New York 2000
- Kleger, Heinz, Stadtregion und Transnation, Herausforderungen politischer Theorie heute, in: Michael Th. Greven/Rainer Schmalz-Bruns(Hg.), Politische Theorie-heute. Ansätze und Perspektiven, Baden-Baden 1999, S. 385-414
- Klein, Hans H., Status des Abgeordneten,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 (H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I: Demokratische Willensbildung - Die Staatsorgane des Bundes, Heidelberg 1987, S. 367-390
- Klein, Markus/Claudio Caballero, Rückwärtsgewandt in die Zukunft. Die Wähler der PDS bei der Bundestagswahl 1994,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7.Jg., 2/1996, S. 229-247
- Klein, Markus/Kai Arzheimer, Grau in Grau. Die Grünen und ihre Wähler nach eineinhalb Jahrzehnten, in: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9. Jg., 4/1997, S. 650-673
- Klein, Markus/Dieter Ohr, Gerhard oder Helmut? >Unpolitische< Kandidateneigenschaften und ihr Einfluss auf die Wahlentscheidung bei der Bundestagswahl 1998,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41. Jg., 2/2000, S. 199-224
- Kleinert, Hubert, Die GRÜNEN 1990/91. Vom Wahldedebakel zum Neuanfang, in: APuZB 44/1991, S. 27-37
- Kleinert, Hubert, Bündnis 90/DIE GRÜNEN: Eine neue dritte Kraft?, in: APuZB 6/1996, S. 36-44
- Kleinert, Hubert, Vom Protest zur Regierungspartei. Die Geschichte der Grünen, Frankfurt/M. 1992

- Kleßmann, Christoph/Georg Wagner, Einleitung, in: dies.(Hg.), Das gespaltene Land. Leben in Deutschland 1945-1990: Texte und Dokumente zur Sozialgeschichte, München 1993, S. 11-20
- Klingemann, Hans-Dieter, Die Entstehung wettbewerbsorientierter Parteiensysteme in Osteuropa, in: Wolfgang Zapf/Meinolf Diekes (Hg.), Institutionenvergleich und Institutionendynamik, Berlin 1994, S.13-38
- Klockmann, Susanne, Eine Gegend voller Geheimnisse<. Zu Irene Disches Erzählung >Eine Jüdin für Charles Allen< und Wendehälse anderer Art, in: Sven Kramer Gegenwartsliteratur, Opladen 1996, S.115-135
- Kluxen, Kurt, Geschichte und Problematik des Parlamentarismus, Frankfurt/M.1983
- Knight, Jack, Institution and Social Conflict, Cambridge 1992
- Koch, Thomas, Unternehmer als Klientel der PDS, in: Michael Brie/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a, S.81-101
- Koch, Thomas, Die PDS im Vereinigungsprozeß, in: Michael Brie/ 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b, S.181-199
- Kocka, Jürgen, Einleitende Fragestellungen, in: ders. (Hg.), Theorien in der Praxis des Historikers (Geschichte und Gesellschaft, Sonderheft 3), Göttingen 1997, S.9-37
- Kocka, Jürgen, Vereinigungskrise. Zur Geschichte der Gegenwart, Göttingen 1995
- König, Helmut/Michael Kohlstruck/Andreas Wöll (Hg.), Vergangenheitsbewältigung am Ende des zwanzigsten Jahrhunderts (=Leviatha, Sonderheft 18/1998), Opladen 1998
- Korte, Karl-Rudolf, Die Chance genutzt? Die Politik zur Einheit Deutschlands, Frankfurt/M.-New York 1994
- Korte, Karl-Rudolf, Demokratie braucht Literatur. Vom deutschen Umgang mit erzählender Literatur, in: APuZ B13-14/1996, S.24-31
- Koselleck, Reinhart, Historia Magistra Vitae. Über die Auflösung des Topos im Horizont neuzeitlicher bewegter Geschichte, in: ders.,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Frankfurt/M.1989, S.38-66
- Köstering, Hans, Vier Jahre Verwaltungsaufbau im Land Brandenburg-Rezeption, Evolution oder Innovation?, in: Verwaltungsrundschau, 3/1995, S.83-89
- Kreikenbom, Henry, Einstellungen der Bürger zu den Parteien, in: Oscar W. Gabriel (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 S.167-187

- Kreikenbom, Henry, Nachwirkungen der SED-Ära, Die PDS als Katalysator der Partei- und Wahlpräferenz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1998, S.24-46
- Krieger, Joachim Edward, Rollenorientierungen, Rollenerwartungen und Rollenverhalten von Ost-Abgeordneten im Deutschen Bundesta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Frankfurt/M. u. a. 1998
- Krockow, Christian Graf von/Peter Lösche (Hg.), Parteien in der Krise. Das Parteiensystem und der Aufstand des Bürgerwillens, München 1986
- Kropp, Sabine, Die Länder in der bundesstaatlichen Ordnung, in: Oscar W. Gabriel/ Everhard Holtmann (Hg.),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97a, S.245-288
- Kropp, Sabine, Oppositionsprinzip und Mehrheitsregel in den Landesverfassungen: Eine Analyse am Beispiel des Verfassungskonflikts in Sachsen-Anhalt,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8.Jg., 3/1997b, S.370-390
- Krüger, Hans-Peter, Nachwort, in: John Dewey, Die Öffentlichkeit und ihre Probleme, Bodenheim 1996, S.193-211
- Krüger-Potratz, Marianne/Annette Kaminsky/Werner Winter. Völkerfreundschaft und internationale Solidarität, in: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Hg.), Freundschaft! Geschichte, Struktur und Funktionsweise der DDR-Volksbildung, Bd. 3, Teil II, Berlin 1996
- Kuhn, Thomas S., Die Struktur wissenschaftlicher Revolutionen, 2. rev. Aufl. Frankfurt/ M. 1976
- Kühne, Jörg-Derlet, Volksvertretung im monarchischen Konstitutionalismus (1814-1918), in: Hans-Peter Schneider/Wolfgang Zeh (Hg.),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New York 1994, S.49-101
- Kühnel, Wolfgang/Carola Sallmon-Metzner, Grüne Partei und Grüne Liga. Der geordnete Aufbruch der ostdeutschen Ökologiebewegung, in: Helmut Müller-Enbergs/Marianne Schulz/Jan Wielgohs (Hg.), Von der Illegalität ins Parlament. Werdegang und Konzepte der neuen Bürgerbewegungen, 2. erw. Aufl. Berlin 1992, S.166-220
- Kunert, Günter, Erwachsenenspiele, Erinnerungen, München-Wien 1997
- Kunig, Philip, Die Parteien,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 (H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 Demokratische Willensbildung-Die Staatsorgane des Bundes, Heidelberg 1987, S.103-147
- Kuppe, Johannes L., Streit über Deutschlandpolitik und DDR-Forschung, in: Heiner Timmermann (Hg.), DDR-Forschung. Bilanz und Perspektiven Berlin 1995, S.59-67

## L

- Land, Rainer/Ralf Possekel, PDS und Moderner Sozialismus, in: Michael Brie/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 S.112-130
- Lange, Elmar/Peter Schöber, Sozialer Wand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ispiel: Lutherstadt Wittenberg, Opladen 1993
- Lapp, Peter J., Die Volkskammer der DDR, Opladen 1975
- Lapp, Peter J., Die > befreundeten Parteien < der SED. DDR-Blockparteien heute, Köln 1988
- Lapp, Peter J., Die Blockparteien und ihre Mitglieder, in: Enquete-Kommission >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 Bd. II, 1, Frankfurt/M. 1995, S. 290-300
- Laslett, Peter, Introduction, in: John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 Critical Edi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Apparatus, Cambridge 1960, S. VI-XVII
- LeGoff, Jacques, Neue Geschichtswissenschaft, in: ders./ Roger Chartier/ Jacques Revel (Hg.), Die Rückeroberung des historischen Denkens, Frankfurt/M. 1994, S. 11-61
- Lehmbruch, Gerhard, Die Politikwissenschaft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ders. (Hg.), Einigung und Zerfall. Deutschland und Europa am Ende des Ost-West-Konflikts, Opladen 1995, S. 329-360
- Lenk, Kurt, Parlamentarismuskritik im Zeichen politischer Theologie. Carl Schmitts >> Sakralisierung << der Demokratie zum totalen Staat, in: APuZB 51/1996, S. 15-22
- Lenk, Kurt, Carl Schmitts Parlamentarismuskritik. Ein Kapitel politischer Existentialismus, in: Carsten Schlüter-Knaur (Hg.), Die Demokratie überdenken. Festschrift für Wilfried Röhrich, Berlin 1997, S. 39-54
- Leonardy, Uwe, Deutscher Föderalismus jenseits 2000: Reformiert oder deformiert?, in: Zeitschrift Parlamentsfragen, 30 Jg., 1/1999, 135-162
- Lepenies, Wolf, Benimm und Erkenntnis. Zwei Vorträge, Frankfurt/M. 1997
- Lepenies, Rainer M., Parteiensystem und Sozialstruktur. Zum Problem der Demokratisierung der deutschen Gesellschaft, in: Gerhard A. Ritter (Hg.), Die deutschen Parteien vor 1978, Köln 1973, S. 56-80
- Lepenies, Rainer M., Interessen und Ideen. Die Zurechnungsproblematik bei Max Weber, in: ders., Interessen, Ideen und Institutionen, Opladen 1990a, S. 31-47
- Lepenies, Rainer M., Soziologische Theoreme über Sozialstruktur der >> Moderne << und die >> Modernisierung <<, in: ders., Interessen Ideen und Institutionen Opladen 1990b, S. 211-231

- Leunig, Sven, Verfassungsverhandlungen in Thüringen 1991 bis 1993. Ein Entscheidungsprozeß im Schatten des Mehrheitbeschlusses, Frankfurt/M. u. a. 1996
- Lévi-Strauss, Claude, Die elementaren Strukturen der Verwandtschaft, Frank/M. 1981
- Linck, Joachim/Siegfried Jutzi/Jörg Hopfe, Die Verfassung des Freistaats Thüringen. Kommentar, Stuttgart u. a. 1994
- Linnemann, Rainer, Die Partei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onsituierung, Mitgliederentwicklung, Organisationsstrukturen, Münster-New York 1994
- Linz, Juan J.,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Nature of Contemporary Democracies, in Garry Marks/Larry Diamond(Hg.), Reexamining Democracy. Essays in Honor of Seymour Martin Lipset, Newbury Park u. a. 1992, S. 181-207
- Lipp, Carola, Politische Kultur oder das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in der Kultur, in: Wolfgang Hardtwig/Hans-Ulrich Wehler(Hg.), Kulturgeschichte heute, Göttingen 1996, S. 78-110
- Lipset, Seymour M./Stein Rokkan, Cleavages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dies.(Hg.),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1967, S. 1-64
- Locke, John, Zwei Abhandlungen über die Regierung. Hg. U. eingel. V. Walter Euchner, Frankfurt/M. 1977
- Lohse, Jörg Landtagsabgeordnete in Sachsen-Anhalt: Auf den Pfaden politischer Professionalisierung,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30.Jg., 1/1999, S.117-134
- Lösche, Peter, »Lose verkoppelte Anarchie«*.Zur aktuellen Situation von Volksparteien am Beispiel der SPD, in:APuZB43/1993, S. 34-45*
- Lösche, Peter, Kl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Parteien,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4
- Lösche, Peter, /Franz Walter, Die SPD.Klassenpartei - Volkspartei -Quotenpartei: Zur Entwicklung der Sozialdemokratie von Weimar bis zu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Darmstadt 1992
- Lösche, Peter, /Franz Walter, DieFDP. Richtungsstreit und Zukunftszweifel, Darmstadt 1996
- Lüdtke, Alf, Einleitung: Was ist und Wer treibt Alltagsgeschichte?, in: ders.(Hg.),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M.-New York 1989, S. 9-47
- Lüdtke, Alf, Sprache und Herrschaft in der DDR. Einleitende Überlegungen, in ders./ Peter Becker(Hg.), Akten. Eingaben. Schaufenster: Die DDR und ihre Texte, Berlin 1997a, S. 11-26
- Lüdtke, Alf/Peter Becker(Hg.), Akten. Eingaben. Schaufenster. Die DDR und ihre Texte. Erkundigungen zu Herrschaft und Alltag, Berlin 1997

- Luhmann, Niklas,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1997a
- Luthardt, Wolfgang/Arno Waschkuhn, Plebiszitäre Komponenten i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Entwicklungsstand und Perspektiven, in: Ansgar Klein/Rainer Schmalz-Bruns(Hg.), Politische Beteiligung und Bürgerengagement in Deutschland, Bonn 1997, S. 59-87
- Lützeler, Paul M., Der postmoderne Neohistorismus in den amerikanischen Humanities, in: Hartmut Eggert/Ulrich Profutlich/Klaus R. Scherpe (Hg.), Geschichte als Literatur. Formen und Grenzen der Repräsentation der Vergangenheit, Stuttgart 1990, S.67-76
- Lützeler, Paul M., »New Historicism«: Methoden-Experimente in den USA, in: ders., Klio oder Kalliope? Literatur und Geschichte: Sondierung, Analyse, Interpretation, Berlin 1997, S.170-178
- Lyotard, Jean-Francois, Das postmoderne Wissen. Ein Bericht, Graz-Wien 1981
- Lyotard, Jean-Francois, Der Widerstreit, München 1989

## M

- Mählert, Ulrich, Die Partei hat immer recht! Parteisäuberungen 1936-1953, Paderborn u. a. 1998, S.315-457
- Malinowski, Bronislaw, Korallengärten und ihre Magie. Bodenbestellung und bäuerliche Riten auf den Trobriand-Inseln, Frankfurt/M. 1981
- Marek, Dieter/Doris Schilling, Neubildung des Landes 1990, in: Bernhard Post/Volker Wahl (Hg.), Thüringen-Handbuch. Territorium, Verfassung, Parlament, Regierung und Verwaltung in Thüringen 1920 bis 1995, Weimar 1999, S.60-68
- Margalit, Avishai, Politik der Würde. Über Achtung und Verachtung, m. e. Vorwort v. Frize Stern, 2. Aufl. Berlin 1997
- Markovits, Inga, Rechts-Geschichte. Ein DDR-Zivilprozeß aus den 1980er Jahren, in: Alf Lütke/Peter Beckger (Hg.), Akten. Eingaben. Schaufenster: Die DDR und ihre Texte, Berlin 1997, S.259-278
- Marquard, Odo, Glück im Unglück. Philosophische Überlegungen, München 1995
- Marschall, Stefan, Public Relations der Parlamente. Parlamentarisches Kommunikationsmanagement in der modernen Öffentlichkeit,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30.Jg., 3/1999, S.699-715
- Mausm Marcel, Soziologie und Anthropologie I, Frankfurt/M. 1989
- Meckel, Markus, Konsequenzen aus den Erfahrungen der Oppositionszeit: Partei oder soziale Bewegung?, in: Dieter Dowe (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 S.53-66

- Medick, Hans, Missionare im Ruderboot? Ethnologische Erkenntnisweisen als Herausforderung an die Sozialgeschichte, in: Alf Lüdtke (Hg.),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M. 1989, S.48-84
- Mergel, Thomas, Kulturgeschichte-die neue »große Erzählung«? Wissenssociologische Bemerkungen zur Konzeptualisierung sozialer Wirklichkeit in der Geschichtswissenschaft, in: Wolfgang Hardtwig/Hans-Ulrich Wehler (Hg.), Kulturgeschichte heute, Göttingen 1996, S.41-77
- Merkel, Wolfgang, Theorien der Transformation: Die demokratische Konsolidierung postautoritärer Gesellschaften, in: Klaus von Beyme/Claus Offe (Hg.), Politische Theorien Theorien in der Ära der Transformation (=PVS-Sonderheft 26), Opladen 1996, S.30-58
- Merkel, Wolfgang, Einleitung, in: ders./Eberhard Sandschneider (Hg.), Systemwechsel 3. Parteien im Transformationsprozeß, Opladen 1997a, S.9-21
- Merkel, Wolfgang, Systemtransformation. Eine Einführung in die Theorie und Empirie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Opladen 1999
- Merkel, Wolfgang/Hans-Jürgen Puhle, Von der Diktatur zur Demokratie. Transformationen, Erfolgsbedingungen, Entwicklungspfade, Opladen-Wiesbaden 1999
- Meuschel, Sigrid, Legitimation und Parteiherrschaft in der DDR. Zum Paradox von Stabilität und Revolution in der DDR 1945-1989, Frankfurt/M.1992
- Mill, John Stuart, Betrachtungen über d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hg. v. K. L. Shell, Paderborn 1971
- Mill, John Stuart,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Buffalo New York 1991a
- Mill, John Stuart, Über die Freiheit, Leipzig-Weimar 1991b
- Milligan, David/William Watts Miller (Hg.), Liberalism, Citizenship and Autonomy, Aldershot u. a. 1992
- Mintzel, Alf, Die CSU in Bayern als Forschungsobjekt-Entwicklung, stand, Defizite und Perspektiven der CSU-Forschung,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81-118
- Mintzel, Alf/Hermann Schmitt, Krise der Parteiendemokratie?, in: Politische Bildung, 14.Jg., 1981, S.3-16
- Möller, Bärbel, Parteien im lokalen Raum: Empirische Befunde aus Jena und Frankfurt (Oder),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195-213
- Mommsen, Wolfgang J., 1848. Die ungewollte Revolution: Die revolutionären Bewegungen in Europa 1830-1849, Frankfurt/M.1998

- Montana, Leo, Gerechtigkeitsansprüche und Ungerechtigkeits erleb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Walter R. Heinz/Stafan E. Hormuth (Hg.), Arbeit und Gerechtigkeit im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ß Opladen 1997, S.231-274
- Montrose, Louis A., Die Renaissance behaupten. Poetik und Politik der Kultur, in: Moritz Baßler (Hg.), New Historicism - Literaturgeschichte als Poetik der Kultur, Frankfurt/M.1998, S.60-93
- Moreau, Patrick (in Zusammenarbeit mit Jürgen Lang und Viola Neu), Was will die PDS?, Frankfurt/M.-Berlin 1994
- Moreau, Patrick/Jürgen P. Lang, Aufbruch zu neuen Ufern? Zustand und Perspektiven der PDS, in: APuZ B 6/1996, S.54-61
- Morgan, Robert J.,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on in the Tenth Federalist, in: The Journal of Politics, 36.Jg., 4/1974, S.852-885
- Morley, David, Theoretical Orthodoxies: Textualism, Constructivism and the New Ethnography in Cultural Studies, in: Marjorie Ferguson/Peter Golding (Hg.), Cultural Studies in Question, London u. a. 1997, S.121-137
- Morlino, Leonardo,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in: Richard Gunther/Hans-Jürgen Puhle/P. Nikiforos Diamandouros (Hg.), The Politic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Baltimore/London 1995, S.315-388
- Müller, Klaus, Verfassung des Freistaats Sachsen. Kommentar, Baden-Baden 1993
- Müller, Klaus, Der osteuropäische Wandel und die deutsch-deutsche Transformation. Zum Revisionsbedarf modernisierungstheoretischer Erklärungen, in: Rudi Schmidt/Burkhard Lutz (Hg.), Chancen und Risiken der industriellen Restrukturierung in Ostdeutschland, Berlin 1995, S.1-42
- Müller, Klaus, Kontingenzen der Transformation, in: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4/1996, S.449-466
- Müller, Reinhard, Kein glückliches Land,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7. 12. 1998, S.1
- Müller-Enbergs, Helmut, Welchen Charakter hatte die Volkskammer nach den Wahlen am 18. März 1990?, in: Hans-Dieter Klingemann/Richard Stöss/Bernhard Weßels (Hg.), Politische Klasse und politische Institutionen.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Eliteforschung, Opladen 1991, S.235-255
- Müller-Enbergs, Helmut (Hg.), Was will die Bürgerbewegung?, Augsburg 1992
- Müller-Enbergs, Helmut, Zwischen Bewahrung und Modernisierung. Politische Einstellungen in der letzten Volkskammer der DDR, in: Dietrich Herzog/Hilke Rebenstorf/Bernhard Weßels (Hg.), Parlament und Gesellschaft. Eine Funktionsanalys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Opladen 1993, S. 248-271
- Müller-Enbergs, Helmut/Marianne Schulz/Jan Wielgoß (Hg.), Von der Illegalität ins Parlament. Werdegang und Konzepte der neuen Bürgerbewegungen, 2. erw. Aufl. Berlin 1992

- Münch, Richard, Basale Soziologie: Soziologie der Politik, Opladen 1982a  
Münch, Richard, Theorie des Handelns, Frankfurt/M.1982b  
Münch, Richard, Die Struktur der Moderne. Grundmuster und differentielle Gestaltung des institutionellen Aufbaus der modernen Gesellschaften, Frankfurt/ M.1984  
Münch, Richard, Dialektik der Kommunikationsgesellschaft, Frankfurt/M.1991  
Münch, Richard, Risikopolitik, Frankfurt/M.1996  
Münch, Richard, Globale Dynamik, lokale Lebenswelten. Der schwierige Weg in die Weltgesellschaft, Frankfurt/M.1998  
Mund, Verena, Civil versus civilized society? Politische Ordnungskonzeptionen schottischer Aufklärer im Vergleich, in: Reinhart Koselleck/Klaus Schreiner (Hg.), Bürgerschaft, Stuttgart 1994, S.129-160  
Muszynski, Bernhard, Die ostdeutschen Bundesländer und die kritische Masse für eine Reform des deutschen Föderalismus, in: Jürgen Hartmann (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 u. aktual. Neuausg. Frankfurt/ M.-New York 1997, S.35-49

N

- Nehring, Christel, Rolle, Bedeutung und Wirkungsmöglichkeiten der Blockparteien-Die DBD,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II., 4, Frankfurt/M. 1995, S.2375-2398  
Neubert, Ehrhart, Geschichte der Opposition in der DDR 1949-1989, Berlin 1997  
Neugebauer, Gero, Die SPD, in: Oskar Niedermayer (Hg.),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6, S.41-66  
Neugebauer, Gero/Richard Stöss, Die PDS. Geschichte. Organisation. Wähler. Konkurrenten, Opladen 1996  
Neyer, Jürgen, Legitimes Recht oberhalb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es? Supranationalität als Herausforderung für die Politikwissenschaft,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40.Jg., 3-1999, S.390-414  
Niedermayer, Oskar, Das intermediäre System, in: Max Kaase/Andreas Eisen/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Hellmut Wollmann, Politisches System, Opladen 1996a, S.156-230  
Niedermayer, Oskar, Zur systematischen Analyse der Entwicklung von Parteiensystemen, in: Oscar W. Gabriel/Jürgen W. Falter (Hg.), Wahlen und politische Einstellungen in westlichen Demokratien, Frankfurt/M. 1996b, S.19-49  
Niedermayer, Oskar, Das gesamtdeutsche Parteiensystem,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a, S.106-130

- Niedermayer, Oskar, Beweggründe des Engagements in politischen Parteien,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b, S.323-337
- Niedermayer, Oska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 Niethammer, Lutz/Alexander von Plato/Dorothee Wierling, Die volkseigene Erfahrung. Eine Archäologie des Lebens in der Industrieprovinz der DDR, Berlin 1991
- Noller, Peter, Globalisierung, Standträume und Lebensstile. Kulturelle und lokale Repräsentationen des globalen Raumes, Opladen 1999
- Nullmeier, Frank, Interpretative Ansätze in der Politikwissenschaft, in: Arthur Benz/Wolfgang Seibel (Hg.), Theorieentwicklung in der Politikwissenschaft - eine Zwischenbilanz, Baden-Baden 1997, S.101-144
- Nullmeier, Frank, Interpretative Politikanalyse in der Theorienkonkurrenz, in: Andreas Reckwitz/Holger Siver (Hg.), Interpretation, Konstruktion, Kultur. Ein Paradigmenwechsel in den Sozialwissenschaften, Opladen-Wiesbaden 1999, S.219-238

## O

- O'Neill, Onora, Tugend und Gerechtigkeit. Eine konstruktive Darstellung des praktischen Denkens, Berlin 1996
- Oberndörfer, Dieter/Gerd Mielke/Ulrich Eith, In den Siegesbechern der Parteien finden sich Wermutstropfen, in: Frankfurter Rundschau, 21.10. 1994, S.16
- Oberreuter, Heinrich, Politische Parteien: Stellung und Funktion im Verfass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Alf Mintzel/Heinrich Oberreuter (Hg.),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Opladen 1992a, S.15-40
- Oberreuter, Heinrich, Vom »sozialistischen« zum demokratischen Parlamentarismus, in: Jürgen Hartmann/Uwe Thaysen (Hg.), Pluralismus und Parlamentarismus in Theorie und Praxis. Winfried Steffani zum 65. Geburtstag, Opladen 1992b, S.285-297
- Oexle, Otto G., Geschichte als Historische Kulturwissenschaft, in: Wolfgang Hardtwig/Hans-Ulrich Wehler (Hg.), Kulturgeschichte heute, Göttingen 1996, S.14-40
- Offe, Claus, Die deutsche Vereinigung als »natürliches Experiment«, in: Bernd Giesen/Claus Leggewie (Hg.),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1991, S.77-86
- Offe, Claus, Varieties of Transition. The East European and East German Experience, Cambridge 1996a

- Oliver, Dawn/Derek Heater, The Foundations of Citizenship, New York u.a. 1994
- Oppenländer, Karl Heinrich (Hg.), Wiedervereinigung nach sechs Jahren: Erfolge, Defizite, Zukunftsperspektiven im Transformationsprozeß, Berlin-München 1997
- Otto, Stephan, Rekonstruktion der Geschichte. Zur Kritik der historischen Vernunft: Zweiter Teil, München 1992

P

- Papke, Gerhard, Rolle, Bedeutung und Wirkungsmöglichkeiten der Blockparteien- Die LDPD,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 II., 4, Frankfurt/M. 1995, S.2399-2463
- Parsons, Talcott, Evolutionäre Universalien der Gesellschaft, in: Wolfgang Zapf (Hg.), Theorien des sozialen Wandels, Köln-Berlin 1969b, S.55-74
- Parsons, Talcott, Zur Theorie der sozialen Interaktionsmedien, Opladen 1980
- Patzelt, Werner J., Politikwissenschaft, in: Uwe Flick u.a.(Hg.), Handbuch Qualitative Sozialforschung. Grundlagen, Konzepte, Methoden und Anwendungen, München 1991, S.53-55
- Patzelt, Werner J., Abgeordnete und Repräsentation. Amtsverständnis und Wahlkreisarbeit, Passau 1993
- Patzelt, Werner J., Das Volk und seine Vertreter: eine gestörte Beziehung, in: ApuZ B 11/1944, S.14-23
- Patzelt, Werner J., Deutsche Politik unter Reformdruck, in: Robert Hettlage/Karl Lenz (Hg.), Deutschland nach der Wende. Eine Zwischenbilanz, München 1995b, S.68-92
- Patzelt, Werner J., Vergleichende Parlamentarismusforschung als Schlüssel zum Systemvergleich, in: Winfried Steffani/Uwe Thaysen (Hg.), Demokratie in Europa. Zur Rolle der Parlamente (=Sonderheft der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Opladen 1995c, S.355-385
- Patzelt, Werner J., Regierung und Parlament: Implementationsproble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den neuen Ländern, in: Axel Murswieck (Hg.), Regier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stitutionen und Politik, Opladen 1996a, S.57-78
- Patzelt, Werner J., Imperatives Mandat und plebiszitäre Elemente: Nötige Schranken der Abgeordneten Herrlichkeit?, in: Günther Rüter (Hg.), Repräsentative oder plebiszitäre Demokratie-eine Alternative? Grundlagen, Vergleiche, Perspektiven, Baden-Baden 1996b, S.183-200
- Patzelt, Werner J., Zum politikwissenschaftlichen Nutzen der Evolutionären

- Erkenntnistheorie, in: Rupert Riedl/Manuela Delpo (Hg.), Die Evolutionären Erkenntnistheorie (EF) im Spiegel der Wissenschaften, Wien 1996c, S.273-288
- Patzelt, Werner J., Deutschlands Abgeordnete: Profil eines Berufsstands, der weit besser ist als sein Ruf, in: Winfried Steffani/Uwe Thaysen (Hg.), Parlamente und ihr Umfeld. Daten und Analysen zu einer herausfordernden Regierungsform, Opladen 1997a, S.311-351 (Original 1996)
- Patzelt, Werner J., Ostdeutsche Parlamentarier in ihrer ersten Wahlperiode: Wandel und Angleichung, in: Wilhelm H. Schröder (Hg.), Politik und Gesellschaft (= Historical Social Research 22, Sonderheft 20 Jahre Teill 2), 1997b, S.160-180
- Patzelt, Werner J., Der Bundestag, in: Oscar W. Gabriel/Everhard Holtmann (Hg.),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97c, S.121-179
- Patzelt, Werner J., Ein latenter Verfassungskonflikt? Die Deutschen und ihr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9. Jg.,4/1998a, S.725-757
- Patzelt, Werner J., Wider das Gerede vom Fraktionszwang! Funktionslogische Zusammenhänge, populäre Vermutungen und die Sicht der Abgeordnet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9. Jg.,2/1998b, S.323-347
- Patzelt, Werner J., Parlamentskommunikation, in: Otfried Jarren/Ulrich Sarcinelli/ Ulrich Saxer (Hg.), Politische Kommunikation in d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 Opladen 1998c, S.431-441
- Patzelt, Werner J., Parlamentarische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Normative Erwägungen, empirische Befunde und praktische Empfehlungen, in: Zeitschrift für Politik, 46. Jg., Neue Folge, 3/1999, S.243-282
- Patzelt, Werner J./Karin Algasinger, Das Parteiensystem in Sachsen, in: Oskar Niedermayer (Hg.),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6, S.237-262
- Patzelt, Werner J./Roland Schirmer, Parlamentarismusgrün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APuZB 27/1996, S.20-28
- Patzelt, Werner J. (unter Mitarbeit v.Joachim Amm), Sachsen, in: Jürgen Hartmann (Hg.), Handbuch der deutschen Bundesländer, 3. erw. und aktual. Neuausg. Frankfurt/M.-New York 1997, S.5003-545
- Pawlowski, Dietrich, Wie im Westen so auf Erden. Sachsen-Anhalts verkorkste Wiedergeburt, Berlin 1997
- Pesch, Volker, Handlungstheorie und Politische Kultur, Wiesbaden 2000
- Peter, Edgar, Einigungsvertrag und Arbeitsrecht, in: Kritische Justiz, 23. Jg., 1990, S.478-485

- Peters, Bernhard, Die Integratio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M. 1993
- Pfau, Thomas, Aspekte der Entwicklung liberaler Kräfte in der DDR vom Herbst 1989 bis zum Herbst 1990,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105-112
- Pitkin, Hannah F.,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 a. 1967
- Poguntke, Thomas, Der Stand der Forschung zu den Grünen: Zwischen Ideologie und Empirie,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187-210
- Poguntke, Thomas, Bündnis, 90/Die Grünen, in: Oskar Niedermayer (Hg.),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6, S.87-109
- Poguntke, Thomas, Politische Parteien, in: Oscar W. Gabriel/Everhard Holtmann (Hg.), Handbuch Politisches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Wien 1997, S.501-555
- Poguntke, Thomas/Rüdiger Schmitt-Beck, Still the Same with a New Name? Bündnis, 80/Die Grünen after Fusion, in: German Politics, 3/ 1994, S.97-113
- Pohl, Rüdiger/Joachim Ragnitz, Ostdeutsche Wirtschaft: Kein Grund zur Resignation, in: Arno Waschkuhn/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Lehr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9, S.271-291
- Pollack, Detlef, Sozialstruktureller Wandel, Institutionentransfer und die Langsamkeit der Individuen. Europa-Universität Viadrina, Arbeitsberichte, Frankfurt/Oder 1996
- Pollack, Detlef/Gerf Pickel, Die ostdeutsche Identität-Erbe des DDR-Sozialismus oder Produkt der Wiedervereinigung? Die Einstellung der Ostdeutschen zu sozialer Ungleichheit und Demokratie, in: APuZB 41-42/1998, S.9-23
- Popp, Roland, Responsivität, in: Peter Precht/Franz-Peter Burkard (Hg.), Metzler Philosophie Lexikon, Stuttgart-Weimar 1996, S.451-452
- Post, Bernhard/Volker Wahl (Hg.), Thüringen-Handbuch. Territorium, Verfassung, Parlament, Regierung und Verwaltung in Thüringen 1920 bis 1995, Weimar 1999
- Prantl, Heribert Wo ist die deutsche Einheit?, in: Süddeutsche Zeitung, 2./3. 10. 1999, S.4
- Preuss, Ulrich K., Dokumentation: Der Entwurf der Arbeitsgruppe Neue Verfassung der DDR des Runden Tisches für eine Verfass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Kritische Justiz, 23.Jg., 1990, S.222-262
- Preyer, Gerhard, Mitgliedschaftsbedingungen, in: ders. (Hg.), Strukturelle Evolution und das Weltsystem, Frankfurt/M. 1998a, S.71-119
- Probst, Lothar, Wer ist die PDS-zum Beispiel in Rostock?,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7.Jg., 2/1997, S.216-229

## R

- Rabinow, Paul/William M. Sullivan, The Interpretative Turn. A Second Look, in: dies (Hg.), Interpretative Social Science. A Second Look, Berkeley-Los Angeles-London 1987, S.1-30
- Raschke, Joachim, Einleitung, in: ders. (Hg.), Bürger und Parteien. Ansichten und Analysen einer schwierigen Beziehung, Opladen 1982, S.9-38
- Raschke, Joachim, Die Grünen. Wie sie wurden, was sie sind, Köln 1993
- Raschke, Joachim, SPD und PDS. Selbstblockade der Opposition?, in: Blätter fü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12/1994, S.1453-1464
- Raschke, Joachim, Das Selbstverständnis der Grünen in einer sich verändernden Gesellschaft, in: Frankfurter Rundschau vom 11. 2. 1995, S.7
- Rausch, Heinz/Theo Stammen (Hg.), DDR. Das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System, 2. Aufl. München 1974
- Rawls, John, Politischer Liberalismus, Frankfurt/M. 1998
- Rebenstorf, Hilke, Gesellschaftliche Interessentation und politische Integration, in: Dietrich Herzog/Hilke Rebenstorf/Bernhard Weißels (Hg.), Parlament und Gesellschaft. Eine Funktionsanalys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Opladen 1993, S.53-98
- Reckwitz, Andreas, Praxis-Autopoiesis-Text. Drei Versionen des Cultural Turn in der Sozialtheorie, in: Andreas Reckwitz/Holger Sievert (Hg.), Interpretation, Konstruktion, Kultur. Ein Paradigmenwechsel in den Sozialwissenschaften, Opladen-Wiesbaden 1999, S.19-49
- Reckwitz, Andreas, Holger Sievert (Hg.), Interpretation, Konstruktion, Kultur. Ein Paradigmenwechsel in den Sozialwissenschaften, Opladen-Wiesbaden 1999
- Redlingshöfer, Bernd/Ursula Hoffmann-Lange, Die Transformation der kommunalen politischen Eli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m Beispiel der Gemeindevertretung der Stadt Jena, in: Hans Bertram/Wolfgang Kreher/Irene Müller-Hartmann (Hg.), Systemwechsel zwischen Projekt und Prozeß. Analysen zu den Umbrüch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8, S.697-725
- Reese-Schäfer, Walter, Grenzgötter der Moral. Der neuere europäischamerikanische Diskurs zur politischen Ethik, Frankfurt/M.1997
- Rehberg, Karl-Siegbert, Institutionen als symbolische Ordnungen. Leitfragen und Grundkategorien zur Theorie und Analyse institutioneller Mechanismen, in: Gerhard Göhler (Hg.), Die Eigenart der Institutionen. Zum Profil politischer Institutionentheorie, Baden-Baden 1994, S.47-84
- Reich, Jens, Zehn Jahre deutsche Einheit, in: APuZ B1-2/2000, S.28-32

- Reiche, Steffen, Motivationen der Gründergeneration, in: Dieter Dowe(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 S.21-28
- Reichel, Peter, Parteien und politische Kultur in Deutschland.-Ein Rückblick, in: Joachim Raschke (Hg.), Bürger und Parteien. Ansichten und Analysen einer schwierigen Beziehung, Opladen 1982, S.101-120
- Reißig, Rolf, Perspektivenwechsel in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in: Raj Kollmorgen/Rolf Reißig/Johannes Weiß (Hg.), Sozialer Wandel und Akteure in Ostdeutschland. Empirische Befunde und theoretische Ansätze, Opladen 1996, S.245-262
- Reißig, Rolf, Transformationsforschung: Gewinne, Desiderate und Perspektiven, in: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39.Jg., 2/1998, S.301-328
- Renner, Rolf G., Einleitung, in: Dorothee Kimmich/Wolf D. Renner/Bernd Stiegler (Hg.), Texte zur Literaturtheorie der Gegenwart, Stuttgart 1996 S.279-286
- Richter, Michael, Entstehung und Transformation des Parteiensystems in der SBZ und Berlin 1945-1950,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 II., 4, Frankfurt/M. 1995a, S.2509-2586
- Richter, Michael, Rolle, Bedeutung und Wirkungsmöglichkeiten der Blockparteien-die CDU,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 II., 4, Frankfurt/M. 1995b, S.2587-2638
- Richter, Michael, Zur Entwicklung der Ost-CDU vom Januar 1990 bis zum Vereinigungsparteitag am 1. Oktober 1990, in: Michael Richter/Martin Reißmann (Hg.), Die Ost-CDU. Beiträge zu ihr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Weimar-Köln-Wien 1995c, S.235-251
- Rieger, Günter, Solidarität,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ieger Olaf Schultze/ 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a, S.586
- Rieger, Günter, Bürgerschaft,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ieger Olaf Schultze/ 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b, S.84-85
- Ritter, Claudia, Sozialdemokratische Ost-West-Affären: Claudia Ritter befragt Hans Misselwitz, Rainer Land und Klaus-Jürgen Scherer zum Verhältnis von Ost- und Westdeutschen in der Sozialdemokratie, in: Berliner Debatte INITIAL, 4/1997, S.49-59
- Reißmann, Martin, »Die Differenzierung fördern...« -Zu Zielen, Methoden und Ergebnissen der Westarbeit der Ost-CDU (1950-1971), in: Michael Richter/Martin Reißmann (Hg.), Die Ost-CDU. Beiträge zu ihr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Weimar-Köln-Wien 1995, S.183-200
- Rodwin, Lloyd/Donald A. Schon (Hg.), Rethinking the Development Experience, Washington 1994

- Rohe, Karl, Wahlen und Wählertraditionen in Deutschland. Kulturelle Grundlagen deutscher Parteien und Parteiensysteme im 19. und 20. Jahrhundert, Frankfurt/M. 1992
- Rohe, Karl, Politik. Begriffe und Wirklichkeiten, 2. Aufl. Stuttgart-Berlin-Köln 1994a
- Rohe, Karl, Entwicklung der politischen Parteien und Parteiensysteme in Deutschland bis zum Jahre 1993, in: 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demokratie in Deutschland, Opladen 1997, S.39-58
- Röhrich, Wilfried, Die repräsentative Demokratie. Ideen und Interessen, Opladen 1981
- Roller, Edeltraud, Sozialpolitische Orientierungen nach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Oscar W. Gabriel (Hg.), Politische Orientierungen und Verhaltensweisen im vereinigten Deutschland, Opladen 1997, S.115-146
- Rommelfanger, Ulrich, Ausarbeitung und Werdegang der Thüringer Landesverfassung, in: Karl Schmitt (Hg.), Die Verfassung des Freistaats Thüringen, Weimar-Köln-Wien 1995, S.55-68
- Rommelfanger, Ulrich, Das Werden des Freistaats Thüringen, in: Karl Schmitt (Hg.), Thüringen. Eine politische Landeskunde, Köln-Weimar 1996, S.20-36
- Rorty, Richard, Kontingenz, Ironie und Solidarität, Frankfurt/M. 1989
- Rorty, Richard (Hg.), The Linguistic Turn.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 With Two Retrospective Essays, Chicago-London 1992
- Rorty, Richard, Hoffnung statt Erkenntnis. Eine Einführung in die pragmatische Philosophie, Wien 1994
- Rosa, Hartmut, Operatives Paradigma und objektiver Geist. Kuhn, Taylor und die Konstruktion der sozialen Wirklichkeit, in: Andreas Reckwitz/Holger Sievers (Hg.), Interpretation, Konstruktion, Kultur. Ein Paradigmenwechsel in den Sozialwissenschaften, Opladen-Wiesbaden 1999, S.158-180
- Rousseau, Jean-Jacques, Vom Gesellschaftsvertrag oder Grundsätze des Staatsrechts, in: ders., Sozialphilosophische und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1981, S.268-391
- Rudzio, Wolfgang,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g.), Grundwissen Politik, Bonn 1991a, S.48-88
- Rudzio, Wolfgang, Das politisch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Aufl. Opladen 1996
- Rupieper, Hermann-Josef, Die Wurzeln der westdeutschen Nachkriegsdemokratie. Der amerikanische Beitrag 1945-1952, Opladen 1993
- Rüsen, Jörn, »Moderne« und »Postmoderne« als Gesichtspunkte einer Geschichte der modernen Geschichtswissenschaft, in: Wolfgang Küttler/Jörn Rüsen/

- Ernst Schulin (Hg.), Geschichtsdiskurs I: Grundlagen und Methoden der Historiographiegeschichte, Frankfurt/M. 1993, S. 17-30
- Rüsen, Jörn, Historische Orientierung. Über die Arbeit des Geschichtsbewußtseins, sich in der Zeit zurechtzufinden, Köln-Weimar-Wien 1994
- Rüsen, Jörn, Einleitung: Für eine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der Geschichte, in: ders./Michael Gottlob/Achim Mittag (Hg.), Die Vielfalt der Kulturen. Erinnerung, Geschichte, Identität 4, Frankfurt/M. 1998, S.12-36
- Rüther, Günther (Hg.), Literatur in der Diktatur. Schreiben im Nationalsozialismus und DDR-Sozialismus, Paderborn u. a. 1997

S

- Saage, Richard/Gunnar Berg (Hg.), Zwischen Triumph und Krise. Zum Zustand der liberalen Demokratie nach dem Zusammenbruch der Diktaturen in Osteuropa, Opladen 1998
- Saalfeld, Thomas, Parteisoldaten und Rebellen. Fraktionen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90, Opladen 1995
- Sarcinelli, Ulrich, Politikvermittlung durch Parlamente: ein Problemaufriß, in: ders. (Hg.), Öffentlichkeitsarbeit der Parlamente. Politikvermittlung zwischen Public Relations und Parlamentsdidaktik, Baden-Baden 1994, S.19-33
- Sarcinelli, Ulrich, Öffentlichkeitsarbeit der Parlamente-Politikvermittlung zwischen Public Relations und Parlamentsdidaktik, in: Winfried Steffani/Uwe Thaysen (Hg.), Parlamente und ihr Umfeld. Daten und Analysen zu einer herausfordernden Regierungsform, Opladen-Wiesbaden 1997a, S.264-273
- Sarcinelli, Ulrich, Repräsentation oder Diskurs? Zu Legitimität und Legitimationswandel durch politische Kommunikation, i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8.Jg., 2/1988, S.547-567
- Scheuner, Ulrich, Das repräsentative Prinzip in der modernen Demokratie, in: Heinz Rausch (Hg.),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r Repräsentation und Repräsentativverfassung, Darmstadt 1968, S.386-418
- Schiller, Theo, Die FDP: Partei der wechselnden Wechselwähler, in: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uttgart 1990, S.63-85
- Schiller, Theo, Stand, Detizite und Perspektiven der FDP-Forschung,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119-146
- Schiller, Peter, Deutscher Bundestage 1976-1994: Parlaments- und Wahlstatistik,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6.Jg., 4/1995, S.551-566

- Schlumberger, Friedrich-Claus, Organisatorische Probleme beim Aufbau der CDU-Thüringen, in: Josef Schmid/Frank Löbner/Heinrich Tiemann (Hg.), Probleme der Einheit. Organisationsstrukturen von Parteien und Verbänden, Marburg 1994, S.25-30
- Schmid, Josef/Heinrich Tiemann, Gewerkschaften und Tarifverhandlungen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Organisationsentwicklung, politische Strategien und Probleme am Beispiel der IG Metall, in: Volker Eichener/Ralf Kleinfeld/Detlev Pollack/Josef Schmid/Klaus Schubert/Helmut Voelzkow, Organisierte Interessen in Ostdeutschland, 1. Halbbd., Marburg 1992, S.135-158
- Schmidt, Hartwig, Ein Kapitel »Dialektik der Aufklärung«. Zur Ambivalenz der DDR-Gesellschaft, in: Michael Thomas (Hg.), Abbruch und Aufbruch. Sozialwissenschaften im Transformationsprozeß, Berlin 1992, S.19-35
- Schmidt, Manfred G., Opposition, in: Dieter Nohle (Hg.), Lexikon der Politik, Bd. 3: Westliche Länder, hg. v. Manfred G. Schmidt, München 1992b, S.283-288
- Schmidt, Ute, Transformation einer Volkspartei-Die CDU im Prozeß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37-74
- Schmidt, Ute, Die CDU, in: Oskar Niedermayer (Hg.),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6a, S.13-39
- Schmidt, Ute, Risse im Gefüge der vereinigten CDU, in: Frankfurter Hefte/Neue Gesellschaft, 43 (1996b), S.303-308
- Schmidt, Ute, Von der Blockpartei zur Volkspartei? Die Ost-CDU im Umbruch 1989-1994, Opladen 1997a
- Schmidt, Ute, Ost-West-Konflikte in der CDU nach der Wende-Probleme der Integration und Identität, in: Berliner Debatte INITIAL, 4/1997b, S.27-39
- Schmidt, Ute, Sieben Jahre nach der Einheit. Die ostdeutsche Parteienlandschaft im Vorfeld der Bundestagswahl 1998, in: APuZ B1-2/1998, S.37-53
- Schmitt, Carl,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7. Aufl. Berlin 1991
- Schmitt, Karl (Hg.), Die Verfassung des Freistaats Thüringen, Weimar-Köln-Wien 1995a
- Schmitter, Philippe C., Interest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ies, in: Garry Marks/Larry Diamond (Hg.), Reexamining Democracy. Essays in Honor of Seymour Martin Lipset, Newbury Park u. a. 1992, S.156-181
- Schmitter, Philippe C., Interest, Associations and Intermediation in a Reformed Post-Liberal Democracy, in: Wolfgang Streeck (Hg.), Staat und Verbände (PVS-Sonderheft 25/1994), Opladen 1994, S.160-171
- Schnädelbach, Herbert, Vernunft, in: Ekkehard Martens/Herbert Schnädelbach (Hg.), Philosophie. Ein Grundkurs, Reinbek b. Hamburg 1985, S.37-76

- Schneider, Eberhard, Die politische Funktionselite der DDR. Eine empirische Studie zur SED-Nomenklatura, Opladen 1994
- Schneider, Hans-Peter, Das parlamentarische System, in: Ernst Benda/Werner Maihofer/Hans-Jochen Vogel (H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Berlin 1983, S.239-299
- Schneider, Hans-Peter,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und politische Praxis der parlamentarischen Opposition in: ders./Wolfgang Zeh (Hg.), Parlamentsrecht und Parlamentspraxi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89, S.1055-1086
- Schneider, Hans-Peter, Die bundesstaatliche Ordnung im vereinigten Deutschland, in: Jochen Huhn/Peter-Christian Witt (Hg.), Föderalismus in Deutschland. Traditionen und gegenwärtige Probleme, Baden-Baden 1992, S.239-261
- Schneider, Hans-Peter, Das parlamentarische System, in: Ernst Benda/Werner Maihofer/Hans-Jochen Vogel (H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neubearb. u. erw. Aufl. Berlin-New York 1994, S.537-598
- Scholz, Bettina, Bundestag und Volkskammer. Meinungsprofile von Abgeordneten im Vergleich, in: Dietrich Herzog/Hilke Rebenstorf/Bernhard Weßels (Hg.), Parlament und Gesellschaft. Eine Funktionsanalys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Opladen 1993, S.272-299
- Schönberger, Christoph, Das Parlament im Anstaltsstaat. Zur Theorie parlamentarischer Repräsentation in der Staatsrechtslehre des Kaiserreichs(1871-1918), Frankfurt/M. 1997
- Schorlemmer, Friedrich, Vom demokratischen Zentralismus zur liberalen Demokratie-Verwerfungen und Perspektiven, in: Richard Saage/Gunnar Berg (Hg.), Zwischen Triumph und Krise. Zum Zustand der liberalen Demokratie nach dem Zusammenbruch der Diktaturen in Osteuropa, Opladen 1998, S.85-99
- Schroeder, Klaus, Der SED-Staat.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 München-Wien 1998
- Schubert, Klaus, Pluralismus versus Korporatismus,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 1: Politische Theorien,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 München 1995, S.407-423
- Schubert, Klaus, Dritter Sektor,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 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 S.134
- Schultze, Rainer-Olaf, Widersprüchliches, Ungleichzeitiges und kein Ende in Sicht. Die Bundestagswahl vom 16. Oktober 1994,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6.Jg., 2/1995, S.336-352

- Schultze, Rainer-Olaf, Partei neuen Typs, in: Dieter Nohlem (Hg.), Lexikon der Politik, Bd. 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a, S.457-458
- Schulz, Marianne, Neues Forum. Von der illegalen Opposition zur legalen Marginalität, in: Helmut Müller-Enbergs/Marianne Schulz/Jan Wielgoß (Hg.), Von der Illegalität ins Parlament. Werdegang und Konzepte der neuen Bürgerbewegungen, 2. erw. Aufl. Berlin 1992, S.11-104
- Schumpeter, Joseph A., Kapitalismus, Sozialismus und Demokratie Einführung v. Eberhard K. Seifert, 7. erw. Aufl. Tübingen-Basel 1993
- Schütt-Wetschky, Eberhard, Grundtypen parlamentarischer Demokratie. Klassisch-altliberaler Typ und Gruppentyp, Freiburg-München 1984
- Schütt-Wetschky, Eberhard, Haben wir eine akzeptable Parlamentarismustheorie? in: Jürgen Hartmann/Uwe Thaysen (Hg.), Pluralismus und Parlamentarismus in Theorie und Praxis. Winfried Steffani zum 65. Geburtstag, Opladen 1992, S.91-112
- Schüttenmeyer, Suzanne S., Bundestag und Bürger im Spiegel der Demoskopie. Eine Sekundäranalyse zur Parlamentarismusperzeption in der Bundesrepublik, Opladen 1986
- Schüttenmeyer, Suzanne S., Der Bundestag als Fraktionenparlament, in: Jürgen Hartmann/Uwe Thaysen (Hg.), Pluralismus und Parlamentarismus in Theorie und Praxis. Winfried Steffani zum 65. Geburtstag, Opladen 1992, S.113-136
- Schüttenmeyer, Suzanne S., Repräsentationen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 1: Politische Theorien,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 München 1995, S.543-552
- Schüttenmeyer, Suzanne S., Fraktionen im Deutschen Bundestag 1949-1997. Empirische Befunde und theoretische Folgerungen, Opladen-Wiesbaden 1998a
- Schüttenmeyer, Suzanne S., Responsivität, in: Dieter Nohlem (Hg.), Lexikon der Politik, Bd. 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ainer-Olaf Schultze/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b, S.561
- Schüttenmeyer, Suzanne S., 50 Jahre deutscher Parlamentarismus: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Leistungen und Defizite, in: Thomas Ellwein/Eberhard Holtmann (Hg.), 50 Jah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Rahmenbedingungen-Entwicklungen-Perspektiven(=PVS-Sonderheft 30/1999), Opladen Wiesbaden 1999, S.482-495
- Searle, John, Die Konstruktion der gesellschaftlichen Wirklichkeit. Zur Ontologie sozialer Tatsachen, Reinbek bei Hamburg 1997
- Segert, Astrid/Irene Zierke, Sozialstruktur und Milieuerfahrung. Aspekte des alltagskulturellen Wandels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

- Segert, Dieter, Parteien und Parteiensysteme in der Konsolidierung der Demokratien Osteuropas, in: Wolfgang Merkel/Eberhard Sandschneider (Hg.), Systemwechsel 3. Parteien im Transformationsprozeß Opladen 1997, S.57-99
- Seibel, Wolfgang, Die Treuhandanstalt - eine Studie über Hyperstabilität, in: Hellmut Wollmann/Hans-Ulrich Derlien/Klaus König/ Wolfgang Renzsch/Wolfgang Seibe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a, S.169-222
- Seidel, Harald, Motivationen der Gründergeneration der SDP, in: Dieter Dowe(in Zusammenarbeit mit Rainer Eckert) (Hg.), Von der Bürgerbewegung zur Partei. Die Gründung der Sozialdemokratie in der DDR, Bonn 1993, S.13-20
- Siekmeier, Marthias, Restauration oder Reform? Die FDP in den sechziger Jahren-Deutschland - und Ostpolitik zwischen Wiedervereinigung und Entspannung, Köln 1998
- Sofsky, Wolfgang/Rainer Paris, Figurationen sozialer Macht. Autorität-Stellvertretung -Koalition, Frankfurt/M. 1994
- Sokal, Alan/Jean Bricmout, Postmoderne in Wissenschaft und Politik, in: Merkur, 52. Jg., 9-10/1998, S.929-943
- Sontheimer, Kurt, Grundzüge des politischen Systems der neu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völlig überarb. Neuausg. Frankfurt/M. 1993
- Spülbeck, Susanne, Ordnung und Angst. Russische Juden aus der Sicht eines ostdeutschen Dorfes nach der Wende, Frankfurt/M.-New York 1997
- Starck, Christian, Die Verfassungen der neuen Länder,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 (H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X: Die Einheit Deutschlands - Festigung und Übergang, Heidelberg 1997, S.353-402
- Staritz, Dietrich, Geschichte der DDR, erweiterte Neuausg. Frankfurt/M.1996
- Staritz, Dietrich/Hermann Weber (Hg.), Einheitsfronts und Einheitspartei. Kommunisten und Sozialdemokraten in Ost- und Westeuropa 1944-1948, Köln 1989
- Staritz, Dietrich/Siegfried Suckut, Strukturwandel des DDR-Parteiensystems,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211-229
- Steffani, Winfried, Parteienstaat und Opposition, in: ders., Parlamentarische und präsidentielle Demokratie. Strukturelle Aspekte westlicher Demokratien, Opladen 1979b, S.207-238
- Steffani, Winfried, Parteien als soziale Organisationen,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9.Jg., 4/1988, S.549-560
- Steffani, Winfried, Das magische Dreieck demokratischer Repräsentation: Volk, Wähler und Abgeordnete,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30.Jg., 3/1999, S.772-793

- Steinfath, Holmer (Hg.), Was ist ein gutes Leben? Philosophische Reflexionen, Frankfurt/M.1998
- Stenger, Horst, Deutungsmuster der Fremdheit, in: Herfried Münkler (Hg.), Furcht und Faszination. Facetten der Fremdheit, Berlin 1997, S. 159-222
- Stenger, Horst, »Deshalb müssen wir uns noch fremd bleiben...«. Fremdheitserfahrungen ostdeutscher Wissenschaftler, in: Münkler, Herfried (Hg.), Die Herausforderung durch das Fremde, Berlin 1998, S.305-400
- Strauss, Leo, Naturrecht und Geschichte, 2.Aufl. Frankfurt/M.1989
- Sturm, Roland, Die Zukunft des deutschen Föderalismus, in: Ulrike Liebert/Wolfgang Merkel (Hg.),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1991, S.161-182
- Suckut, Siegfried, Blockpolitik in der SBZ/DDR 1945-1949, Köln 1986
- Suckut, Siegfried, Die DDR-Blockparteien im Licht neuer Quellen, in: Jürgen Weber (Hg.), Der SED-Staat. Neues über eine vergangene Diktatur, München 1994, S.99-197
- Suckut, Siegfried/Dietrich Staritz, Alte Heimat oder neue Linke? Das SED-Erbe und die PDS-Erben, in: Oskar Niedermeyer/Richard Stöss (Hg.),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169-191

## T

- Thaysen, Uwe, Der Runde Tisch. Oder: Wo bleibt das Volk? Der Weg der DDR in die Demokratie, Opladen 1990
- Thaysen, Uwe (in Zusammenarbeit mit Hans Michael Kloth), Der Runde Tisch und die Entmachtung der SED. Widerstände auf dem Weg zur freien Wahl, i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d. VII., 2, Frankfurt/M. 1995, S.1706-1852
- Therborn, Göran, European Modernity and Beyond. The Trajectories of European Societies 1945-2000, London u. a. 1995
- Thomas, Rüdiger, Von der DDR-Forschung zur kooperativen Deutschland-Forschung. Bilanz und Perspektive eines umstrittenen Wissenschaftsfeldes, in: Heiner Timmermann (Hg.), DDR-Forschung. Bilanz und Perspektiven Berlin 1995, S.299-313
- Thompson, Edward P., Die Entstehung der englischen Arbeiterklasse, Frankfurt/M. 1987
- Thumfart, Alexander, Rhetorische Sprache-ein Kriterium zur Differenzierung von politischen und sozialen/soziologischen Institutionenbegriffen, in: Gerhard

- Göhler (Hg.), Die Eigenart der Institutionen. Zum Profil politischer Institutionentheorie, Baden-Baden 1994, S.221-242
- Thumfart, Alexander, Die Perspektive und die Zeichen. Hermetische Verschlüsselungen bei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München 1996a
- Thumfart, Alexander, Staatsdiskurs und Selbstbewußtsein. Sprachlichrhetorische Formen ihrer Institutionalisierung, Amsterdam 1996b
- Thumfart, Alexander, Zirkulation: Versuch, die philosophische Krise der Repräsentation in den politischen Diskurs einzuführen, in: Zeitschrift für Politik, 44.Jg., 2/1997b, S.184-207
- Thumfart, Alexander, Kritische Gerechtigkeitstheorien und Ungerechtigkeit im Transformationsprozeß, in: Andreas Dornheim/Winfried Franzen/Alexander Thumfart/ Arno Washkuhn (Hg.), Gerechtigkeit. Interdisziplinäre Grundlagen, Opladen- Wiesbaden 1999a, S.208-248
- Thumfart, Alexander, (Un)Gerechtigkeitsgefühle und Selbstvorstellung im Gerechtigkeitsdiskurs bei Michael Walzer und Richard Rorty, in: Herfried Münkler/Marcus Llanque (Hg.), Konzeptionen der Gerechtigkeit. Kulturvergleich-Ideengeschichte-Moderne Debatte, Baden-Baden 1999b, S.327-345
- Thumfart, Alexander, Westliche Rezeptionsmuster, das Fremde und der Wandel in den neuen Bundesländern. Von der Modernisierung »to something else«, in: Arno Washkuhn/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Hand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6c, S.185-266
- Thumfart, Alexander/Arno Washkuhn, Das ambivalente Staatsverständnis in den Gerechtigkeitstheorien von Habermas, IfS-Nachrichten, Nr. 8, Institut für Staatswissenschaften, Universität der Bundeswehr München, München 1998

U

- Uppendahl, Herbert, Repräsentation und Responsivität. Bausteine einer Theorie responsiver Demokratie,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12. Jg., 1/1981, S.123-134
- Uppendahl, Herbert, Demokratische Responsivität und kommunale Entscheidungsprozesse, in: Dietrich Thränhardt/Herbert Uppendahl (Hg.), Kommunikationstechnologien und kommunale Entscheidungsprozesse, München 1982, S.257-271
- Ushner, Manfred, Die zweite Etage. Funktionsweise eines Machtapparats, Berlin 1993

## V

- Veen, Hans-Joachim, Stabilisierung auf dünnem Eis. Entwicklungstendenzen des Parteiensystems nach der zweiten gesamtdeutschen Wahl, in: Heinrich Oberreuter (Hg.), Parteiensystem am Wendepunkt?, München-Landsberg a. Lech 1996, S.182-203
- Veen, Hans-Joachim/Peter Gluchowski, Die Anhängerschaft der Parteien vor und nach der Einheit-eine Langfristbetrachtung von 1953-1993,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25. Jg., 2/1994, S.165-186
- Vielmetter, Georg, Postempiristische Philosophie der Sozialwissenschaften in: Andreas Reckwitz/Holger Siver (Hg.), Interpretation, Konstruktion, Kultur. Ein Paradigmenwechsel in den Sozialwissenschaften, Opladen-Wiesbaden 1999, S.50-66
- Vierhaus, Rudolf, Die Rekonstruktion historische Lebenswelten. Problem moderner Kulturgeschichtsschreibung, in: Hartmut Lehmann (Hg.), Wege zu einer neuen Kulturgeschichte, Göttingen 1995, S.7-28
- Volkens, Andrea/Hans-Dieter Klingemann,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Parteien im Prozeß der Vereinigung, in: Eckhard Jesse/Armin Mitter (Hg.),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Bonn 1992, S.189-214
- Vollrath, Ernst, Die Kultur des Politischen. Konzepte politischer Wahrnehmung in Deutschland, in: Volker Gerhardt (Hg.), Die Begriffe der Politik. Bedingungen und Gründe politischen Handelns, Stuttgart 1990b, S.268-290
- Vorländer, Hans, Die FDP nach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APuZ B 5/1992, S.14-20
- Vorländer, Hans, Die FDP nach der Bundestagswahl 1994, in: Gerhard Hirscher (Hg.), Parteiendemokratie zwischen Kontinuität und Wandel. Die Deutschen Parteien nach den Wahlen 1994, Hanns-Seidel-Stiftung 1995, S.243-265
- Vorländer, Karl, Die FDP: Entstehung und Entwicklung, in: Oskar Niedermayer (Hg.), Intermediäre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6, S.113-133
- Vornbäumen, Axel, Ob Land, ob Bezirk, Schlesien muß es sein: In Görlitz an der Neiße suchen Bürger und Politiker nach einer neuen Identität, in: Frankfurter Rundschau, 3. 5. 1990, S.3

## W

- Wagner, Birgit, Technik und Literatur im Zeitalter der Avantagard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Imaginären, München 1996

- Wagner, Wolf, Kulturschock Deutschland, Hamburg 1996
- Waldrich, Hans-Peter, Der Demokratiebegriff der SED. Ein Vergleich zwischen der älteren deutschen Sozialdemokratie un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tuttgart 1980
- Walter, Franz, Führung in der Politik: SPD-Parteivorsitzende, in: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3/1997, S.1287-1336
- Walter, Franz/Tobias Dürr/Klaus Schmidtke, Die SPD in Sachsen und Thüringen zwischen Hochburg und Diaspora. Untersuchungen auf lokaler Ebene vom Kaiserreich bis zur Gegenwart, Bonn 1993
- Walzer, Michael, Kritik und Gemeinsinn. Drei Wege der Gesellschaftskritik, mit e. Vorwort v. Otto Kallscheuer, Berlin 1990
- Wander, Fred, Das gute Leben. Erinnerungen, München-Wien 1996
- Wandin, Peter, Politische Wende und parteiorganisatorischer Wandel der SPD, in: Josef Schmid/Frank Löbler/Heinrich Tiemann (Hg.), Probleme der Einheit. Organisationsstrukturen von Parteien und Verbänden, Marburg 1994, S.31-37
- Waschkuhn, Arno, Partizipation und Vertrauen. Grundlagen von Demokratie und politischer Praxis, Opladen 1984
- Waschkuhn, Arno, Was ist Subsidiarität? Ein sozialphilosophisches Ordnungsprinzip: Von Thomas von Aquin bis zur »Civil Society«, Opladen 1995a
- Waschkuhn, Arno, Politik in Ostdeutschland: Konfliktlinien, Institutionen und demokratisches Profil: Ein Plädoyer für mehr Subsidiarität, in: Berliner Debatte: INITIAL, 3/1996 S.26-31
- Waschkuhn, Arno, Politische Systeme, in: Arno Mohn (Hg.), Grundzüge der Politikwissenschaft, 2. Aufl. München-Wien 1997a, S.237-325
- Waschkuhn, Arno, Demokratietheorien. Politiktheoretische und ideengeschichtliche Grundzüge, München-Wien 1998a
- Waschkuhn, Arno, AGIL-Schema, Latency/Latenz, in: Dieter Nohlen (Hg.), Lexikon der Politik, Bd.7: Politische Begriffe, hg. v. Dieter Nohlen/Rieger-Olaf Schultze/Suzanne S. Schüttemeyer, München 1998b, S.26-27 bzw. S.346
- Waschkuhn, Arno, Vertrauen im demokratietheoretischen Kontext, in: Klaus-Peter Hufer/Birgit Wellie (Hg.), Sozialwissenschaftliche und bildungstheoretische Reflexionen. Festschrift für Bernhard Claußen, Frankfurt/M.1998, S.45-57
- Waschkuhn, Arno, Politik in Ostdeutschland-Politische Konfliktlinien, institutionelle Fragen und Demokratisches Profil, in: Arno Waschkuhn/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Lehr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6b, S.43-183
- Waschkuhn, Arno/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Lehr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9
- Waschkuhn, Arno/Alexander Thumfart, Projekt »Politik in Ostdeutschland«:

- Einleitung, in: ders./Alexander Thumfart (Hg.), Politik in Ostdeutschland. Lehrbuch zur Transformation und Innovation, München-Wien 1999, S.11-38
- Waszek, Norbert, Man's Social Nature. A Topic of the Scottish Enlightenment in its Historical Setting, Frankfurt/M.-Bern-New York 1986
- Weber, Hermann, DDR. Grundriß der Geschichte 1945-1990, vollständig überarb. u. erg. Neuauf. Hannover 1991
- Weber, Hermann, Herausbildung und Entwicklung des Parteiensystems der SBZ/DDR, in: ApuZ B 16-17/1996, S.4-13
- Weber, Max, Wissenschaft als Beruf,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4., erneut durchges. Aufl. hg. v. J. Winckelmann, Tübingen 1973
-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9. Aufl. Tübingen 1988, S.17-206
- Wehlig, Hans-Georg, Vorwort, i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Hg.), Parte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uttgart-Berlin-Köln 1990, S.7-9
- Weick, Karl E., Der Prozeß des Organisierens, Frankfurt/M.1985
- Welsch, Wolfgang, Unsere postmoderne Moderne, 2. durchges. Aufl. Weinheim 1988
- Welzel, Christian, Rekrutierung und Sozialisation der ostdeutschen Elite. Aufstieg einer demokratischen Gegenelite?, in: Wilhelm Bürklin/Hilke Rebenstorf u. a. (Hg.),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1997, S.201-237
- Werner, Camilla, Direktdemokratische Entscheidungsverfahr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Diskussionsstand und den Meinungen der Abgeordneten des 11. Deutschen Bundestages und der Volkskammer, in: Hans-Dieter Klingemann/Richard Stöss/Bernhard Weßels (Hg.), Politische Klasse und politische Institutionen.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Eliteforschung, Opladen 1991, S.405-433
- Weßels, Bernhard, Abgeordnete und Bürger: Parteien und Wahlkreis-kommunikation als Faktoren politischer Repräsentation, in: Hans-Dieter Klingemann/Richard Stöss/Bernhard Weßels (Hg.), Politische Klasse und politische Institutionen.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Eliteforschung, Opladen 1991, S.325-356
- Weßels, Bernhard, Politische Repräsentation als Prozeß gesellschaftlich-parlamentarischer Kommunikation, in: Dietrich Herzog/Hilke Rebenstorf/Bernhard Weßels (Hg.), Parlament und Gesellschaft. Eine Funktionsanalyse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Opladen 1993, S.99-137
- Whelan, Frederick G., Order and Artifice in Hume's Political Philosophy, Princeton, N. J. 1985
- White, Hayden, Auch Klio dichtet oder Die Fiktion des Faktischen. Studien zur

- Tropologie des historischen Diskurses, Stuttgart 1991
- White, Hayden, Historical Emplotment and the Problem of Truth, in: Saul Friedländer (Hg.), Probing the Limits of Representation. Nazism and the »Final Solution«, Cambridge/Mass.1992, S.37-53
- White, Morton, Philosophy, The Federalist, and the Constitution, New York-Oxford 1987
- Wielgoß, Jan, Bündnis 90-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Anpassung,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Parteien und Wähler im Umbruch. Parteiensystem und Wählerverhalten in der ehemaligen DDR und den neuen Bundesländern, Opladen 1994, S.143-168
- Wielgoß, Jan/Marianne Schulz/Helmut Müller-Enbergs, Bündnis 90. Entstehung, Entwicklung, Perspektiven, Berlin 1992
- Wiesendahl, Elmar, Parteien und Demokratie. Eine soziologische Analyse paradigmatischer Ansätze in der Parteienforschung, Opladen 1980
- Wiesendahl, Elmar, Noch Zukunft für die Mitgliederparteien? Erstarrung und Revitalisierung innerparteilicher Partizipation, in: Ansgar Klein/Rainer Schmalz-Bruns (Hg.), Politische Beteiligung und Bürgerengagement in Deutschland. Möglichkeit und Grenzen, Bonn 1997, S.349-381
- Wiesendahl, Elmar, Parteien in Perspektive. Theoretische Ansichten der Organisationswirklichkeit politischer Parteien, Opladen 1998a
- Wiesendahl, Elmar, Wie geht es weiter mit den Großparteien in Deutschland?, in: APuZ B1-2/1998b, S.13-28
- Winter, Thomas von, Die Christdemokraten als Analyseobjekt oder: Wie modern ist die CDU-Forschung?, in: Oskar Niedermayer/Richard Stöss (Hg.), Stand und Perspektiven der Parteienforschung in Deutschland, Opladen 1993, S.57-80
- Winter, Thomas von, Wahlverhalten in den östlichen Bundesländern: Wahlsoziologische Erklärungsmodell auf dem Prüfstand, in: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Jg.,2/1996, S.298-316
- Wittig, Dietmar, Mitglieder und Wähler der PDS, in: Michael Brie/Martin Herzig/Thomas Koch (Hg.), Die PDS. Postkommunistische Kaderorganisation, ostdeutscher Traditionsverein oder linke Volkspartei? Empirische Befunde und kontroverse Analysen, Köln 1995, S.58-80
- Wittkowski, Joachim, Die DDR und Biermann. Über den Umgang mit kritischer Intelligenz: Ein gesamtdeutsches Resümee, in: APuZ B 20/1996, S.37-45
- Woderich, Rudolf, Peripherienbildung und kulturelle Identität, in: Raj Kollmorgen/Rolf Reißig/Johannes Weiß (Hg.), Sozialer Wandel und Akteure in Ostdeutschland. Empirische Befunde und theoretische Ansätze, Opladen 1996, S.81-99
- Wolle, Stefan, Der Weg in den Zusammenbruch: Die DDR vom Januar bis zum Oktober 1989, in: Eckhard Jesse/Armin Mitter (Hg.), Die Gestaltung der

- deutschen Einheit. Geschichte-Politik-Gesellschaft, Bonn 1992, S.73-110
- Wolle, Stefan, Die heile Welt der Diktatur.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1971-1989, Bonn 1998
- Wollmann, Hellmut, Variationen institutioneller Transformation in sozialistischen Ländern: Die (Wieder-)Einführ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n Ostdeutschland, Ungarn, Polen und Rußland, in: ders./Helmut Wiesenthal/Frank Bönker (Hg.), Transformation sozialistischer Gesellschaften: Am Ende des Anfangs, Opladen 1995, S.554-596
- Wollmann, Hellmut, Institutionenbildung in Ostdeutschland: Neubau, Umbau und »schöpferische Zerstörung«, in: Max Kaase/Anderas Eisen/Oscar W. Gabriel/Oskar Niedermayer/Helmut Wiesenthal, Politische System, Opladen 1996a, S.47-153
- Wollmann, Hellmut, Transformation der ostdeutschen Kommunalstrukturen: Rezeption, Eigenentwicklung, Innovation, in: ders./Hans-Ulrich Derlien/Klaus König/Wolfgang Rensch/Wolfgang Seibe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a, S.259-327
- Wollmann, Hellmut/Hans-Ulrich Derlien/Klaus König/Wolfgang Rensch/Wolfgang Seibe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
- Wollmann, Hellmut/Hans-Ulrich Derlien/Klaus König/Wolfgang Rensch/Wolfgang Seibel, Die institutionelle Transformation Ostdeutschlands zwischen Systemtransfer und Eigendynamik, in: dies.,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Opladen 1997, S.9-23

## Y

- Young, James P., Amerikanisches politisches Denken: Von der Revolution bis zum Bürgerkrieg, in: Iring Fetscher/Herfried München 1985, S. 617-653

## Z

- Zapf, Wolfgang, Der Untergang der DDR und die soziologische Theorie der Modernisierung, in: Bernd Giesen/Claus Leggewie (Hg.), Experiment Vereinigung. Ein sozialer Großversuch, Berlin 1991, S.38-51
- Zapf, Wolfgang, Die Transformation in der ehemaligen DDR und die soziologische Theorie der Modernisierung, in: ders., Modernisierung, Wohlfahrtsentwicklung

- und Transformation. Soziologische Aufsätze 1987 bis 1994, Berlin 1994, S.128-143
- Zapf, Wolfgang, Modernisierungstheorien in der Transformationsforschung, in: Klaus von Beyme/Claus Offe (Hg.), Politische Theorien in der Ära der Transformation, Opladen 1996a, S.169-181
- Zapf, Wolfgang, Gliederung und Organe des Bundestages, in: Josef Isensee/Paul Kirchhof (H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 Demokratische Willensbildung-Die Staatsorgane des Bundes, Heidelberg 1987, S.391-423
- Zehnpfennig, Barbara, Einleitung, Einleitung, in: Alexander Hamilton/James Madison/John Jay, Die Federalist Papers. Übers., eingel. u. m. Anmerkungen versehen v. Barbara Zehnpfennig, Darmstadt 1993, S.1-44
- Zintl, Reinhard, Politikverflechtung und Machtverteilung in Deutschland, in: Thomas Ellwein/Everhard Holtmann (Hg.), 50 Jahre Bundesrepublik Deutschland. Rahmenbedingungen-Entwicklungen-Perspektiven (=PVS-Sonderheft 30), Opladen-Wiesbaden 1999, S.471-481

##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 동·서독의 정치통합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Ⅰ):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Ⅱ):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동·서독의 정치통합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동·서독의 정치통합**

비매품

동·서독의 정치통합

안미현, 최경인, 안미라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 동·서독의 정치통합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 KINU정책연구시리즈

###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광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n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www.kinu.or.kr](http://www.kinu.or.kr)



동·서독의 정치통합  
Die politische Integration Ostdeutschlands